헌법제정 70주년 **반(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보고회**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2018년 7월 12일 (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공동주최 강창일 · 김종대 · 노회찬 · 신경민 · 심상정 · 원혜영 · 이종걸 · 전해철 · 천정배 · 최경환 의원실, 성공회대민주자료관, 평화박물관

목 차

발표문

■ **반헌법행위집중검토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 조사결과 발표 및 향후 계획 (한홍구)** 08

■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 (변상철)** 19

열전개요 및 인물소개

■ **열전개요 9인**

1. 민간인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한경록 24

2.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29

3.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36

4.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40

5.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43

6. 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의 괴벨스 허문도 56

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64

8.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고영주 72

9.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82

■ **인물소개 115인** (가나다 순) 99

가재환 강신욱 강진규 강창성 강충성 강화봉 경무현 고영주 구자춘 길재호
김교련 김근수 김기완 김기홍 김남옥 김동근 김동운 김동하 김성남 김수현
김영광 김용성 김용순 김용진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김중서 김태선 김형영
남궁길영 노덕술 노원욱 문귀동 문재준 박래조 박영길 박원택 박종연 박지원
박찬일 박창암 박처원 박충훈 박치옥 방준모 백남은 백용기 백태하 서 성
서재두 서정각 서주연 성종환 신갑생 신상규 신영주 심상은 안강민 안경상
안응모 양두원 양승태 오정근 유병창 유정방 윤기병 윤재호 윤종원 윤진원
윤태일 이강학 이근직 이낙선 이상귀 이서우 이용택 이우철 이재권 이재준
이종구 이종명 이종원 이철환 이철희 이춘구 이치왕 이학봉 이협우 이희권
임내현 임동구 장경순 전재구 정구영 정형근 조인구 조일제 조한경 진형구
차철권 최규하 최난수 최대현 최문영 최병규 최운하 한경록 한웅진 한종철
한환진 허문도 홍필용 황산덕 황진호

부 록

별첨1.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명단 156

별첨2.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사건별 명단(①) 사건별 전체 명단(②) 158

별첨3. [논문] 한홍구,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203

별첨4.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구성 및 편찬 제안문 240

인 사 말

이만열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상임대표 (전 국사편찬위원장)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지난 2015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6일에는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전 편찬은 대상으로 선정된 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이들이 스스로를 헌법수호자로 참칭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우리 사회의 이념공간을 오염시킨 헌법-반헌법의 전도된 관계를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10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곧이어 '촛불혁명'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시절의 수많은 적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특히 헌법을 파괴한 반헌법 행위자들의 생생한 민낯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비롯한 권력 수뇌부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어 법정에 섰으며, 또 검찰 수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이들의 실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들 기억하듯이 1년여 전 광장과 거리를 밝혔던 촛불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지금 곳곳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돼오고 있

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도 그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과거-현재-미래는 깊은 연관을 맺으며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는 반헌법행위를 ①내란 및 헌정유린 ②부정선거 ③고문조작 및 테러 ④간첩조작 ⑤학살 ⑥언론탄압 ⑦문민정부 이후 반헌법 사건 등 일곱 개 분야로 나눠서 각 분야별 대표적인 반헌법 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을 선정해, 각 해당 인물의 반헌법 행위와 역사 속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진행된 작업 결과를 모아서 1차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회의 책임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교수가 열전 편찬 작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변상철 선생은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의 기본 취지 및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며칠 뒤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유린되어온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동시에 유린된 헌법을 바로 잡기 위한 실천과 희생이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만들어져온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흐름 속에서 개정된 헌법입니다. 이 9차 개정 헌법을 고치자는 의견이 대통령과 정치권, 사회 여러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과 함께, 아니 어쩌면 그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사람들의 반헌법 행위를 제대로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본 편찬위원회의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또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보다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본 편찬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 작업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역사의 법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나아가 이 작업은, 국가와 정부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 및 재산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5,000여 후원회원 분들이 보내주시는 물심양면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모든 조사위원과 편찬위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 대표단과 고문단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오랫동안 기억되고, 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발 표 문

■ **반헌법행위집중검토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 조사결과 발표 및 향후 계획**

한홍구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성공회대 교수)

■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

변상철 (지금여기에 사무국장)

발 표

반헌법행위집중검토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 조사결과 발표 및 향후 계획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성공회대 교수

2015년 7월 16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는 말씀을 처음 드린 후, 10월 12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출발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16개월의 준비 끝에 2017년 2월 12일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이 405명 이외에 주요 반헌법행위와 관련된 인물 약 2,500명의 명단을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집중검토 대상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물조사에 들어간 저희 위원회는 이제 헌법제정 70주년을 앞두고 115명의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115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재환 강신욱 강진규 강창성 강충성 강화봉 경무현 고영주 구자춘 길재호
김교련 김근수 김기완 김기홍 김남옥 김동근 김동운 김동하 김성남 김수현
김영광 김용성 김용순 김용진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김중서 김태선 김형영
남궁길영 노덕술 노원욱 문귀동 문재준 박래조 박영길 박원택 박종연 박지원
박찬일 박창암 박처원 박충훈 박치옥 방준모 백남은 백용기 백태하 서 성
서재두 서정각 서주연 성종환 신갑생 신상규 신영주 심상은 안강민 안경상
안응모 양두원 양승태 오정근 유병창 유정방 윤기병 윤재호 윤종원 윤진원

윤태일 이강학 이근직 이낙선 이상귀 이서우 이용택 이우철 이재권 이재준
이종구 이종명 이종원 이철환 이철희 이춘구 이치왕 이학봉 이협우 이희권
임내현 임동구 장경순 전재구 정구영 정형근 조인구 조일제 조한경 진형구
차철권 최규하 최난수 최대현 최문영 최병규 최운하 한경록 한웅진 한종철
한환진 허문도 홍필용 황산덕 황진호

이들을 반헌법행위 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아래 〈표 1〉입니다.

〈표1〉 반헌법행위 분야별 검토대상자 (1차 보고 115명)

분야	115명	시기	명단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22명	이승만 시기	박찬일
		박정희 시기	강창성 구자춘 길재호 김동하 김영광 김용순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문재준 박치옥 백태하 오정근 윤태일 이낙선 전재구
		전두환 시기	김중서 박충훈 이학봉 최규하
		이명박 박근혜시기	양승태
부정선거	2명	이승만 시기	이강학
		이명박 시기	이종명
고문조작 및 테러	53명	이승만 시기	김용진 노덕술 윤기병 이근직 조인구 최란수 최운하
		박정희 시기	김교련 김근수 김기완 김기홍 김동근 김동운 박종연 박창암 서정각 서주연 안경상 윤종원 윤진원 이용택 이재권 이종원 이철희 조일제 차철권 최대현 최문영 홍필용 황산덕 황진호
		전두환 시기	강진규 고영주 김수현 문귀동 박원택 박처원 백남은 서 성 안응모 유정방 윤재호 이종구 이철환 이춘구 조한경 한종철
		노태우 시기	강신욱 김형영 노원욱 신상규 정구영 정형근
간첩조작	27명	박정희 시기	김성남 박래조 박지원 백용기 이희권 최병규 한환진 남궁길영
		전두환 시기	가재환 강충선 경무현 김남옥 김용성 박영길 서재두 성종환 신갑생 심상은 안강민 유병창 이상귀 이서우 이우철 이재준 이치왕 임내현 임동구
학살	7명	이승만 시기	강화봉 김태선 신영주 이협우 장경순 한경록 한웅진
언론 탄압	3명	박정희 시기	방준모 양두원
		전두환 시기	허문도
기타	1명		진형구

이들을 주된 활동 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아래 〈표 2〉입니다.

〈표2〉 반헌법행위 활동시기별 검토대상자 (1차 보고 115명)

시기	115명	분야	명단
이승만 시기	16명	학살	강화봉 김태선 신영주 이협우 장경순 한경록 한웅진
		고문조작 및 테러	김용진 노덕술 윤기병 이근직 조인구 최란수 최운하
		부정선거	이강학
		언론탄압	박찬일
박정희 시기	51명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강창성 구자춘 길재호 김동하 김영광 김용순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문재준 박치옥 백태하 오정근 윤태일 이낙선 전재구
		고문조작 및 테러	김교련 김근수 김기완 김기홍 김동근 김동운 박종연 박창암 서정각 서주연 안경상 윤종원 윤진원 이용택 이재권 이종원 이철희 조일제 조한경 차철권 최대현 최문영 홍필용 황산덕 황진호
		간첩조작	김성남 박래조 박지원 백용기 이희권 최병규 한환진 남궁길영
		언론탄압	방준모 양두원
전두환 시기	39명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김중서 박충훈 이학봉 최규하
		고문조작 및 테러	강진규 고영주 김수현 문귀동 박원택 박처원 백남은 서 성 안응모 유정방 윤재호 이종구 이철환 이춘구 한종철
		간첩조작	가재환 강충선 경무현 김남옥 김용성 박영길 서재두 성종환 신갑생 심상은 안강민 유병창 이상귀 이서우 이우철 이재준 이치왕 임내현 임동구
		언론탄압	허문도
노태우 시기	6명	고문조작	강신욱 김형영 노원욱 신상규 정구영 정형근
문민정부 이후 시기	3명	김대중 시기	진형구
		이명박 · 박근혜 시기	양승태 이종명

이들을 출신 별로 정리한 것이 아래 〈표 3〉입니다.

〈표3〉 반헌법행위 출신별 검토대상자 (1차 보고 115명)

출신	115명	시기	명단
군	22	박정희	강창성 구자춘 길재호 김동하 김용순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문재준 박창암 박치옥 백태하 오정근 윤태일 이낙선 장경순 최문영 한웅진 홍필용
		전두환	이종구 이춘구 이학봉
판사	10	이승만	김용진
		박정희	김기홍 양승태 최병규 한환진
		전두환	가재환 김중서 서 성 이철환
		노태우	노원욱
검사	20	이승만	조인구
		박정희	김성남 박종연 서정각 서주연 안경상 이재권 이종원 이희권 최대현 황진호
		전두환	고영주 김남옥 안강민 임내현
		노태우	강신욱 신상규 정구영 정형근
		김대중	진형구
경찰	25	이승만	노덕술 강화봉 김태선 신영주 윤기병 이강학 최난수 최운하 한경록
		박정희	박래조 박지원 남궁길영
		전두환 노태우	강진규 경무현 김수현 문귀동 박원택 박처원 백남은 신갑생 안응모 유정방 윤재호 조한경 한종철
정부 관료	7	이승만	박찬일 이근직
		박정희	황산덕
		전두환	박충훈 최규하 허문도
		노태우	김형영
기타	1	이승만	이협우
정보부 · 안기부	24	박정희	김근수 김기완 김동근 김동운 김영광 방준모 양두원 윤종원 윤진원 이용택 이철희 전재구 조일제 차철권
		전두환	강충선 박영길 성종환 심상은 유병창 이상귀 이서우 이치왕 임동구
		이명박	이종명
보안사	6	박정희	김교련 백용기
		전두환	김용성 서재두 이우철 이재준

이상 115명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들 9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명은

> 민간인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한경록**
>
>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
>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
>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
>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
> 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의 괴벨스 **허문도**
>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
>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고영주**
>
>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등입니다.

나머지 106명에 대해서는 자료집에 수록된 개요로 발표를 대체하겠습니다.

※ 현재 조사 중인 인물 (총 13명)

: 곽의영 구용서 김성곤 김치열 박종규 사광욱 신직수 안두희 오치성 차지철 최 환 홍종수 홍진기

조사작업의 진행 경과와 방식

1. 조사진의 구성

2018년 7월 현재 저희 위원회에는 상근 6명, 반상근 5명 등 총 11명의 조사위원이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모두 8명으로 상근 4명, 반상근 4명입니다. 이밖에 행정요원 2명 상근, 연구보조원과 조교 등 8명이 반상근 형태로 자료조사와 연구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원	상근	반상근	박사학위	
책임편집인	1	1		1	역사학 1
조사위원	10	5	5	7	정치학 2, 사회학 2, 역사학 2, 교육학 1
행정요원	2	2			
연구보조원	4		4		
조교	4		4		
총원	21	8	13	8	

2. 조사의 결과물로서의 반헌법행위자열전과 반헙법행위자 아카이브

본 위원회는 발족 이후 16개월에 걸친 예비작업 끝에 2017년 2월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A급에 해당하는 집중검토 대상자 이외에 B · C급에 해당하는 관련자 2,500여명의 명단을 사건 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사위원들의 전문분야, 관심도, 상근 · 비상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배분하였고, 2017년 5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된 집중검토대상자들은 특정한 반헌법사건에서 개인이 수행한 역할과 관련되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반헌법행위자열전은 그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대기를 재구성하려 합니다. 그가 반헌법행위를 기반으로 그 후 어떻게 출세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전체를 보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비록 반헌법행위로 인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역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컨대 저희는 한 개인의 일생에 대해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개인에 관한 자료를 망라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최종결과물은 당연히 반헌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전기인 열전입니다. 대상자의 중요성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의 분량이 천차만별이고, 개인에 따라서는 몇 권의 책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깊게 다뤄져야 할 인물도 있지만, 본 열전에서는 개인당 평균 A4 8-10매 내외로 정리할까 합니다. 많은 경우 A4 8-10매에 담기 힘들만큼 자료가 풍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에 발표한 115명 중 15명 가량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거의 구할 수 없어 개인별 열전 편찬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몇 명을 묶어 서술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열전 편찬을 위해서는 조사위원들이 개인별 보고서를 A4로 적게는 40-50매, 많게는 500매 가량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는 개인별로 수백에서 수천 매가 될 것인데, 별도의 자료파일로 만들 예정입니다. 조사위원들은 열전의 집필자에게 보고서와 수집된 자료 파일을 보내기에 앞서 보고서 내용을 축약한 A4 4-5매 분량의 〈열전개요〉를 작성합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9명의 행적에 대한 글이 바로 현재 조사위원들이 작성한 〈열전 개요〉입니다. 열전의 집필자들은 본 위원회가 제공하는 열전개요와 인물별 보고서, 자료 파일을 토대로 집필자 개인이 각각 대상자에 대한 열전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접하게 될 최종결과물은 이렇게 작성되는 열전이지만, 이 과정에서

작성된 상세한 개인별 보고서와 방대한 개인별 자료는 아카이브로 저장되어 향후 연구자들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열전 수록대상 예정자 400 여명 외에 B · C급 행위자 2,500명의 명단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000명 정도를 선별하여 A4 4-5매 정도의 인물 개요와 참고자료 목록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아카이브가 마련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들 반헌법행위자 거의 대부분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시민여러분과 더불어 만드는 반헌법행위자열전과 반헌법행위자 아카이브는 이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3. 조사대상 자료와 아카이브

한 개인의 일대기를 추적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장, 총리, 장관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경우 자료가 너무 많아 걱정이지만, 자료가 전혀 없어 막막한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의 전기나 회고록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출생지, 가족 배경, 학력 등 기본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반헌법행위자들 중 하위직에서 학살이나 고문을 직접 실행한 자들의 경우는 이름 이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본 위원회 조사위원들은 가히 접근가능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 관련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물과 역할에 따라, 활동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성지순례 하듯이 한 인물을 검색할 때 반드시 점검하는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검색 사이트]

1. 조선 인물DB, 중앙일보 인물DB, 한국 인물정보DB, 인명록, 네이버 위키백과 등에서 약력 검색
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신문기사 검색

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신문기사 검색

3. 카인즈 신문기사 검색

4.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검색

5. 구글 검색(인명 및 사건 관련어 조합)

6. DBpia 검색

7. 잡지 검색: 월간조선, 신동아, 월간중앙, 정경연구, 월간말 등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9. 국회도서관 검색,

10. 국회회의록 시스템 검색

11. 국가기록원

12. 국무회의록 검색

13. 관보 검색, 판결문 검색

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DB: 고문 진정서, 항소, 상고, 호소문

15. 조선일보, 중앙일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16. 스크랩, 아이서퍼 등을 통한 2000년 이후 신문자료 검색

17. 단행본: 본 위원회 소장 현대사 자료 및 각종 회고록, 전기, 사사, 지방지 등 1만권

오늘 발표한 115명에 대한 보고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각 조사위원들의 공동회람과 책임편집인의 상세한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됩니다.

4. 향후 일정과 계획

115명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작업을 계획하면서 본 위원회는 반헌법행위자 1인당 조사에 상근 조사위원이 4주, 반상근 조사위원은 5-6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이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래 위원회의 바램은 2019년 말까지 2년 반에 걸쳐 405명의 조사를 완료하는 것었지만, 지금의 속도로 볼 때 405명의 조사보고서를 완료하는 시점은 빨라야 2021년 중반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에 100명을 조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획 또는 희망보다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정상궤도를 꾸준히 걸어왔고, 아직 갈길이 멀지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정의 단축을 위해 조사완료된 열전수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절한 필자에게 집필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각계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지식인이나 논객 300-400명에게 열전의 집필을 의뢰할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현대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필력을 갖춘 분이라면 일정한 수준의 반헌법행위자열전을 무리없이 서술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성금과 조사위원들의 재료 다듬기와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 논객들의 마무리를 거쳐 반헌법행위자열전이 편찬될 것입니다.

400여명의 열전을 한꺼번에 펴낼지 집필이 완료된 사람들을 시기나 사건 성격과 상관없이 순차적으로 낼지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아마도 절반 이상의 조사를 완료한 후 결정해도 될 것입니다. 400명 열전을 한꺼번에 간행한다면 아마도 2022년이나 2023년이 될 것이고, 순차적으로 간행한다면 2021년 첫 권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초고가 완성된 뒤에도 세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수록 대상이 된 인물 자신이나 유가족 측의 검토와 이의제기 과정입니다. 본 위원회는 초고가 완성되면 당사자나 유가족이 검토하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둘째, 현대사, 정치사, 헌정사 전공자 등 해당 인물과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초고에

혹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또다른 해석을 기술할 필요가 있는지 내용 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셋째, 변호사들과 법학 교수들에게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헌법이 파괴되고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에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록하거나, 개인 감정에 치우친 서술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리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재정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작업은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입니다. 현재의 인원만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디기는 하지만, 사실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연구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재정형편 상 조사위원의 증원도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촛불 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진보언론이나 일부 단체들에 대한 후원이 급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회의 형편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적폐 청산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 표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

변상철

'지금여기에' 사무국장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반헌법 관련자들의 서훈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헌정파괴, 국민 기본권 유린 등 반헌법적 행위가 분명히 밝혀진 인사들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과 관련된 관련자 수십 명, 인혁당 사건, 김근태, 심진구 사건 및 중부지역당 등에서 고문을 한 수사관 등은 여전히 서훈이 취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간첩사건이 재심에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 고문 · 가혹행위 사실과 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되고 있으나 사건 조작에 관여한 수사관, 검사, 법관들이 받은 훈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현재까지 기존 간첩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모두 140건입니다.(국가폭력피해자지원단체 '지금여기에' 통계) 이 사건과 관련되어 훈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관은 모두 180여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근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훈이 취소된 사례가 없습니다.

신귀영 사건의 전 부산시경 소속 이덕만 수사관은 1985년 보국훈장 광복장을, 이준호, 배병희 사건의 전 서울시경(옥인동대공분실) 권태한 수사관은 1985년 보국훈장 광복

장을, 이장형 사건의 전 치안본부 대공분실 백남은 수사관은 1985년 보국훈장 광복장을, 박노수 김규남 사건의 중앙정보부 수사관 2인은 1976년,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습니다.[1]

행정안전부는 서훈대상자 유죄 판결시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훈취소를 즉시 처리하여 법의 형평성과 국민 감정 등에 반하는 서훈 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서훈 취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5. 31 서울중앙지법에서 고문과 관련되어 재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고병천은 고문한 사실을 부인하고 고문에 관한 위증 혐의로 유죄판결(징역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서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처가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 사유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 커다란 공적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널리 알려야할 이들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상세 서훈 내용은 현재 대부분 알려지지 않고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서훈 정보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를 통해 간첩사건으로 조작된 이들의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훈의 상세 사유와 출생년도 정도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서훈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서훈(또는 상훈공적)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민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 잘못 결정된 상훈을 바로 잡고 이후 결정되는 상훈 역시 올바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1 이 밖에
– 재일동포 관련 재일동포 관련 최양준 간첩사건의 부산보안부대 수사관, 1985 보국훈장 광복장
– 구명서 간첩사건의 보안대 수사관, 1994 보국훈장 광복장
– 이성희 간첩사건의 중정 파견 검사1명, 수사관 4명 1974 훈장. 울릉도간첩사건 유죄 선고자 32명중 28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또한 현재까지 판결로 국가폭력이 인정된 327명의 국가폭력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수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3,800여억 원 한국일보, 2014.10.21.) 피해자의 가족의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피해자 개인의 국가배상금만 따지더라도 1,449억 4천 8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자와 국가에 커다란 손해를 끼친 담당 수사 관련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무죄사유가 고문, 불법감금 등 불법행위에 의해서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그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국가배상금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심 판결문을 검토하여 그 불법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T/F를 구성, 구상권 청구를 권고하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그 즉시 구상권을 청구토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과거사 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 기구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전담토록 하여 지속적인 과거사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전개요 및 인물소개

■ **열전개요 9인**

1. 민간인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한경록
2.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3.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4.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5.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6. 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의 괴벨스 허문도
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8.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고영주
9.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 **인물소개 115인** (가나다 순)

가재환 강신욱 강진규 강창성 강충성 강화봉 경무현 고영주 구자춘 길재호
김교련 김근수 김기완 김기홍 김남옥 김동근 김동운 김동하 김성남 김수현
김영광 김용성 김용순 김용진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김중서 김태선 김형영
남궁길영 노덕술 노원욱 문귀동 문재준 박래조 박영길 박원택 박종연 박지원
박찬일 박창암 박처원 박충훈 박치옥 방준모 백남은 백용기 백태하 서 성
서재두 서정각 서주연 성종환 신갑생 신상규 신영주 심상은 안강민 안경상
안응모 양두원 양승태 오정근 유병창 유정방 윤기병 윤재호 윤종원 윤진원
윤태일 이강학 이근직 이낙선 이상귀 이서우 이용택 이우철 이재권 이재준
이종구 이종명 이종원 이철환 이철희 이춘구 이치왕 이학봉 이협우 이희권
임내현 임동구 장경순 전재구 정구영 정형근 조인구 조일제 조한경 진형구
차철권 최규하 최난수 최대현 최문영 최병규 최운하 한경록 한웅진 한종철
한환진 허문도 홍필용 황산덕 황진호

한경록

(韓景祿, 1912 ~ 1962.8.1.)

'민간인 학살' 경찰 책임자 한경록 "A, B, C로 나누어 싹 없애라" 지시 · 명령

〈LIFE〉지가 주목한 '이승만의 친구'…보도연맹, 형무소재소자, 부역혐의자 학살에 직접 관여

일제강점기 친일경찰 출신인 한경록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 핵심 가해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다. 특히 그는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학살 사건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부역혐의자 학살 사건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였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선정한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중복 포함 628명) 가운데 민간인 학살 분야에서는 일선 경찰 중 유일하게 3관왕(위의 세 사건)을 달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만큼 악명 또한 높았다.

1912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어난 한경록은 일본 동경 니혼대학 법률과를 중퇴한 뒤 1939년 12월 일제강점기 경부보 시험에 합격[1] 하면서 일제 경찰에 투신했다. 당시 경부보 합격 동기 중 일제 하 고문경찰로 악명 높았던 하판락[2]도 포함돼 있다. 한경록은 함남 신흥경찰서 경부보(1940년)[3]로 근무한 뒤 원산경찰서 사법주임을 지냈다. 해방 후 제6관구(전북)와 제8관구(전남) 경찰청[4] 공안과장과 수사과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1 조선총독부관보 제3863호 소화14년(1939년) 12월 5일자.

2 1934년 순사로 경찰을 시작한 뒤 1939년 경부보 시험에 합격했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고문경찰이었던 하판락은 고문하는 귀신이라는 뜻의 '고문귀'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악질이었다. 오늘날 고문경찰의 대명사가 이근안이라면, 일제강점기 최고의 고문경찰은 하판락으로 통했다.

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자료

4 1946년 4월 미군정기는 각급 경찰서를 관구로 편성해 운영했다. 이후 1949년 2월 이승만 정부에서 관구경찰청이 폐지되면서 경찰서명이 원지명으로 환원되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전남도경 보안과장을 지냈으나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가 저술한 『광주전남현대사(2권)』(실천문학사, 1991.)에 따르면 전남도경 보안과장이던 한경록이 순천경찰서에 파견됐을 때 봉기군의 공격이 이뤄졌고, 이때 한경록은 "하수구나 분뇨통 속에 숨어 살아난 일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태의 『여순병란(상)』(청산, 1994.)에서도 한경록에 대한 행적이 짧게 기술돼 있다. 이에 따르면 순천경찰서장 양계원 총경과 순천 감찰서장 한운경 감찰관, 그리고 광주에서 출장 온 한경록 전남도경 보안과장(총경)이 여순 봉기군에 쫓겨 순천경찰서 담을 넘어 탈출하면서 순천경찰서는 봉기군 수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경록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책임자로 활동한 시기는 경북도경국장 재임 시절이다.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고 전투가 고착상태에 놓이면서 경남과 경북은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학살 사건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한경록은 9 · 28 서울수복 이전까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다. 1960년 5월 23일자 〈대구매일신문〉은 "1950년 8월 13일 취임하였던 조준영 경북도지사는 6 · 25 사변 당시 가창골서 자행된 학살은 당시 경찰국장인 한경록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예비검속을 실시한 요시찰인을 군 당국서 인계받아 처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골은 한국전쟁 중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사상범들을 비롯해 모두 1만 명 가량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남한 최대 규모의 학살터로 지목되고 있다. 전쟁 발발 초기 가창골 학살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950년 7월 7일부터 3일간 제주 4 · 3사건 관련자 140명과 여순사건 관련자 82명이 학살됐으며,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대구형무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 1196명이 군경에 의해 학살되는 등 현재 확인된 공식기록만 2천명이 넘는다. 가창골 이외에도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역시 형무소 재소자는 물론 인근 지역 보도연맹원을 포함해 모두 3,500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두 군인과 경찰에 의한 집단 학살이었다.

경북도경과 대구지역 경찰들은 당시 집단 학살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한 이모씨는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조사에서 잡혀온 보도연맹원들을 트럭에 태우고 가창골짜기에 가서 직접 처형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경 특경대에 근무한 또 다른 이모씨도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해 사상범들을 트럭에 태워 가창골짜기 등으로 데려가 직접 총살시켰다고 진술했다.[5] 이들은 모두 한경록 지휘 아래 있던 일선 경찰들이었다.

한경록은 1950년 8월 4일 경기도경국장에 보임됐다. 하지만 수복 이전이었기 때문에 환도 시까지 경북경찰국 비상경비사령관을 겸했다. 9 · 28 서울수복 후 인천항을 통해 경기도로 들어온 한경록은 이후 '잔류파'[6]에 대한 대대적인 부역혐의자 조사를 지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선 경찰들에게 부역자 처리를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부역혐의자는 취조 후 A, B, C로 구분됐다. A급은 즉결처분, B급은 판단유보, C급은 훈방 처리토록 했다. 하지만 한경록은 애초 이를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가평경찰서 설악지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함모씨는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조사에서 한경록이 인천상륙작전 직후 인천의 한 학교 운동장에 각 지역으로 복귀할 경찰관을 집합시킨 뒤 "A, B, C로 나누어 싹 없애라"라고 연설했다고 밝혔다.[7] 실제 가평 지역에서 B, C급으로 분류된 이들 중 살아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또 1950년 11월 중순 중공군 투입으로 전세가 밀리자 한경록은 관할 경찰서에 후퇴준비를 지시하면서 '전세가 불리하여 후퇴하게 되면 A급 범죄자의 경우 서장의 재량에 의해 처단하고, B급(재소자 포함)은 엄격히 교육하여 훈방 처리하되 노동당에 다시는 가담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역자 처리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8]

---

5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122쪽.

6 서울 한강교 폭파로 피난을 간 '도강파'와 그렇지 못한 '잔류파'가 분리됐다. 그런데 9.28수복 후 서울로 돌아온 도강파는 잔류파에게 부역혐의를 덧씌우며 이들을 탄압했다. 전쟁 초기 보여준 무능과 패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이승만 정부 하에서 도강파는 애국자로, 잔류파는 부역자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7 진실화해위원회보고서, 「경기 가평 · 포천 부역혐의 희생사건」, 9쪽.

8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서울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478쪽.

경기지역 부역혐의자 색출 및 처리작업을 담당한 한경록은 1951년 7월 29일부터 1952년 11월 7일까지 전남도경국장으로 전보됐다.[9] 이 무렵 호남지역은 후방에 잔존해 있던 빨치산 토벌작전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지리산 대토벌을 위한 백야전전투사령부(사령관 백선엽)가 꾸려진 것도 1951년 11월이었다. 1952년 1월 3일 한경록은 후방 치안확보 및 공비소탕 등의 공을 세워 트루먼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유' 훈장을 받았다. 당시 〈조선일보〉에 따르면 동 훈장은 한국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첫 훈장이었다.

한편, 한경록은 1952년 4월 24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서민호 의원 사건'을 담당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민호 의원은 '거창양민학살사건 국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지냈으며, 그가 조사 단장으로 있을 때 자신을 암살하려던 대위 서창선을 살해하면서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이에 앞서 1952년 초 반이승만 세력을 중심으로 국회는 의원내각제를 강력히 추진했고, 이승만 정부는 직선제 개헌을 통해 이승만 독재 정권을 연장하려 했다. 4월 20일 이승만의 최측근 장택상이 돌연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이후 '개헌안 4개 원칙'이 발표되면서 개헌안 서명 의원들에 대한 포섭 및 분열이 본격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 추진파의 맹장이던 서민호 의원이 구속되면서 전선은 흐트러졌다. 결국 그해 7월 7일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발췌개헌이 공포됐다.

1952년 12월 〈LIFE〉지에 화려하게 보도된 한경록은 외신 기자에게 자신을 '이승만의 친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독직(瀆職)사건에 연루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2월 30일 "가사 형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한경록은 이듬해 1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됨으로써 사표가 처리됐다. 반면, 한경록에게 상납비를 제공한 순천경찰서장 박사기는 1월 1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경찰복을 벗었다. 1953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 일선 경찰서장의 비위를 보도하면서 "이래서 백성과 하부직원은 운다"고 전했다.

한경록은 경찰을 그만둔 뒤 제7~10대 함경남도 북청군민회장(1956.5~1964.8, 함

9 "경무관급 대이동" 〈동아일보〉 1951.7.29.

남동우회 총무 겸임)을 지냈다. 하지만 1960년 3 · 15부정선거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함남지사 이윤식은 구속됐고, 한경록 역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961년 4월 1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윤식 전 함남지사는 3 · 15 당시 도민으로부터 거둬들인 5백만환을 부정선거 자금으로 쓴 데 이어 도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선동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함남동우회 사무국장으로 있던 한경록씨가 주동이 되어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았다. 한편, 민간인 학살을 비롯해 숱한 악행을 저지른 한경록은 1962년 8월 13일 뇌일혈로 사망했다. 그의 나이 51세였다.

박찬일

(朴贊一, 1921 ~ 2005)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자 4 · 19혁명 이후 경무대 '인의 장막'의 최정점

"제정 러시아의 라스푸틴(Rasputin)같은 섭정, 국민들의 원성의 제1호" 비판도

박찬일은 1954년 4월부터 1960년 이승만대통령이 하와이 망명하기까지 경무대 비서관을 지냈다. 4월 혁명 이후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의 하와이 망명에 필요한 절차를 극비리에 추진했다. 그만큼 이승만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받는 최측근이었고, 허정에게 이기붕의 망명을 요청[10] 할 만큼 '이기붕의 사람'으로도 알려졌다. 세상은 이승만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고 점차 독재정치로 치달아가는 것이 노령의 이승만대통령의 측근들이 '인의 장막'을 쳐서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정점에 박찬일이 있었고 그의 권세는 '서대문 경무대'로 통하는 이승만정권의 2인자였던 부통령 이기붕마저 쥐어흔들면서 횡행천하로 무소불위 해오던 부통령급 비서관이었다.

4 · 19혁명 이후 경무대 '인의 장막'의 총 조종자로 직권을 남용하여 업무횡령 및 수억 환에 달하는 부정축재를 한 것과 국사를 독직한 것 등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박찬일에 대한 진정 · 고발 · 고소사건이 쏟아졌고 온갖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수사결과는 부정혐의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확증 부족이었다. 겨우 '공용서류무효' 죄로 구속되어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3 · 15 부정선거 및 4 · 19 발포 원흉들 중에서 유일하게 혁명입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피해서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샀다. 서대문 형무소 복역 중 5 · 16쿠데타가 발생하여 부정축재자로 걸렸고, 혁명검찰부에

10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샘터사, 1979, 227쪽.

의해 부정축재와 '국사에 관한 독직' 죄목으로 다시 기소되었다. 혁명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상소심판부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1962년 9월 만기 출소하였다.

경무대 비서관들 중[11] 박찬일이 경무대 '비서정치'를 주도했다. 당시 경무대 비서실에서 경리를 담당했던 김상래(金相來)의 회고담에 의하면 1955년 이후 이승만 정권 후기의 비서실 진용은 이랬다. 본관에는 수석비서관 격인 유창준, 박찬일, 구본준 비서가 근무했고, 별관에는 이원희, 최치환, 이승근, 홍의식 등이 근무했다. 1956년까지는 유창준비서가 가장 중요한 면회 관계 일을 맡았으나 박찬일비서가 인계받은 이후 유창준은 4 · 19까지 거의 맡은 일이 없었다. 박찬일 비서가 면회, 섭외, 각부 지시사항까지 담당한 최고 측근이 되었고, 구본준 비서는 담화문을 담당했다.[12]

이러한 그의 존재와 역할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보동향을 수집하여 워싱턴에 보고하는 주한 미국 기관들의 다양한 문서[13]에서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국대사 다울링 대사는 1959년 8월15일 국무부에 보내는 전문[14] 에서 "이 대통령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요즘 그는 서류도 거의 안 읽고 사람도 안 만난다. 모

11 이승만 정권 말기 경무대 비서관들은 이원희, 유창준, 박찬일, 구본준, 최치환, 이승근, 홍의식, 김상래 등이 있었다.

12 "이원희씨는 각부의 결재서류 담당이었다. 경찰국장 출신인 최치환씨는 정보와 결재서류를 맡았다. 이승근씨는 차익교씨 후임으로 건의서, 진성서, 탄원서 등 민원업무를 처리했으며, 홍의식씨는 서무당당이었다. 나는(김상래) 경리를 맡았었다." 경무대 사계, [김상래씨 회고담] 후비 비서실. http://m.cafe.daum.net/syngmanrhee/HGEw/93?q=D__-d15Yb4U.A0

13 2002년 10월21일부로 비밀이 해제되어 공개되었다. 중앙일보, [뉴시스] 2015.07.22. http://news.joins.com/article/18289969

14 FRUS 1958-1960. Volume XVIII. Japan; Korea, January 1958-November 1959, U.S. Interest in the Military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troduction of Dual-Capable Weapons; North Korean/Chinese Proposals for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From Korea and U.S./U.N. Responses (Documents 204-284)
"영부인(Mrs. Rhee)이 대통령을 괴롭히는 많은 일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관 박찬일(Park Chan-il)의 협조 하에 그가 모를 것이라 생각되는 경우 이따금 그의 이름을 빌어 자신이 결정을 내리곤 했던 것은 오래된 관행이었다. 최근 대통령의 체력 및 정신력이 더 약해지고, 통제되지 않은 외부 정보를 접할 일이 더 적어지면서(그는 몇 개의 신문을 읽고, 소수의 사람들을 만날 뿐임) 그처럼 영부인이 결정을 할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아마도 영부인의 암묵적 묵인 하에 박찬일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특히 중요하거나 논쟁적인 문제의 최종 결정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적어도 대통령의 오랜 방침들과 생각들의 틀 안에서 박찬일이 편향된 설명을 통해 대체로 자신이 옹호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사실 점점 더 많은 정책 결정을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박찬일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항상 누군가와 상담하는 중요한 문제의 경우일지라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전문 해석)

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사안을 보고하지 않고, 30대 초반에 불과한 박찬일과 상의하는 등 비서가 대한민국의 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장관들도 대통령을 만나기가 힘들고 장관들이 올리는 보고서 결재를 박찬일 비서에게 맡기면서 (박찬일의) 위세가 급속도로 상승되고 있다고 파악, 경무대 내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박찬일은 누구인가?

박찬일은 1921년 박인서(1886년 경북 봉화 생)의 외동 아들로 경북 대구에서 출생했다. 부친 박인서는 1919년 영주 봉화 지도자로서 3.1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마포형무소에서 2년 복역하고 출감했다. 가족관계는 누이 박명교(전 삼호그룹(재벌)회장 정재호(1913년생)[15]의 아내)와 장인 한재달(전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사장)이 알려져 있다. 한재달은 아버지 박인서와 함께 대구 남산교회 장로였다. 1936년 대구 계성중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계성중학교 3, 4학년 학생으로는 신도환(1922년생, 대한반공청년단 단장), 정해덕(성창기업 장남, 성창해운 대표) 등이 있었다.[16] 1943년 일본중앙대학 전문부를 나왔고, 1946년 경북여고에서 잠시 교편을 잡기도 했다. 1948년 외무처가 발표한 도미 유학생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그의 경력을 보면 미국 L.A.주립대학을 졸업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외무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박찬일은 웨스트몬트대학[17]으로 보도되었다. 귀

15 정재호(1913–2005년). 경북 예천 출신. 삼호무역과 삼호방직, 조선방직, 삼호공업사 창립 사장. 계명대 이사장. 정수장학회 설립 멤버. 부인 박명교, 4남2녀. 섬유산업을 발판으로, 권력자 이기붕의 비호 및 박찬일 등의 배경으로 한국전쟁 이후 단기간에 정상급 재벌이 되었다가, 4 · 19혁명과 5 · 16쿠데타의 정치격변을 거치면서 치명타를 맞고 다른 1950년대 재벌과는 달리 3공화국하의 경제개발 드라이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많던 계열사를 모두 잃어버린, 풍운의 기업인이다.

16 내가 겪은 20세기 춘보 김태묵의 회고, 1973.7.21. 경향신문.

17 웨스트몬트 대학은 1937년 설립된 미국의 사립대학으로 캘리포니아 주 산타 바바라에 위치하고 있다. 박찬일이 웨스트몬트에서 L.A. 주립대학으로 옮긴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다른 자료에는 아이오와 주립대 졸업이라고 나오기도 한다. 이기붕이 아이오와주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기붕(1896)은 1915년 서울 보성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도미했다. 아이오와주의 패사디나시 헌팅턴호텔 등에서 일하면서 고학과 노동으로 학비를 조달했다. 1923년 미국 아이오와주 데이버 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뉴욕에서 허정(許政) 등과 함께 『삼일신보 三一申報』 발간에 참여하다가 1934년 귀국하였다. 귀국 후 허정과 충북 영동의 광산에 투자하여 광산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국 후 이기붕의 추천으로 경무대 비서관이 되었다. 경무대 비서실[18] 기능은 연락, 의전, 서류작업 등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지만 정권 말기에 박찬일을 중심으로 한 비서진의 권력이 세졌다. 이른바 경무대 '비서정치'의 실세인 박찬일의 권세는 '서대문 경무대'라 불린 이기붕을 능가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1960년 6월호 사상계는 이를 '경무대의 인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다. 군과 경찰 인사는 곽영주 경무관이 전담하고, 일반인사는 '영부인 프란체스카의 암묵적 동의를 받아' 박찬일 비서가 관여했다. 박찬일은 3 · 15부정선거 원흉들이었던 최인규 내무부장관(사형), 이강학 치안국장(사형언도 후 감형), 곽영주 경무관(경호실장-사형), 신도환 반공청년단장(사형언도 후 감형) 그리고 이승만의 비자금을 숨겨둔 장본인으로 지목되었던 유태하 주일대사(징역8년 선고) 등과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었다. 삼성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1950년대 삼호재벌의 정재호 와는 처남매부 사이였다. 4 · 19혁명 발발 1년 전인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비밀리 한국을 방문한 미하원 저드 의원[19]을 경무대로 안내한 미대사관의 와츠 서기관은 회고 증언에서 "이 대통령이 기력이 쇠약한 상태로, 분명히 용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박찬일 비서에 대해 "제정 러시아의 라스푸틴(Rasputin)같은 섭정을 하고 있다. 대통령을 업고 전횡을 휘두르는 그는 국민들의 원성의 제1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4 · 19 혁명이 발발하고 3 · 15부정선거 및 4 · 19발포 명령 관련자들이 속

18 우리나라의 대통령 보좌기구, 비서실이 제대로 구성된 것은 1964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때부터다. 정부수립 초기에 중앙청에 집무실이 있었던 이승만대통령은 비서실장은 임명하지 않은 채 이기붕(수석) 등 5-6명의 비서를 두었다. 1949년 9월 대통령령으로 비서실 직제가 처음 마련되었으나 이 대통령은 4 · 19혁명으로 하야할 때까지 정무 박찬일, 행정 조재호, 공보 김광섭, 경호에는 곽영주 등의 조촐한 비서실을 유지했다. 이성춘, 매일신문, 2008.6.23.

19 미국이 4 · 19혁명보다 근 1년 앞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959년 여름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원의원 월터 저드 특사를 비밀리에 보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권유한 것이다. 뉴시스가 21일 입수한 미외교연구협회 '오랄 히스토리(구두 역사)'에 따르면 4 · 19 혁명 당시 미 대사관 부대사였던 마샬 그린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비밀특사로 월터 저드 의원을 한국에 보내 이승만 대통령이 퇴진하고 후계자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을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미 대사관 정무과 윌리엄 와츠 서기관도 별도의 증언회고록을 통해 "저드 특사를 비밀리에 경무대로 안내해 이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 배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연방하원의원인 월터 저드 특사의 행적은 미국 정부의 공식 채널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와츠 서기관은 1995년 8월7일 미외교연구위원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36년간이나 비밀로 유지한 역사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아이젠하워의 비밀특사는 국무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려운 건강문제에 직면했고 30대 비서 박찬일과 자유당의 일부 관료에 의해 국사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특단의 조치였다. 〈뉴시스 2015년 7월 22일 송고기사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23/2015072300452.html

속 검거될 때,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연히 박찬일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쏟아졌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굵직한 혐의만 해도 여러 가지였다. ① 제일은행 불하 당시 매형인 삼호 정재호에게 헐값 낙찰[20] ② 공보실장 전성천에게 압력을 가하여 경향신문 폐간 ③ 조선방직과 동흥상사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개입. 채권자 신원조사 등으로 압력을 가하여 채권을 포기케 함(조선방직 부정사건)[21] ④ 미국에서 보내 온 보육원 구호물자를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횡취[22] ⑤ 관재청장 유완창씨에게 압력을 가하여 미도파 건물 임대계약 체결 당시 당초의 계약자인 대한부동산주식회사 대표 유덕영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무역협회(대표 최순주 씨) 앞으로 계약을 경신하도록 종용, 대통령 유시라는 명목으로 허위공문서를 발송하여 관재청으로 하여금 유씨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케 함[23] ⑥ 신도환이 출마한 5 · 2선거(4대 민의원) 당시 선거소송으로 요청된 부정투표의 감정을 박찬일과 최치환 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압력을 넣어 부당하게 감정했다는 것[24] ⑦ 경무대 비서직을 남용하여 정부 각 부처와 대기업으로부터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여 부정축재를 하였다는 것 등 여러 가지 혐의와 고소 · 고발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되었다. 더구나 '인의 장막'

20 1956년 4월 제일은행 귀속주 불하 시 낙찰자 윤석준(조선제분사장)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에 압력을 가하여 고의로 7차례 유찰시켜 특정인(매부 정재호 삼호방직)에게 낙찰케 했다는 혐의. 제일은행주는 8차입찰시의 최고입찰자인 윤석준(조선제분사장)씨와 2위 입찰자인 강일매(동화백화점사장)씨의 사망으로 3위 입찰자인 정(정재호)씨에게 낙찰됨.

21 상인들로 구성된 「조선방직 상인채권청산대책위원회」 및 「동흥상사주식회사」 에서는 정재호 씨 일파가 관여하고 있는 「조선방직」 의 운영권 인수에 있어서 박찬일과 곽영주의 압력이 작용되어 시가보다 헐값인 5천만 환에 인계되었을 뿐 아니라 인수당시 각 지방의 영세상인 1,300여 명으로 구성된 「일수판매거래처」 인 「동흥상사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제품대금선납금」 조로 받아들인 채무액 16억 7천여만환 중 9억 4천여만환의 지불을 회피하고 있는 반면 3 · 15선거 당시에는 정치자금으로 9억여 환을 제공하였다고 폭로함. 1960.7.3. 경향신문.

22 1960.6.12. 동아일보. 1957년 미국영화 「전송가」 에 출연하기 위해 도미했던 「한국보육원」 원아 30여 명이 미국 각지를 순회할 당시 미국 각계 인사가 한국보육원에 원조한 것인데 그 후 이 구호물품은 해군함정 1척에 실려 부산에 들어왔다 한다. 이 때 「박」 은 「후란체스카」 여사와 결탁 전기 구호물품 중 의류 · 악기 · 서적 등 여섯 「츄럭」 분을 경무대 창고에 보관 「한국보육원」 에 넘겨주지 않고 경무대서원 20여 명을 동원 이를 서울시내 동대문시장 상인들에게 팔아 처분했다는 것이다.

23 '박찬일 피소, 이박사 사인 위조', 조선일보, 1960.6.22. 대한부동산 주식회사사장 유덕영씨는 박찬일이 당시 무역협회회장 최순주씨와 짜고 1954년 9월 미도파 건물을 빼앗기 위해 대통령 유시를 팔고 가만(可晩)이라는 이대통령 '싸인'을 위조해서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고 서울지검에 고소를 제기했다.

24 5 · 2선거(1958년) 때 대구 갑구는 민주당 서동진 씨가 당시의 무소속 입후보자 신도환과 대립하여 결국 부정선거로 패배하게 되자 서 씨는 대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 위조투표용지를 감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인데 이 위조투표용지의 진부를 감정하고 있던 국립과학연구소에 대하여 박찬일이 압력을 넣어 허위감정을 하였다고 검찰에 알려지자 그 진부를 가리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압수에 착수한 것이다.

이 쳐 있던 이승만정권 말기 경무대는 홍진기(내무장관), 박찬일(비서관), 곽영주(경호실장) 의 3인 치하였고, 4 · 19 당일에도 상기 3인이 경무대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무대 앞 발포모의에 박찬일도 가담했다는 진술[25]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혐의에 대한 확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찬일의 구속은 계속 미루어졌다. 또 한 가지 구속이 이루어진 다른 이유는 경무대비서관의 직무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필하는 가운데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등 법적 구속요건이 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26] 그래서 겨우 1960년 8월 5일 '공용서류무효'혐의로 구속[27]되었다. 각종 혐의에 대해 네 차례의 공판이 진행되었고, 사건 관계자들이 소환되어 증언도 했지만, 뚜렷하게 불리한 증언이 없었고 박찬일 자신은 공소사실을 일괄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다'는 모호한 진술로 발뺌했다. 1960년 11월 19일 다른 3 · 15부정선거 원흉들은 모두 혁명 입법(특별법)을 기다리며 공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유독 박찬일 만 '공용서류등록무효'죄[28](일반법)가 적용되어 3년 구형을 받았고, 1960년 11월 25일 1심 공판에서 2년 언도를 받았다.[29] 이마저도 1961년 5월 15일 서울고법(조창섭 부장판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 후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 중 5 · 16 쿠데타가 발생했고 박찬일은 26명의 부정축재자 중 한명으로 걸려서 혁명검찰에 의해 부정축재와 국사독직죄목으로 다시 기소되었다. 1962년 1월 26일 박찬일(기결수)에게 부정축재처리법 25조 2항, 동법 2조 2항과 4항을 적용하여 징역 4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그러나 1962년 2월 1일 혁명재판소 5심판부는 박찬일에게 징역 2년을 언도했고[30] 다시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에 의하여 1962년 4월 10

25 경향신문, 1961.2.18.

26 신용순, '박찬일은 왜 잡지 않는가?' 『주간춘추』, 제4호(1960. 7월), 46쪽. 박찬일은 경무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으로 국무원사무처의 공식 발령장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27 경향신문, 1960.8.5.

28 '공용서류무효'죄란 박찬일이 경무대 결재비서로 재직할 당시 동화통신사가 에이피통신사와 수신계약체결을 하기 위해 재무부로부터 77,000달러 정부 불을 불하 받는 경위에 관한 경무대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고 찢어버렸다는 것이다.

29 동아일보, 1960.11.26. '호가호위(狐假虎威)로 천하를 호령했건만 꼬리가 안 잡혀 붙든 것이 겨우 공문서무효죄라니 과연 호족에 속하는 모양'

30 동아일보, 1962.2.1. 달러건 무죄, 홍삼건만 유죄(각주 31참조).

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31] 이로써 1962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그의 행적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1970년대는 계성중학 동창이었던 성창기업 정해덕이 운영하는 반도목재와 성창해운의 사장직을 거쳤으며,[32] 1980년대는 한보건설 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중동 요르단(한인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33] 몇 개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볼 때 실업인으로 살았으며, 전직 경무대비서관으로서 남긴 생전의 증언[34]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경무대 '인의 장막'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으로서 역사에 책임 있는 증언을 남긴 것이 없다. 1984년 한국농촌문화연구회[35] 이사 직함으로 미국 홀트국제아동복지회가 제정한 '헤리 홀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36] 2005년 이민 간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서 사망[37] 한 것으로 보인다.

31 동아일보, 1960.4.11. 정재호에게 AP 통신계약금으로 매수되도록 협조했다는 7만 달러 중 정부 보유불은 일만 7천 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 66,000달러는 '아이 · 씨 · 에이'불이므로 10만 달러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 보유불을 부정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정축재처리법에 해당하지 않고, 설경동씨에게 정부 소유 홍삼을 불하되도록 하여 설씨가 부정축재하는 것을 도왔다는 점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32 매일경제, 1973.2.23.

33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사업회 편집, 『한국 교회 해외 선교의 선구자들: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 7인의 선교 이야기』, 233쪽.

34 찾을 수 있는 생전의 증언기록은 '이박사 하야 비화'가 있다(경향신문, 1966.4.26).

35 1954년 김일주씨가 창립, 2010년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아카데미로 명칭 변경하여 지금에 이름.

36 조선일보, 1984.11.10.

37 반남박씨 대종중 기록 중 일부. http://www.bannampark.co.kr/php75/board.php?board=park61&page=344&sort=hit&command=body&no=972

윤진원

(尹鎭遠: 1925.1.12. ~)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현역 대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이었던 김대중을 일본에서 강제로 마취 납치한 범행의 지휘자

윤진원은 1925년 경남 김해 진영면에서 태어났다. 부산공고를 나와 교편생활을 잠시 하다가 6 · 25 직후인 1950년 12월 육군 종합학교 11기를 수료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육군 종합학교는 6 · 25 전쟁 후 부족한 장교를 보충하기 위해 2개월 정도의 초단기 교육을 거쳐 소위를 배출하던 기관이었다. 11기에는 200명의 장교가 배출되었다. 임관 뒤 1961년까지 육군 첩보부대(HID)에서 대북공작 임무를 담당했다. 첩보부대는 1948년 대북 정보수집과 공작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육군 정보국 첩보과가 1951년 독립부대로 발전한 부대였다. 1972년 육군 정보사령부로 발전했다. 첩보부대원들은 북한에 침투해 공작을 벌이는 만큼 생명을 걸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다. 부대의 활동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1952~1954년 및 1957년 첩보부대장은 김대중 납치사건 때 정보차장보를 한 이철희였다. 윤진원은 대북 공작 분야에서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요원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윤진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뒤 현역 소령 신분으로 정보부에 들어가 대북 공작 임무를 담당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인 124군부대원 31명이 청와대 코앞까지 급습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한달 동안 총 14회나 '비상시국대책회의' 및 '군 수뇌부회의' 등을 소집했다. 박정희는 긴급합동안보비상회의에서 독자적인 대북 보복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북한 김일성 숙소와 124군

부대를 타격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공군에는 특수부대 창설과 수송을 지시했다. 이 작업 전체의 조정 · 감독은 대북공작담당인 국제정보국장 이철희에게 맡겼다. 이철희는 공군 특수부대 창설의 예산과 작전은 정보부가 담당하고, 훈련과 수송은 공군이 맡도록 하면서, 대북공작단장 윤진원에게 공군 특수부대의 창설, 훈련, 작전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을 일임했다. 윤진원은 각군의 특수작전을 종합 통제했고, 매월 각군 특수공작 책임자 회의를 열어 상황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공군은 중앙정보부의 지휘 아래 서해 실미도에 특수부대를 창설했다. 실미도부대의 조정 · 감독 권한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부대의 예산도 중장정보부에서 편성하였다. 부대원은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되어도 은폐가 가능한 누범자, 폭력배 등 31명이 선발되었다. 훈련중 5명이 재판 없이 명령 불복, 탈주 등을 이유로 살해되고 2명이 사망했다. 윤진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과거사위 진술에서 “실미도 부대 내의 관리상태를 훤히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공작원 살해를 단순사망으로 보고받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또한 부대원 급식비 등 예산 착복이 발생해 부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졌으나 윤진원 및 중정 간부들은 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대 창설에 앞장섰던 김형욱이 69.10 해임되면서 대북 보복작전이 흐지부지되었다. 공군에서는 여러차례 후속대책을 요구했으나 윤진원 및 중앙정보부 간부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부대를 방치했다. 시간이 흘러 사후보장 약속이 무산되고 신분이 불안해진 부대원 24명은 1971.8.23. 06:30경 훈련교관 및 기간병 20여명을 사살하고 실미도를 탈출했다. 부대원, 군인, 민간인 46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대간첩본부장 김재명은 “공비가 출현했다”고 발표했다. 윤진원은 2006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에서, “다른 부대는 현역으로 전환시켜서 제대하고 무사히 잘 지나갔다. 공군도 훈련이 그 정도 됐으면 군번 주고 제대가 될 줄 알았다”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변명했다.

1973년 유신체제의 폭압정치가 시퍼렇던 때, 박정희로부터 김대중의 해외에서의 유신 비판을 침묵시키도록 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정보차장보

(해외 정보 · 공작 담당) 이철희에게 김대중 납치를 지시했다. 이철희는 해외공작국(8국)장 하태준과 협의하여 납치공작 지휘를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대령에게 맡기고, 일본 현지사정을 잘 아는 주일파견관 김동운에게 공작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1973.7.21. 김동운이 입국해 이철희 · 하태준 · 윤진원에게 김대중 납치계획인 'KT계획'을 보고한 뒤 일부 수정되어 실시가 결정되었다. 당일 윤진원과 김동운은 일본으로 가서 납치계획을 시작했다. 김동운은 전 일본 자위대 정보부대원과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의 협조도 받으려고 시도했다. 윤진원은 자신의 감독하에 있던 공작선 용금호를 일본으로 입항시켰다. 윤진원은 주일 정보부 총책임자인 주일공사 김기완의 협조를 얻어 주일 정보부원 20여명을 총동원하고 김대중의 숙소와 동선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 7.30 제보를 받고 정보부원 6명을 데리고 식당으로 출동했으나 김대중이 돌아간 뒤였다.

윤진원은 8.8 일본 그랜드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원 5명을 지휘해 김대중을 마취시켜 납치했다. 윤진원은 중간에 김대중을 오사카 요원에게 넘겨 '처리'케 하고 자신은 공작선 용금호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오사카 요원과 엇갈려 만나지 못했다. 윤진원은 오사카 소재 정보부 안가를 거쳐 김대중을 용금호에 실어 한국으로 보냈다. 이때 오사카 요원이 김대중의 신원을 인수했더라면 김대중의 운명도 달라졌을지 모른다. 윤진원은 바로 귀국하지 않고 오사카에 머물렀다. 본부에서 급히 귀국해 다음 일을 추진하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해외공작국장 하태준이 급히 일본으로 건너와 귀국을 종용한 뒤에야 홍콩을 경유하여 귀국했다. 아직 김대중이 방면되기 전이었다. 이철희 차장보가 청와대를 다녀온 뒤 윤진원에게 "(김대중을 일본에) 도로 갖다 놓을 수 없겠나"고 말했다. 윤진원이 권총을 빼들고 "너 죽고 나 죽자"면서 대들었다.

윤진원은 사건 이후 1973년, 1974년 거듭 장군 진급에서 탈락되었다. 윤일균 차장과 신직수 부장에게 항의한 뒤 1975년 초 예편과 동시에 중정 관리관(1급)으로 승진, 재임용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승진과 동시에 1급직인 강원지부장을 권유했으나, "정치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 나는 공작단 일이 천직이다"라며 거절하고 계속 2급직인 공작단장에 머물렀

다. 윤진원과 함께 대북공작 분야에서 일했던 동료들은 “그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으며 수십년간 일해온 대북 전문공작요원이었다. 정치공작에 투입되는 바람에 30년 동안 쌓아 온 명예를 잃어 버렸다”고 애석해 했다.

윤진원은 사건 이후 용금호 선원 관리 책임을 맡아 생활대책비로 중정에서 2,000만원을 받아, 이들에게 지급하고 이들의 취업을 위해 관련업체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1975년 말경 윤진원의 관리하에 있던 공작선 용금호가 대규모 밀수사건에 연루되자 퇴직 조치를 당했다. 해외공작단도 해체되었다. 김형욱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때 윤진원의 동생 윤봉춘도 밀수에 관여했다. 이 와중에 윤진원은 중앙정보부 보안차장보 출신인 해운항만청장 강창성에게 부탁하여 밀수사건으로 해고된 부하 3명을 취직시켰다.

1977.8 박대통령의 지시로 관리관에 재임용되었다. 윤진원은 국정원 과거사위 면담(2006.2.14.)에서 이때의 일을 이렇게 말했다. “각하께서 정보부 공작단을 해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문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만두게 된 경위도 알아보라고 하여 결국 김재규 부장 시절 관리관으로 재임용이 되었습니다. 박대통령은 당시 본인에 대해 재발령을 해주면서 김대중 사건으로 인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정년퇴직하면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조치도 해 놓겠다는 말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대규모 인원조정 때 해직되었다. 해직 뒤에는 공개장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옛 부하 · 동료들과 국방부가 운영하는 저비용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일로 소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취재를 요청한 기자에게 “내가 이제와서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조용히 내버려둬 주세요. 자식들 얼굴도 있고 손주들까지 있는데…”라고 회한이 묻은 말을 했다. 윤진원은 2005년 국정원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김동운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불란서 대혁명시절 많은 인명살상이 있었으나 민주화가 되고 나서도 과거사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은 국가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국가이익’를 앞세워 과거사 조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양두원

(梁斗源, 1926/1927 출생 추정 ~)

동백림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서독 거점장으로 유학생 납치 가담

유신체제의 동아일보 광고탄압, 언론탄압에 앞장서다

코리아게이트의 막후세력으로 불법 로비공작 총지휘

양두원은 1926~27년생으로 추정되며 1951년 2월 해병대 간부후보생 3기 소위로 임관되어 육군 36연대에 배속되어 6 · 25 당시 피의 능선으로 불려진 983고지에 참전하였다. 1963년 12월 해병대 대령에 진급했다. 1966년 해병대 대령으로 있을 때 골프장에서 만난 김형욱에게 발탁되어 중앙정보부 근무를 하게 되었다. 1967년 주서독 대사관 참사관, 1972년경 주미공사, 1974.1 기획조정실장, 1974.9 보안차장보로 근무하다가 1976.11 해임되어 퇴직했다. 1975년 경희대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 제목은「미국외교정책에서의 한국」이다.

1967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주서독 대사관 참사관으로 파견되어 동백림 사건 때 유학생의 국내 납치, 관련자를 강제로 불법송환하는 것에 관여하여 독일정부로부터 강제 본국송환 당했다. 그는 이수길 등을 협박, 고문하여 독일에서 강제 출국시키는 등 동백림사건 당시 중앙정보부의 서독 거점장으로 활동하였다. 서독정부가 주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중앙정보부에서 납치해 간 유학생들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결국 서독에서 양두원 참사관 등 3명의 한국 외교관이 1967년 7월 19일 본을 떠나 귀국하게 되었다.

이후 김형욱은 그를 유엔 참사관으로 보내고 이름도 이상호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1969년 10월 김형욱이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자 양두원도 주미공사에서 해임되어 김형

욱의 세계여행을 수행했다. 김형욱은 세계여행에서 돌아온 뒤인 1971년 2월 무렵 양두원을 합참본부로 보냈고 합참에서 준장으로 진급하여 예편했다.

1971년 말 주미 한국대사관의 공사(정보 담당)로 근무하면서 미국지역 중앙정보부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유신에 반대하는 교포신문을 광고를 끊게 만드는 수법을 동원하여 폐간시키는 탄압 활동을 지휘하고 또 불법 대미 로비활동을 지휘했다. 1973년 12월 김대중의 미국 강연회를 폭력으로 저지하려 한 사태는 당시 미국 국무성 내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1973년 8월 17일자 국무성 비망록에는 '이상호 공사가 워싱턴에 남아 있는 한, 그는 계속적으로 한국 교포사회에서 분쟁과 미국에 대한 방해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974년 1월 그는 미국으로부터 본국 소환 요청을 당해 미국을 출국하게 되었다.

1974년 1월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 1974년 9월 중정 국내보안담당 차장보를 역임했다. 이 무렵 1974년 말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실천운동을 전개할 때 그는 보안차장보로서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7개월간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자들을 대량해고케 함으로써 자유언론을 말살하였다. 같은 시기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과정을 지휘하면서 야당의원들에게 국민투표 거부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음성적인 탄압을 가했다.

그는 1975년 6월 이동욱 동아일보 주필에게 유신정권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아의 결의와 진로'라는 사설을 게재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동아일보는 거절했다. 그 문건에는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현행 (유신) 헌법을 철폐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유신 체제를 계속 수호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전체 국민의 주권적 결단을 지지하고"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보안차장보를 하던 1974~1976년까지 재미 로비스트 김한조를 통한 '백설작전'(Operation Snow White)이라는 대미 불법로비 공작을 전개하여 로비자금을 김한조에게 전달하고 김한조로 하여금 미국 정계, 언론계 인사들을 매수하도록 지휘하였다.

미국언론에 의해 코리아게이트라고 불린 한국 정부기관에 의한 대미 뇌물 증여 등 불법 로비사건은 크게 박동선과 김한조에 의해 진행되었다. 1972~73년 미군 철수와 유신 이후 인권탄압 비판에 직면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 언론의 맹비난에 속수무책이었는데, 이 때 등장한 것이 미국 언론과 의회에 인맥이 넓다고 알려진 김한조였다. 박정희는 육영수와 함께 김한조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로비를 부탁했다. 김한조는 오하이오주 핀들리대학 인맥을 활용하여 반대여론이 많았던 포드대통령의 방한, 에드워드 케네디, 프레이저 의원이 주장한 대한 군사원조 삭감안 부결 등에 기여하고, 뉴욕타임스에 박정희 정부를 찬양하는 글을 싣기도 하고, 뉴욕타임스, 워싱톤포스트, 그리고 CBS의 크롱카이트의 박정희 인터뷰를 성사시킨 것처럼 보였다. 이 중간 과정에 양두원 중정 차장보가 '백설작전'이라고 명명한 대미로비공작 계획을 작성하고 지휘했던 것이다. 결국 양두원은 '백설작전'의 실패와 그 내용이 1976년 11월 미국 언론에 폭로되면서 문책, 해임되었다.

그는 1969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신직수 당시 검찰총장의 아들의 유학을 도와준 인연으로 신직수가 법무장관이 된 뒤 신직수와 김형욱이 이후락에게 청탁하여 주미공사로 다시 발령받을 수 있었다. 그는 또한 1972년에는 김형욱의 둘째 아들 김정우를 양아들로 받아들여 미국에 유학을 하게 도와줘 김형욱에게 신세를 갚았다.

그러나 정보 · 수사 분야에 전문경험이 없는 양두원은 중앙정보부 관련 부서 중요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두 번이나 강제출국당하는 등 여러번 사고를 낸 끝에 결국 불명예 퇴직당했다. 그는 중정에 근무하는 11년 동안 법절차나 민주주의 원리를 도외시하고 상관의 호불호만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이다.

이학봉

(李鶴捧: 1938.5.15. ~ 2014.5.24.)

신군부의 권력장악 과정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 · 수사한 '권력교체기의 「칼」',
전두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최장수 참모' 특혜 누려

이학봉은 1938년 5월 15일 경남 김해군 명지면(현재 부산으로 편입됨)에서 태어났다. 전라북도 정읍과 전주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38] 명지국민학교와 대동중학교를 졸업했다. 1957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육사 17기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다음해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17기생 친구가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보훈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하나회 출신 17기생 이병태도 그중 하나로서 이학봉은 이병태의 동생 이설혜와 결혼한다. 1958년 7월 육사 18기로 입교했는데 이로써 후일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12 · 12반란과 5 · 17내란을 일으키던 시기 이른바 '보안사 3인방'에 함께 속했던 허화평과 허삼수의 육사 1년 후배가 된다.

1961년 5월 이학봉이 육사 4학년생일 때 5 · 16내란이 일어났다. "당시 18기생들은 자신들의 입교 당시 교장이던 이한림 1군사령관의 체포 때문에 5 · 16을 놓고 찬반이 분분했으나, 결국 5월 18일 「혁명지지」 시가행진에 나섰다." [39] 전두환 등이 주도한 이 시가행진에 이학봉도 참여했다.

이학봉은 1962년 2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병학교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후 9월부터 21사단에서 근무했는데 65연대 소대장과 대대 작전장교, 수색중대장 등을 거

38 "이학봉", 『위키백과』.

39 김일동, "「5공비리」의 뇌관, 이학봉과 청와대 민정비서실", 『신동아』 1월호, 1989, 269쪽.

쳤다. 1967년 21사단 수색중대장으로 있다 방첩부대(1968년 2월부터 보안사령부로 됨)로 전보되었다. 이학봉 본인에 따르면 보안사로 자리를 옮긴 것은 "윤필용 당시 보안사령관이 육사 기수별로 몇 명씩의 청년장교를 점찍어 보안사 근무 명령을 낸 것"이 그 배경이었다.[40] 이후 방첩부대 및 보안사에서 수사관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대공수사계장을 6년이나 맡을 정도로 대공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학봉은 방첩부대로 옮기고 난 후 '하나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7년 6월 방첩부대 대위로서 5등 보국훈장을 수여받는데 훈장을 받은 다른 16명과 함께 간첩 김대수 외 17명을 검거, 일망타진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학봉은 1968년 11월 울진 · 삼척 지구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당시 이들의 기습을 받은 부대장들이 문책을 우려해 적의 규모를 부풀려 상부에 보고하는 등 "초동단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을 때 적의 규모를 제일 먼저 파악해 군의 작전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해진다.[41]

1969년 3월 보안사 대위로서 5등 보국훈장을 수여받았으며 1971년 6월에는 김재규 보안사령관 등 16명이 간첩 검거 등의 공을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을 때 함께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1975년 5월 "74년 일본을 거점으로 국내에 침투 암약한 간첩 8명을 검거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는다. 1974년 보안사가 수사한 재일교포 관련 사건으로는 최철교 사건과 진두현 사건이 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의 인권운동가와 재일교포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과 구출 활동이 있었고, 일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논란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두 사건 모두 고문 등에 의한 조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진두현 사건의 경우 "도쿄변호사회가 조사한 보고서"

40 "사람과 사람. [와이드 인터뷰 | 10 · 26에서 5 · 18까지를 말한다] '5공의 산파' 이학봉의 최초 본격 증언", 『월간중앙』, 2005. 7호.

41 김일동, "「5공비리」의 뇌관, 이학봉과 청와대 민정비서실", 『신동아』 1월호, 1989, 269쪽.

가 있으며 현재 재심이 준비 중인데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 사유는 충분히 확인되며 여러 정황상 고문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이학봉이 최철교 · 진두현 사건으로 훈장을 수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문에 의한 조작에도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1976년 "전방의 보안부대장 등을 맡아 잠시 보안사를 떠나 있다 1976년에 복귀"했으며 1977년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장이 된다. [42]

이학봉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0 · 26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10 · 26사건 당시 보안사 수사과장이던 이학봉은 사건 당일 '부마항쟁'에 직면해 있던 부산지구 보안대장 권정달 대령을 수사업무에서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내려가 있었다. 10 · 26사건 발생 후 계엄령이 선포되고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하면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을 겸임하게 된다. 보안사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이후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이학봉도 권력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된다. 합수부 수사국장으로서 '박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 책임자'의 직책을 맡아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 등 국내 수사기관을 통할지휘하며 10 · 26사건을 수사하였다. 김재규는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전신을 각목으로 구타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기 고문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이학봉은 고문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김재규가 처 김영희와 변호인 안동일 등에게 일관되게 고문 내용을 주장한 점이나 조갑제가 저술에서 김재규에 대한 서빙고분실에서의 고문 사실을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사과정에서 김재규가 고문당했을 개연성이 높다.[43] 이학봉은 김재규가 보안사령관일 때 대공수사계장을 지냈기 때문에 둘은 잘 아는 사이였다.

이학봉이 합수부 수사국장으로서 행사하던 권력이 어느 정도로 막강한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이학봉이 경남고 동기동창인 김기춘을 보호해준 일이 전해진다. 김기

42 "사람과 사람. [와이드 인터뷰 | 10 · 26에서 5 · 18까지를 말한다] '5공의 산파' 이학봉의 최초 본격 증언", 『월간중앙』, 2005. 7호.

43 조갑제, 『박정희 13 – 마지막 하루』, 조갑제 닷컴, 2007, 260쪽.

춘은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일 때 그 밑에서 수사국장으로 있으면서, 김재규의 지시로 보안사의 힘을 빼는 작업을 지휘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보안사 장교들 사이에서 '김기춘은 보안사 공적 1호'란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다. 10 · 26사건 이후 중정 간부들이 다수 합수부로 연행돼 김재규와의 관련 여부 등을 추궁당할 때 이학봉이 나서서 위기에 처한 김기춘을 보호해주었다고 전해진다. 이학봉은 김재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양병호 대법원 판사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굴하지 않은 양병호는 이후 악명높은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 강제 사직 당한다.

10 · 26사건이 일어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1979년 11월 24일 윤보선 등이 중심이 된 일부 재야 인사들이 YWCA에서 결혼식을 위장해 유신체제의 조속한 종식과 범민주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다.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의 지시로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일부 지도 인사들에 대해 고문을 가했는데 이학봉이 합수부 수사국장으로서 수사 전과정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학봉은 12 · 12 군사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전두환이 중심이 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의 연행 · 수사 모의 과정에 참여하며 정총장에 대한 "수사내용이나 수사계획 수립"의 임무를 맡았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인사처장 겸 합수부 총무처장 허삼수 등이 오후 7시 경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도착해 정승화 총장을 불법적으로 체포 · 연행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그 바로 직전 오후 6시 30분 경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의 연행, 조사에 대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얻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떠났는데 합수부 수사국장 이학봉은 최규하로부터 재가를 얻기까지 전두환을 밀착 수행하며 전두환을 보좌한다. 이학봉은 12 · 12군사반란에서 수행한 역할을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는다.

이학봉은 10 · 26사건 직후부터 정승화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전두환에게 밝혔지만 전두환이 처음에는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망설이다 나중에 이학봉으로부터 조사 보고를 받고 난 후 마음을 바꿔 정승화를 김재규의 공범으로 의심하며 그를 구속 조사대상자로 보

게 되었다고 한다.[44]

12 · 12 이후 정승화에 대한 수사는 정승화를 김재규의 공범으로 만들려는 합수부의 의도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합수부는 방침을 바꿔 '공모에서 방조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정승화는 회고록에서 밝히듯 보안사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한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학봉은 수사책임자로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승화의 진술에 따르면 이학봉은 정승화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 정승화를 만나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제시하며 유죄를 인정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으며, 사면, 복권 등을 미끼로 "공개재판정에선 묻는 말에만 대답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정승화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자마자 정승화를 찾아와 항소를 포기하면 "김재규에 대한 사형집행이 끝나는 대로" 석방시켜주고 곧 사면 및 복권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한다. 정승화는 이학봉의 제안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12 · 12 이후 이학봉은 전두환의 지시로 온갖 비리 의혹에 싸여 있던 최태민을 서빙고에서 조사했지만 조사를 마친 뒤 전방부대에 보내 6개월 동안 가둬둔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최태민을 방면했다. 이로써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해졌고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 됐다.

이학봉은 10 · 26사건과 12 · 12반란을 거치며 전두환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국내의 굵직한 사건에 모두 간여하는 「무서운 실세」로 등장"한다.[45] 전두환과의 긴밀한 관계는 이후 평생 유지된다. "5공 권력창출과 「전 대통령 만들기」의 사실상 기획자"가 허화평이었다면 이학봉은 김재규 중정부장, 정승화 육참총장, 5 · 17 이후는 "3김씨를 포함, 다수의 정치인을 수사선상에 올린 권력교체기의 「칼」이었다."[46]

---

44 조갑제, 『박정희 13 - 마지막 하루』, 조갑제 닷컴, 2007, 184-185쪽.

45 김일동, "「5공비리」의 뇌관, 이학봉과 청와대 민정비서실", 『신동아』 1월호, 1989, 268쪽.

46 김재명, "5 · 17때 「3김 소탕」서 YS는 내가 빼냈다. 이학봉의 10 · 26, 12 · 12, 5 · 17", 『월간중앙』 10월호, 1992, 259쪽.

이학봉은 5 · 17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12 · 12 이후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직하게 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해 나갔다. 「12 · 12 군사반란 및 5 · 17 내란 사건 2심 판결문」(1996)에 따르면 "전두환은 1980.5.초 보안사 내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학봉을 포함해 허화평, 허삼수와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등 보안사 내 핵심 참모들이 "2, 3일간 수시로 만나 논의한 끝에 비상계엄의 해제와 전두환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시위를 강력히 제압하고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 주도 세력의 협조 하에 지역계엄보다 한층 강화된 전국계엄을 실시하는 동시에 과도정부적 성격의 소극적인 내각을 통제하기 위한 비상기구의 설치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으로 정리되는데 이학봉을 포함한 신군부 핵심 세력의 동의를 거쳐 1980년 5월 17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된다.[47]

5 · 17내란 직후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비상기구가 설치되는데 이러한 "비상조치 선포계획"의 "실제 작업팀은 보안사의 권정달 정보처장, 정도영 보안처장, 허삼수 인사처장, 이학봉 대공처장과 허화평 사령관 비서실장 등 이른바 전장군 그룹의 '5인방'이었다"고 한다. 권정달은 "소요가 심해지는 4월 하순경에는 이미 이 같은 대책들이 다 마무리되고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48]

이학봉은 5 · 17내란에서 재야 정치인, 학생 등 신군부의 내란 수행에 장애가 될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들을 사전 검거, 수사토록 지시하는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12 · 12반란 및 5 · 17내란 사건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학봉은 "5 · 16. 오후 소요배후 조종 및 권력형부정축재자 등의 거주지역 보안부대 대공과장들을 보안사로 불러 검거대상

47 「12 · 12 군사반란 및 5 · 17 내란 사건 2심 판결문」(1996). 이유. 2부 범죄사실. 2. 내란.

48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 3』, 동아일보사, 1993, 149–151쪽.

자 명단을 나누어 주면서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검거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다. 전두환은 5.17. 이학봉에게 같은 날 22:00를 전후하여 소요배후조종자 및 권력형부정축재자들을 전원 검거하라고 지시하였다. (…) 이학봉은 5.17. 11:00경 보안사로 중앙정보부, 경찰 등 합동수사단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계엄확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고,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과 대공수사국은 소요배후조종자 중 국민연합 관련자들을, 보안사 대공처는 권력형부정축재자들을, 경찰은 소요 관련 복학생과 재학생 대표들을 각각 검거, 수사하도록 지시"하였다.[49]

이처럼 이학봉은 예비검속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여 폭동의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이학봉의 지시로 내란 세력은 "전국 각 지역에서 비상계엄 확대와 병행하여 실시한 예비검속 과정에서 총 2,699명을 체포하는 등 전국적인 비상계엄의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동시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여 폭동"하였던 것이다. [50]

이학봉은 전두환이 "국보위 업무를 실질적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1980.5.31. 상임위원장에 자신이 취임"하고, "허화평, 허삼수와 함께 각 분과위원과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자신들이 그 실권을 장악한 후 국보위상임위원회를 통하여 공직자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통폐합, 불량배소탕 등 소위 국정개혁작업을 수행하여 국보위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전두환 등의 국정수행능력을 내외에 과시하여 집권세력으로 부각시키는 데 이용하면서 국보위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각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했다.[51]

신군부 세력은 5 · 17 직후 광주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거센 민

49 「12 · 12 군사반란 및 5 · 17 내란 사건 2심 판결문」. 이유. 2부 범죄사실. 2. 내란.

50 「12 · 12 군사반란 및 5 · 17 내란 사건 2심 판결문」. 이유. 제2부 범죄사실. 2. 내란. 다. 폭동행위.

51 「12 · 12 군사반란 및 5 · 17 내란 사건 2심 판결문」. 이유. 제2부 범죄사실. 2. 내란.

중항쟁에 직면하게 되는데 광주에서 계엄군이 자행한 만행을 덮고 유력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한다. "광주의 상황을 김대중씨와 연계시키는 '작전'을 개시"한 것은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였고 이 작전에 이학봉 등이 동원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가공할 고문을 자행했다. 정동년과 김상현 외에도 이문영, 예춘호, 이신범, 조성우, 설훈, 이해동, 이호철 등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참혹한 고문이 가해졌으며 김대중, 문익환 등에게도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52]

신군부는 김대중씨 등에 대한 재판을 의도대로 이끌기 위해 "물샐틈없이 군법회의를 장악했다." 이학봉은 김대중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군 검찰에 대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으며 "검찰관 전원과도 회의를 갖고 수사상황을 챙겼"다고 한다.[53]

신군부 세력은 양김씨와 그 측근들, 중견정치인들, 김종필 등 정권 장악에 장애가 될 만한 사람들을 연행해 재산을 몰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신군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연행 대상은 전두환 노태우 장군 등 최고실세들이 결정"했으며 "물론 이학봉 합수부 수사국장도 실무책임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다.[54]

이학봉은 "부정축재자 재산환수시 수사책임자로 있으면서 김종필, 이후락, 이세호 등 군의 대선배를 무릎 꿇일 정도로 기세가 당당했다"고 한다.[55]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과정에서 어처구니없고 상당히 무리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야당정치인 정해영씨의 경우 재산 헌납을 거부하자 "자식이 보는 앞에서 뭇매를 때려 '혼절'시키는 패륜 행위"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56]

이학봉은 신군부가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정계에서 은퇴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52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 3』, 동아일보사, 1993, 263–265쪽.
53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 3』, 동아일보사, 1993, 266–270쪽.
54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 3』, 동아일보사, 1993, 256쪽.
55 김진룡, "이학봉과 민정비서실", 『월간중앙』 12월호, 1988, 663쪽.
56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 3』, 동아일보사, 1993, 253–259쪽.

과정에서 '실무주역'으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해진다. 이학봉은 경남고 선배인 김영삼 총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신군부의 의사를 전달할 메신저"를 통해 만약 김 총재가 "정계은퇴를 거부할 경우 여자관계와 정치자금 문제 등 약점을 언론에 폭로, 파렴치한으로 몰아 도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57]

반면 이학봉 본인은 12 · 12 군사반란 및 5 · 17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1980년 8월 13일 나온 김영삼 총재의 정계은퇴 선언 및 가택 연금과 관련하여 김대중씨를 검거하고 김종필씨도 부정축재자로 공직에서 사퇴시키고 재산을 헌납하게 했으면서 김영삼 총재를 가만히 둔다면 "남들이 경상도만 봐준다는 인상을 가질 우려"가 있어 김영삼 총재 쪽에 정계은퇴를 부탁한 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58]

이학봉은 1980년 10월 31일 준장으로 승진한 직후 11월 5일 준장으로 예편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 된다. 약 한 달 후 이원홍의 후임으로 민정수석비서관에 발령받았는데 청와대 내에서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고 1982년 초까지만 해도 허화평 정무수석과 허삼수 사정수석 비서관이 청와대의 실세로 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영자 사건을 계기로 허화평과 허삼수가 전두환의 심기를 건드린 끝에 청와대를 떠나면서 전두환의 신임을 잃지 않은 이학봉이 청와대의 실세로 부상한다. 장영자 사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에 대한 이학봉의 절대적인 충성심이 그를 위기로부터 지켜주었던 것 같다.

이학봉은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과 관련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방지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반대로 전두환의 친형 전기환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경찰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등의 혐의가 명백히 밝혀졌으나 공소 시효 만료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 사건은 한 월간지 기사가 표현했듯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서울시, 국세청 등이 국가공권력을

57 이도성, 『남산의 부장들 3』, 동아일보사, 1993, 310–312쪽.

58 엄상익, 『피고인 각하』, 미래미디어, 1996, 148–149쪽.

악용, 시정협잡배들처럼 공갈과 협박으로 시장운영권을 빼앗아 대통령 친인척에게 넘겨준 범죄" 사건이었다. [59]

이학봉은 '명성그룹 사건'에도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1989년 3월 국회 5공 비리 특위 청문회에서 김철호 전 명성그룹 회장은 명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무사찰 등 정권의 압박 배후에 민정수석 이학봉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학봉은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이 '(주)동일'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통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두환과 사돈간이던 윤광순(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상현의 부)의 처 박혜숙과 인척(이종제 임두빈 전 민정당 국회의원 및 그 부인 구희수)이 설립에 참여한 성남 한미병원의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학봉은 1986년 1월 안기부 해외담당 제2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는 그 자신이 후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두환이 원하던 '학원안정법'에 반대한 데 대한 일종의 좌천성 인사조치였다는 것이다. 이학봉이 이 법안을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는 말도 있으나 그가 과거에 맡은 사건들의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들을 감안할 때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다.[60]

이학봉이 안기부 2차장으로 있던 1987년 1월 윤태식 사건이 발생한다. 홍콩에 거주하던 윤태식이 자택에서 처 김옥분(일명 수지 김)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으며 자신도 납치되기 직전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다. 안기부의 일선 파견관은 윤씨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러한 정황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안기부는 부장 장세동의 지시에 따라 이를 '여간첩 납치미수 사건'이라는 대공사건으로 조작하여 발표했다. 이학봉은 '윤태식 사건'이 발

59 김진룡, "이학봉과 민정비서실", 『월간중앙』 12월호, 1988, 661쪽.

60 김재명, "5 · 17때 「3김 소탕」서 YS는 내가 빼냈다. 이학봉의 10 · 26, 12 · 12, 5 · 17", 『월간중앙』 10월호, 1992, 262쪽.

생했을 당시 안기부 해외담당 2차장으로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을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휘 계통에 놓여 있었으므로 사건 조작과 은폐에 어떤 식으로든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지김의 유족들이 사건 진상이 밝혀진 후 2002년 5월 국가와 윤씨를 상대로 "살인사건을 은폐하고 김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2003년 8월 말 위자료 42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61] 이에 따라 서울 고검은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상자 선별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국정원은 장세동, 이학봉 등 사건 당시 안기부 간부 5명과 살해자 윤태식 등 총 6명의 명단을 서울고검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면밀한 검토' 결과 이학봉이 '수지김' 사건 은폐 · 조작에 깊이 관여돼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장세동을 제외한 이학봉 등 안기부 간부들에 대해 공모 · 가담 정도가 불분명하고 은폐나 조작에 별다른 관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인정치 않았다.

이학봉은 1988년 4 · 26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출마해 제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 이학봉의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해 이씨가 '연희동 몫'으로, 즉 전두환의 요구에 따라 공천 받은 것이며 그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산의 기업인과 안기부 요원들이 거들어줬다는 얘기가 전해진다.[62] 이학봉은 경남 김해 지역구에서 41.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는데 부산, 경남 지역의 거센 '민주당 바람'으로 김해 주위에서 민정당 후보가 전부 낙선한 것을 감안할 때 꽤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학봉은 5공비리 수사 결과 직권 남용 혐의로 1989년 1월 12일 구속된다. 이학봉은 검찰 수사 결과 노량진수산시장 강탈 사건과 관련해 전두환의 형 전기환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반면 동

61 "대법, 수지김 사건 장세동씨 9억원 국가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2008. 3. 31.

62 김일동, "「5공비리」의 뇌관, 이학봉과 청와대 민정비서실", 『신동아』 1월호, 1989, 277–278쪽.

국제강이 국제그룹의 연합철강을 인수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것이다. 이학봉은 1989년 7월 11일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민원이나 대통령측근을 관리해 오던 중 일어난 일이며 5공화국 시절의 핵심권력에 있었다고 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유를 밝히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63] 이러한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되어 5공 비리를 미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적 기사가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다.[64]

이학봉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고향인 경남 김해군 진영읍 사무소에서 귀향 보고차 주민 1백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올 때 현지 재야인사 5명이 "5공비리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뇨통을 던졌으나 직접적인 피해는 모면했다고 한다. [65]

이학봉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경남고 동문, 군 출신 5, 6공 의원들과 교분을 계속 유지하며 정치권 복귀를 추진"했다. 그는 1992년 "3 · 24총선 무렵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ㄱ타운에 개인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치활동 재개를 모색"했다고 한다.[66] 그러나 이학봉은 "후보등록 마감 3시간을 남겨놓고 열린 대법원 확정판결로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그를 대신해 그의 처 이설혜가 경남 김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김영일 민자당 후보에게 2만여 표 차로 패배한다.[67]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 · 18 특별법이 제정되고 1996년 1월 23일 검찰이 5 · 17내란 관련자들을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996년 2월 2일부터 28일까지 검찰은 12 · 12 사건,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의 관

63 "이학봉 피고 집행유예 석방[추성춘]", 『MBC 뉴스』 1989. 7. 11.

64 "검찰 · 법원 5공 미온처리'한통속'", 『한겨레』 1989. 7. 20.

65 "귀향활동 이학봉 의원 재야인사가 분뇨세례", 『경향신문』 1989. 7. 21.

66 "비리인사들은 밝은 새해, 양심수 가족은 슬픈 세밑", 『한겨레』 1992. 12. 31.

67 김재명, "5 · 17때 「3김 소탕」서 YS는 내가 빼냈다. 이학봉의 10 · 26, 12 · 12, 5 · 17", 『월간중앙』 10월호, 1992, 251쪽.

련자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이학봉은 반란중요임무 종사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1996년 8월 26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8년으로 감형되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되었으나 1998년 8월 15일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특사로 석방되었다.

이학봉은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가 2014년 5월 24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학봉은 10 · 26사건 이후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호령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국장으로서 김재규와 정승화를 수사했으며, 장태완, 정병주 등 12 · 12군사반란을 진압하려 한 군 인사들을 연행 수사하고 5 · 17 이후에는 주요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해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하거나 정계에서 강제로 은퇴시키는 등 '군사반란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학봉이 책임 진 다수의 수사과정에서 혹독한, 때로는 '가공할'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정권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는커녕 최고권력자 친인척의 청탁을 적당히 들어주고 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방식으로 최장기간 그의 측근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이학봉은 평생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다. 그가 거리낌 없이 남긴 다음과 같은 말은 그의 의식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난 지금 반대세력이 뭐라고 해도 당당해요. 정승화 참모총장을 잡으러 간 것에 대해서도 추호의 죄책감이 없어요. 빨갱이들은 날보고 뭐라고 하지만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내 소신대로 산 거죠." [68]

68 "['팩션'– 엄 변호사의 못다한 이야기] 이학봉과의 만남 ② 〈용인술〉 부하들 대결 유도한 박통, 뒷돈 받아서 나눠준 전통", 『일요신문』 제714호, 2006. 1. 22.

허문도

(許文道, 1940.2.26. ~ 2016.3.5.)

언론인 출신으로 80년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가담해
기자 강제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 입안 및 실행 … 5공화국에서 언론악법인
언론기본법 제정과 언론사 보도지침 주도해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로 악명 떨쳐

허문도는 1980년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장악과 통제 정책의 입안자이자 실행의 막후 실세였다.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전두환에게 발탁되어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국보위 문공위원을 맡아 기자 대량 강제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주도했고, 전두환 집권 후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언론 악법인 언론기본법 제정과 언론사에 보도지침 시행 등 언론 통제에 앞장섰다. 5공 초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신군부 핵심 실세였던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과 함께 '쓰리(3) 허(許)'로 불렸고, 전두환 집권 기간 동안 5공의 체제이론가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기자 출신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에게 접근해 언론 통제와 문교 정책들을 건의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을 지낸 괴벨스에 빗대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69]'라는 악명이 붙었다. 그가 계획하고 주도했던 언론 통제 정책들은 1931년 일제 만주 침략 당시 '세론지도'라는 명목으로 언론기관들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보도지침을 남발한 군국주의 하 일본의 언론 통제 정책과 유사했다. 그는 자신이 '국가주의자, 민족주의자'[70]라고 강변하고 다녔으나,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저버

69 파울 요제프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 1897~1945). 히틀러의 최측근으로 나치 독일에서 국가대중계몽선전장관으로 나치 선전 및 미화를 책임졌던 인물.

70 국가통일원 장관 시절인 1986년 11월 28일 관훈토론회 석상에서 발언.

리고 군사독재정권에 참여해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거스른 장본인이다.

1940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1957년 부산고(10회), 1964년 서울대 농대 농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단과대 교지 편집기자 경험으로 조선일보에 입사했고, 내근 기자로 일했다. 1969년 친척의 도움으로 일본 동경대에 유학, 1971년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74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경대에서 연구한 과제가 '메이지 유신 시대 이후의 국가형성과 근대화 과정'이었으며, 이때 일본의 천황주의와 국수주의에 심취[71]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 어떤 기록에는 조선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개화파 김옥균을 연구[72]했다고 한다. 1974년 7월 조선일보에 복귀해 동경특파원으로 발령받았다. 그 시절 조총련계 교수 납북기도 사건을 취재해 폭로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일화도 있다고 한다. 일본 체류 때 그의 주변에서 "그가 정부기관과 연결되어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얘기들도 떠돌았다"[73]고 한다. 동경특파원 생활 4년만에 귀국해 조선일보 외신부 차장을 맡았고, 1979년 신문사를 그만두고 주일대사관 공보관으로 다시 일본으로 나갔다.

그가 전두환과 인연을 맺은 것은 부산고 동기 허삼수(許三守)의 추천에 의해서였다. "언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지시를 받은 허삼수 대령이 자리를 만들었고, 그는 전두환과 독대에서 난세론(亂世論)을 펼치며 "오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충격적인 요법으로 과외수업 일소, 불량배 소탕, 언론의 대폭적인 정비 등과 같은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설파[74]했다고 한다. 첫 대면에서 그에게 매료된 전두환은 겸직하고 있던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에 그를 임명했다. 이때부터 그는 민간인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이른바 신군부 '개혁주도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전두환의 두터운 신임 아래 5공 수립 과정에서 언론 통제 정책뿐 아니라 문교 정책에도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

71 이낙연, 『80년대 정치현장』 1989, 동아일보사에서 인용.

72 나무위키 '허문도' 편에서 인용.

73 이낙연, 『80년대 정치현장』 1989, 동아일보사에서 인용.

74 김충식 · 이도성 공저, 『남산의 부장들 3』, 동아일보사, 1993 / 천금성, 「續 · 發刊 금지된 「12 · 12의 진상」 저자가 말하는 5공화국 주도세력 – 허문도와 허화평과 허삼수」, 『신동아』 1988년 2월호 등 참조.

1979년 12 · 12쿠데타, 1980년 5 ·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해 집권 정지작업을 밟아오던 신군부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사의 '보도검열단', 보안사의 '언론대책반'을 동원했다. 허문도는 80년 5월 31일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75] 문교공보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언론계 정화'와 이른바 '언론정비 계획'을 입안했다.

국보위의 '언론계 정화, 정비 계획안'은 ▲국익 우선의 언론풍토 조성, ▲국가 홍보매체의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언론인 숙정 및 신문, 통신, TV, 라디오를 통폐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언론계 정화'는 신군부에 반기를 들었던 비판적인 기자들을 제거하는 작전이었다. 이런 계획에 따라 1980년 11월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합, 지방신문은 1도에 1사만 남기고 폐간됐으며 동양방송을 KBS로 통합시키고 MBC를 공영화시켰다. 그리고 언론사 통폐합 과정에서 보안사 등이 작성한 명단이 언론 정화 대상자로 통보되어 기자와 PD 등 언론사 종사자 933명에서 많게는 1,500여 명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는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 증언대에서 "언론통폐합은 잘한 일"이라며, "80년 5월 말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으로 들어가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으며 언론과 재벌의 분리, 방송공영화, 사이비 기자가 발붙일 수 있는 토양을 없애는 조치 등을 기본으로 방향을 수립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실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 뒤 이수정, 이광표 문공부장관 등과 언론통폐합 방식에 대해 의견교환도 하고 언론통폐합 의미나 성격 등에 관해 허화평, 허삼수와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76]

언론통폐합안은 그가 성안한 「언론창달계획」을 비롯해 국보위, 국방부 등에서도 작성했고 보안사 언론반도 관여했다. 이러한 계획안들은 보안사 언론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됐

75 국보위가 허문도 아이디어라는 기록도 있다. 전두환 전기를 썼던 천금성(위 각주 7번 참조)은 "국보위는 허문도가 처음 주장해서 전두환이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허문도의 시나리오 작성설의 부정"하는 인터뷰들도 있다.

76 「제144회 국회문교공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1988년, p.34.

고, 「건전언론육성 종합방안」이라는 보고서로 작성됐다. [77]

1980년 9월 1일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도 언론통폐합에 대해선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보안사가 작성한 「건전언론육성 종합방안」은 보고됐으나 결재가 나지 않았다. 그러자 허문도가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에게 필요성을 역설하여 공감을 얻어냈고, 11월 11일 이학봉 민정수석이 전두환에게 비상계엄 해제 후의 정국운영 방안을 보고하면서 결심을 받았다고 한다. 전두환의 결심을 받은 「건전언론육성 종합방안」 은 「언론창달계획안」으로 문서 제목이 바뀌어 결재가 이루어져 노태우 보안사령관에게 전달됐고, 12일 오후부터 보안사가 언론사주들을 불러 각서를 받아 집행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언론통폐합은 신군부가 정권 장악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 취임 후 그는 대통령비서실 공보비서관을 거쳐 11월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언론 악법인 언론기본법을 만든 것도 그의 작품이었다.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는 합법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을 논의했고,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그와 이수정, 문공부 기획관리실장 김동호, 공보국장 허만일, 판사 박용상이 언론기본법을 기초했다. 이 법은 국회가 해산되어 기능을 대행한 입법회의에서 12월 26일 통과됐고, 31일 법률 제3347호로 공포되어 이듬해인 1981년부터 시행됐다(언론기본법은 1987년 6월 이후 폐지됐다).

이 법에 따라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에서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시달해 보도를 통제했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 과정에서 언론인 해직에 이어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언론 통제의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 놓았으나 계엄 해제 뒤에도 언론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했다. 계엄 하 보도검열단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상했는데, 이것이 보도지침으로 악명을 떨친 바로 홍보조정실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와 조작의 산실로 알려진 문공부 홍보조정실은 계엄이 해제되기 16일 전인 1981년 1월 19일 설치됐다.

---

77 보안사, 「언론건전육성 종합방안 보고」, 김주언, 『언론통제』, 2009, 리북, p.242에서 재인용.

문공부 홍보조정실은 청와대 정무비서실 지휘 하에 있었고, 허문도와 무관하지 않았다.[78] 홍보조정실의 보도 통제를 통해 방송사 9시 뉴스 첫머리는 대통령 동정으로 시작하는 '땡전뉴스'로 장식됐다. 이 보도지침은 1986년 9월, 해직된 언론인들이 만든 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가 『말』지를 통해 폭로했다. 『말』지에는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문공부가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 584건이 실렸다.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김주언은 "보도지침은 81년 홍보조정실이 생긴 이후 계속 있었으나 85년 이원홍 문공장관과 허문도 정무수석이 들어서면서 강화됐고, 허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 간섭했다"고 증언했다.[79]

한편, 허문도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인 1981년 5월 관제집회에 수천 명을 동원한 '국풍(國風)81'을 기획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5 · 18 광주학살 1년을 맞아 피로 얼룩진 정권 이미지를 세탁하고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기 위해 벌인 것이었다. '국풍'(國風)이란 이름은 그가 일본의 가미카제(神風, Kamikaze) 정신을 본따 이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행사에 군인과 공무원들을 동원해 서울대 학생으로 위장 참여시키기도 했다.

그는 1982년 1월 문공부차관에 임명됐다. 문공부차관 시절 문공부장관이던 이진희와 자주 마찰을 빚었는데, 그의 독선적인 퍼스낼리티가 불만이던 이진희가 차관 전결사항마저 장관 결재사항으로 바꿨다[80]는 기록도 있다. 이후 1984년 10월 그는 대통령비서실 정무1수석비서관이 됐다. 그리고 1985년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학원안정법안 제정을 추진한 것도 그였다. 당시 시국은 1985년 2 · 12 총선 후 대학마다 총학생회와 전학련이 결성되고 5월 미문화원 농성사건이 일어나는 등 학생운동이 가열되던 때였다. 법안은 시위 학생들에 대한 선도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삼청교육대식 발상이었다. 법 제정을 놓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전두환이 야당 총재와 회담 끝에 '입법 보류'를 밝혀 무산됐다.[81]

78 김진룡, 「허문도와 홍보조정실」, 『월간중앙』 1988년 12월호, 김주언, 『언론통제』, 2009, 리북 등 참조.

79 김주언, 『언론통제』, 2009, 리북, pp.452–453

80 박보균, 『청와대 비서실 3』, 1994, 중앙일보사 등 참조.

81 한명규, 「개혁주도 3許씨의 어제 · 오늘」, 『신동아』 1987년 12월호 등 참조.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5공의 주요 정치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1985년 한때 남북 정상(전두환-김일성)회담이 추진됐는데, 그는 회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82] 또 전두환의 대통령 임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여당이 권력 이양과 후계를 둘러싼 작업에 들어갔을 때인 1986년 초 내각제 개헌 논의에도 간여했다. 여권은 전두환 후계로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낙점해 놓고 있었으나, 전두환 측근들 중엔 '노태우 불가론(不可論)'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1986년 8월 27일에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13대)으로 임명됐는데, 그의 장관 취임 일성은 "전두환 대통령이 일찍이 제창, 국내외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구현해가는 일에 업무의 중점을 두겠다"였고, "삼국을 통일했던 화랑 세대와 같은 통일 담당세대의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므로 청소년들이 통일 담당 세력으로 자임할 수 있게 진력하겠다"[83]는 것이었다.

통일원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원 내 좌경의식 침투를 막기 위한 학술연구 강화, 대학에 '북한학' 강좌 신설 등을 중점 사업('87년 국토통일원 청와대 업무보고)으로 추진했고, 남북대화에 대해 "북한이 우리 사회에 좌경분자 대두에 대해 그릇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 좌경세력을 분쇄한다면 대화 전망도 밝아지리라 본다"는 입장이었다('87.10.15. 국회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그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던 1988년 2월에 통일원 장관에서 퇴임했다. 5공에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으로 출세가도를 달려 한때 주위에서 무임승차(free rider)란 지적까지 받았으나 5공 말까지 항상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1987년 12월 대선 승리로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5공화국 연장선(5.5공화국)에 있었으나 전두환 측과는 거리를 뒀다. 노태우 정권 하에서 허문도는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했으

82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2005, 랜덤하우스중앙 참조.
83 "신임 장관들의 한 마디" 『동아일보』 1986.8.27.

나 13대 총선 공천을 받지는 못 했다. 1988년 13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5공 비리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고, 청문회장에 5공에서의 실권자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다. 1988년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5공 언론인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 등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장에는 그를 비롯해 이상재(당시 보안사 준위), 이광표(당시 문공장관), 이원홍(당시 방송협회장) 등 언론학살 입안 및 실행자들과 피해자들이 증언대에 섰다.

국회 청문회 등으로 5공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노태우 정권은 5공과의 단절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전두환 진영 간 갈등이 빚어졌고, 그해 11월 23일 전두환은 개인재산과 정치자금 139억 원의 국가 헌납을 약속하고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갔다. 노태우는 5공 때 좌천되어 절치부심하던 김기춘을 검찰총장에 앉혀 5공 청산작업을 맡겼다.

1989년 1월, 검찰의 5공비리 수사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이학봉 전 민정수석 등이 구속됐고, 허문도는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출국 33일만에 돌아와 전두환의 메신저로 역할했다. [84] 한편, 그해 3월엔 국회 문공위가 그를 언론 청문회 위증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고, 10월에는 80년에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에게 고소당했으나 이 고소 고발 건은 1990년 검찰(원정일 부장검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1990년 12월말 전두환이 백담사 은둔 2년1개월만에 하산해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온 후로도 허문도는 5공맨으로 전두환의 곁을 지켰다. 1991년 민자당 특임위원을 지냈고, 1992년 14대 총선 경남충무 · 통영 · 고성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민자당 정순덕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84 오병상, 『청와대 비서실 4』, 1995, 중앙일보사 /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2005, 랜덤하우스중앙 등 참조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5 · 18특별법이 제정되어 12.12 및 5 · 18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허문도도 이듬해 1월 10일 검찰에 소환되어 언론통폐합 및 'K-공작' 추진 의도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996년 1월 23일 전두환, 노태우 등 5 · 18 관련자 8명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수사결과를 요약하면 "언론통폐합은 허문도 등의 구상 아래 대통령 전두환이 결심해 지시했고 보안사령관 노태우가 실행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언론사 난립으로 월급도 못 주는 경영주가 있었고, 사이비 기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는 그런 언론사나 종사원은 사회적으로 기생충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언론통폐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소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후 그는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상남도지사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현역 도지사인 한나라당 김혁규 후보에게 패했고, 이듬해인 1999년 불교TV 사장에 선임됐으나 노조와 언론단체, 불교계 반발로 6개월만에 하차했다. 2000년 자유민주연합 경기수원권선지구당 위원장을 맡았고, 2002년 자민련 특임위원장을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했다.

정계 은퇴 후 보수 우익의 대표 인사로 활동하면서, 2003년 '반핵 · 반김(反核 · 反金(김정일))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2016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살아생전 5공화국 권력 핵심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과오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박처원

(朴處源, 1927.5.13. ~ 2014.9.)

대공 경찰로 전두환 정권에서 시국 사건 고문 수사 지휘 …
1980년대 학림 용공 조작, 김근태 고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박처원은 경찰의 대공 수사 분야에서 순경으로 시작해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을 거쳐 치안감까지 올랐다. 해방 정국에서 남로당 와해 공작을 비롯해 1950년대와 6~70년대 남파 간첩 검거 등 수많은 전공(?)을 쌓아 특진을 거듭하고 훈포장을 받았는데, 그의 탁월한 수사력을 뒷받침했던 것은 악랄한 고문 기술이었다. 1980년대 대공 경찰의 책임자로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휘하 수사관들에게 명령을 내려 학생 ·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고문하여 각종 시국 사건들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경찰이 수사한 무림 · 학림 용공 조작과 김근태 고문이 그의 지휘 아래 저질러졌고, 1987년 치안본부 5차장 때 박종철 고문치사 경관 축소 조작 및 사건 은폐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다.

1927년 5월 13일 평안남도 진남포 출생으로 해방 직후 부친 박동훈[85]이 친일 경력으로 체포되자 당시 5년제 중학 졸업 후 소련군 사령관 통역으로 들어가 기회를 엿보다 단신으로 월남했다고 한다. 월남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보급기지를 습격하다 체포돼 손톱과 발

85 박처원은 부친과 관련해 『월간조선』(1996년 11월호) 인터뷰를 통해 "경성제국대 법대를 나온 박동훈(朴東薰) 씨로 일제 때 총독부와 평양도청 등에 근무했고 군수로도 부임했는데, 8 · 15 광복과 함께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친일파로 몰려 체포됐다"고 밝히고 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성 법학교 제1회 졸업생 명단에 박동훈(朴東勳)"이란 이름이 있고, 『매일신보』 1932.12.6자 기사에 "朴東勳(龍岡有志)"이란 이름이 나온다. 시기 등으로 미루어 경성 법학교를 졸업한 용강유지 박동훈(朴東勳)이 박처원의 부친일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치는 않다. 「"간첩 잡을 경찰이 다 없어졌어요" – 朴處源 前 치안본부 5차장 인터뷰」, 『월간조선』 1996년 11월호, pp.212–228 참조.

톱이 뽑히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86]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았다. 월남 후 경찰학교 17기에 응시하여 1947년 20세의 나이로 경찰에 들어갔으며, 첫 부임지는 서울 종로경찰서였다. 이때부터 대공 수사에 투입되어 정부 수립 직후 남로당 지하조직 적발과 조직원 검거 [87] 등에 참여했다.

그가 대공 수사에 매달린 이유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해방 정국에서 가족들이 지주 계급이란 이유로 북에서 처형(?)당하고 월남하면서 반공이데올로기로 철저하게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성장배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족 처형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1950년 6 · 25 발발 직후에는 서울 집에 숨어 지내다가 9 · 28 수복 후 군 · 경 · 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창룡 특무부대장)에서 반공검사 오제도 등과 함께 남로당원 및 부역 혐의자 검거 임무를 맡았다. 이때 남로당 경남도당 분쇄와 남파 간첩 검거[88]등 전과를 올렸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김창룡, 오제도를 잇는 대공 수사 요원으로 꼽힌다. 1958년 내무부 치안국 특수정보과(경위)로 발령받았으며, 재일동포 북송 당시 일본으로 밀항해 오무라 수용소에 구속 수용된 채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일은 대공 수사 요원들에게 신화로 전해졌다[89] 고 한다.

---

86 1999년 이근안 검찰 수사에서 박처원이 도피 배후로 밝혀졌을 당시 신문의 인물 기사를 인용한 것인데, 해방 정국에서 박처원의 북쪽 행적은 확인이 안 되며 기사는 박처원이 반공주의자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근안 배후 박처원, 40여년 경찰대공분야 代父」『한국일보』 1999.11.15.; 「박처원 전 치안감은 누구」, 『세계일보』 1999.11.16.; 「박처원 누구인가」『조선일보』 1999.11.16. 등 참조.

87 1973년 수상한 '5 · 16 민족상' 공적록에 따르면 "해방 정국에서 남로당 총책 김삼룡(金三龍)을 비롯해 김종원(金鍾源), 최흥봉(崔興奉), 곽이형(郭二亨), 백철(白鐵, 경북도당책), 동필언(董弼彦, 강원도당책) 검거에 공이 있다"고 쓰고 있다. 『5 · 16 민족상 공적록(1966~1980)』, pp.637-646 참조.

88 '5 · 16 민족상' 공적록에 따르면 "6 · 25사변 후에는 군 · 검 · 경합동수사본부의 일원으로 활약하며 남로당 경남도당 분쇄를 비롯, 후방에 침투한 적 五列을 다수 검거했고 휴전 후 미8군 통신대에 잠입 암약 중이던 간첩 유승준(俞昇濬) 등 일당을 위시한 북괴정치보위부 서울책 박병구(朴炳九) 일당, 대통령 암살을 음모한 이성재(李星載) 일당, 노동당 경남도당 재건사건 주모자 황용규(黃龍奎) 일당을 검거했다."고 쓰고 있다. 『5 · 16 민족상 공적록(1966~1980)』, pp.637-646 참조.

89 1987년 박처원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주도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중앙일보』 기사(「40년 외길 대공수사의 대부」, 1987.5.29.)에서 인용한 것이다.

재일조선인 북송 사업은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일본과 북한 정부, 조총련이 추진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북송 저지를 위해 특공대까지 파견했다. 1959년 9월 재일동포 학도의용군 경험자 41명, 경찰 간부시험 합격자 24명, 예비역 장교 1명 등 총 66명의 특공대가 일본에 파견됐으며, 이들 중 12명은 밀항 중 바다에서 실종됐고 작전도 수행하지 못한 채 귀국하는 과정에서 25명이 적발돼 일본에서 실형을 살아야 했다. 이 사건은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사건명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 사건)를 통해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명한 바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는 "당시 공작 실무는 치안국 정보5계가 진행했고, 관련자 조사에서 치안국장 이강학과 박OO이 사망으로 진술 청취가 불가능했다"고 쓰고 있다. 보고서에 나오는 '박OO'이 '박처원'으로 보이며, '사망에 의한 진술 청취 불가'는 2007년 생존해 있었으나 투병 중이라 진술 청취가 불가능하지 않았나 추정된다.[90]

1960년 3 · 15부정선거 때는 비밀경찰[91] 일원으로 활동했는데, 비밀경찰은 당시 내무부 치안국장 이강학이 관건과 불법을 동원한 부정선거 방법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경찰서에 하달한 부정 비밀지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충성심 강한 경찰관들로 운영한 조직이었다. 비밀경찰의 존재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 속에 선거 후 세상에 드러났는데, 관련자들이 대부분 해임됐으나 박처원은 그해 11월 4일 전북경찰서 정보과로 발령받았다.

박처원은 1963년 대통령 암살 공작 임무 남파 간첩 노성집 검거 등 유공으로 1966년 경감으로 특진해 치안국 정보과 3계로 발령받았고, 1971년부터 치안국 정보과 공작분실(경정)에서 근무했다. 1970년 통혁당 경남도당책 윤두수 검거를 비롯해 1973년까지 24년간 남파 간첩 121명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129명 및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령 위반자 346

90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 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2007 참조

91 1959년 새로 임명된 내무장관 최인규는 치안국장에 이강학을 임명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관건과 불법을 동원한 온갖 방법들을 계획해 실행에 들어갔다.

명을 검거[92]하고 무궁포장(1952년), 화랑무공훈장(1955년), 보국훈장 광복장(1965년), 보국훈장 삼일장(1969년 무장간첩 김기상, 박우범 검거 유공[93]) 등을 수상했다.

그의 탁월한 대공 수사력을 뒷받침했던 것은 고문 기술이었다. 그는 친일 경찰로 유명했던 노덕술을 상관으로 모셨다[94]고 하는데, 노덕술로부터 일제 치하 수백 명의 독립투사의 입에서 변절과 동료의 은거지를 끄집어낸 고문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았다고 한다(해방 직후 수도경찰서장 장택상은 노덕술의 친일 행위를 눈감아주고 그를 수사과장에 기용해 경찰 내 반이승만 세력 숙청과 좌익분자들 검거를 맡겼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총경으로 승진하여 치안본부 공작실장을 맡았고,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경무관에 올랐다. 승진하면서도 경찰서장이나 시 · 도경국장 등 직책을 마다하고 일선에서 대공 수사를 고집했다는데, 경무관 승진 당시 안응모 치안본부장에게 "행정 문서기안 같은 일은 해보지 않았다"며 승진을 사양했던 일화[95]도 떠돈다.

5공 때 그가 이끈 대공 수사조직은 경찰 안에서도 베테랑 수사 인력 중 선발된 요원들

---

92 '5 · 16 민족상' 공적록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73년까지 "考試위원장 진승록(陳承綠) 간첩사건,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남파된 노성집(盧成楫) 일당의 송추사건, 통혁당 경남도당책 윤두수(尹斗洙) 일당, KAL기 납북 미수사건, 김상태(金相泰) 일당사건 등과 기타 지하당 재건 및 군사기밀정탐을 목적으로 남파된 간첩을 다수 검거했다"고 쓰고 있다. 『5 · 16 민족상 공적록(1966~1980)』, pp.637-646 참조.

93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중 [국무회의 의안처리건] 의안번호 제1548호.

94 박처원 인물 기사들에서 친일 경찰 '노덕술 사단'의 막내라고 쓰고 있는데, 근거를 제시한 기사는 없었다. 노덕술은 1945년 8월부터 평안남도 평양경찰서장을 맡고 있다가 해방을 맞아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체포되어 몇 달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후 월남했고, 1946년 수도경찰청 장택상에 의해 수사과장에 기용되어 경찰 내 반이승만 세력 숙청과 좌익분자 검거 등을 주도(1946년 4월 당시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를 암살한 한현우 등을 검거)했으며, 1948년 7월 장택상 저격 혐의로 체포된 박성근을 고문 치사시킨 후 시신을 한강에 투기한 혐의로 경무국에 체포되어 조사받다가 석방됐던 이력이 있다. 그리고 1949년 1월 24일 반민특위에 체포됐는데, 백민태라는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반민특위 간부 암살 지시 음모가 드러났으나 대통령 이승만이 "노덕술은 반공투사"라며 석방을 요구했고 반민특위가 이를 거절했으나 얼마 안가 이승만과 내무차관 장경근 주도 하에 조작된 국회프락치 사건, 6.6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으로 반민특위가 와해됐으며 이때 풀려나 경기도 경찰부 보안주임으로 영전했다. 이후 헌병 중령으로 변신하여 1950년에는 육군본부에서 범죄수사단장으로 근무하는 등 대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1955년 서울 15범죄수사대 대장을 지냈으며, 1955년 부산 제2육군범죄수사단 대장으로 재임 시 뇌물수뢰 혐의로 그해 11월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6개월을 언도받고 파면됐다. 따라서 박처원이 이북에서 월남 후 1947년 경찰에 들어가 대공 경찰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노덕술을 상관으로 모셨을 개연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선 『월간중앙』 1989년 3월호(158호) 「반복되는 拷問의 역사 ; 盧德述과 李根安, 그 역사적 계보」(金京子) 기사 등을 참고할 만하다.

95 「40년 외길 대공수사의 대부」, 『중앙일보』 1987.5.29.에서 인용.

로 구성됐고, 특별한 사명감과 '의리'로 뭉친 극우비밀결사 같았다[96]고 한다. 그는 휘하 부하들을 각별히 총애하고 조직에 대한 보호욕이 유달리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무에서는 호랑이처럼 굴다가도 부하들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섰다"는 게 경찰 내부 평가였다. 이런 결속력을 바탕으로 그가 이끈 대공 수사조직은 '박처원 사단'으로 불렸고, 그중 두각을 나타냈던 이가 그가 발탁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었다.

1979년 10 · 26과 80년 5 · 17 쿠데타로 집권해 정통성이 취약했던 전두환 정권은 학생 ·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해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의 지휘 아래 학림 조작과 김근태 고문이 벌어졌다. 1981년 경찰은 "학생운동권에서 전국민주학생연맹이란 단체가 노동운동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자연맹과 연계해 대학 시위를 주도해 왔다"면서 전민노련 활동가 이태복을 필두로 전민학련 관계자 이선근, 청계노조 지부장 양승조 등을 연행하여 고문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이른바 학림사건)[97]했는데, 이때 수사 실무책임자였다. 이런 고문 수사로 녹조근정훈장(1980년), 홍조근정훈장(1984년)[98]을 받았고, 그렇게 받은 훈포상만 40여 개에 달했다.

1985년엔 민추위 배후로 지목되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해 온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에 대한 고문을 지시한 것도 그였다. 김근태 수사는 박처원 사단 내 경감 김수현이 이끄는 수사 3계(경위 김영두, 경장 최상남)가 맡았고, 그의 지시로 수사 2계장 경감 백남은과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경감 이근안이 투입됐다. 당시 재야인사나 학생, 노동자들에게 남영동 대공분실은 살인적인 고문 수사로 공포의 공간이었다. 수사 요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문해 상부에 그럴듯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 표창을 받고 진급 혜택을

96 「40년 외길 대공수사의 대부」, 『중앙일보』 1987.5.29.에서 인용.

97 학림 사건 관련자들은 법정에서 허위 자백과 고문 사실을 폭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부터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28년이 흐른 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사건 재조사를 통해 고문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면서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2010년 12월 법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재심 판결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민학련 ·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 사건(1981) 재심 판결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사건 재심판결문 모음집 15 – 미분류유형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3』, 4.9통일평화재단,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참조.

98 홍조근정훈장은 경찰공무원인 경우 치안감과 경무관 계급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이다.

누렸으나 자백을 받지 못하거나 심문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99]고 하는데, 남영동팀 소속 전직 경관은 "윗사람이 내려와 '말로 해서 되겠느냐'라며 고문을 독려했다"고 한다.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박처원이었다. 그는 정권의 신임을 받아 1986년 치안감(5차장)으로 승진했고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고 한다.

남영동에서 있었던 김근태에 대한 살인적인 고문은 법정에서 폭로됐다.[100] 이에 김근태 가족과 변호인단은 고문 경관 및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서 1988년 고문 경관 4인(김수현, 백남은, 김영두, 최상남)이 독직폭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3년에서 1년6월형이 선고됐다. 한편, 김근태는 당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2011년 사후 부인 인재근이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101]

김근태의 고문 폭로를 기화로 전두환 정권에서의 고문 피해에 대한 증언들이 터져 나와 사회 이슈가 되었다. 그러자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도피 잠적했고, 이근안 도피를 도운 것도 그였다. 대공 경찰이란 특성상 베일에 가려 있던 그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경관 축소 조작과 사건 은폐를 주도하다가 그해 5월 29일 구속 수감되면서부터였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단순 쇼크사'로 발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의 부검과 언론 보도로 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고문 경관 중 조한경과 강진규로 축소해

---

99 「고문 명령 내린 용서받지 못할 자들」, 『시사저널』 526호(1999.11.25.)에서 인용.

100 김근태는 1985년 9월 4일부터 20일까지 모두 열 차례의 전기고문, 물고문을 번갈아가며 받았다. 수사는 당시 안기부와 협의 아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전담했고, 박처원 단장은 수사 진행상황을 박배근 치안본부장과 정형근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진다. 고문 폭로는 12월 19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18호 법정에서 열린 1차 재판에서 있었다.

101 「김근태 사건(1985) 재심 판결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사건 재심판결문 모음집 24 – 미분류유형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7』, 4.9통일평화재단,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참조.

이 둘을 구속시켰다. 수감된 조한규와 강진규가 심경 변화를 일으키면서 사건 축소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해 5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5 · 18 광주항쟁 희생자 7주기 추모 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명의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성명서가 발표, "박종철 고문치사에 경위 황정웅, 반금곤, 경사 이정호가 가담했으며, 범인 5명을 2명으로 줄여 발표하게 했던 배후자는 당시 대공수사2단5과장 유정방 경정이었으며, 이 조작에는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치안감, 대공수사2단5과2계장 박원택 경정이 가담했다"[102] 고 폭로한다.

이 폭로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그는 고문 경관을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어 1987년 9월 1심(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재판은 1990년 8월 2심(서울고법 형사1부) 무죄, 1991년 12월 3심(대법원 형사3부) 유죄취지 파기환송, 1993년 파기환송심을 거쳐 1996년 대법원에서 1심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는 이 재판 도중인 1988년 6월 30일 경찰에서 정년퇴임했다. 퇴임 후 1993년 1월까지 경찰청보안간부연수소 사무실을 빌려 '현대비교문화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며 공산주의 비교연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1999년 이근안이 자수하면서 김근태 고문에 대한 검찰 조사가 벌어졌고, 이때 이근안에게 고문과 도피를 지시하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근태 고문 관련해 "박처원이 '혼을 내서라도 철저히 밝혀내라'는 정형근(1985년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의 말에 따라 이근안을 투입했고, 수사 상황을 정형근과 치안본부장, 검찰 등에 수시로 보고했으며, 김근태 고문 사실이 폭로된 후 안기부와 검찰 등과 함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김 씨에 대한 면회 · 접견금지 및 상처 조기

1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소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명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조작되었다」 성명서 참조.

치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발표[103]했다.

또 검찰은 이근안의 잠적과 도피 관련해 "'박처원 사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박처원의 주도 아래 김수현과 백남은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밝혀냈고, 박처원은 카지노업자 전낙원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이근안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5월 23일, 1심(서울지법 형사7단독 고영한 판사)에서 그가 이근안에게 도피를 지시하고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으니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 퇴직 이후 그는 중풍과 당뇨로 고생했고, 2005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2014년 9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69세 때인 1996년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다고 거짓말을 하겠소. 난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도 상실했소. 무슨 미련을 갖겠소."[104]라고 심경을 밝혔으나 세상을 뜰 때까지 자신의 고문 행위에 대한 참회나 피해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103 「검찰의 김근태 고문 조사결과」『연합뉴스』 1999.12.16

104 「"간첩 잡을 경찰이 다 없어졌어요" – 朴處源 前 치안본부 5차장 인터뷰」,『월간조선』 1996년 11월호, pp.212–228 인용.

고영주

(高永宙, 1949.2.21. ~)

27년여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활동한, '마지막 구(舊) 공안검사'
"고문 조작한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 기소"한 1981년 〈부림사건〉 담당검사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로 확신한 '빨갱이 감별사'

고영주는 대한민국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27년 5개월 동안의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공안검사 가운데 한 명이다. 검사 옷을 벗은 뒤에도 고영주는 자칭 '애국세력'의 선봉에 서서 ("남보다 먼저 국가적 위험을 인식"하는 남다른 능력과 불타는 열정으로) '마지막 구(舊) 공안검사'답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적', '극우 편향주의자'라고 부른다. 반면에 그를 옹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 감별사', '아스팔트 우파의 자존심'이라는 별칭을 그의 이름 앞에 붙인다.

우리나라 검찰에 공안부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다. 간첩이나 반체제세력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공공의 안전'을 뜻하는 '공안'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것이다. 그 뒤 1973년에는 대검에도 공안부가 생겼다. 1964년은 한일회담 반대투쟁, 베트남 파병반대 같은 학생시위가 극렬했던 때다. 또 1973년은 유신개헌 직후다. 이를 미뤄볼 때, 검찰 공안부와 정권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공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안보를 위해 일해 왔기 때문이다. [105]

고영주가 열전편찬위원회의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가 된 것은 1980년대 부산

105 장윤선, 〈오마이뉴스〉, 2007년 12월 17일

지역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1981년)과 관련, 부산지검 검사로서 "고문 조작한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 기소"한 담당검사였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내 삶에서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일이었다. 사건 발생 33년만인 2014년 9월 25일고호석 외 4인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번 확정판결로 피해자들은 사법적으로 완전히 명예가 회복됐으며, 부림사건의 성격 역시 "영장 없는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고영주는 대법원에서 부림사건 재심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여전히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며 오늘날 종북세력의 뿌리"라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 "이번 판결은 좌경의식화 학습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중견 법관까지 됐다는 것을 의미"[106]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고영주에게는 피의자를 직접 구타했다는 증언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고영주가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묵살했다는 증언은 여기저기 나온다. 부림사건에서의 고문이 문제가 되자 고영주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고문당했다는 말들이 나왔지만 수사 중엔 고문당했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영주가 '공산주의자였지만 전향했다'고 칭한 김문수는 1986년 5월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사건으로 보안사에 끌려가 죽도록 고문을 당했다. 그는 "전기고문, 고춧가루 물 고문, 전기봉 고문과 심한 구타로 수사를 받는 동안 앉지도 못하고 소변도 못 볼 지경으로 전신이 망가져 검찰에 송치된 뒤 고영주, 정진규 검사에게 고문 흔적을 보여주며 이를 호소했으나 무시당했고 3차례에 걸친 고문 흔적 증거보전 신청도 서울형사지법과 대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주는 부림사건의 피고인인 고 이상록씨가 자신에게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

106 연합뉴스, 2014년 2월 13일

니다"라는 주장을 곳곳에서 설파하며 다닌다. 하지만 ①"만에 하나 이상록씨가 (고영주)검사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출소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지인은 물론 부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느냐. 그런 진술을 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문 조서나 법정에서 나와야 될 얘기인데 조서나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오고간 적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돌아가신 것을 악용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 ②이상록씨가 취조를 받으러 온 '첫날' 사상논쟁을 했다고 했지만, 이상록씨의 담당 검사는 고영주 변호사가 아니라 최병국 검사였으며, ③"우리 모두 40일 정도 되는 기간에 불법감금, 고문, 폭행 속에 지냈고 검찰로 넘어갔을 때는 엉망진창이 돼 있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와 사상 논쟁을 했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 등을 볼 때, 고영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949년 2월 21일 충청남도 보령군 남포면에서 출생한 고영주는 아버지가 소석회광산과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던 기업가 출신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성장하였다. 경기중과 경기고를 거쳐 1967년 서울공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였다. 입학 당시만 해도 그의 꿈은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다녀와 모교 교수가 되는 것이었다. 성적이 나빠 유학 계획이 틀어져 버리자 그는 유학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했다. 광주 포병학교 교장실에 근무하면서 샤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사업을 맡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법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법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이 없었다. 혼자 찾아낸 책이 〈법의 정신〉이었다. 이것이 그를 법조계로 이끌었다[107]고 한다.

3년간 군복무를 마친 그는 사법시험 공부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2년 만인 1976년 제1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시험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1980-983), 대검 공안부 공안기획담당관(1995-98), 서울지검 1차장검사(2000-01), 대검 감찰부장(2004-05)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장(2005-06)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2008),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09-1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2015),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2015-2017) 등을 역임하였다.

107 조성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영주 위원장 인터뷰", 〈조선일보〉, 2011년 8월 2일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서 고영주는 ①1985년 5월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당시 고려대를 담당, 삼민투를 이적단체로 기소, ②1985년 11월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때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을 개발, 적용, ③198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과 범인은닉혐의 적용, 이돈명 변호사를 구속, ④1986년 11월 민통련 사무실에 대한 수색.폐쇄 조치 등을 수행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고영주(부장검사)는 "1988년 여소야대 시절 평민당 등 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거셀 때 '북한 형법'이라는 신무기를 개발해 이를 저지한 인사로 검찰 내에서 유명"하다.[108] 당시 그는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안보형사법의 주축으로서, 대남적화를 꿈꾸는 북한공산집단의 각종 간접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결정적 역할을 다 해왔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109]이라고 주장했으며, 법무부 검찰3과 과장 시절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구성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법률"이자 "국가존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이 희생될 수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무정부주의자의 논리일 뿐이다."[110]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안검사 고영주의 전성기는 김영삼 정부 후반기에 대검 공안(담당)기획관을 지낼 때(1995.9.-1998.3.)였던 것으로 보인다. 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이 체제 수호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하에서 '공안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대검 공안(담당)기획관은 전국 검찰의 공안업무를 총괄[111]하는 공안 사령탑 격[112]인 자리다.

이 무렵 고영주는 공안 내부에서 최고의 기획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때의 대검 공안부장은 최병국으로 부림사건의 콤비가 공안의 사령관과 참모장이 된 것이다.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의 주역들에게는 면

108 한겨레, 1998년 3월 28일
109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989, 80쪽
110 〈월간 말〉, 1994년 4월호
111 동아일보, 1995년 9월 22일
112 경향신문, 1995년 9월 22일

죄부를 주려 한 검찰은 특히 대학생들을 심하게 탄압했다. 1996년 8월 이른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태 당시 대학생을 5715명 연행한 것이다. 고영주는 1997년 6월 검찰 최초로 한총련(5기)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 간부들을 구속하겠다고 겁박하여 한총련을 와해시킨 일등공신으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대검 공안(담당)기획관 고영주는 12 · 12, 5 · 18에 대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19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후의 명언을 남기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불기소했다. 그런데 다섯 달도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고 전두환을 구속했고 결국 사형까지 구형했다. 자기 모순에 빠진 검찰에 논리를 제공한 게 당시 고영주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검찰은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군 통수체계 및 민주헌정질서를 뿌리째 와해시키고 건전한 경제구조를 왜곡시킨 반국가적 반역사적 범죄"라며 "결국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진실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달라. 이 재판이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평가도 있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을 뿐이라는 거다. 그렇더라도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꽉 막히지는 않았던 것 같다.[113]

고영주는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공안검찰이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초등학생 등의 글을 모아 펴낸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자를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유홍준 교수나 납북시인 정지용, 김기림 등의 글을 문제삼는 교과서 검열을 시도한 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교육계와 학계는 당연히 공안검찰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해 "한마디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라고 크게 반발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고영주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

113 김의겸, 한겨레, 2015년 10월 10일

다. 구 공안의 대표 격인 고영주는 공안에서는 밀려났지만 서울지검 1차장검사,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동부지청장 등 요직을 지냈다. 그러나 고영주는 자신이 "김대중 정부 때 나는 '제거 대상 검사 10걸' 가운데 1명이었다. 날 내보내려고 비리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찾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좌천으로 끝났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7월 서울지검 형사 2부장 고영주에게 여론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다. "통조림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 방부제 포르말린을 사용해 골뱅이 등 통조림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업자 여러 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연히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건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고영주가 지휘한 검찰의 터무니없는 졸속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1, 2심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2000년 9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통조림 생산업체들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줄줄이 도산[114]했지만, 고영주는 이에 대해 아무런 법적.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고영주의 선배 공안통인 김기춘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야심차게 추진한 작품인 1989년 11월의 공업용 우지(소기름) 라면 사건이 있다.

고영주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엄청 핍박을 받았으며, "더러워서 검사 옷을 벗었다"고 줄기차게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강금실이 법무장관이 되면서 검사장급 15명이 옷을 벗었다고 하지만 고영주는 살아남았다. 그는 2003년 8월 청주지검장이 되었고, 9개월 만에 대검 감찰부장으로 전보되었다. 1년 뒤인 2005년 4월 그는 지검장 중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 남부지검장이 되었다. 그런 그가 2006년 2월 고검장 인사에서 승진이 좌절되자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공안딱지가 붙어 있는데 더 남아 뭘 하겠느냐"며 '더럽다'고 옷을 벗었다.

이때 인사권자인 법무장관은 고영주와 사법시험 동기인 천정배였다. 고영주는 전두

114 한홍구, 한겨레, 2015년 10월 10일

환 정권 밑에서 공안검사가 되어 체제 유지의 첨병으로 활동했지만, 공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천정배는 학살자 전두환 이름으로 된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며 판검사의 길을 포기하고 변호사로 취업한 바 있다. 천정배는 고영주가 부림사건의 악연 때문에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금실 장관도 인사 불이익은 커녕 "참여정부에서 대검 감찰부장까지 해서 승승장구 한 건데 무슨 핍박을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고영주는 참 부지런하고 스스로 일을 찾고 만드는 사람이다. 2006년 고검장 승진에 탈락하여 검사 옷을 벗은 이후 고영주는 '마지막 구(舊) 공안'[115]이라는 이름값을 하듯 맹활약을 한다. 검찰 신분증만 반납했지, 여전히 공안검사(劍士)로서 그는 아무런 거칠 것이 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 한총련을 베었던 그 칼로 전교조를 찌르고 통합진보당을 베고 사립학교, 공영방송, 세월호를 겨누고 '종북인사'의 이름을 새길 것을 다짐했다.[116]

검사 퇴임 이후 고영주가 맡은 공직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 이사, 이사장),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 등의 자리로, 자칭 '애국세력'들에 의해 공안 칼잡이로 격전지에 파견되거나 본인이 자청해서 뛰어든 것이었다. 이런 고영주에 대해 김의겸은 '변형된 출세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좌절된 출세욕이 그의 막가파식 행동양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홍구는 검사 이후 그의 일련의 행동은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사명감의 발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이런 불타는 사명감 속에서 고영주는 자신이 "남보다 먼저 국가적 위험을 인식"한다면서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어 맹공을 가한다.[117]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고영주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의

115 동아일보, 2006년 2월 4일
116 한홍구, 한겨레, 2015년 10월 10일
117 한홍구, 한겨레, 2015년 10월 10일

오류와 '파에톤 콤플렉스'(Phaethon Complex)가 결합된 인물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즉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행동경향성"을, 후자는 "성취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강박적 욕망"을 뜻한다.

2014년 12월말 고영주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새누리당 추천으로 위원이 되었다. 박근혜 정권에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상을 인양하는 작업을 막아 나설 검투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고영주는 그 부름에 충실히 답했는데, 문화방송(MBC)이 전원구조 오보를 낸 것을 옹호하고, 정부쪽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비호하고,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하고, 또 이미 검찰과 언론에서 밝혀낸 것이 많기 때문에 "별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까지 말한 것이다.

한편 검사 퇴임 이후 고영주는 보수우익 민간단체 활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2008.06.),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2008.10.),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2014.11.),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2015) 등이 그것이다. 고영주는 자칭 '애국보수'의 이론가이자 행동가로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진력했으며, 2009년 11월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간되지 않은)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 편찬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 속에서 고영주는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고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청구서 작성 등에 앞장섰다. 그는 통진당 당원 전체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통진당 잔당들이 '민중민주주의'처럼 용어를 바꿔서 대체정당을 만든다면, 이를 확인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역할을 정부 공직자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보수진영 의병(義兵)들이 다시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4년 8월 14일 제7회 '우남이승만애국상' 수상은 이런 그의 활약상에 대한 보상이었다.

한홍구와 김의겸에 따르면, 통진당 해산의 숨은 주역이자 1등공신은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만든 고영주였다. 고영주는 이 작업을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기 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준비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의 공로는 모두 황교안이 차지하여 총리까지 되었다. 통진당 해산의 전공을 둘러싸고 둘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흐른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118]

고영주의 활약은 그의 '망언의 역사'와 그 궤적을 함께 한다. 부림사건과 관련된 것 외에도, "국론을 분열시켜 적화통일 앞당기려는 시국선언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적이다.…좌익세력들이 북한 지령을 받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2009년 6월 9일),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2013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 · 검찰 · 공무원 중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119], "국사학자 90%가 좌편향"[120], "모든 판사의 꿈이 대법관이 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 공안사범에 대해 무죄를 내리지 않거나, 영장을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인사를 했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등 그의 망언은 넘쳐흐른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 "이런 극단적인 편향이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라 평한 바 있다.[121]

'한국판 괴벨스' · '고벨스'(고영주+괴벨스)로 불리는 고영주의 쉴새없는 망언과 거짓말 제조는 그의 철저한 '공안적 사유'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공산주의자 감별 전문가'인 자신이 누구든 지목하면 무지한 국민은 그런 줄 알고 따르라고 강변한다. 실체적 진실의 무시와 왜곡이야말로 공안적 사유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현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수정하는 대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처럼 현실을 비틀어 조작해낸다. 공산주의 · 좌경용공이라는 낙인만 찍으면 만사 오케이이던 권위주의 독재시절을 거치며 내면화 · 체질화된 아주 못된 습성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118 김의겸, 한겨레, 2015년 10월 10일; 한홍구, 한겨레, 2015년 10월 10일
119 한겨레, 2015년 10월 7일
120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12일
121 〈오마이뉴스〉, 2015년 10월 3일

반대자를 억압하는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착각과 망상도 그런 시대를 살아오며 더 굳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좌든 우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낙인을 찍어 침묵시키거나 응징하는 것이야말로 고영주가 온몸으로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자 전체주의적 광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그의 입을 막을 필요는 없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낡은 공안세력의 민낯을 명쾌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말 같지 않은 말에도 이렇게 일말의 가치는 담겨 있는 법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적에게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122]

122 박용현, 한겨레, 2015년 10월 7일

양승태

(梁承泰, 1948.1.26. ~)

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현(現)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 정치권과의 거래 시도,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참여

사법엘리트 양승태의 거침없는 질주

양승태는 경남 밀양(부산이라는 설도 있음)에서 출생해 부산에서 자랐고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때인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군법무관을 거쳐 1975년 11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양승태는 처음 판사로 임명된 1975부터 1977년 사이에 12건의 긴급조치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였다. 또 1976년에는 모두 4건의 조작 간첩 사건의 배석판사로 참여하였다.

양승태가 처음 법관으로 임명된 1975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 그해 4월 8일 대법원에서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판결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사형이 집행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그 시절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반면 양승태는 유신체제에 순응하며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되었다.

양승태는 1980년 9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민사지법과 형사지법, 영등포 지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994년 7월부터 199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거듭했다.

1995년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되었고,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등을 거쳐 19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는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 · 정리 절차를 거칠 때 회생과 파산 사이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다. 한마디로 기업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파산수석부장판사로서의 판결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양승태 판사가 이때 많은 기업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승태가 사법부뿐 아니라 경제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인맥이 생겼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승태는 1999년 4월부터는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양승태는 1990년대 중반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때도 그랬지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에도 당시 사법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었던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법원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였다. 양승태는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곧 사법부라는 일체감과 자부심을 갖게 됐을 것이다. 어쩌면 양승태 사법농단의 뿌리가 이 같은 그릇된 의식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양승태는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2002년 2월 부산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고, 2003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법원행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양승태는 공판 판사로서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송무국장(1994.7~1995.2), 사법정책연구실장(1994.7~1995.2) 그리고 법원행정의 실무책임자인 법원행정처 차장(2003.2~2003.9)으로 근무함으로써 법원행정의 핵심 요직을 모두 거쳤다.

양승태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제8대 특허법원장으로 근무한 뒤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용되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양승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으나 대부분의 재임기간을 박근혜 정부와 함께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져 있었다.

반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 양승태

양승태가 본 위원회에 의해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6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본 위원회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법농단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이미 양승태를 반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양승태는 서울지법 판사 시절 재일동포 김동휘 사건(1976. 4. 30, 1심 선고), 이원이 사건(1976. 4. 30, 1심 선고), 장영식 사건(1976. 5. 7, 1심 선고), 조득훈 사건(1976. 6. 8, 1심 선고) 등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장영식 사건은 대법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어 1979. 1. 14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김동휘 사건(2012. 5. 24), 이원이 사건(2018. 1. 26), 조득훈 사건(2014. 9. 5)도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23]

또한 양승태는 198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1986. 12. 4. 제주지법 1심 판결)과 오재선 간첩조작 사건(1986. 12. 4. 제주지법 1심 판결)에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 강희철 사건의 경우 재판 당시 양승태 판사는 피고인에게 '고문이 없었는지' 물었으나 결국 무기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강희철씨는 양승태 부장판사가 "자

123 괄호 안의 날자가 각각 무죄 선고일임

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그 판사의 이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라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우동 대법관이 당시 공소사실 자체가 조작가능성이 농후했지만 혼자 힘으로 뒤집지 못했다며 후회한 사건이기도 하다.[124] 강희철 사건은 2008년 6월 23일 제주지법에서 재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강희철 사건과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은 오재선 사건의 경우도 유사한 내용이다. 오재선씨는 재판정에서 자신은 '빨갱이가 아니고 고문을 당해 하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으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재선씨는 이 사건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는 양로원에서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된 사실을 알았고, 그가 자신의 1심 재판장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았다. 오재선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고 7월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125]

이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1건은 재판 진행 중)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거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다.

양승태는 이들 간첩 사건 이외에도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할 당시 1975년 심지연, 최열, 이명준 등 대학생들, 1975년 이부영, 성유보 등 전 동아일보 기자, 1977년 이혜경, 배경순, 고광순 등 여대생들의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여 12건의 긴급조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지배엘리트의 수호자가 된 사법권력

양승태는 화려한 법원 경력을 쌓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끝에 모든 법조인에게 선망

124 박우동, 1994,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한국사법행정학회, 158–160쪽; 최문호, "그 판사 이름 안 잊어버렸다"…양승태, 〈뉴스타파〉, 2017. 2. 16

125 김정호, "'난 간첩 아냐...억울함 푸는 게 마지막 목표' 32년만의 재심, 사연은?", 뉴시스, 2018. 4. 12

의 대상인 대법원장이 되었다. 하지만 양승태는 존경받는 법조인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동원한 법원행정권 남용,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판사들에 대한 감시 등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하였다.

양승태 사법부의 행태는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잘 보여준다. 군부독재 정권 시절의 사법부는 민주화가 굴절없이 진행됐다면 당연히 청산되었어야 할 적폐이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부역자들인 사법부는 오히려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군부독재 시절 사법부는 독재자의 사법권 침해를 막지 못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마지못해서 정치권력에 협조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때처럼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치권력과 거래를 시도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초대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역할과 사법부의 독립을 중요하게 놓았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다. 또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강하게 놓음으로써 행정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보장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였다.

사법부는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법원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법부의 위상은 전두환 정권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독재 정권 아래서 행정부의 시녀 역할을 한 사법부의 개혁과 독립성 확보가 사법 개혁의 중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에 따라 대법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법원의 인적 청산 등 사법부의 개혁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마땅히 청산되었어야 할 ‘구시대의 적폐들’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면서 법원이 지배엘리트의 기득권 지킴이 노릇을 했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과 함께 등장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는 지배엘리트와 정치 · 경제권력 편들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를 저질렀다.

사법 독립권 침해 및 헌법 파괴 행위

양승태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사실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126] 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변론기일을 무기 연기하였다. 이 사건은 4년 넘게 법원 한 귀퉁이에 처박혀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바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127] 대법원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아예 열지 않았던 셈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재판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상고심 재판은 처음 대법원 3부에 배당됐으나 두 달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13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기환송돼[128] 서울고법으로 넘겨졌다. 상고심 재판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희망대로 전원합의체에 넘겨져 소수의견 없는 대법관 13명 전원의 찬성에 의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20일 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상고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129]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최대의 관심사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의 정치적 거래를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른바 양승태 체제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재산 뒷조사에서부터 동향 감시와 회유, 인사상 불이익 등 다양한 방

126 2013년 1월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 6644명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이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또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군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한겨레, 2017. 4. 27)

127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7. 4. 27 "박전대통령 파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한겨레, 2017. 4. 27)

128 한겨레, 2018. 6. 10

129 "원세훈 재판, 청와대 각본 · 대법원 연출 법정드라마?", 한겨레, 2018. 6. 10

식으로 압력을 가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대한변협회장도 사찰하려 했다. 검찰이 넘겨받은 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자료에는 당시 변협회장이던 하창우 변호사 소유의 건물 등 재산을 몰래 뒷조사하거나, 과거 수임 내역 등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 등이 담긴 불법성 자료들이 다수 있었다. 양승태 사법부는 대한변협회장에 관한 추문 등을 언론이나 법조계에 흘리는 등의 방법으로 망신주기도 계획했다.[130]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인사권을 이용하여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심의관들은 정치권과의 거래를 위한 각종 문건들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410건이나 된다. 심의관들은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법원의 최대 현안을 관철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던 재판의 판결들을 사법부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의 정치적 거래문건 작성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만들었다.

양승태 사법부는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 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원세훈 사건뿐 아니라 통상임금 판결, KTX여승무원 재판, 국가배상 소멸시효 판결, 전교조 판결, 통진당 사건 등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큰 여러 사건들을 정치적 거래에 활용하려 했다.

재판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행위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3권분립에 따른 상호견제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헌법 파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의 류영재 판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3차 특조단 조사에서 사법행정관에 의한 법관 독립 침해뿐 아니라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침해가 정면으로 드러났다"고[131] 비판했다.

---

130 "양승태 사법부, 당시 대한변협회장 사찰 '의혹'", CBS노컷뉴스, 2018. 6. 29

131 "류영재 판사 '판사 사찰 · 재판 거래에 자괴감…국민에 사법부 돌려줘야'", 한겨레, 2018. 5. 30

약자에 가혹한 양승태 사법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배 · 보상 판결로 피해자를 이중의 고통 속에 빠뜨렸다.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간 감옥살이를 한 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법원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동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양승태 대법원은 2014년 12월 24일 '소멸시효 6개월'을 이유로 배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1,2심에서 결정된 배상금을 3심에서 대폭 삭감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등 수많은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이 또 다시 국가에 의해 채무자로 내몰리고 있다.

사법부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이며, 양승태 자신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배 · 보상 판결로써 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에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또 다시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가 되고 있다.

1,2심에서 승소한 KTX(한국철도공사) 여승무원 사건도 양승태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1,2심에서 승소한 KTX 여승무원들은 과거 4년간 고용된 것으로 인정돼 코레일로부터 임금과 소송비용을 일부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이 돈을 모두 토해내야 했다. 판결 직후 세 살 아이의 엄마였던 한 해고여승무원이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이처럼 이 판결 이후 KTX 여승무원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판결을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KTX 여승무원들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여승무원 정미정씨는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보고 너무 분하고 억울했다. 그래도 사법부를 믿었는데 이 나라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하느냐고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말했다.[132] 누가 이들의 삶을 보상해 줄 것인가?

양승태 사법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뿐만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진당 사건 관련 판결, 상여금의 노동자 통상임금 미포함 결정, 국가 배상권 청구권 6개월 시효 및 1, 2심 배상금 액수 깎기, KTX여승무원 정규직 판결, 쌍용차 · 콜텍 정리해고 적법 판결, 철도노조 파업 사건 업무방해죄 적용, 노조 파업관련 손배 · 가압류 폭탄 판결, 키코 불공정 행위 제외 판결 등 청와대가 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재판을 무기로 정치권력과의 거래를 시도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정치 · 경제 권력을 편드는 판결로써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133]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절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로 인해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법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의 천막농성,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발표 및 거리 시위를 벌이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각급 법원의 평판사와 부장판사들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였고,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였다.

법원 안팎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접 고발을 하지 않되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조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132 "KTX 여승무원들은 왜 대법원에 들어갔나", 시사인, 2018. 6. 8(금) 제560호

133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 · 경제 권력 편들기…'보수 폭주'", 한겨레, 2016. 3. 11

포함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 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34]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 발표가 있자 13명의 대법관 전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한 목소리로 '이러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135] 그 전에는 각급 법원장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모여서 양승태 사법부의 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대부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담화 발표 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이 배당되었고, 특수1부 수사팀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을 통째로 달라고 요청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모든 법조인의 선망의 대상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한민국 70년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원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시녀노릇을 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지만 이때는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일정하게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궤도에 오른 지금에 와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놀라운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단순히 정치권력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이해관계와 대법원장의 권력 행사를 위해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사법적 정의의 상징이자, 소수자 인권 보호의 마지막 수호자여야 할 대법원장이 이 같은 위법행위, 반헌법적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는 사실에 법조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

134 한겨레, 2018. 6. 16.자 기사

135 '재판거래' 의혹 싸고 대법원장 · 대법관 정면 충돌, 법률신문, 2018. 6. 5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행정처는 그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 법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력과의 거래 문건을 만드는 일에 열중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울리고 정치 · 경제 권력자들을 편드는 편향된 판결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했다. 이 모든 행위의 정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고, 따라서 그는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긴급조치 판결 뒤집기

2007년 1월 30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136]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러한 조치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부였다. 당시 보고서에 공개된 판사 492명 중 10여명이 현직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등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었고, 전직 대법원장 4명, 헌재소장 1명, 대법관 29명 등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법관을 지낸 판사가 100여명이나 포함돼 있었다.[137]

보고서가 공개될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승태는 긴급조치 판결에 12건이나 관련돼 있었다. 모두 배석판사로서 참여한 재판이었지만 그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현직 판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 관련자였을 것이다. 사법부 청산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양승태는 오히려 승승장구해 대법원장까지 지내며 사법농단의 주범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및 배상 판결이 뒤집혔다는 사실이다. 2013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

136 '긴급조치 위반 판결분석 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2007,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79~442쪽에 수록되어 있다.

137 "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 한겨레, 2007. 1. 30

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위헌 ·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긴급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로 그 대법원이 2014년 10월 27일 긴급조치 9호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138]

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을 정면으로 치받는 하급심 판결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했다. 2015년 2월 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 201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 2016년 2월 4일 광주지법 민사13부 등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긴급조치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왔던 것이다.[139] 이것은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무효 판결이 얼마나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부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대신에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돼 긴급조치 배상 판결 결정을 내린 하급심 판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한다.[140]

양승태 대법원의 이 같은 긴급조치 뒤집기 판결은 단순히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와 양승태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은폐 기도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법부는 아직도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적폐'를 수없이 안고 있는 조직이다.

양승태의 권위주의와 '르완 중위'들

양승태는 사법엘리트의 전형이다. 사법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그의 판사경력은 화려하다. 양승태는 화려한 경력에 걸맞게 엘리트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하여 대법관과 대법원

138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대법원2부.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대법원3부 등.

139 한겨레, 2016. 2. 16

140 "양승태는 어떻게 사법부를 지배했나", 한겨레21, 제1217호, 2018. 6. 18

장이 되었다. 양승태는 법원 내부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 발표 뒤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사법엘리트의 권위의식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양승태는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하였다. 그는 대법원장 재직 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조단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사안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내가 가야 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141] '누가 감히 나를 조사할 것이며, 내가 왜 그런 조사에 응해야 하느냐'는 항변처럼 들렸다.

최강욱 변호사는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임기 2년의 검찰총장을 부러워하는 것은 총장의 말 한마디에 한 몸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검찰 조직을 동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조직을 부러워한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동원해 법원을 검찰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했고, 권위주의적인 법원행정권 남용에 반발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며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법원이 군대처럼 모든 구성원을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142]

한편, 기자가 410개의 의혹 문건이 있다고 이야기 하자 자신이 어떻게 모든 컴퓨터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며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시는 분(기자)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자신은 책임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아랫사람 책임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태도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내에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지

141 "조사 거부 이유 묻자 '내가 가야 됩니까'…특권의식 드러낸 양승태", 한겨레, 2018. 6. 1

142 시사토크 「검찰, 알아야 바꾼다」–'9회, 검찰총장이 부러운 대법원장' 편 참고

세력이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승태의 권위주의적 권력행사를 뒷받침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였다. 1977년 학술연구모임으로 출발한 민판연은 2015년 2월 법원 내 요직을 독차지하는 조직이 되었다. 230명의 회원 중 현직 판사가 110명인데, 그 가운데 4명이 대법관(민일영, 김용덕, 김소영, 박병대)이었다. 전체 법관(3000명)의 4%에 불과한 조직이 현직 대법관의 30%를 장악한 셈이다. 특히 대법관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조실장, 사법정책실장, 인사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모두 차지했다. 역대 34명의 차장 가운데 6명이 민판연 출신이고, 법관 인사 실무를 전담하는 인사심의관은 극히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판연 회원이 맡았다.[143]

인사에서 혜택을 받은 후배들은 자신을 이끌어준 선배에게 충성심으로 보답했다. 40대 초반의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양승태의 '르완 중위'[144]가 되어 윗선의 지시에 아무런 저항 없이 법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사법농단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던 것이다.

한편, 양승태는 여성 · 인권 사건 등에서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호주제 위헌제청, 성범죄 친고죄 폐지, 여성의 종중 회원 인정, 한국외국어대 노조원 해고 무효소송 원심 판결 확정, 수형시설 내 개방형 화장실 관련 소송에서 국가에 패소 판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여성인 김소영 판사를 대법관으로 발탁하고 법원행정처 처장에 임명한 것에서 그런 평가가 있다. 그러나 김소영의 법원행정처장 발탁은 여성주의보다는 법원행정권 남용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자신에 우호적인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143 "양승태는 어떻게 사법부를 지배했나", 한겨레21, 제1217호, 2018. 6. 18

144 스페인과의 전쟁 당시 미국 장교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 두려움 없이 일한 인물로 알려진다. 2013. 1.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한 특강에서 '르완 중위' 일화를 소개했다고 한다. 대법원장이 이같은 군대식 사고를 이제 막 시작하는 법관 초년생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한겨레21, 제1217호, 2018. 6. 18

법원에 되돌아와야 할 '양승태의 운명'

대법원장 지명을 놓고 이명박 정권 내부에서 힘겨루기가 상당했는데 PK 출신의 박희태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양승태를 강하게 추천했다.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내정자로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법관 생활 36년 동안 판결의 일관성 유지"를 중요한 임명 배경으로 설명했다. [145]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승태는 처음 대법원장을 고사했다고 한다. 양승태는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지내면서 법관으로서 내가 가진 힘을 모두 쏟았다. 다시 대법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며 후보자 추천을 고사하고 히말라야 트레킹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양승태는 막판까지 고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설득을 받아들여 수락했다고 한다. [146]

한편, 양승태는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후배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소감을 묻자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6년여 전 대법관 임기를 마칠 때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대법원장으로 지명받아 돌아왔다. 한 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당시 일을 되새기며 농담조로 한 말이었지만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147] 그러나 양승태가 대법원장을 퇴임하면서 법원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좋다고 했던 말은 또 다시 지켜지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검찰 수사로 그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서 기소가 되면 그는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피고인석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법원은 평생 '양승태의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양승태를 피고인석에 앉히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145 "후보고사하며 히말라야행…이대통령이 설득/ 양승태 내정자 임명되기까지", 조선일보, 2011. 8. 19

146 조선일보, 2011. 8. 19

147 "양승태 '온몸의 상처 견뎌낸 고목같은 법관이었길…'", 조선일보, 2017. 9. 23

대법원장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 대법원에 관련자들의 원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건 주요 관련자가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이미 지난 해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해 파일 영구 삭제)을 통해 복구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확인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직접 디가우징을 지시했다고 한다.[148] 일선판사들이 "의혹 규명을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하던 때였다.[149]

아직도 사법부는 대법원장만 바뀌었을 뿐,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대법관, 각급 법원장, 고법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등 길목마다 '양승태가 임명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곳곳에 사법농단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양승태의 충직한 아이들'이 버티고 있다. 이들 '양승태의 사람들'과 '양승태의 아이들'은 요소를 장악한 채 길목을 지키며 법원 안팎의 완전한 진상규명 요구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검찰 수사와 진상규명 활동에 저항하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방해 행위를 뚫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화려한 법조엘리트의 참담한 몰락

양승태의 42년에 걸친 법조 경력은 화려하다. 그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서 법원행정의 핵심요직을 모두 거쳤고, 판사로서도 최고의 코스를 밟았다. 양승태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평판사로서 첫 근무를 시작해 마지막으로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으로 퇴임했다. 양승태는 대구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에서 잠깐 동안 근무한 것을 제

148 2018. 6. 27. KBS1 TV 저녁 7시 뉴스.

149 "대법,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양승태 하드는 영구훼손돼", 한겨레, 2018. 6. 27; "'증거인멸 의혹' 대법원, 사상 초유의 검찰 압수수색 받나", 경향신문, 2018. 6. 27

외하고 대부분의 서울에서 판사 생활을 지냈다. 판사로 임명된 지 8년만인 1983년 부장판사(서울고법판사)가 됐고, 18년만인 1993년 차관급인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임명됐으며, 2000년에는 IMF를 맞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가 되는 등 단 한 번도 승진에서 밀리거나 좌절 없이 계속 승승장구했다. 2000년대 초반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등을 거쳐 2005년 판사 임명 30년만에 법관의 최고 명예인 대법원 대법관이 됐고, 2011년에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되었다.

양승태는 전형적인 사법엘리트로서 법원 내의 핵심요직을 두루 그쳤다. 판사 경력뿐만 아니라 법원행정가 경력도 화려하다. 양승태는 1983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필두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의 핵심요직을 모두 거침으로써 '법원행정의 달인'이 되었다.

그러나 양승태의 그 화려한 마지막은 참담하다. 양승태는 한국 사법사상 헌법 파괴에 앞장선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고, 본 위원회의 '반헌법행위자열전'에도 그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사법역사는 양승태 이전과 그 이후로 기록되어야 할는지도 모를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사법부가 더 이상 치욕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인물소개

(총 115명) (가나다순)

가재환 (賈在桓, 1940.12.8. ~)

가재환은 충남 서산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4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동기 중 선두주자로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사법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내며 '법원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법행정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가재환은 5공 시절 1981~86년에 유태흥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등 공안사건에 안기부 등 권력기관의 의사(압력)를 사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 이러한 가재환의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성과 권력의 분립 ·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 안기부 등의 의사에 따라 법원이 판결하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재환이 사법연수원장 시절 '법조윤리' 과목을 개설하고, 직접 강의를 한 것은 한국 사법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강신욱 (姜信旭, 1944.4.1. ~)

강신욱은 경북봉화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9회에 합격해 1973년 검사로 임관했다. 검찰에서 특수수사통으로 대검 중수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서울지검 2차장, 인천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며, 2000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1991년 서울지검 강력부장 때 유서사건 수사팀장으로 강기훈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하여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에 선정됐다.

강진규 (姜鎭圭)

강진규는 1987년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5과2계 4반원(경사, 30세)으로 박종철 물고문에 가담해 죽게 한 경관이다. 재판에서 박종철 머리를 욕조 안 물 속에 눌러 넣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복역 후 1995년 만기 출소했다. 박종철 고문치사로 2차 구속된 고문 경관 반금곤은 징역 6년, 황정웅 징역 5년, 이정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창성 (姜昌成, 1929.9.1. ~ 2006.2.14.)

강창성은 경기 포천에서 출생했으며 육사 8기로 제5사단장을 역임했다.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꾀한 중요한 시기인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까지의 7년간을 정치정보를 다루는 요직인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 보안차장보, 육군 보안사령관으로 장기집권체제 구축과정을 도왔다. 1971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정보부의 국내정치를 총괄하는 보안차장보로서 정치공작, 공무원 동원, 불법자금 살포 등 수단을 총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지휘했다. 보안사령관으로 옮겨서는 유신 체제 정착을 위해 야당 국회의원 13명과 정치인, 반대자들을 불법 연행 · 고문하고, 유신 직후 온 나라를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1973년에는 기독교 목사, 전도사, 학생 10여명이 남산부활절예배에서 유신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시위를 기도한 것을 내란음모로 조작했다. 수경사령관 윤필용의 모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반란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박정희의 뜻에 따라 수사착수 때의 범죄와 별개의 건으로 구속 처벌, 보복을 가함으로써 박정희의 정권 영속을 위해 여하한 도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풍토 조성을 도왔다. 강창성이 보안사령관을 한 시기는 보안사가 남파간첩 감소 경향에 대응해 공작과를 부활시키고 대일공작계를 신설하고 '근원발굴공작'을 개시하던 때였다. 그는 보안사령관 재직 동안 포항제철 설계자 김철우를 비롯해 간첩 46명을 검거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76년 예편해 항만청장을 했다. 전두환 정권 때 과거 하나회를 수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항만청장 시절의 수뢰죄로 구속되어 2년6개월간 복역했다. 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 이회창 대통령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했다.

강충선 (1946.10.23. ~ ?)

강충선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다. 강충선은 1981년 박동운 사건(일명 '2차 진도간첩

단 사건')의 수사관으로써 박영준의 처남 이영남 조사를 담당했다. 1982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때는 안기부 청주분실에서 송기복 조사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서울 남산분실로 이송된 뒤에는 실황 조사 등을 담당했다. 피해자 송기복은 국정원 진실위 면담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강충선이 옷을 다 벗고 있는 대로 욕을 하면서 허리띠를 풀어서 마구 때렸다'고 증언하였다. 강충선은 1993년 안기부 부이사관일 때 보국훈장천수장을 수여받았고 포장사유는 "간첩 검거"였다.

강화봉 (姜和鳳, 1923 ~ ?)

강화봉은 경상남도 거제 출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 말 경찰을 지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거제경찰서 사찰계장(주임)으로 거제지역 보도연맹원 학살을 지휘 · 감독한 핵심 인물이며, 전쟁 전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도 일부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제지역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뤄졌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700여명의 주민들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피학살자 유가족들의 탄원으로 1951년 2월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된 강화봉은 관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황창록(거제CIC 대장), 배삼식(거제시국대책위원장), 이채권(전 거제 민보단장)이 사형을, 유기봉(거제CIC 정보원)이 20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배삼식은 옥중 자살했고, 황창록은 병사했으며, 이채권은 1951년 9월 17일 '잔형면제'로 풀려났다. 이어 유기봉이 1952년 3월 1일 '3.1절 특사'로 석방됐으며, 강화봉이 1952년 12월 4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남으로써 거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핵심 가해자 모두가 석방됐다. 이후 강화봉의 행적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경무현 (1937.12 ~ 2003)

경무현은 경기도경(후에는 인천시경) 소속 정보(대공)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는데 1994년 12월 31일 인천경찰청을 퇴사했다. 경무현은 이근안보다 한 살 많은 동년배이고 경찰은 5년 선배로 1974년 당시 같은 경장 계급이었다. 경무현은 1977년 경기도경이 조사한 안장영 사건의 내사공작(다람쥐공작)과 고문수사, 황용윤 사건(1978, 경기도경)의 내사공작(미나리공작), 정영 사건(1983, 안기부 인천지부)의 사전 내사 작업인 오징어공작(경기도

경), 김성학 사건(1985, 경기도경)의 고문수사, 그리고 반제동맹당 사건(1986, 경기도경) 고문수사에 가담하였다. 경무현 등 경기도경 소속 경찰관들은 1985년 승해호 출신의 납북귀환어부 김성학에 대한 불법감금 및 고문 · 가혹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우세(59, 전 경기도경 정보과) · 윤여경(56, 경기남양주경찰서 보안계장) · 경무현(62, 전 경기도경 정보과) 등 3명에 대해서는 가혹행위 · 불법체포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1년 · 자격정지 2~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최재복(59, 전 경기도경 정보과), 황원복(52, 인천동부경찰서 정보과), 김재곤(48, 경기 광주경찰서 보안계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달아난 이근안과 김병익(59) 등 2명에 대해서는 "재판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며 이때까지 검거되면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판결했다.

고영주 (高永宙, 1949.2.21. ~)

고영주는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한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27년 5개월 동안의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활동했다.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1980-), 대검 공안부 공안기획관(1995-98), 서울지검 1차장검사(2000-01), 대검 감찰부장(2004-05)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장(2005-06)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고영주는 1980년대 부산 지역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과 관련, 부산지검 검사로서 "고문 조작한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 기소"한 담당검사였다. 사건 발생 33년만인 2014년 9월 고호석 외 4인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사건의 성격 역시 영장 없는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검사복을 벗은 후 고영주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2008),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09-1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2015),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2015-2017)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판 괴벨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는 근거 없는 막말로 이름값을 높인 인물이다.

구자춘 (具滋春: 1932.5.11. ~ 1996.2.10.)

구자춘은 1932년 경북 달성에서 출생해 대구사범 1년제 강습과를 수료하고 잠시 초등학

교 교사로 재직했다. 한국전 발발과 함께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포병 소위로 임관했다. 1961년 제6군단 포병단의 대대장으로서 5 · 16내란 모의에 참여했으며, 5 · 16 당일 장병 430여 명을 인솔하여 육군본부 점령에 가담하는 등 내란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963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예편했다. 치안국 정보과장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으로 재직했는데 이때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탄압에 관여했다. 제주지사 재직 시 박정희 정권이 제주에서 또 다시 자행한 '강제노역'에 관여했다. 수산청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한 후 1974년 9월 양탁식의 후임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되었다. 1978년 12월 내무장관에 취임했으며 내무장관으로서 YH무역 시위 무력 진압, 부마항쟁 무력 진압 등에 관여했다. 5 · 17내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부정축재 등의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 받았으며 재산 헌납을 강요받았다.

길재호 (吉在號, 1923.4.15. ~ 1985.9.28.)

길재호는 1923년 평북 영변에서 출생해 1949년 육사를 8기로 졸업했다. 김종필 등과 함께 정군운동에 참여했으며, 이후 박정희와 김종필이 주도한 5 · 16내란에 모의 단계에서부터 가담하였다. 내란 성공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보건사회분과위원, 법사위원장을 지내는 등 내란 정권의 요직을 맡았고 공화당 창당멤버로 활약했다. 제6, 7대 총선에서는 충남 금산에서 당선되었으며 8대 국회에서는 전국구의원으로 진출했다. 1966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민주공화당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삼선개헌 추진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공화당 사무총장으로서 진두지휘한 1967년의 6 · 8총선과 1971년의 4 · 27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집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혐의가 짙다. 1971년 일어난 이른바 '10 · 2항명 파동'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당했으며 당에서 제명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양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여생을 보냈다.

김교련 (金敎鍊, 1929.10.9. ~ 2008.2.8.)

김교련은 평북 출신의 월남자로 1950년 종합6기로 임관했고, 1960년대부터 방첩대에서부터 보안사에 이르기까지 대공 분야에 종사했다. 김교련은 1971년 보안사 대공처장 근무

당시 5 · 16민족상(안보부문)을 받았는데, 공적조서에 의하면 “1950년도에 임관하여 전방 지휘관으로서 전투경력을 갖추고 휴전선의 비정규전을 연구해 왔으며, 1954년 국방부 연합참모부에 전임되어 대간첩작전 업무의 중책을 수행하여 북괴대남공작방향과 단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국가정책기관에 건의”했다고 되어 있다. 5 · 16 이후 1963년부터 1974년까지 방첩대와 보안사에 근무하면서 대간첩작전, 대공수사에서 맹활약하였고, 을지 · 충무 ·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국선장 · 천수장 · 삼일장, 대통령 표창 등 많은 포상을 받았다. 1960년대 초 · 중반 방첩부대 공작과장, 1 · 3군단 방첩대장, 502(경남) · 507(충북) 방첩대장, 방첩대 방첩처장 등을 거쳐 1968년 보안사령부로 개편된 다음에는 대공처장으로 재직하였다. 김교련은 대공처장으로 있을 때 서승 · 서준식 사건(1971)을 필두로 일본 관련 간첩조작 사건에 관여하였고, 남산부활절예배사건(1973), 문인간첩단사건(1974) 등의 수사책임자로서 악명을 떨쳐 반헌법행위자로 선정되었다. 1977년 준장으로 예편한 뒤 동아건설 부사장 겸 동아콘크리트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보안사 시절의 인맥을 활용하여 5공 초기 동아건설의 리비아 진출과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근수 (金瑾洙, 1934.11.6. ~)

김근수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를 졸업하였다. 1961년 중앙정보부 공채 1기로 입사해 대공수사국 수사관, 수사과장, 수사단장, 안전조사국장을 지냈다. 박노수 · 김규남 간첩사건(1969), 사와모도 산지(澤本三次) 간첩사건(1972), 김정사 간첩사건(1977)을 수사하여 훈장까지 받았으나, 이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신반대 민주화 운동을 ‘유신저해사범’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야당인 신민당을 사찰했으며, 김영삼이 신민당 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공작을 벌였다. 안전조사국장일 때 박근혜-최태민 관계를 조사하기도 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때는 안전국 요원 30여명을 부산 계엄사 합수부로 파견하여 부마민주항쟁이 남민전의 배후조종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려고 시도했다. 5.17 이후에 보안사 이학봉과 함께 김대중 주변인물을 고문하여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한 수사 책임자였다. 1981년 현홍주의 후임으로 안전기획부 정보정책국장이 되어 관제 야당 창당 · 관리, 방송 PD 조사 · 협박을 했다. 안기부 1차장을 한 뒤 보훈

처장, 13대 국회의원, 상주시장을 했다. 상주시장 때인 2005년 상주 콘서트 압사사고로 11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완 (金基完, 일명 김재권: 1926.4.5. ~ 1994.6.23.)

김기완은 충북 음성 출생이다.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재학중 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정훈국 부국장, 공군 정훈감으로 근무했다. 정훈감이던 1958년 KNA기에 탑승중 납북되었다가 18일만에 귀환했다. 1966년 김형욱 중정 부장에 의해 국내정치 담당국(제3국)의 촉탁 판단관으로 중정에 들어가 1967년 5.3 대통령선거와 6.8 총선을 앞둔 정치분석 임무를 담당함으로써 6 · 8 부정선거의 일익을 담당했다. 선거 뒤 심리전국장으로 승진 임명되어 삼선개헌 때 고위 당정청대책회의 실무담당자로 활동함으로써 정권연장을 위한 삼선개헌을 위해 일했다. 1969년 주일공사 신분의 중정 일본책임자로 임명되어 재일동포 내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는 민단 자주파 세력을 불법과 흑색모략을 동원해 제거하고자 하였다. 1973년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국민 46%의 지지를 받은 바 있는 김대중을 일본에서 마취 납치하는 범죄를 지휘한 최고 현지 책임자였다. 김기완은 일본 폭력배 두목 양원석에게 김대중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면서 협조를 구하고, 신용순 동아일보 기자 등 많은 중정 협조자들을 관리했다. 양일동과 김대중의 만남을 알아낸 것도 김기완이었다. 납치 가담자들의 폭로를 두려워 한 박정희로부터 현금 50만 달러와 미국 주재 중정 요원 신분을 획득하고 1979년에는 한국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 1982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전 KBS 아나운서 임택근의 누나가 부인이며, Sung Kim(한국명 김성용) 전 주한 미대사는 차남이다.

김기홍 (金淇洪, 1928 ~)

김기홍은 경상남도 삼천포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1953년 부산지검 검사, 1956년 춘천지검 검사, 1957년 – 1961년 2월 서울지검 검사를 지냈다. 5 · 16 쿠데타 후 혁명재판소부 검찰관에 임명되어 민주당의 장면 등을 '쿠데타모의혐의'로 공격하며 정치적 타격을 준 '이주당(二主黨) 사건' 등을 담당하였다. 1962년 8월 김기홍은 육군보통군법회의에서 '이주당 사건' 담당 검찰관으로서 장면 전총리를 직접 심문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1963년 4월 그는 검

찰관에서 법관으로 전직하게 되어 부산지법, 제주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1968년 9월 19일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 1968년 11월 2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5부 재판장으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공판을 담당하여 권재혁 이일재에 대해 사형, 이강복 이형락에게 무기징역, 그외 8명에게 최고 15년에서 3년6월까지의 징역형 등 피고인 12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969년 11월 3일 권재혁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이일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971년 10월 18일 이강복은 대전교도소 수감중 암으로 사망했다. 또 이형락은 만기출소했으나 자살을 하는 비극적 삶을 선택했다. 2014년 5월 16일 대법원은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옥 (金南沃, 1939.3 · 15.~1990.11.11.)

김남옥은 자신이 담당했던 과거 간첩 · 공안 사건 중에서 재심무죄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5건이나 될 정도로 고문조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검사 중 한 명이다. 대표적인 고문조작 사건 공안검사로 지청장까지 지냈으나 주로 광주 · 전남과 전주 등 호남지역을 돌았던 아웃사이더 검사였다. 김남옥은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 이청일 사건(1973), 납북귀환어부 강대광(태영호) 사건(1979), 김기삼 간첩조작 사건(1981), 김양기 간첩조작 사건(1986)의 1심 검사를 맡았는데 이 사건들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김남옥은 김기삼 사건의 피해자 김씨가 '검찰 조사 때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였으나 욕설까지 하면서 고문 사실을 외면했다. 또한 김남옥은 1985. 10. 전남대 삼민투 사건에서 강기정 등 4명에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및 자격정치 12년 등 중형을 구형하였다.

김동근 (金東根, 1930.10.3. ~)

김동근은 서울 태생이며 육사 8기다. 1966년 2군사령부 수송참모(대령)에서 예편하고, 중앙정보부 해외정보국 부국장으로 특채되었다. 1969년 김계원 부장 비서실장, 1970년 정권 위해사범 수사를 목적으로 신설된 보안수사국의 초대 국장을 했다. 1971년 9월부터 중앙정보부에서 국내정치를 총괄하는 보안차장보에 있으면서 유신체제 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서 헌정중단과 헌법 파괴를 통해 유신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또한 1971년 4 · 27 대통령선거 관권개입과 부정, 10.2 항명파동 때 김성곤 의원 등 고문, 위수령과 국가비상사태선언, 서울대생 내란음모 조작사건 등도 지휘했다. 1973년 주영 공사, 1977~1985년주수단 대사 등 외교관을 했다. 1988년 신민주공화당 총재비서실장, 1992년 14대 국회의원(민자당 전국구)을 하면서 구 공화 · 유신세력을 재건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파기, 3당합당 추진을 위해 김종필을 보좌했다.

김동운 (金東雲, 김병찬으로 改名: 1926. 일자 미상 ~)

김동운은 충남 출생으로.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이후 대북공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에 근무하다가 5 · 16후 중앙정보부에 들어갔다. 한일 수교 이전인 1963년부터 신문사 특파원 신분을 위장해 일본에 들어가 활동했다. 수교 후에는 1969년 군에서 예편하여,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해 첩보 · 공작 활동을 했다. 특히 일본 공안기관 요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했다. 김대중 납치사건에서 김대중 납치계획서인 'KT공작계획서'를 작성해서 차장보 이철희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서의 제2안은 일본 폭력범죄조직인 야쿠자를 동원해 김대중을 일본에서 살해하는 안이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전직 일본 자위대 정보요원들에게 김대중의 소재 파악과 미행을 의뢰했다. 윤진원 공작단장과 함께 납치 준비물을 준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사건이후 지문 발견과 목격자 등장으로 일본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는 등 납치사건이 중정의 소행임을 드러내는 중심인물이 되었으나, 한국 수사당국은 형식적인 조사 뒤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박정희정권은 납치 후 대외적으로는 김동운을 해임했다고 발표했지만 1년만에 몰래 부이사관급 고위직으로 복직시켜 1982년까지 계속 근무케 했다.

김동하 (金東河, 1919.4.1. ~ 1995.12.3.)

김동하는 1919년 함북 무산에서 출생해 만주 신징군관학교를 제1기로 졸업하고 만주군 장교로 임관하였다. 1945년 일본 패망 당시 만주군 상위(대위)였다. 1946년 귀국한 후 해안경비대에 입대해 12월 소위로 특별임관했다. 1949년 4월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요원으로 참여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제주읍 주둔 해병대 제2대대장으로서 민간인에 대한 집단 총살을 지휘했다. 1960년 1월부터 박정희와 긴밀히 접촉하며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 해병

대 병력 동원을 위해 김윤근 등을 포섭하고 주요 작전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및 반란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하였다. 내란 성공 후 고문, 최고위원 겸 운영기획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 외무국방위원장 등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요직을 맡았다. 1963년 3월 '반혁명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며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1963년 12월 사면령에 의해 면소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1971년부터 6년간 마사회장을 역임하였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친일인명사전』에 수록돼 있다.

김성남 (金聖男, 1942 ~)

김성남은 군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고, 1968년 부산지검 진주지청 검사로 시작해 1984년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을 끝으로 못을 벗었다. 김성남은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 성동지청 검사를 거쳐, 춘천지검 속초지청장(1981), 부산지검 울산지청 부장검사(1982), 전주지검 정읍지청장(1983)을 지냈으나 검찰의 요직을 맡지는 못했다. 김성남은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였고, 5공 말기 대한변협 추천 문귀동의 부천서 성고문 사건 특별검사 2인에도 올랐다. 김성남은 온건개혁 성향의 인물로 평가되지만, 검사 시절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인 정규용 사건(1976, 1심 징역 · 자격정지 15년), 안희천 사건(1977, 1심 징 · 자15년), 안장영 사건(1977, 1심 사형)의 1심 검사로서 고문에 의한 조작 사실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반헌법행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세 사건은 경기도경의 이근안 등이 가혹한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으로 2013~14년에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성남은 피의자들이 고문으로 사건이 조작됐다고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검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김수현 (金秀顯, 1934 ~)

김수현은 1960년 경찰에 들어와 대공 수사를 담당했고, 1980년 3월부터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근무한 경관이다. 상관인 박처원의 지휘 아래 1981년 이른바 '학림 사건'(전국민주학생연맹 ·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 고문 수사에 가담했으며, 1983년 수사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1985년 치안본부 대공수사 1반장(경감) 때 서울대 민추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를 고문하여 독직폭행죄로 피소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영광 (金永光, 1931.10.20. ~ 2010.9.13.)

김영광은 경기 평택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를 졸업한 뒤 1961년 중앙정보부에 들어갔다. 위장잡지『신사조』운영, 판단기획국 과장, 4 · 27 대선 대책반, 1971년 정국운영계획안인 'KM계획' 작성에 참여했다. 1972년 5월부터 유신체제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궁정동팀의 실무책임자로서 유신쿠데타와 헌정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신 후 판단기획국장으로 유신정국 운영방안을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긴급조치 하 온갖 반헌법적, 반민주적 파행이 벌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 제10대 유정회 국회의원에 이어, 11대(전두환 정권하 관제 야당인 한국국민당), 14대(민자당) 국회의원을 했다.

김용성 (金容成, 1947.9.20. ~)

김용성은 1969년 2월 동국대 ROTC 소위(학군7기)로 임관해 1971년 중위 때부터 육군보안사령부와 인연을 맺었다. 그 후 1980년대 내내 국군보안사령부 3처 대공분석실장, 보안사령부 대공처 수사 1,2계장, 전주501보안대 대공과장, 보안사령부 3처(대공처) 수사2과장, 보안사 2처(방첩처) 방첩6과장 등을 지내며 이른바 '간첩 사건' 수사에서 명성을 떨쳤다. 김용성은 1981~1983년 국군보안사령부 수사2계장(소령)으로서 재일유학생 간첩사건인 이헌치 사건, 김태홍 사건, 김병진 사건, 하원차랑 사건, 김상순 사건, 박박 사건, 서성수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였고, 1984~85년에는 전주510보안대 대공과장(중령)으로서 납북귀환어부 서창덕 사건(1984)과 정삼근 사건(1985) 조사를 지휘하였다. 김용성이 수사한 이들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거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용성은 198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방첩처 방첩2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비상시 요주의 인물의 예비검거 계획인 '청명계획'을 입안 수립하였다. 이처럼 김용성은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고문 수사와 간첩 사건 조작 등으로 악명을 떨쳤고, '청명계획' 수립 당시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사실이 폭로되었다. 김용성은 '간첩 검거' 등의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1975.5), 보국훈장삼일장(1982.8.27), 보국훈장천수장(1984.11.1) 등의 훈장을 받았다.

김용순 (金容珣, 1926.4.15. ~ 1975.11.10.)

김용순은 1926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해 1947년 조선경비사관학교(=육사 3기)를 졸업했다. 1961년 5 · 16내란에 가담하며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겸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62년 7월 최고회의 문교사회분과 위원장에 임명되었고 헌법심의위원을 겸임하였으며, 재건국민운동 초안을 작성 · 발표했다. 1963년 1월 제2대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했고, 재건당(민주공화당) 조직에 참여, 1963년 9월 육군 중장 승진과 동시에 예편했다. 1963년 12월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삼천포시 · 사천군 · 하동군 지역구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 지역구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는데 일부 선거 부정 사례가 보고되었다. 1969년 1월부터 한강개발공사 이사를 겸임한 혐의로 국회 해당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신청을 했으나 낙천되었다. 이후 1974년까지 5 · 16민족상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였다.

김용진(金容晋, 1914.7.15. ~ 1992.)

김용진은 평남 강동 출생으로 1936년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1940년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1941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42년 변호사로 개업해서 활동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1.4후퇴 때 남하했고, 오제도 검사 등 대공 검사의 주선으로 법관으로 복직했다. 195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52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선포한 포획심판소 심판관, 1954년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법관생활 중에도 법전 편찬위원, 대학강사, 법전 집필 등 학구적인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1958년 조봉암과 진보당사건 2심 재판장으로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진술이 강요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진술한 양명산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특무 정보기관의 조작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해서 결국 조봉암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법과 현실의 간극을 판사가 메울 수 없다면, 법의 노예가 된다면 판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한 1심 재판장 유병진 판사와 대조된다. 그는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외에도 많은 간첩사건(간첩 고정길, 간첩 박설원 등)에서 원심을 깨거나, 원심 그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권력에 맞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하거나 판사의 정치적 · 사회

적 책무에 적극 나선 적은 없었다. 5 · 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10월 해임되었고, 다시는 법관으로 기용되지 못했다. 퇴직 후에는 1961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1966년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법 연구를 한 결과 1976년 '구속적부심 부활'로 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김윤근 (金潤根, 1926.5.19. ~)

김윤근은 1926년 황해도 은율에서 출생했다. 만주 신징(新京)군관학교 6기 예과 과정을 거쳐 곧바로 일본 육사 본과 2년으로 입교하나 머지않아 일제가 패망하여 곧바로 귀국했다. 1947년 2월 해군사관학교를 1기로 졸업했다. 1950년 모슬포에 주둔한 해병대 제3대 대장(소령)으로 임명되었는데 8월 20일 현장 계엄군 지휘관으로서 150~200여명에 이르는 예비검속자에 대한 총살 집행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에 현장 책임자로 가담하였다. 1960년 박정희와 김동하로부터 내란 참여를 설득 받고 1961년 해병 제1여단장으로 부임한 후 쿠데타에 출동할 부대의 전투준비 태세 향상 등 내란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시켰다. 5 · 16 당일 김윤근의 해병 여단이 가장 먼저 헌병대의 저지선을 뚫고 한강 도강에 성공함으로써 내란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5 · 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교체위원장, 외무국방위원장, 부정축재자처리위원회 위원, 헌법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963년 3월 반혁명음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구속되지만 1개월 만에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1963년 중장으로 예편한 후 1970년까지 호남비료 사장, 1972년부터 1976년까지 한국수산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김재춘 (金在春, 1927.6.4. ~ 2014.1.2.)

김재춘은 1927년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해 1948년 육사를 5기로 졸업했다. 5 · 16내란 모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내란에 동원할 실병력 지휘관들을 구성하고 있던 육사 5기 그룹을 포섭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5 · 16 당시 몇 차례 주요한 고비를 임기응변을 통해 넘김으로써 내란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 5 · 16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과 방첩부대장 및 군 · 검 · 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활동하였다. 1963년 2월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된다. 박정희의 지시로 범국민정당(자유민주당) 설립을 추진했으

나 박정희가 결국 김종필의 공화당을 선택하면서 이후 권력의 핵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됐다. 1971년 5월 민중당 소속으로 김포 · 강화 지역구에서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데 이듬해 공화당에 입당했다. 1973년 2월 공화당 소속으로 제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78년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낙선했다. 1987년 대선 당시 '군정 종식'을 주장하며 YS 진영에 합류하지만 머지않아 공천 문제로 결별하였다. 이후 정계를 떠나 5 · 16 민족상 이사장 등을 지냈다.

김종오 (金鍾五, 1921.5.22. ~ 1966.3.30.)

김종오는 1921년 충북 청원군에서 출생하였으며 1943년 주오대학교 법학과를 중퇴한 후 1944년 학도병에 입대하여 일본군 견습사관(소위)으로 소대장보가 되었다. 일제 패망 직후 귀국하여 1946년 1월 군사영어학교를 1기생으로 졸업하면서 육군참위(소위)로 임관했다. 한국전쟁에 제6사단장, 제3사단장, 제9사단장으로 참전했다. 이후 육사교장과 제1군단장, 제5군단장, 육군 교육총본부 총장 등을 거쳐 1959년 2월 육군 참모차장에 임명되었다. 5 · 16쿠데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이 되었고, 1961년 6월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었다. 총장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재준 헌병감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문재준의 입을 통해 부정축재와 부정선거 등 과거 비리 사실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1962년 1월 육군 대장으로 승진하였다. 군 수뇌부가 김종필 세력을 견제하고 박정희의 민정 참여 포기를 촉구할 때 함께 했지만 박정희가 군정연장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3 · 16성명을 발표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군정 연장 지지를 표명했다. 1965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였다.

김중서 (金重瑞, 1919.6.30. ~ 1991.3.13.)

김중서는 함경남도 정평 출생으로 1943년 보성전문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5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1980년 김재규 사건에서 사형선고에 반대하여 사퇴한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대법원 판사로서 5 · 18 이후 정치풍토쇄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치인 811명을 정치활동규제대상자로 선정 · 발표(1980.11.12.)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이들의 정치활동과 공무원 피선거권을 제

약하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치적 반대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데 협조하고 5공화국 수립을 방조하였다. 1981년 11월 김중서를 포함한 대법원 판사 전원은 야당지도자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선 (金泰善, 1903.5 · 18. ~ 1977.1.7.)

김태선은 함경남도 고원군 출생으로 평양 숭실중학교 졸업 후 도미(渡美)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듀북 대학을 거쳐 노스웨스턴대학교 영문학 수료 후 일리노이 웨슬리안대학 범죄학 및 사회학(학사)을 전공하고 보스턴대 대학원에서 신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57년 일리노이 웨슬리언대에서 명예박사학위(법학)를 받았다. 김태선은 해방 후 미군정청 경무부 수사국장을 거쳐 수도경찰청장, 서울시경국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전쟁 발발 초기 내무부 치안국장을 역임했다. 이어 제5 · 6대 서울시장과 제9대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김태선은 여러 정치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최능진 사건을 비롯해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와해 사건, 김구 암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을 반민특위로부터 보호한 인물도 김태선 당시 수도청장이었다. 또 여순사건 당시 이뤄진 숙군 작업도 이승만을 독대한 김태선의 조언으로 본격화됐다. 1949년 6월 국민보도연맹 결성 당시 서울시경국장으로 이를 주도했으며, 한국전쟁 초기 치안국장으로 민간인 학살 사건의 내무부 최고 책임자였다. 김태선은 온갖 부정선거에도 연루돼 있다. 1952년 내무부장관에 기용된 것도 8 · 5정부통령 선거 때문이었다.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서울시장에 인선된 그는 이승만의 호를 딴 우남회관(현 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시 지명의 '우남시' 변경 등을 주도했다. 또 민족혼이 담긴 효창공원을 시민운동장으로 만드는 계획에도 앞장섰다. 1956년 5 · 15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이 패한 책임을 지고 7월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더 이상 공직을 맡지 못했으며 1967년 재향경우회 회장을 지냈다.

김형영 (金炯永, 1939 ~)

김형영은 20대 때부터 인장 · 인쇄업에 종사하다가 197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재직한 문서감정인이다. 1991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그해 5월 분신한 김기설 유서와 검찰이 제시한 강기훈 필적을 감정했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엉터리 감정 결과를

증거로 삼아 강기훈을 유서대필범으로 처벌했다. 1992년 국과수 퇴직 후 제일문서감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과수 재직 당시 문서 허위 감정과 뇌물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섰고, 사설감정인 때인 1998년 국유지 소송사기단에 연루돼 구속된 바 있다.

남궁길영 (1925.12 ~ 2009 사망 사실 확인)

남궁길영은 1951년 8월 경찰에 임용되어 1973년 12월 경사로 퇴직했고, 전북지역에서 오랫동안 정보경찰(1963.7.~1972.6)로 근무하였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 '임봉택 · 박춘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망한 상태이다. 남궁길영은 전북도경과 군산경찰서 수사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건의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남궁길영 등 정보과 수사관들은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조작을 통해 최만춘(1969), 1차 서창덕(1969), 임봉택 · 박춘환(1972) 등을 간첩으로 조작해냈다.

노덕술 (盧德述, 1899.6.1. ~ 1968.4.1.)

노덕술은 경남 울산 태생으로 1918년 일제 강점기 경남 순사로 시작해서 1945년 평양경찰 서장으로 해방을 맞고 월남했다. 1946년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임용되었다. 1948년 '박성근(임화)고문치사사건'을 저지르고 발각되자 도주했다. 도중 중에도 경찰의 비호를 받았고, 최난수와 함께 반민특위요인 암살음모를 기획했다. 1949년 1월 악질친일 고문 경찰의 대표적인 '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되어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어 박성근고문치사사건, 반민특위암살음모 등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50년 군으로 자리를 옮겼고, 1955년 서울 제15육군범죄수사단 대장시절 뇌물수뢰 혐의로 파면되었다. 파면 후 고향 울산으로 내려가 오랜 시간 칩거하다가 1960년 7월 5대 민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탈 그 후 흥신소를 차려서 활동하다가 1965년 탈선 흥신소로 영업정지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68년 4월 서울에서 사망했다.

노원욱 (魯元旭, 1936.12.26. ~)

노원욱은 평북 선천 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13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 부장 때 유서사건 1심 재판장이었는데, 이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추론으로 조작된 공소사실과 국과수의 엉터리 필적 감정결과를 인용해 강기훈에게 자살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2007년 진화위 조사로 재심이 권고되어 2015년 대법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1992년 변호사를 개업했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원이다.

문귀동 (文貴童, 1947.7.19. ~)

문귀동은 1986년 부천경찰서(현 부천소사경찰서)에서 노동운동 관련으로 연행되어 온 서울대 휴학생 권인숙을 성고문한 경관이다. 당시 부천서 조사계 형사(경장, 39세)로 재직하면서 권인숙을 상대로 5 · 3 인천사태 수배자 행방을 취조하던 중 저항할 수 없도록 결박해 놓고 강제 추행 등 천인공노할 고문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파면됐고, 2년 뒤인 1988년 가혹행위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어 5년형을 언도받고 만기 복역했다.

문재준 (文在駿, 1926. ~ 1994.10.15.)

문재준은 1926년 함남 함흥에서 출생하여 1948년 육사를 5기로 졸업했다. 5 · 16내란 당시 문재준이 이끄는 6군단 포병부대는 내란군 가운데 최초로 서울에 진입해 육군부대를 점령함으로써 내란을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6군단이 미군의 작전지휘권 하에 있었음에도 미군 몰래 병력을 이동시킨 것은 휴전선 방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행위였다. 쿠데타 성공 후 헌병감 및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을 겸직했다. 김종오 신임 육군참모총장과 인사문제로 불화를 겪는 과정에서 김종필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게 되며 김종필을 손보는 동시에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오히려 '장도영 일파 반혁명사건'에 연루돼 1962년 1월 '혁명재판소 심판부'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62년 5월 형 집행 면제로 석방되었다. 1971년 대선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정계 진출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벽시계를 제조하는 '동선산업사'를 운영했으며 택시 부착용 시계를

만들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기도 했다.

박래조 (朴來祚, 1925/1926? ~)

박래조의 출생 시기는 국무총리를 지낸 황인성(1926.1.9. 출생)과 외무장관을 역임한 김광수(1925.8.15. 출생)과 무풍초등학교 동기인 점을 감안할 때 1926년 전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경찰청에서 펴낸 『전라북도 호국경찰사』(2012. 8.)에 의하면 박래조는 6 · 25참전 경찰유공자로, 1956년 무공포장을 받았다. 박래조는 1960년대부터 1983년 퇴임할 때까지 전북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부안경찰서장, 순창경찰서장, 임실경찰서장, 전북도경 통신과장, 고창경찰서장, 김제경찰서장, 전주중부경찰서장, 전북도경 정보2계장, 정보과장, 보안과장 등을 지냈다. 박래조는 1968년 전북도경 정보2계장으로 재직하면서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간첩사건(1968) 조작에 관여하였다. 1978년에는 전북도경 정보과장으로서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사건의 고문조작 수사를 지휘하였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영길 (? ~ ?)

박영길은 1980년 안기부 1국 1단 수사3과 수사관으로써 석달윤 · 김정인 사건 수사 당시 김정인 일가족과 석달윤 등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김정인, 석달윤, 박공심, 장제영, 석달임 등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수사로 사건을 조작하는데 가담하였다. 또한 1981년 박동운 사건에서는 주수사관으로써 이치왕 계장과 함께 진도지역에서 박동운 주변 인물들에 대한 내사와 불법연행 업무를 진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박원택 (朴元澤, 1938? ~)

박원택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치안본부 대공3부 수사2단5과2계장(경정)으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축소 조작하고 은폐한 경관이다. 1966년 경찰(순경)에 입문했고, 1982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고문 경관 도피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종연 (朴宗演, 1927.12.15. ~)

박종연은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61년(34세) 고시 사법과 13회에 합격했다. 1965년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한 김중태 · 송철원 등을 가혹하게 심문한 뒤 내란음모로 기소했다. 같은 해 MBC사장 황용주를 논문을 이유로, 조선일보 이영희 기자를 기사를 이유로, 영화감독 이만희를 영화 '7인의 여포로'의 내용을 이유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1965년 소설가 남정현을 소설 '분지'의 내용을 이유로 구속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965년 위수령 때 예비역 원로 장성들이 국민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호소문을 내자 이들을 구속하고 내란선동죄로 기소했다. 남북교류를 주장한 민사당 대통령 후보 서민호 국회의원을 반공법으로 기소했다. 1967년~1969년 동안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국장을 하면서 동백림 사건 때 다시 민비연 학생과 교수를 엮어 기소했으며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재판부를 협박했다. 검찰로 돌아와 김지하 등을 오적 사건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대중 후보 집 화재 사건 때는 영장담당판사실에 다른 검사들과 몰려가 5시간 동안 김대중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압박했다. 1971년 조영래, 장기표 등을 중앙정보부로부터 송치받아 9단계 내란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구속 기소했다. 1973년 돌연 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박지원 (朴志遠, 생몰년도 미확인)

박지원은 1968년 12월 당시 전북도경 정보2과 3계(대공분실) 주임(경위)으로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사건의 수사 실무책임자(경감)였고, 1969년 10월에는 전북도경 정보2과 3계장(대공분실장)으로 납북귀환어부 최만춘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다. 이 두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재심이 청구되어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박지원은 수사일선에서 악명을 떨친 고문 경찰관이었지만 인적 사항이나 전체 경력이 파악되지 않는다. 1971년 7월 27일 보국훈장을 수여받았는데 경감 계급이었고, 1973년 6월 5일 경정으로 승진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된다.

박찬일 (朴贊一, 1921 ~ 2005)

박찬일은 경북 대구 출생으로 1943년 일본 중앙대 전문부를 졸업하고 1946년 잠시 경북

여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1948년 외무처가 지원하는 미국유학생에 선발되어 도미했다. 귀국 후 이기붕의 추천으로 1954년 이승만대통령비서관이 되었다. 1956년부터 경무대를 출입하는 면회와 섭외를 담당하면서 이승만의 최고 측근이 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던 이기붕조차도 박찬일 비서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승만대통령 접견이 불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고령의 이승만 정권 집권말기 경무대 인의 장막의 총 조정자였다. 박찬일은 프란체스카여사와 협력하여 이승만에게 올라가는 국정정보를 선별해 차단하였다. 이러한 그의 위세는 1959년 8월 다울링 주한미 대사가 본국에 보내는 전문에서 '영부인 프란체스카여사와 30대 초반에 불과한 박찬일 비서가 대한민국의 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다. 경무대 절대 권력을 한 몸에 지닌 박찬일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 집무가 불가능하도록 인의 장막을 치고 직권남용에 의한 독직과 공무집행 방해, 부정축재를 일삼았다. 경제적으로는 그의 매부였던 정재호가 삼호방직과 제일은행이라는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대재벌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경향신문폐간압력, 조봉암 사법살인 압력 행사가 알려져 있다. 4월 혁명 직후에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의 하와이 망명에 필요한 절차를 극비리에 추진했다. 1960년 8월 구속되어 그 해 11월 1심에서 '공용서류무효'죄로 징역 2년이 언도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15일 서울고법(조창섭부장판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 후 5 · 16 쿠데타가 발생했고 다시 26명의 부정축재자 중 한명으로 기소되었다. 1962년 1월 26일 부정축재처리법을 적용하여 징역 4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그러나 1962년 2월 1일 혁명재판소 5심판부는 박찬일에게 징역 2년을 언도했고 다시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에 의하여 1962년 4월 10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62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그 후 1965년 성창해운회장, 1969년 반도목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4년에는 홀트국제아동복지회가 제정한 84년도 '해리 홀트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행적과 정확한 사망 날짜는 미상이다.

박창암 (朴蒼巖, 1921(1923?).5.15. ~ 2003.11.10.)

박창암은 함경남도 북청군 양화면 출생이며, 만주군 간도특설대 하사관 출신의 대한민국 육군 군인이다. 한국전쟁 때 주로 심리첩보전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1963년 1월 준장으

로 진급과 동시에 예편하였다. 1961년 5 · 16군사반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혁명검찰부장을 지냈다. 박창암은 혁명검찰부장으로서 ①5 · 16 군사반란 직후 설치된 혁명재판소 검찰부의 기소 지휘를 통해 ②5 · 16 직후 인권침해 사건 ③민족일보 폐간 및 조용수 사법살인 사건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다. 이후 박창암은 1963년 '군 일부 쿠데타 음모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동년 12월 출옥 후 월간지 〈자유〉 발행인(1968-2001), 국사찾기협의회 2대 회장(2000)을 역임하였다.

박처원 (朴處源, 1927.5.13. ~ 2014.9.)

박처원은 평남 진남포 출생으로 해방 후 단신 월남하여 1947년 경찰에 투신, 대공 수사 요원으로 1980년대 경무관, 치안감까지 지냈다. 해방 정국에서 남로당 와해 공작을 비롯해 1950~70년대 남파 간첩 검거 등 수많은 전공(?)을 쌓았는데, 화려한 전공 뒤엔 악랄한 고문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재직하는 동안 4등 보국훈장, 5등 근무훈장, 은성화랑무공훈장, 방위포장 등을 받았다. 전두환 정권에서 대공 경찰 책임자로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휘하 수사관들을 지휘하여 학생 ·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고문으로 각종 시국 사건들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했다. 당시 경찰이 수사한 무림 · 학림 용공 조작과 김근태 고문이 그의 지시 아래 저질러졌다. 1987년 5차장 때 박종철 고문치사 경관 축소조작 및 사건 은폐를 주도했고, 이 건으로 1996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0년엔 이근안 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에선 1988년 정년퇴임했다.

박충훈 (朴忠勳, 1919.1.19.(음력) ~ 2001.3.16.)

박충훈은 전라남도 제주군 출생의 대한민국의 군인 · 경제관료 · 정치인이다. 공군소장 예편(1961). 상공부 차관(1961-1963) 및 장관(1963.2-8), 경제기획원 장관(1964-1967), 한국무역협회 회장(1973-1980), 국무총리서리(1980.5-8/1980.8-9) 및 대통령권한대행(1980.8-8), 국정자문위원(1981-1988),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상근 회장(1982-) 등을 역임하였다. 국무총리서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박충훈은 전두환 · 노태우 신군부의 내란행위를 묵인 · 방조함으로써 제5공화국 수립을 방조한 핵심 당사자였다.

박치옥 (朴致玉, 1925. ~ 2005.3.)

박치옥은 황해도 황주에서 출생했으며, 1948년 4월 육사를 5기로 졸업했다. 1961년 3월 육군 제1공수전투단장으로 부임했다. 5 · 16내란에 모의 단계에서부터 가담하였다. 5 · 16 당일 계획보다 지체되기는 했으나 박치옥이 이끄는 공수단은 중앙청 · 국회의사당 · 시청 · 방송국 등 서울 중심부를 점령했다. 5 · 16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위원이 되었지만 7월 3일자로 최고회의 위원직 사표가 수리되었다. '장도영 일파 반혁명 행위 사건'에 연루돼 혁명재판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상소 기각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1962년 5월 형 집행 면제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석탄공사 이사를,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구로수출공단 전무를 역임했다.

방준모 (方俊模, 1926.일자 미상 ~ 2014.5.21.)

방준모는 일본 출생이며 육사 8기다. 줄곧 헌병으로 근무하다 1960년 퇴역. 1961년부터 중앙정보부 근무. 대공수사국 수사과장, 1964년 감찰실장. 장기영 부총리 캐비닛 절취(1965), 경향신문 강제매각 공작(1966), 박한상 의원 테러, 윤보선 대통령후보 저격계획(1967), 한국비료 강제헌납, 국민복지회 사건 조작(1968), 이수근 간첩조작(1969) 등과 동아일보 손보기, 한일회담 일본대표 문서 비밀 촬영, 농림부장관 비리 사찰, 법조인 사생활 사찰, 장관부인 기생파티 사찰, 미군 군납 담합 등에 개입했다. 경향신문 강제매각 당시 경향신문을 인수하려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을 테러하고,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통제 · 격리하고, 이준구의 처 홍연수의 주변인물을 분리해서 홍연수를 고립시켜 경향신문을 매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에서는 이수근의 남한 귀순 이후 적법한 심사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판단만으로 계속적으로 그를 의심하고 괴롭힘으로써 남한 탈출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1971년 미국으로 이민 갔다.

백남은 (白南殷, 1935 ~)

백남은은 전두환 정권 때 치안본부에서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고문한 경관이다. 1974년부터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근무했으며, 1983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전두환 정권에

서 경찰의 대공 수사를 총지휘한 '박처원 사단'으로 1985년 치안본부 대공수사 2반장(경감, 86년 경정 승진) 재직 당시 김근태 고문 관련해 독직폭행죄로 피소되어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백용기 (白龍基, 1935.6.23. ~ ?)

백용기는 해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목포지구 보안대장으로 재임하던 1973년 납북귀환어부인 박월림 간첩조작 사건을 지휘하였다. 당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목포해군보안대는 박월림을 연행해 88일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하였다. 박월림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2010. 6. 30)을 거쳐 2012. 5. 9 재심무죄가 확정되었다. 백용기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함대 근무를 하다가 1966년부터 정보장교로 전속하여 묵호지구 보안대장, 인천지구 보안대, 목포지구 보안부대장, 부산지구 보안부대장을 거쳐 1975년에는 보안부대 본부 대공과장으로 승진하였고, 1985년 해군대령으로 퇴임하였다. 백용기는 보안부대 근무 시절 대간첩 작전과 간첩 사건 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1969), 보국훈장 삼일장(1973.8.5.) 등을 받았고, 1976년 5 · 16민족상(안전보장부문)을 수상하였다.

백태하 (白泰夏, 1925. ~ 2012.9.11.)

백태하는 평남 강서에서 출생하였으며 1949년 육사를 9기로 졸업했다. 1961년 제6군단 포병대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5 · 16내란에 병력을 이끌고 서울에 진입해 육군부대를 점령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5 · 16 후 중앙정보부 제주지부장, 경기도지부장, 서울지부장을 역임했다. 서울지부장 시절 경향신문을 이준구로부터 빼앗으라는 박정희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 가담했다. 1969년 중정 6국장으로서 군산의 미군 위안부 기지촌인 아메리카타운 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 중정 퇴임 이후 1973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김형욱과 교류했다. 박정희 정권의 부탁을 받고 김형욱이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정권의 치부를 폭로하지 못하게 설득 작업을 벌였다. 1996년 5 · 16 내란과 그 주체세력들을 비판하는 회고록『반역자의 고백』을 발간했다.

서 성 (徐 晟, 1942.9.6. ~)

서성은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1회에 수석 합격하여 판사에 임용되어 이후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치며 대법관까지 지냈다. 전두환 정권 때 서울형사지법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일동포 및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 재판을 맡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그가 유죄 판결한 간첩 사건들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그리고 1985년 김근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부로 법정에서 고문이 폭로되었음에도 터무니없는 증거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이었다. 김근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14년 5월 재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재두 (생몰년도 미확인)

서재두는 보안대 수사관(준위)으로 납북귀환어부 김용태 간첩조작 사건과 이병규 간첩조작 사건의 실무책임자였다. 1984년에 만들어진 사건으로 속초 출신의 김용태가 마산에서 체포되어 강릉보안대로 이송된 다음 서재두 등에 의해 간첩사건으로 조작되었다. 이병규 사건은 1985년 5월~7월에 각각 강릉107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장성탄광 쟁의와도 관련이 있다. 107보안대 수사계장이었던 서재두(준위)는 두 사건에서 불법연행과 장기간의 불법구금, 폭력과 고문 등으로 김용태, 이병규를 각각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했다. 이병규의 경우에는 장성광업소 노동쟁의를 배후조종한 것처럼 꾸몄다.

서정각 (徐廷覺, 1928.3.23. ~ 2015.11.24.)

서정각은 1928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중 제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를 지냈다. 1970년 9월 서울지검 차장검사, 1973년 4월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 검사, 1975년 10월 서울지검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1980.6.-1981.4.)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검 당시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이 “민중봉기 유도, 정부전복”을 획책했다고 허위발표를 했다. 당시 검찰조직의 책임자로서 유신체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한 인사들을 ‘정부전복선동사건’으로 규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서주연 (徐柱演, 1920.5.20. ~ 1979.2.22.)

서주연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마산공립상업학교를 마치고 1942년 니혼대학(日本大學) 법률과를 졸업하고 총독부 조선장학회 장학고시 법과시험에 합격하여 1942년 10월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근무했다. 1946년 미군정시기 사법요원양성소 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지법 판사에 임명되었다가 한국전쟁시기 군검찰관으로 차출되었다. 1952년 1월 이영근 등 간첩사건 수사를 담당하여 이 사건을 부산지법에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이영근, 김용, 김종원 등 3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1952년 5월 26일 부산지법 1심공판에서 이영근 등 피고 9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가 언도되었다. 이후 1963년 5월 서울지검 검사장, 1964년 10월 대검찰청 검사, 1968년 5월 부산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 1964년 8월 발표된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하여 검사들의 항명파동이 발생한 바 있다.

성종환 (成鍾煥, ? ~ ?)

성종환은 안기부 1국수사관으로서 1982년 '송씨 일가 간첩조작 사건' 당시 송기준의 인지동행보고 및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고문 수사를 자행하였다. 송씨 일가 사건의 피해자인 송기준은 '청주서 처음 성종환 등 셋이서 두들겨 팼고, 거동을 못하자 양쪽에서 부축했으며, 수십 가지 고문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송기준은 또 '벽에 세워놓고 조금만 움직이면 몽둥이찜질을 했고, 전기고문도 당했다'고 말했다. 성종환은 1983년 3월에 발생한 재일관련 사건인 '차풍길 사건'에도 관여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임의동행으로 연행하여 66일 동안 영장 없이 수사했음'을 시인했지만 '당시는 그게 관행이었다'고 변명했다.

신갑생 (생몰년도 미확인)

신갑생은 전북 도경 소속 수사관으로서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 사건'(1978)과 5공시절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오송회 사건'(1982)의 고문 수사관이지만 자세한 인물내력은 확인할 수가 없다. 신갑생이 1976년 4월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신갑생은 얼굴에 칼자국으로 보이는

흉터가 있었고, 냉혹한 고문기술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한다. 1978년의 강대광 사건에서 신갑생은 주도적으로 고문에 참여했고, 1982년 오송회 사건에서는 신갑생 스스로가 '고문기술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온갖 고문을 다 하며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 한 고문 피해자는 고문사실을 폭로한 책(『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1997)에서 "그때의 고통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지옥이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신상규 (申相圭, 1949 ~)

신상규는 강원철원 출생으로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1회(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검사로 임관했다. 1984년 전주지검 군산지청 재직 때 보안대가 수사한 납북귀환어부 서창덕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고, 1991년 서울지검 강력부 수석검사로 유서사건 수사를 맡아 강압 수사와 국과수의 엉터리 필적 감정을 증거로 강기훈으로 유서대필범으로 기소했다. 2009년 광고고검장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로 있다. 서창덕 사건과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진화위 조사로 재심이 권고됐고,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영주 (辛泳柱, 1916.10.2. ~ 1977.12.7.)

신영주는 경상남도 창녕군 출생으로 보성고등보통학교 중퇴 후 일제하 친일 경찰(고등부 경부)을 지냈다. 해방 후 고성, 통영, 진주경찰서장을 거쳐 경남경찰국 사찰과장을 역임한 뒤 1953년 10월 충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승진했다. 한국전쟁 전후 예비검속 및 보도연맹원 학살을 주도적으로 지휘 · 감독한 일선 부서는 도경 사찰과였다. 신영주는 이 기간 도경 사찰과장을 지냄과 동시에 경남 보도연맹 이사장을 역임했다. 1958년 제4대 총선에 당선돼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는 1960년 4 · 19혁명 후 치러진 제5대 총선에 출마한 것이 빌미가 돼 '7 · 29 창녕 난동사건'을 불러왔다. 한국전쟁 피학살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물론 부정선거 의혹까지 겹치면서 폭력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낙마한 신영주는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3 · 15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이 인정돼 1961년 공민권이 제한됐다. 하지만 5 · 16쿠데타 후 복권돼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한다. 1971년 공천 탈락 후 학교법인 남지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심상은 (沈相銀, 1924.3.8.~?)

심상은은 1968년 10월 중앙정보부 외국어 전문가 공채로 채용되어 1985년 6월 정년퇴직했다. 1981년 박동운 사건 당시 박경준의 주심문관이었다. 심상은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2008.8.19.)에서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신경이 곤두서게 되면 뺨 정도는 때리기도 했겠지만 몽둥이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했다. 심상은은 1982년 송씨 일가 사건에서 송기홍 · 김명준 · 한옥희 등의 진술조사를 담당하였고, 1983년에는 남산분실 수사계에 근무하면서 '오주석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피해자인 오주석은 주심문관이었던 심상은이 한 무차별적인 폭행과 통닭구이, 물고문 등 고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심상은은 1981년 3월 24일 '간첩 검거 공훈'을 이유로 보국훈장삼일장을 받았다.

안강민 (安剛民, 1941.5.26. ~)

안강민은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8회 사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다. 대학동기들에 비해 3~4년 늦게 출발했지만 사시8회의 선두주자로서 서울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 공안부장 등의 검찰의 핵심요직을 모두 거쳤다. 안강민은 중수부장 시절 노태우 · 전두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역대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중수부장이 되었다.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박동운 간첩조작 사건(1981)을 비롯해, 대표적인 공안시국 사건의 하나인 이태복 · 이선근 등의 '전민노련 · 전민학련 사건'을 담당해 반헌법행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지검북부지청 형사2부장 · 특수1부장 · 공안1부장을 지내며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서경원의원 밀입북 사건 등을 수사하였다. 안강민은 1994년 9월 대검공안부장, 1995년에는 대검중수부장이 되었다. 대검중수부장 시절 노태우 · 전두환 비자금 사건 수사를 통해 두 명의 전직대통령과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원조 · 금진호 · 김종인 등 6공의 고위인사들을 대거 구속, 기소하였고,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기업 회장 다수를 수사, 기소하였다. 안강민은 1997년 1월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지검 검사장이 되었으나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에서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1999년 7월 사시8회 동기인 박순용이 검

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옷을 벗었다. 변호사 개업 뒤에도 정치권의 러브 콜이 계속되었으나 정치가로 변신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에는 이명박 · 박근혜 후보의 국민검증위원회 위원장, 2008년 4.9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안강민은 이른바 PK(부산 · 경남) 출신으로 공안 · 특수 분야에서 맹활약하면서 승승장구하였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의 행운은 없었다. 안강민은 오랫동안 공안검사로서 시국사건과 공안사건, 간첩조작 사건을 다루었다. 그가 다룬 사건 가운데 박동운 사건과 전민노련 · 전학련사건은 재심무죄가 선고되었고, 서경원 밀입북 사건 등은 여전히 고문 · 조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강민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과거 무죄사건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안강민은 대검 중수부장 시절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등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고, 검찰 내에서는 훌륭한 특수수사 검사로 존경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자주 러브콜을 받았고, 실제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안강민은 서울지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지만 명성이란 면에서는 검찰총장을 능가한다. 하지만 엘리트검사 안강민의 명성 뒤에는 인권침해를 외면한 공안검사, 정치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안경상 (安景相, 1935.1.18. ~)

안경상은 평남 맹산에서 출생하였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1956년 고시 8회로 합격하였다. 1961년부터 검사 활동을 했고 1971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 되어 조영래, 이신범 등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지휘했다. 학생들에게는 고문을 가하고, 재판부에는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살해 암시까지 하는 협박을 가했다. 1974년 민단 소속 재일동포 사업가였던 이좌영을 북괴공작원이라고 지목하고 을릉도와 전북 주민들을 고문하여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 같은 해 발표한 고병택 간첩사건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1973년 각 교도소로 하여금 장기 좌익 재소자에 대한 '전향공작전담반'을 설치하고 구타와 가혹행위, 고문, 처우 차별, 타 재소자에 의한 폭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살인적인 강제 전향공작을 실시하도록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비전향 재소자 11명이 의문사했다. 1973년 서울대 최종길 교수를 불러 조사하던 중 3일 뒤 사망케 하였다. 김치열 중

정차장은 유럽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면서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자살했다고 허위발표했다. 안경상은 이 사건의 조작 · 은폐 과정을 지휘했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교수의 죽음이 대공수사국의 차철권 등의 수사관들에 의한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사망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복귀한 안경상은 1977년 2월부터 1979년 3월까지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맡았다. 유신반대 세력을 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 유신체제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서울대에 유학중이던 재일교포 김정사 등 4명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 김정사가 만난 재일동포 임계성이 속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함으로써 1980년 김대중 내람음모 사건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죄(한민통 의장)를 뒤집어 씌워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1986년 감사원장이 된 뒤 감사관 이문옥을 반장으로 하는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과세실태 감사를 중단시켰다.

안응모 (安應模, 1930.12. 24. ~)

안응모는 황해도 (해주) 벽성 출생의 대한민국의 경찰인, 행정관료, 정무직공무원으로 1953년 순경에서 시작하여, 치안본부장(1982-83), 충남지사(1984-87), 국가안전기획부 제2 · 1차장(1988-90), 내무부 장관(1990-91) 등을 역임하였다. 1991년 강경대 폭행치사 사건으로 내무부장관에서 경질된 이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1996-98),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2008-)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안기부 제1차장 시절 안응모는 1989년 공안정국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였으며, '서경원 방북과 공안정국 조성 사건' 관련, 불법연행과 고문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였다.

양두원 (梁斗源, 일명 이상호, 1926~27년 출생 추정)

양두원의 가명은 이상호이며 출생지와 학력 등은 미상이다. 1966년 현역 해병대 대령으로 김형욱에게 발탁되어 중앙정보부 근무를 시작했다. 1966년 주서독 대사관 참사관 직함의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동백림 사건 관련자를 강제로 불법송환하는 데 가담해서 독일정부로부터 강제 본국송환 당했다. 1971년 말 부터 미국지역 중앙정보부 활동을 총괄하는 주미공사로 있으면서 대미 불법 로비와 유신반대 교포들을 탄압하는 활동을 지휘했다. 이 과정

에서 불법사실이 드러나 1973.12 미국에서 또 출국조치 당했다. 보안차장보로서 1974년 말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실천운동을 전개하자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7개월간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자들을 대량 해고케 함으로써 자유언론을 탄압하였다. 같은 시기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과정을 지휘하면서 야당의원들에게 국민투표 거부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음성적인 탄압을 가했다. 보안차장보를 하던 1974년부터 김한조를 통해 백설작전이라는 대미 불법로비 공작을 전개하여 로비자금을 김한조에게 전달하고 김한조로 하여금 미국 정계, 언론계 인사들을 매수하도록 지휘하였다. 1976년 백설작전의 실패와 노출로 문책 해임되었다.

양승태 (梁承泰, 1948.1.26. ~)

양승태는 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받는 인물이다.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된 이래 엘리트 코스를 밟아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지냈으나 법원의 이익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위해 정치권과의 거래를 시도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다. 서울지법 판사 시절 12건의 긴급조치 판결과 4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였고, 제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2건의 간첩조작 사건의 재판장으로 참여하여 반헌법 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오정근 (吳定根, 1929. ~ 1982.7.11.)

오정근은 경기도 양주에서 출생해 1950년 11월 해병간부후보생 3기로 입대했다. 5 · 16 당시 해병 제1여단 3대대를 이끌고 가장 선두에서 헌병대의 저지선을 뚫고 한강 도강에 성공함으로써 내란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5 · 16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국정감사반,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등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1962년 2월 최고회의 의장 직속의 '종합경제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군 일부 쿠데타 음모사건'에서 음모에 연루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외유를 통해 체포 · 연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초대 수산청장, 수산개발공사 사장을 거쳐 1969년 10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제2대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1973년부

터 1979년까지 유정회 국회의원을 지냈다. 1980년 5 · 17 내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정치비리 부패 등 국가기강 문란자'로 분류돼 연행 조사를 받고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가 되었다.

유병창 (俞炳昌, 1949.2.28. ~ ?)

유병창은 1974년 중앙정보부 공채로 입사하여 대공파트, 감찰파트, 대테러파트 등에서 근무했고, 2007년 2월 퇴직했다. 1980년 안기부 1국1단 수사3과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김정인 · 석달윤 사건 당시 박공심, 한화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고문 수사를 자행하였다.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된 김정인의 부인 한화자는 유병창이 수사 도중 "야, 이 쌍년아,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거짓말이야. 여기는 중앙정보부 남산분실이야. 너 같은 년은 여기서 죽어서 나가도 개죽음밖에는 안 돼"라고 하면서 구두를 벗어 이마부위를 내리쳤다고 유병창의 고문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유병창은 1981년 박동운 사건에서는 박미심의 부심문관, 박동운 · 박경준 조사를 맞았고, 1982년 송씨 일가 사건에서는 박종덕의 수사보고 작성, 김춘순 진술조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유정방 (劉井邦, 1940? ~)

유정방은 박종철 고문치사 경관들의 상관으로 사건을 축소 조작하고 은폐한 경관이다. 1961년 경찰(순경)이 됐고, 1969년부터 서울치안국 공작분실에서 근무했다. 경관 재직 당시 1978년 근정포장, 1986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1987년 치안본부 대공3부 수사2단5과장(경정)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범인 도피' 혐의로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과 함께 구속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6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어 파면됐다.

윤기병 (尹箕炳, 1908.9.14 ~ 1999.2.15.)

윤기병은 서울 출생으로 1937년부터 경기도 경찰부 소속 경찰로 있다가 해방을 맞았다. 미군정청에 의해 경찰서장으로 채용되었다. 1948년 5월 동대문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5 · 10총선에 이승만에 대항하여 출마한 최능진(미군정 경무부 수사국장))의 후보등록을 방해했다. 최능진은 극적으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그러자 경찰을 동원하여 추천인들이 스

스로 날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내 최능진의 등록을 강제로 무효화 시켰다. 1949년 6월 중부경찰서장 일 때 반민특위가 친일경찰의 상징이었던 최운하를 체포하자, 직접 나서서 반민특위본부를 습격하고 특경 대원 수십명을 체포하는데 앞장섰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이 실패하고 친일 세력의 안정화가 구축되었다. 그 후 1953년 10월 서울시경국장이 되었고 1955년 4월 시경국장에서 물러나면서 경찰을 그만두었다. 그 후 변호사로(1948년 조선변호사 시험 합격)활동했다.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최고회의 심계원(감사원) 감찰위원을 역임했다.

윤재호 (尹在鎬, 1929? ~ 1991)

윤재호는 전두환 정권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과장(총경)으로 있으면서 1983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조작한 함주명 간첩 사건과 1985년 서울대 민추위 사건으로 연행되어 온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 고문을 지휘한 경관이다. 1952년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 형사과와 수사과에서 근무했고, 1982년부터 대공 수사를 담당했다. 김근태 고문으로 고발되어 1988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혐의로 피소됐으나 재판에 회부되진 않았다.

윤종원 (尹從源, 1929. 일자 미상 ~)

윤종원은 출생지와 학력 등이 미상이다. 특무대 수사장교로 대공수사 분야에 근무했으며 중앙정보부 창설 때부터 현역 대위로 대공수사국에 근무했다. 중앙정보부 서울시지부 수사계장으로 있던 1964년 부하들로 하여금 학원프락치사건과 중정의 YTP 운영 사실을 조사 폭로한 서울대 송철원을 몰래 잡아다 폭행 · 고문하도록 하였다. 1964년 이용택 수사과장 휘하로 들어가 주무사무관으로서 인혁당 관련자들을 고문하여 사건을 조작하였다.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박정희가 직접 진두지휘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내란 사건 수사에서 대공수사국 수사과장으로서 관련자를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했다. 안전기획부 대공수사단장이던 1981년 박동운의 부친이 남파했다는 증거도, 박동운이 월북했다는 증거도 없이 고문을 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게 조작했다. 1987년 윤태식이 홍콩에서 김옥분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도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여 국가이익을 거양"했다는 이유로 윤태식의 살인과 월북 기도사실을 은폐하고 납북으로부터 탈출한 반공투사로 조작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휘하였다. 1989년 정년퇴직했다. 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이용택과 사돈이다.

윤진원 (尹鎭遠, 1925.1.12. ~)

윤진원은 경남 김해 태생이며 1950년 육군 종합학교 11기로 소위에 임관했다. 1951~1960년 첩보부대에서 대북공작을 담당했으며, 1961년 현역 소령 신분으로 중앙정보부에 근무했다. 1968년 1·21 사태 후 대북 보복을 위한 공군 특수부대인 실미도부대 창설과 교육·훈련을 주도하였다. 실미도부대의 대북 보복 작전이 정책적으로 보류된 뒤 부대 해체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1971년 46명이 사망하는 참극의 원인을 제공했다. 해외공작단장(현역 대령)으로 있던 1973년 일본 현지에 파견되어 중앙정보부 일본 파견관 20여명을 모두 동원해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를 8월 8일 호텔에서 강제로 마취시켜 납치, 중정의 공작선을 이용, 한국으로 압송하는 공작을 총괄 지휘했다. 1975년 2월 대령으로 예편함과 동시에 중정 관리관으로 재임용되었으나, 그해 12월 그가 관리하는 중정 소속 공작선 용금호가 밀수에 관련되어 면직되었다. 1978년 박정희의 특별지시로 관리관으로 다시 임용되었다. 1980년 퇴직한 뒤에는 칩거 생활을 했다.

윤태일 (尹泰日, 1918.6.18. ~ 1982.12.10.)

윤태일은 함북 회령에서 출생해 1942년 12월 만주의 신징군관학교를 제1기로 졸업하고 지린(吉林) 지구 공병대에서 근무했다. 일제 패망 당시 만주국군 공병 중위였다. 1946년 4월 인천항으로 귀국했다. 1948년 10월 육군사관학교 7기 특별반을 마치고 대위로 임관했다. 5·16 내란 모의에 참여했으며 5·16 당시 박정희의 메신저로서 이한림 1군 사령관을 쿠데타 지지 내지는 최소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았다. 쿠데타 성공 후 군인 신분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되었다. 1963년 12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며 1964년 1월 대한주택공사 총재에 임명되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유정회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친일인명사전』에 수록돼 있다.

이강학 (李康學, 1924.2.20. ~ 2006.5.22.)

이강학은 경북 대구 출생으로 일본대학 경제과를 졸업하였다. 창씨명은 고세이 야스유키(香星康之)이며 일본군 육군 소위(1945년)로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경찰에 투신했다. 1946년 경북 경찰국 통신부 과장 겸 특별경비대장 일 때 10월 대구항쟁을 진압했다. 당시 경찰의 발포로 수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1948년에는 제주도 경찰국 비상참모부장을 지냈다. 1949년 경북경찰학교 교장, 1950년 1월에는 경주경찰서장이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총경으로 진급해 경주전투대를 이끌고 북한군 토벌에 공을 세웠고, 포항경비사령부 관할 지역내 용공분자로 이름이 올려 있는 사람들의 신원분류에 참여해서 200여 명을 처형대상자로 분류했다. 1952년에는 전북도경 경무국장으로 발령되었다. 1954년 1년간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서 1954년 4월 치안국 공보계장, 2년 뒤 경무관으로 승진해 경찰전문학교 학감, 1957년 치안국 보안과장, 1958년 경무과장을 거쳐 35세에 최연소 치안국장 자리에 올랐다. 1958년 정당의 입을 막고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릴 속셈으로 내놓은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통과시킨 24보안법파동 때 야당의원들의 옥외집회를 불허하고 무술경관들을 동원해서 야당국회의원들을 감금 및 폭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을 총 지휘했다.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의 사법살인에 대한 보도통제와 경고서한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1960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비밀경찰을 조직해서 선거를 독찰했으며, 일찍부터 3 · 15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최인규 내무장관과 함께 전국 경찰국장들에게 부정선거책략을 지시했다. 3 · 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3월 17일 1차 마산시위를 '공산당 수법에 의해 이루어진 증거가 있다'고 발표하여 마산경찰당국이 구속된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혹독한 고문을 가하고 각종 증거물을 조작하도록 방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나자 이승만은 3월 28일 이강학을 문책 해임했다. 4월 혁명 발발 이후 혁명재판에서 3 · 15부정선거를 주도한 주범으로 사형이 집행된 최인규 내무장관과 함께 처음에는 사형언도를 받았으나, 5 · 16 군사쿠데타 이후 상소심판부에서 무기징역, 그 후 몇 차례 감형 끝에 1964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나왔다. 출옥 후 기업가로 변신, 원양어업으로 돈을 모으고 1975년 큰 화재가 났던 구 대연각 호텔 인수, 1981년 고려증권 등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근직 (李根直, 1903.1.12. ~ 1964.3.16.)

이근직은 경북 금릉(김천) 출생으로 1928년 일본 도쿄고료척식대학교(東京紅陵拓植大學校) 법과를 졸업했고, 1930년부터 강원도 원주군 군속(郡屬), 강원도 도속(道屬)을 거쳐 1942년 평창군수, 원주군수로 근무했다. 해방 이후도 계속 강원도 상공국장 등을 역임했고, 1950년 서울특별시 산업국장, 1952년 함태영 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1955년 2월 경상북도 도지사에 임명되었으며, 재직 중 영남일대에서 일어난 '가짜 이강석' 사건을 해결했다. 그 덕분에 1957년 내무장관으로 취임했다. 내무장관 시절 조봉암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국시에 위배된다고 하여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혁신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총 지휘했다. 즉, 조봉암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고 사법살인이 일어나는 전 과정의 첫 사건의 발단을 지휘하고, 1959년 7월 31일 조봉암 사형 때는 재차 농림부장관으로 기용되어 국무회의에 참석하였고, 이승만에게 강력히 제거 사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1960년 3 · 15부정선거를 기획한 국무위원 6인위원회의 멤버로서 4 · 19 혁명 이후 재판에 회부되어 12년 구형을 받았다. 보석 출감 중 일어난 5 · 16쿠데타로 재수감되었고 7년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1962년 7월 형집행정지로 출감했다.

이낙선 (李洛善, 1927.12.30. ~ 1989.7.15.)

이낙선은 경북 안동에서 출생해 1950년 육군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포병소위로 임관하였다. 5 · 16내란 모의 과정에 참여했으며 1961년 5월 15일 밤부터 김종필과 함께 쿠데타 공약 등 문건의 인쇄 작업을 감독했다. 1961년 7월부터 최고회의 의장 공보비서관으로 박정희의 지근거리에서 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내란 주체세력이 민정이양을 바로 눈앞에 둔 1963년 8월 말에 발행한 『한국군사혁명사』의 편찬작업을 총괄하는 등 5 · 16의 사관(史官)으로 활동했다. 1966년 3월 초대 국세청장으로 부임했다. 1969년 10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상공부 장관을 역임했다. 건설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1974년 8월 '밀수보석 사건'이 불거지자 9월 사직했다. 1976년 11월 한국기술검정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1980년 1월 롯데그룹 부회장에 취임하며 이후 롯데상사, 호텔롯데 사장으로 1984년 6월까지 재직했으며, 1984년 10월 코리아스파이서 사장에 선임되었다.

이상귀 (李相貴, 1945.3.6. ~ ?)

이상귀는 1974년 11월 중앙정보부 공채로 입사했고, 1986년 안기부 본부 대공수사국에서 전주지부로 이동했다. 이상귀는 1980년 김정인 · 석달윤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김정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김정인의 처 한화자의 신문 등을 담당하며 고문 수사를 주도했다. 이상귀는 1981년 박동운 사건에서는 한동자의 주심문관으로 활동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주먹으로 몇 대 때렸을 수는 있다'는 식으로 고문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사망하고 없는 이치왕 계장에게 고문 책임을 대부분 떠넘겼다. 1982년 송씨 일가 사건에서는 송기복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고, 1983년 안기부 남산분실 대공수사국 수사팀 소속으로 '오주석 간첩조작 사건' 수사 업무를 맡았다.

이서우 (李瑞雨, 1945.10.7. ~ ?)

이서우는 1974년 9월 중앙정보부 7급 공채로 입사해 대공수사국 수사단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6월 서기관으로 정년퇴직했다. 1980년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1국1단 수사3과 소속으로 김정인 · 석달윤 사건 수사에서 김정인과 그의 가족들을 불법연행하는 데 가담하였고, 김정인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서우는 1983년에는 '오주석 간첩조작 사건' 수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용택 (李龍澤, 1930.11.29. ~)

이용택은 대구 출생이다. 1950년 육군 헌병학교를 수료하여 헌병 하사, 1951년 갑종간부 7기로 소위 임관. 헌병으로 복무하다가 1959년 예편하였다. 5 · 16 쿠데타 직후 박창암의 혁명검찰부 수사국 수사관을 거쳐 61년 말에서 62년 초 사이에 중앙정보부에 들어왔다. 60년대와 70년대 전반 중요한 보안사건, 정치사건의 대부분을 수사하면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사건을 조작하는 데 있어 중앙정보부 최악의 수사관이었다. 1964년 제1차 인혁당 사건 조작, 1967년 김재화 조총련 자금 유입 사건, 동백림 사건, 민비연 사건 고문수사, 1974년 민청학련 · 인혁당재건단체 조작 사건, 1975년 김영삼 긴급조치 위반 조사 등이 그가 관여한 사건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 · 인혁당 사건 때는 주 1~2회씩 이

용택으로부터 직접 수사상황을 보고받았다. 1981년, 1985년 무소속으로 고향인 달성 · 고령 · 성주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의정활동은 민정당에 보조를 맞췄다. 1997년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이우철 (1953 ~)

이우철은 보안대 수사관으로 1953년생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인적사항은 알 수가 없다. 이우철은 1984~85년 서창덕 간첩조작 사건과 정삼근 간첩조작 사건의 주수사관(상사)으로써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고문 등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였다. 이우철은 1985년 510보안대 재직 시절 보국훈장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납북어부 서창덕 사건의 공로로 돼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전주보안대 군산파견대 박병근 상사는 "이우철은 성격이 좀 괄괄하고 활동적인 편이라 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8년 1월 18일 MBC 보도국 기자가 납북어부사건 고문피해자 서창덕, 정삼근과 함께 가해자인 이우철 취재를 하였다. 이우철은 인천시 남구 숭의동에서 행정사(서사) 사무실을 열고 있었는데, 고문 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모른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재권 (李在權, 1928.12.1. ~ 1990.6.2.)

이재권은 경남 진양 출신으로 1957년 해인대학(현 경남대학교) 법정학부를 졸업하고 1957년 제9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1959년 부산지방법원 및 지검에서 사법관시보로 근무했다. 1961년 5월 대구지방검찰청에 검사로 부임했다. 1972년 4월 서울지검 검사로 발령난 이후 1974년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재일교포 고병택 간첩사건', '재일교포 진두현 간첩사건' 등을 담당하였다. 고병택 사건에 대해 2013년 4월 11일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975년 4월 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 선교자금사건을 담당하여 민주화운동을 한 박형규 목사 등 성직자를 파렴치한 행위를 한 혐의로 몰아가려고 했다. 이후 그는 간첩사건과 선교자금사건 등의 공으로 대검특수부 1과장 겸 서울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하기도 하였다.

이재준 (1932 ~ 사망, 사망년도는 미확인)

이재준은 보안대 수사관으로 1932년생으로 알려지나 자세한 인적사항은 알 수가 없다. 이재준은 1984~85년 서창덕 간첩조작 사건과 정삼근 간첩조작 사건 당시 전주보안대 수사계장(준위)으로써 이우철 상사와 함께 간첩사건을 조작하였다. 이재준은 1977년 보국포장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간첩 검거로 되어 있다. 김용성, 이우철, 이재준은 전주510보안대에서 팀을 이루어 서창덕 사건과 정삼근 사건을 고문조작함으로써 본 위원회에 의해 반헌법행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종구 (李鍾九, 1935.11.21. ~)

이종구는 경북 칠곡에서 출생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수경사 30대대장, 육군본부 작전처장,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 육군 제2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등을 역임한 '하나회의 황태자'였다. 1993년 7월 '율곡사업 비리'로 수감되기도 했다. 국군 보안사령관 시절 이종구는 서노련 사건(노동운동가들에 대한 불법 연행 구금 및 고문) 및 18건에 달하는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사건의 핵심 책임자였다. 후자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은 87년 민주화 이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종명 (李鍾明, 1957 ~)

이종명은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으며 1979년 육사를 35기로 졸업했다. 위관 시절 정보사령부(DIC)에서 30개월가량 근무했으며 1985년 5월부터 1987년 8월까지 장세동 안기부장 비서실에 파견되어 근무했다. 제12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장, 군사기획부장, 민군심리전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4월 국가정보원 제3차장에 임명되어 2013년 4월까지 재직했다.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의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간주하여 원세훈 등 피고인들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모두 유죄 인정" 판결을 내렸다. 이종명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지만 2017년 8월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피고인들의 “국정원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차 인정했으며 이종명 전 3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종원 (李鍾元, 1926.5 · 18. ~ 2007.8.27.)

이종원은 충청남도 아산 출생으로 1945년 전주사범학교, 1952년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상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19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1951년 해군 법무관으로 군 생활을 했으며, 제대 후 1953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해 청주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진주지청 검사,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5 · 16쿠데타 직후 혁명검찰부 검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족일보 및 조용수사법살인사건 상고심 등에도 관여하여 박정희로부터 최고회의의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1967년 7월 ‘동백림 사건’, 민비연 사건 당시 공안부 부장검사로 사건 기소에서 재판과정 총지휘, 감독했다. 또 1968년 동양통신사 필화사건 등 언론탄압에도 관련하였고 법무부 교정국장 재임(1973.4.– 1975.9.)시 ‘전향공작’에 관여했다. 1979년 3월 대구고검 검사장에 임명되었으며, 대구고검 검사장 재직 중이던 1981년 4월 오탁근 장관의 후임으로 제31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장영자 · 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으로 경질되었다.

이철환 (李鐵煥, 1938.2.12. ~)

이철환은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시 15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1986년 서울고법 부장 때 부천경찰서 성고문으로 고발된 문귀동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재판장이었다. 1987년 김근태 고문 경관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로 심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부천서 사건 재정신청 기각 관련해 1993년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정치판사로 지목됐다. 1999년 광주고법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우일 소속 변호사로 있다.

이철희 (李哲熙, 1923.9.1. ~)

이철희는 충북 청원 출생으로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 출신이다. 육군 첩보부대장, 방첩부대장을 했다. 중앙정보부 해외담당국장으로 있을 때 동백림 사건 관련자 30여명을 유럽에

서 불법 체포 강제 귀국시키는 공작의 책임자였으며, 1.21사태 뒤 대북 보복을 위해 공군과 공동으로 창설한 오소리 작전의 684부대(일명 실미도 부대)의 예산 · 작전의 책임자였다. 정보차장보일 때 김대중 납치를 지휘했다. 57세 되던 81년 전두환의 처삼촌인 이규광의 처제 장영자와 결혼했고, 장영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가 1982년 이철희 ·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년간 복역한 뒤 석방되었다.

이춘구 (李春九, 1934.11.18. ~ 2011.9.20.)

이춘구는 충북 청원 출생의 대한민국의 군인, 공무원, 정치인이다. 육사 14기 졸업(1954-1958), 육군 준장 예편(1981),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1980), 사회정화위원장(1980-1981), 11~14대 국회의원(1981-1996), 내무부 장.차관,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사무총장, 민자당 · 신한국당 대표최고위원, 국회 부의장(1994) 등을 역임했다.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 시절 이춘구는 삼청교육대 사건의 핵심 당사자(삼청계획 집행 및 삼청교육 주관)였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는 내란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볼 때, 삼청교육대 사건은 내란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치왕 (? ~ 사망, 사망년도는 미확인)

이치왕은 1980년 1국 1단 수사3과 수사1계장으로서 김병호 등과 함께 진도에서 석달윤, 장제윤, 한화자 등을 불법적으로 연행하였고, 석달윤 · 김정인 사건의 주수사관으로서 석달윤을 조사했다. 한화자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때 수사관이 자신의 고문 광경을 보게 하자 남편 김정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갈 터이니 우리 가족은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치왕은 1981년 박동운 사건에서 박동운 · 박경준을 조사하며 고문수사를 주도하였다. 사건의 피해자 박동운은 언론 인터뷰에서 "취조를 담당한 이치왕이라는 자는 '월북 후 북한공작원으로 남파된 니 애비가 잡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니 애비가 말해서 너희 가족을 잡아온 것이다. 간첩 활동한 것을 다 불어라'고 강요했어요. 그리고 '니가 시인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도 발가벗긴 채 네 옆에 매달아놓을 것이고, 네 아내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도 거부하면 아이들을 데려다 이 모든 모습

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했지요"라고 말했다. 박동운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치왕이 "처자식도 고문하겠다"는 말에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치왕은 1986년 5월 '간첩검거 공로'를 이유로 보국훈장천수장을 서훈하였다.

이학봉(李鶴捧, 1938.5.15. ~ 2014.5.24.)

이학봉은 경남 김해에서 출생했으며 1962년 2월 육사를 18기로 졸업했다. 수색중대장 등을 거쳐 1967년 방첩부대(1968년 2월부터 보안사령부)로 전보되었다. 1977년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장이 되었다. 1979년 10 · 26사건 발생 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국장을 겸임하게 되며 김재규와 정승화에 대한 수사를 책임졌다. 장태완, 정병주 등 12 · 12군사반란을 진압하려 한 군 인사들도 연행 수사했다. 이학봉이 책임 진 다수의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 12 · 12반란 모의 과정에 참여했으며 5 · 17내란 모의 과정에도 가담해 소위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참여했다. 5 · 17 당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재야 정치인, 학생 등 신군부의 내란 수행에 장애가 될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들을 사전 검거, 수사토록 지시하는 등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5 · 17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는 전두환 등 내란 주도 세력이 국보위상임위원회를 통해 헌법기관인 정부와 대통령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조작에 관여해 사건 관련자들을 혹독하게 고문 · 수사하는 과정을 지휘했다. 1980년 12월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에서 전두환의 친형 전기환의 불법행위를 도와준 것과 관련 직권남용, 직무유기, 협박 등의 혐의가 명백히 밝혀졌으나 공소 시효 만료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다. 1986년 1월 안기부 제2차장에 임명되었다. 1988년 4 · 26총선에서 경남 김해 지역구에 민정당 후보로 출마해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89년 1월 5공비리 수사 결과 동국제강이 국제그룹의 연합철강을 인수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돼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다. 1989년 7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1992년 3 · 24총선에서 출마자격을 상실한 이학봉을 대신해 처 이설혜가 경남 김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낙선했다. 1996년 검찰에 의해 12 · 12군사반란 및 5 · 17내란과 관련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반란중요임무 종사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2심 재

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8년형이 확정되었지만 1998년 8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특사로 석방되었다.

이협우 (李協雨, 1921 ~ 1987.8.11.)

이협우는 경상북도 경주군(현 경주시) 내남면 출생으로 대구농림학교를 졸업했다. '경주의 노덕술'로 불릴 만큼 악질이었던 이협우는 1949년 내남면 민보단장 시절 이 지역 주민을 수차례 학살하고, 일부 지역 유지를 좌익으로 몰아 총살시킨 뒤 재산을 강탈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1950년 5월 제2대 민의원 선거에서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한국전쟁 당시 이뤄진 살인 및 방화 등의 혐의로 1960년 9월 15일 구속 수감된 이협우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사의 상고 역시 대법원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당시 이협우를 고소한 경주피학살자유족회 김하종씨는 되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협우는 내남면민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속돼 1962년 9월 1심 재판에서 또다시 사형이 선고됐으나 1963년 3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데 이어 1963년 5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이 역시도 무죄가 확정됐다. 또 1963년 6월 28일 내남면 김하원씨 가족 살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소환됐으나 재판이 흐지부지 이뤄지면서 이협우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한 범죄에서 모두 법적 책임을 빗겨갔다. 1967년 6월 제7대 총선에서 자유당 공천을 받고 월성군 지역구에 출마하기도 했으나 이후 행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부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사기도박을 알선하며 폐인처럼 지낸 것으로 전해지나 명확하지는 않다. 1975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경주 월성군 지부 상임대표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희권 (李羲權, 1943.9.11. ~)

이희권은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군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다. 1973년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1975), 서울지검 성동지청(1978) · 동부지청 검사(1981), 춘천지검 검사(1982), 광주고검 검사(1985), 전주지검 부장검사(1986), 인천지검 형사2부장(1988), 대구지검 형사1부장(1989)을 거쳐, 광주지검 목포지청장(1990), 춘천지검 강릉지청장(199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1993)을 지냈으며, 1994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이희권의 검사 경력은 평범한 편이다. 서울지검 성동지청과 동부지청에서 잠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목포, 춘천, 전주, 인천,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 보냈다. 공안계통에서 근무하지 않고 일반검사로 지냈음에도 목포, 전주, 춘천 지역에서 근무할 때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을 맡게 되었다. 오랫동안 공안계통에 근무하면서 간첩조작 사건, 공안 사건, 시국 사건 등에 깊숙이 관여한 '악행'이 분명한 검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납북어부 사건에서 검사로서의 인권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본 위원회에 의해 반헌법행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임내현 (林來玄, 1952.2.21. ~)

임내현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 서중,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16회)에 합격하였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인천지검 검사, 미국유학,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기획과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장,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 부장,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광주고검 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학벌이나 경력으로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지만 호남 출신이었던 탓에 공안이나 특수 분야 등에서는 활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 쪽과는 거리가 있었던 임내현이지만 인천지검 재직 시절인 1983년 납북어부(월북자가족) 간첩사건인 정영 사건의 수사(기소)검사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임내현은 이 사건 피해자 정영 등이 수사기관(안기부 인천분실)에서 심각한 고문을 받아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호소했으나 이를 전면 외면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등 검사로서의 인권보호 의무는 준수하지 않았다.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임내현은 민주당에 입당, 2004년 광주 북구을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15년 12월 문재인의 민주당을 탈당하여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합류했으나 2016년 4월 총선에서 2013년 7월에 있었던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돼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임동구 (林東龜, 1949.11.13. ~ ?)

임동구는 1974년 중앙정보부에 공채로 입사해 2005년 정년퇴직했다. 1979년 9월 '간첩 검거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수여받았다. 1981년 박동운 사건에서는 박동운의 부심문관(주심문관은 조윤원 수사관)으로 활동했고, 1982년 송씨 일가 사건에서는 송기섭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또한 1983년 '오주석 간첩조작 사건'에서는 김종주 조사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임동구는 '오주석 사건 피의자들이 50여일 동안 남산분실에 불법감금 돼 있었던 것은 간첩사건의 경우 순순히 자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동구는 불법구금은 당시의 관행이었고, 조사 때 "한두 대 쥐어박는 경우는 있다"고 말해 사실상 고문사실을 시인했다.

장경순 (張坰淳, 1922.3.23. ~)

장경순은 전라북도 김제군(현 김제시) 출생으로 만경보통학교와 배재중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양대학 척식산업학과를 마치고 귀국한 뒤 중국 상해에 학도병으로 징집됐다. 일제 패망 후 한국광복군으로 귀국한 그는 2년 반 동안 전주북중학교(전주고 전신) 유도교사로 활동했다. 이어 1948년 육군사관학교 7기 특별반으로 입교했다. 입교 당시 직속상관(중대장)은 박정희였다. 소위 임관 후 남산학교(특수정보)를 거쳐 한국전쟁 초기 CIC(방첩대) 차장을 지냈다. 이때 직속상관은 CIC본부장 한웅진이었다. 1957년 준장에 진급한 뒤 육군 정보학교장과 육본 교육처장 등을 지냈으며, 교육처장 시절 박정희를 도와 5 · 16군사쿠데타에 가담했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과 농림부장관을 역임했다. 1963년 육군 중장 예편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일선에 뛰어든 그는 그해 11월 치러진 제6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전북 김제에 출마해 당선, 그해 말부터 10년간 최장수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제6~10대까지 내리 5선 국회의원을 했으며, 한독의원협회 회장, 한국유도회 회장, 세계유도연맹 부회장, 민주공화당 중앙위원회 의장, 제1무임소 장관 등을 두루 거쳤다. 1979년 10 · 26사건 후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뒤 2002년 대한민국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2003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2004년에는 유도 10단에 올라 유성(柔聖)의 칭호를 받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한 그는 현재 우파 시민사회 연합체인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고문

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재구 (全在球, 1928.2.10. ~)

전재구는 충북 옥천에서 출생했으며 육사 8기다. 1949년 육본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배속되어 김종필, 박정희와 인연을 맺고, 방첩부대 보안처장 등 정보계통에서 주로 있었다. 5 · 16 쿠데타 때는 2군 사령부 인사참모실에 근무하면서 방첩부대 부부대장의 조사에 거짓 답변하여 쿠데타 움직임을 숨겨줘 사전에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5 · 16 직후 중앙정보부 창설에 가담하여 1973년까지 6국(특수활동국)장, 서울분실장, 3국(국내정치국)장, 5국(대공수사국)장으로 있으면서, 반혁명사건, 한일회담 반대 사건을 수사하고 1967년 6대 대선, 7대 총선 실무를 지휘했고, 삼선개헌 추진과 국민투표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0년 김대중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 뒤 다시 3국장으로 복귀하여 1971년 대통령선거와 총선 관권 선거를 실무적으로 지휘했다. 1973년부터 유정회 국회의원을 6년간 했다. 대한준설공사 · 한진건설 사장을 하다가, 200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정구영 (鄭銶永, 1938 ~)

정구영은 경남 하동 출생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시 사법과 13회에 합격해 1965년 검사로 임관했다. 1985년 전두환 정권에서 서울지검장에 임명되어 1986년 건대 농성 등 대량구속 사태를 지휘했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축소 수사에 관여했다. 검찰공화국에 비유되는 노태우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1989년 방북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했고, 1991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였다. 1993년 검찰총장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했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이다.

정형근 (鄭亨根, 1945.7.26.(음력) ~)

정형근은 경상남도 거창에서 출생한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 변호사이다.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후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복무, 1983년에는 안기부 법률담당관

에 특채되어 안기부의 대공수사국 수사2단장(1985-), 대공수사국장(1988-), 제2차장보(1992-), 제1차장(1994-95) 등을 역임했다. 안기부 대공수사국 수사2단장 시절에 정형근은 김근태 고문 사건 · 심진구 고문 사건 · 중부지역당 사건,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에는 서경원 방북과 공안정국 조성 사건 · 사노맹 사건 등과 관련해 고문 수사 및 은폐조작 등을 총지휘했다. 이후 신한국당 공천으로 정계 입문한 이래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조인구 (趙寅九, 1923. 11.19. ~ 1994.3.25.)

조인구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1942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46년 사법요원 양성소 입소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지방법원 사법관시보가 되었다. 1948년 대구지방경찰청 검사로 시작하여 195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58년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재판 1심과 2심 모두 기소 검사를 담당했다. 조인구는 '조봉암이 북한 괴뢰에 호응하여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다'고 하는 입증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날조된 기소장으로 조봉암에게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구형하고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12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유병진 판사가 담당했던 1심재판부는 조봉암에게 5년을, 진보당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인구는 다시 기소했다. 김용진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2심판결에서는 양명산이 '1심의 자백이 고문과 협박, 회유에 못 이겨 한 '거짓자백'이었다'고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그대로 간첩죄를 인정하여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59년 2월 대법원에서도 조봉암 사형이 확정되었다. 조봉암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지만 상고심을 맡았던 같은 재판부가 1959년 7월 30일 재심을 기각했고 다음날인 7월 31일 전격 사형이 집행되었다. 조인구는 1960년 3 · 15부정선거 획책으로 경질된 전 치안국장 이강학 후임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되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1차 마산시위에 이어 김주열군의 시신 유기 및 은폐조작에 항의하는 2차 마산시위가 발생하자 이를 '적색분자의 준동 혐의'가 있다고 규정하고 대공검사 오제도와 하갑청 육군 특무대장과 더불어 이른바 '대공3부 합동수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산에 상주하면서 용공사건으로 조작하려고 했다. 4월 혁명 이후 검찰은 4 · 19 당일 발포 최고 책임자로 내무장관 홍진기를 살인혐의로 치안국

장 조인구를 살인예비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960년 10 · 8판결로 무죄 석방되었다. 이후 '반민주행위자 임시처리법'이 생겨서 재구속 당하게 되자 도피했다. 1965년 11월 오랜 도피생활을 끝내고 자진출두 했다. 1967년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에 의거하여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으나 1968년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1970년 변호사 개업을 했고, 이후 계속 활동하다가 1994년 사망했다.

조일제 (趙一濟, 1928.8.12. ~)

조일제는 일본 오사카 출신이며, 해방 후 경남 함안에 정착하였다. 1951년 부산 특무부대 문관으로 국회 사찰 임무를 담당했다. 1961년 중앙정보부에 특채되어 사회각계 정보수집과 사찰 임무를 맡았으며 국내정치담당국 정치과장에 임명됐다. 1970년 4월 김지하의 '오적'을 게재한 사상계를 말살시킬 일환으로 그 재정적 후원자였던 김세영 신민당 국회의원을 협박하여 의원직을 강제로 사퇴시켰다. 국내정치국장을 거쳐 보안차장보(국내정치담당)를 하던 1973년 10월, 서울대 최종길 교수를 고문중 사망케 하고, 이를 자살로 위장, 은폐 · 조작하는 것을 지휘하였다. 가장 악랄하고 참혹한 고문 ·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인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고문조작을 지휘한 최고위 실무자였다. 자신의 방에서 피의자진술서, 신문조서를 취합하는 등 고문 · 조작 실무를 총지휘하여, 152명을 감옥에 보내고, 무고한 8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도록 했다. 1979년 유정회 국회의원을 했고, 1981년 제5공화국의 관제정당인 국민당의 창당에 참여하여 전국구 국회의원과 정책위 의장을 하였다.

조한경 (趙漢慶)

조한경은 1987년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5과2계 1반장(경위, 41세)으로 치안본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해 온 박종철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고문을 지시한 경관이다. 경찰이 박종철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나 검찰의 부검과 언론 보도로 숨길 수 없게 되자 사건 발생 5일만에 구속됐고, 1988년 징역 10년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이후 1994년 형기의 2/3(7년 3개월)만 채우고 가석방됐다.

진형구 (秦炯九, 1945.9.24. ~)

진형구는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 1972년 부산지검 검사로 검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울고검 부장검사(1990) 대검 감찰부장(1996-98), 대검 공안부장(1998-99), 대전고검장(1999)을 역임하였다. 진형구는 대검 공안부장 시절 발생한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다. 2012년 12월 10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한국조폐공사 파업을 '공권력의 노동 기본권 억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당시 조폐공사 노동조합 부위원장이던 구충일 등 1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다.

차철권 (車鐵權, 1927. 일자 미상 ~)

차철권은 경남 함안 출생으로 1947년 군에 자원 입대했다. 1950년 순천지구 방첩대로 배속되어 전쟁포로를 심문하는 등 주로 대공수사 분야에서 근무했다. 1956년 단기 장교양성기관인 갑종 간부 소위로 임관했고, 군생활 20년을 줄곧 특무부대-방첩부대에 있었다. 1970년(43세) 중앙정보부에 주사급 요원으로 특채되어 대공수사 부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1971.4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의 제보자인 자수자 이필우 심사를 담당했고, 1973년 10월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새로운 공작 차원에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를 불러 조사하던 중 3일 뒤 사망케 하였다. 김치열 중정차장은 유럽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면서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자살했다고 허위발표하고 사건을 조작 · 은폐했다. 최교수의 죽음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로 조사중 차철권 중심의 수사관들에 의한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사망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유신과 박정희에 비판적이던 재일교포 사업가 이좌영에 대한 내사공작 끝에 1974년 2월 전남대 교수 이성희와 울릉도 지역 주민 전영관 등 40여명을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내 대규모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했다. 관련 피의자의 간첩 혐의에 대해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었으나 32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가운데 3명은 사형 당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유력한 증거인 피고들의 진술이 불법구금과 고문 ·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을 밝혀냈고, 재심 법원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중앙정보부에서 해직되었다.

최규하 (崔圭夏, 1919.7.16. ~ 2006.10.22.)

최규하는 강원도 원주 출생의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무총리 출신 대통령이다. 1946년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공직에 입문, 주일한국대표부 총영사(1952-57), 외무부 장관(1967-71),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1971-1975), 국무총리서리 · 국무총리(1975-79), 대통령권한대행(1979), 10대 대통령(1979-80)을 역임하였다. 대통령직 사임 이후 에는 국정자문회의 의장(1981~1988)을 맡았다. 대통령권한대행이자 대통령으로서 최규하는 제5공화국 수립 방조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인물이다. 특히 대통령 최규하의 행위는 당시 헌법인 유신헌법 제46조("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를 지키지 못했음이 명확하다.

최대현 (崔大賢, 1926.2.9. ~ 1984.7.30.)

최대현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1951년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하여 군 검찰관 등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대검찰청검사 겸 수사국장, 1968년 12월 서울지검 공안부장, 1971년 12월 대통령사정 특별 보좌관실 파견 근무, 관세청장(1974 - 1978), 1978년 12월 10대 국회의원(유정회) 등을 역임했다. 그는 1953년 10월 군검찰관으로 복무할 때 최초의 간첩사건인 '정국은 간첩사건'을 담당하였고 이후 1964년 '경향신문강제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이준구 사장 등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기도 하였다. 1965년 재일관련 오진영 등 사건의 수사 및 1심 검사로 참여했고 1969년 이수근 간첩 사건, 1969년 박노수 · 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등에서 사형을 구형하였다. 또 1970년 정인숙사건, 1971년 사법파동에도 관여하였다.

최란수 (崔蘭洙, 1909 ~ ?)

최란수는 충북 영동 출생으로 일제 강점기 경찰(1939년 전북 고창경찰서 경부보)이었다. 해방 후 서울 본정 경찰서 사찰주임이 되어, 1946년 조선정판사위폐고문사건을 담당했다. 1948년에는 수도경찰청 사찰과 부과장(경감)겸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직속 특별수사대 대

장으로 제주도 4 · 3 무차별 강경 진압작전에 참여했다. 특별수사대는 가혹 행위로 유명했다.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으로 1949년 1월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및 전임자 노덕술과 함께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해서 반민특위간부 15명을 암살하려다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그러나 1950년 2심 공판에서 벌금형(20만원)만 받고 석방되었다. 곧 경찰로 복귀하여 1952년 남원경찰서장, 1954년 전남 수사과장, 1956년 춘천 경찰서장, 1958년 김제경찰서장, 1961년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 중앙 분실장을 지낸 후 퇴직하였다. 이후의 행적과 사망 일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최문영 (崔文榮, 1927.11.24. ~)

최문영은 황해 재령에서 태어났으며 육사 8기로 21사단 대대장 등을 했으며, 1962년 6월 제1공수특전단에 전입되어 박치옥의 후임으로 단장이 되었다. 1964년 5월 21일 새벽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시위 학생들이 5 · 16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분노하여 부하 장병들 11명으로 하여금 무장하고 서울형사지법에 난입하고 영장전담판사인 양헌 판사의 집으로 가서 영장을 발부하라고 압박하는 등 초유의 사법부 난입과 유린을 저질렀다. 보름 후에는 다시 동아일보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림으로써 언론기관을 유린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문영은 이 사건으로 퇴역하고 중강문화사를 경영했다.

최병규 (崔秉奎, 1932.7.5. ~ 2009.8.13.)

최병규는 1962년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63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67년 대전지법 판사. 71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72년 서울고법 판사(73년 재판연구관), 7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77년 서울지법 인천지원 부장판사, 1979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판사로서 눈에 띄는 화려하거나 특별한 경력은 없다. 최병규는 서울지법 인천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1977년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인 안희천 사건, 안장영 사건, 김흥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경기도경 대공분실)의 수사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이 세 사건은 후에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근안 등의 경기도경이 가혹한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해낸 사건이

다. 이 사건들은 같은 시기에 유사한 내용을 복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어서 판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병규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판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 무기 등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공안)기관의 요구를 충실히 수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최운하 (崔雲霞, 1901 ? ~ 1950 ?)

최운하는 서울 출생으로 추정되며 1937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촉탁이었다. 경무국 보안과는 사상범과 방송 및 출판물 검열을 담당하는 총독부 사상 통제의 최 일선이었다. 1945년 종로 경찰서 고등계주임(경부)으로 해방을 맞았고 곧 미군정청에 의해 서대문 경찰서장으로 채용되었다. 1947년 수도경찰청 사찰과장이 되어 수많은 좌익세력 검거를 주도했다. 1948년 1월 장택상 경찰청장 저격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임화를 물고문으로 치사케 하고 한강에 시체를 유기하도록 지휘했다. 1948년 6월 동대문경찰서장 박주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거액의 챙긴 독직사건으로 구속되었으나 9월에 무죄로 석방되었다. 두 달 뒤인 11월에 수사과장으로 복직되었고, 1949년 1월 총경으로 승진, 국회프락치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를 총 지휘했다. 1949년 6월 반민특위가 친일경찰의 상징이고 친일청산 방해공작을 일삼는 최운하를 체포하였는데 이것이 경찰에 의한 반민특위 습격 및 해체의 발단이 되었다. 1949년 6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는 배후인물로 최운하를 지목했다. 1949년 11월 구성된 보도연맹 최고지도위원 6인 중 한명이었다. 1950년 5월 서울시경 부국장으로 내정되었으나 한국전쟁 중에 실종되었다.

한경록 (韓景祿, 1912 ~ 1962.8.1.)

한경록은 함경남도 북청군 출생으로 일본 니혼대학 법률과를 중퇴했다. 1939년 12월 일제강점기 경부보 시험에 합격한 뒤 함남 신흥경찰서 경부보, 원산경찰서 사법주임을 지냈다. 해방 후 제6관구(전북)와 제8관구(전남) 경찰청 공안과장과 수사과장을 각각 역임했으며, 1948년 여순사건 당시에는 전남도경 보안과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경록은 한국전쟁 당시 이뤄진 민간인 학살 사건에 직접 개입한 핵심 인물이다. 전쟁 초 경북도경국장을

지낸 그는 이 지역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학살 사건과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경찰 측 핵심 책임자였으며, 9.28 서울수복 후 경기도경국장으로 있으면서 부역혐의자 학살 사건에도 직접 개입한 인물이다. 경산 코발트 광산이나 고양 금정굴 사건 등이 모두 한경록 책임 하에 이뤄졌다. 또 1951년 7월 전남도경국장으로 전보되면서 후방토벌 작전의 경찰 지휘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1952년 12월 뇌물사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7~10대 함경남도 북청군민회장(1956.5~1964.8, 함남동우회 총무 겸임)을 지낸 그는 1960년 3 · 15부정선거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는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한웅진 (韓雄震, 1924.4.9. ~ 1988.9.21.)

한웅진은 전라북도 전주 출생으로 1945년 일본 중앙대학(주오대학) 법과를 수료했다. 1946년 12월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전신) 2기 수료 후 소위로 임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의 동기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제2여단 3연대 3대대장으로 여수 · 순천 진압 작전에 참여했으며, 이듬해 봄 남원 토벌작전(일명 '반선리 전투')에서 홍순석과 김지회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1950년 3월 육본 정보국 CIC(방첩대) 본부장에 임명된 한웅진은 한국전쟁 초기 민간인 학살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되는 CIC의 책임자로서 조직을 이끌었다. 1955년 6월 성좌(임시준장)에 오른 그는 이듬해 2월 한충열(韓忠烈)이었던 이름을 한웅진으로 개명했다. 당시 이를 상의한 사람이 막역한 사이였던 박정희다. 1960년 7월 육군정보학교장에 임명된 한웅진은 이듬해 5월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공안분과위원장과 외부 · 국방위원 등을 역임한 한웅진은 승승장구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9사단장으로 돌연 군에 복귀했다. 육사 8기의 견제, 그리고 거칠게 조언이 가능한 한웅진이 박정희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1년 8월 육군 소장으로 진급한 한웅진은 3관구 사령관, 2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거친 뒤 1968년 7월 계급정년에 따라 예편했다. 이후 정계에 투신하려는 움직임을 여러 차례 보였으나 모두 무위에 그쳤다.

한종철 (1956 ~)

한종철은 1986년 경기도경 대공과(경장, 30세) 재직 당시 이근안 경감 지휘 아래 반제(反帝)동맹당(AILG) 결성기도 사건 관련자들을 고문 수사한 경관이다. 당시 사건 관련자들은 영장도 없이 검거되어 불법 감금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고, 통닭구이 고문, 날개꺾기, 관절꺾기, 고춧가루고문, 물고문을 당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한환진 (韓桓鎭, 1916.2.2. ~ 2008.3.5.)

한환진은 판사 출신이다.1973년 9월 12일 대법원 형사부(주심 한환진 대법관)는 1,2심에서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납북귀환어부 '신평옥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조업을 하면 북한 경비정에 납치될 수 있다는 미필적 예측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 보냄으로써 남북귀환어부들에 대해 간첩죄 처벌을 당연시하는 판례를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납북어부들의 간첩조작 사건의 양산을 사실상 조장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한환진은 대법원판사 재직 시절 2차 인혁당 사건(혹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8명에 대한 사형 선고, '김재규 내란음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재규와 김대중에 대한 사형 판결, 그리고 유신체제 아래서 다수의 긴급조치위반 사건 판결에도 관여하였다. 한환진은 1916년 평안남도 평원군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부친이 의사, 외숙부가 변호사) 평양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거쳐, 고등문관시험(사법과)에 합격함으로써 식민지 시대 때부터 최고의 관료가 될 기회를 잡았다. 해방 후 그 연장선상에서 법관이 되었고,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판사로 탄탄대로를 달렸다. 5 · 16 이후 1961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짧은 대법관 생활을 끝냈으나 1973년 변호사 생활 12년만에 다시 이례적으로 대법관에 임용되어 8년 동안 대법원판사로 재직하면서 유신체제에 순응하는 판결로 일관하였다.

허문도 (許文道, 1940.2.26. ~ 2016.3.5.)

허문도는 경남고성 출생으로 부산고, 서울 농대 졸업하고, 조선일보 기자, 동경특파원으로 재직했다. 1979년 주일 대사관 공보관으로 전직했다가 1980년 12 · 12쿠데타를 일으

킨 신군부에 발탁되어 당시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서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후 5공 수립 과정에서 국보위 문화공보위원, 전두환 집권 후 대통령비서실 공보 · 정무비서관, 문화공보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1수석, 국토통일원 장관 등을 지냈다. 1980년 초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신군부 핵심 실세였던 허삼수 · 허화평 씨와 함께 '쓰리(3) 허(許)'로 불렸다. 국보위 문공분과위원과 청와대 비서관으로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 통폐합 입안 및 실행을 주도했고,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로 불리는 악명을 떨치며 언론악법인 언론기본법 제정과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작성 시행하는 데 앞장섰다. 1981년 5 · 18민주화운동 1주년을 무마시키기 위해 관제집회에 수천 명을 동원한 '국풍 81'을 기획한 바도 있다. 국토통일원 장관 때는 '반공'을 앞세운 반통일 정책들을 입안 실행했다. 1992년 14대 총선(경남 충무 · 통영 · 고성)과 1998년 경남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1999년 불교TV 사장에 선임됐으나 6개월만에 하차했다. 2002년 자민련(자유민주연합)에서 정계 은퇴했고, 이후 대표적인 극우보수 인사로 2003년 '반핵 · 반김(反核 · 反金)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종종 참여했다. 그는 자신이 '민족주의자', '국가주의자'라고 강변하고 다녔으나,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지식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군사독재정권에 빌붙어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거스른 자였을 뿐이다. 76세로 사망할 때까지 5공화국 권력 핵심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과오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홍필용 (洪弼用, 1919.4.13. ~ 2003.7.25.)

홍필용은 평남 순천 출신으로 명치(明治)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제6사단 법무부 부장, 1949년 육군 제1사단 법무부 부장을 역임했다. 1951년 제1회 군법무관 전형시험에 합격했다. 1951년 서울지구 계엄사령부 법무부장, 1954년 제6군단 법무부 부장 역임했다. 1961년 5 · 16 이후 대법관 감독관으로 파견되어 대법관 전원을 해임했다. 1962년 3월 정치정화위원회 사무국장에 임명되었다. 1967년 6월 중앙정보부 5국장으로 재임할 때 동백림사건에 대한 공작을 담당하면서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을 조작 지휘하였다.

황산덕 (黃山德, 1917.6.18. ~ 1989.10.19.)

황산덕은 평안남도 양덕군 출생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로, 불교학자이자 언론인으로,

법무부 장관과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대표 경력으로는 서울대 법대 교수(1954-66), 성균관대 총장(1974), 법무부 장관(1974-76), 문교부 장관(1976-77), 장관 퇴임 이후 한국불교진흥원장(1980-) 등이 있다. 1975년 법무장관 황산덕은 "인혁당은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북괴의 지령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 반국가단체"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후에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황산덕은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인 사회안전법 제정을 지시했다. 1989년 3월 폐지된 이 법의 문제점으로는 ①적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안감호처분 ②죄형법정주의의 위배 ③일사부재리 원칙 및 소급법 금지의 위배 ④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⑤양심의 자유의 침해 등을 꼽을 수 있다. 황산덕은 정비석과의 〈자유부인〉 논쟁(1954)으로도 유명하며, 〈동아일보 필화사건〉(1962)으로 3공화국 때 구속되기도 했다.

황진호 (黃振灝, 1935.2.21. ~)

황진호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62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1963년 춘천지검 검사, 1966년 서울지검 검사에 임명되었다.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할 때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담당 검사로서 권재혁, 이일재 등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구성, 형법 내란죄로 기소하고, 권재혁 등 4명에게 사형 등을 구형했다. 또 1975년 - 1976년 발생한 재일교포유학생 백옥광, 김동휘, 강종건 등 사건과 김원중 사건에도 1심 검사로 참여하였다.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에 1심 검사로 참여하여 당시 김대중 등 피고들의 발언 요청을 묵살하였다. 1977년에 발생한 재일관련 강우규 간첩사건에 담당 검사로 1심에서 강우규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이후 1977-1979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부 록

별첨1. 2017년 기자회견 자료집(11-12쪽)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별첨2. 2017년 기자회견 자료집(13-57쪽)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사건별 명단(①) 및 628명 전체 명단(②)

별첨3. [논문] 한홍구,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별첨4.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구성 및 편찬 제안문

별첨 1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가나다순 명단

가재환 강민창 강신욱 강진규 강창성 강철선 강철형 강충선 강화봉 경무현
고병천 고영주 곽영주 곽의영 구용서 구자춘 권세영 권영해 권정달 권종근
권준옥 길재호 김갑수 김경한 김경회 김교련 김군성 김근수 김기섭 김기완
김기춘 김기홍 김남옥 김동근 김동운 김동하 김득모 김만기 김백일 김보현
김석기 김석수 김성곤 김성남 김성진 김수현 김승일 김영광 김영찬 김영휘
김용배 김용성 김용순 김용진 김용판 김원치 김윤근A 김윤근B 김일환 김장수
김재능 김재춘 김정렴 김 종 김종건 김종만 김종오 김종원 김종필 김종한
김준연 김중서 김지회 김진만 김진영 김진태 김진형 김창룡 김충우 김치열
김태선 김택수 김학의 김헌무 김형기 김형영 김형욱 김황식 남궁길영 남재준
노덕술 노승두 노신영 노원욱 노태우 모성진 문귀동 문봉제 문재준 문호철

민병주 민복기 박경원 박근혜 박내조 박만원 박만호 박영길 박영무 박영수
박영준 박용기 박용익 박원동 박원택 박일룡 박재명 박정희 박종규A 박종규B
박종연 박종표 박준병 박지원 박찬일 박창록 박창암 박처원 박충훈 박치옥
박현식 박희도 박희동 박희방 방준모 배응찬 배제인 백남규 백남억 백남은
백두진 백선엽 백성욱 백용기 백운상 백원교 백인엽 백태하 백한성 변진우
사광욱 서동권 서 성 서완수 서의남 서익원 서재두 서정각 서종철 서주연
선우종원 성용욱 성종환 손중덕 손진곤 송성부 송요찬 송인상 신갑생 신상규
신상묵 신성모 신영주 신영철 신우식 신윤희 신직수 심상은 심용현 안강민
안경상 안두희 안문경 안봉근 안우만 안응모 안종범 안종택 안필준 양달승

양두원 양승태 어청수 엄민영 엄익준 연제욱 예관수 오병선 오익경 오정근

오제도 오치성 오희명 옥도경 우병우 우종일 원세훈 원용덕 원택연 유병창
유병현 유원식 유정방 유충렬 유태흥 유학성 유해진 유혁인 유흥수 윤기병
윤영철 윤익헌 윤재호 윤종원 윤진원 윤치영 윤태일 이강학 이경식 이권섭
이규명 이규홍 이근안 이근직 이기붕 이낙선 이대성 이덕만 이무영 이문성
이범석 이병기 이병호 이사철 이상귀 이상연 이상재 이서우 이석제 이선근
이성우 이세호 이순구 이순신 이순일 이승만 이시원 이영범 이영호 이용택
이우익 이우철 이원홍 이원희 이익흥 이인규 이인철 이재권 이재만 이재윤
이재준 이재화 이재훈 이정용 이존화 이종구 이종명 이종원 이주일 이준영
이중재 이창우 이철환 이철희 이춘구 이치왕 이하성 이학봉 이한동 이해구
이협우 이형근 이 호 이후락 이희권 이희성 임내현 임대화 임동구 임철호

임휘윤 임흥순 장경근 장경순 장기오 장도영 장병화 장석윤 장세동 장은산
전두환 전봉덕 전상석 전성천 전재구 전희찬 정경식 정구영 정기승 정낙중
정명래 정병두 정상학 정용식 정일권 정재환 정주년 정진규 정치근 정해창
정형근 정호성 정호용 정홍원 정희택 조병옥 조 순 조윤선 조인구 조일제
조준웅 조진제 조한경 조흥만 주영복 지창수 진상구 진형구 차규헌 차지철
차철권 채명신 채병덕 천성관 최경조 최규하 최난수 최대현 최덕신 최명부
최문영 최병국 최병규 최병환 최상엽 최세창 최순주 최영희 최운하 최 웅
최인규 최종영 최창림 최 환 추재엽 탁성록 한경록 한경순 한동석 한옥신
한웅진 한종철 한환진 한희석 함병선 허문도 허삼수 허정훈 허화평 홍성철
홍순봉 홍순석 홍종수 홍종철 홍진기 홍필용 황교안 황산덕 황영시 황용주

황진호 곰 독사 불곰 여우

별첨 2-①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사건별 명단

분류	영역	사건명	총원/순인원/중복	명단
학살		제주 4·3사건	9/6/3	홍순봉 송요찬 함병선 문봉제 김재능 탁성록 이승만 조병옥 채병덕
		여순사건 (14연대 반란) 진압과정에서의 학살	4/2/2	김백일 백인엽 이승만 김종원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학살	23/18/5	이승만 정일권 백성욱 장석윤 김창룡 장경근 김갑수 김태선 이협우 김종원 한웅진 장경순 강화봉 신영주 한경록 장도영 조병옥 선우종원 신성모 채병덕 송요찬 탁성록 오제도
		재소자 학살	23/15/8	이우익 이형근 심용현 정재환 이순일 이준영 백원교 김득모 이순구 원택연 백인엽 이정용 백운상 박창록 김종만 이승만 송요찬 이선근 홍순봉 한웅진 장경순 김종원 한경록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의 학살	18/11/7	유해진 오제도 정희택 안문경 이원희 예관수 이무영 김준연 이하성 이 호 이익흥 이승만 김창룡 노덕술 조병옥 장경근 한경록 선우종원
		후방 지역에서의 학살	11/8/3	최덕신 한동석 오익경 백선엽 최영희 김용배 신상묵 권준옥 송요찬 김종원 이성우
		국민방위군 사건	4/4/0	김윤근 윤익헌 이선근 신성모
		광주학살	12/2/10	전두환 정호용 노태우 이희성 주영복 황영시 최세창 장세동 박종규 박준병 최웅 신우식
내란 및 헌정유린	내란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3/3/0	지창수 김지회 홍순석
		5·16군사쿠데타	28/22/6	박정희 김종필 구자춘 길재호 김동하 김용순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문재준 백태하 박종규 이낙선 박치옥 오정근 오치성 유원식 윤태일 이석제 이주일 채명신 홍종철 송요찬 장도영 김형욱 장경순 박창암 박경원
		유신	12/8/4	이후락 김치열 김동근 김영광 김정렴 홍성철 유혁인 김성진 신직수 김기춘 박정희 강창성

내란 및 헌정유린		긴급조치 선포	2/0/2	박정희 신직수
		12·12 / 5·17	19/19/0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차규헌 유학성 황영시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신윤희 박종규 박희도 장기오 권정달 김진영
	헌정유린	부산정치파동 ·발췌 개헌	2/2/0	원용덕 이범석
		사사오입 개헌	4/2/2	최순주 백한성 이승만 이기붕
		삼선개헌	12/2/10	전재구 김진만 박정희 김형욱 이후락 정일권 박경원 윤치영 백남억 길재호 김성곤 김기완
		5공 수립 방조	4/3/1	최규하 박충훈 김중서 이 호
고문조작	이승만 정권	국회 프락치 사건	6/2/4	사광욱 최운하 오제도 김태선 채병덕 전봉덕
		반민특위 습격사건	8/3/5	노덕술 최난수 윤기병 이승만 장경근 김태선 이 호 윤치영
		김구 암살 사건	7/5/2	안두희 전봉덕 채병덕 장은산 윤치영 신성모 김창룡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4/0/4	이기붕 임흥순 이익흥 김종원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사법살인	11/4/7	박찬일 조인구 이근직 김용진 임철호 장경근 홍진기 오제도 김준연 이 호 김갑수
	박정희 정권	5·16 후 각종 반혁명 사건들	5/1/4	조흥만 김종필 이철희 박창암 이석제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2/1/1	최문영 박종규
		1차 인혁당 사건	7/4/3	이용택 서주연 정명래 김형욱 신직수 윤종원 한옥신
		한일국교 정상화 전후 내란 조작 사건들	4/1/3	박영수 김형욱 신직수 한옥신
		민족주의비교 연구회 사건	4/3/1	홍필용 박종연 이종원 이용택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2/2/9	황진호 김기홍
		사법파동	3/2/1	김종건 이규명 최대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3/1/2	정기승 이후락 박종연
		춘천 강간 살인 조작	1/1/0	정용식

고문조작		남산 부활절 예배 내란음모 사건	4/1/3	김교련 김형기 강창성 문호철
		김대중 납치사건	5/4/1	이철희 윤진원 김기완 김동운 이후락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	3/2/1	안경상 차철권 김치열
		문인간첩단 사건	1/0/1	김교련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14/5	신직수 윤종원 조일제 손중덕 박재명 문호철 강철선 박희동 박현식 유병현 이세호 민복기 이병호 서종철 박정희 김치열 이용택 최명부 이규명
		수도권 선교자금 횡령 사건	2/1/1	이재권 이용택
		강제전향 및 사회안전법	4/3/1	황산덕 배응찬 강철형 신직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4/2/2	서정각 정치근 박정희 이용택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2/1/1	조준웅 진상구
		부마항쟁	5/2/3	차지철 최청림 김근수 박정희 권정달
	전두환 정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3/0/3	전두환 이학봉 권정달
		삼청교육대 사건	8/4/4	김만기 정경식 이춘구 서완수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허삼수
		10.27.법난 사건	3/1/2	김충우 노태우 이희성
		무림·학림 사건(전민학련·전민노련)	6/3/3	유흥수 김경회 허정훈 박처원 이근안 김수현
		부림사건	5/5/0	최병국 고영주 이덕만 송성부 이규홍
		아람회 사건	1/0/1	정용식
		오송회 사건	2/2/0	신갑생 이재화
		녹화사업	4/3/1	박준병 최경조 서의남 전두환
		김근태 고문 사건	8/6/2	이근안 윤재호 김수현 백남은 서성 김원치 정형근 박처원
		부천서 성고문 사건	4/3/1	문귀동 서동권 이철환 장세동
		서노련 사건	1/1/0	이종구
		애학투련 (건대농성) 사건	6/2/4	최상엽 최 환 장세동 이해구 강민창 서동권

고문조작		반제동맹사건	2/1/1	한종철 이근안
		제헌의회 사건	4/1/3	장세동 전희찬 김택수 박희방
		민족해방노동자당 심진구 사건	6/4/2	장세동 정형근 곰 여우 불독 독사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	7/7/0	박처원 강민창 이해구 유정방 박원택 조한경 강진규
		윤태식 사건	6/4/2	정주년 전희찬 김승일 엄익준 장세동 이학봉
		5공화국 정치판사	6/6/0	유태흥 손진곤 이영범 박영무 안우만 정상학
	노태우 정권	1989년 방북사건과 공안정국 조성(걸개그림, 서경원방북)	8/4/4	안응모 김학의 김군성 안종택 정형근 서동권 정구영 김기춘
		사노맹 사건	2/2/0	정형근 서동권
		강기훈유서대필사건	10/8/2	정해창 정구영 강신욱 신상규 김형영 노원욱 임대화 박만호 김기춘 서동권
		중부지역당 사건	3/2/1	이상연 성용욱 정형근
간첩 조작		이수근 이중간첩 조작 사건	3/1/2	최대현 김형욱 방준모
		박노수, 김규남 간첩 조작 사건	4/2/2	모성진 전상석 최대현 김형욱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사건	40/25/15	이한동 양승태 김황식 권종근 윤영철 이재훈 김택수 서익원 이사철 이창우 정진규 최명부 정낙중 안필준 고병천 장병화 한경순 이권섭 김종한 이순신 우종일 오희명 조진제 추재엽 진상구 박준병 이종구 허정훈 최병국 이재권 정경식 정용식 김근수 차철권 노신영 김기춘 서 성 이덕만 송성부 이규홍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 사건	20/15/5	경무현 박지원 이우철 이재준 김용성 서재두 박내조 백용기 한옥신 김남옥 김성남 이희권 최병규 한환진 남궁길영 신상규 최병국 강철선 이근안 신갑생
		월북자 가족 관련 조작간첩 사건	25/22/3	이치왕 강충선 심상은 임동구 이상귀 유병창 이서우 성종환 박영길 변진우 안강민 임내현 임휘윤 김경한 오병선 김석수 김형기 가재환 노승두 최종영 김헌무 홍종수 정명래 윤종원 김군성
부정선거		3·15부정선거	24/21/3	이기붕 최인규 이강학 한희석 박용익 임흥순 송인상 이성우 최병환 이존화 조 순 곽의영 김영휘 배제인 김영찬 김진형 구용서 김일환 박만원 이중재 임철호 이승만 장경근 이근직

부정선거		4·19발포	5/5/0	곽영주 유충렬 백남규 박종표 홍진기
		1967년 (6·8부정선거)	7/2/5	엄민영 양달승 정일권 김형욱 김종필 길재호 이후락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9/5/4	강창성 백두진 박경원 백남억 김성곤 길재호 신직수 김정렴 이후락
		초원복집 사건	5/2/3	정홍원 김진태 김기춘 정경식 박일룡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10/8/2	원세훈 연제욱 옥도경 이종명 민병주 박원동 김용판 황교안 김기춘 김진태
언론탄압		경향신문 폐간	4/1/3	전성천 이기붕 홍진기 임철호
		민족일보 사건	1/1/0	박창암
		문화방송·부산문화 방송·부산일보 강탈 사건 (5·16장학회 사건)	4/2/2	황용주 박용기 박정희 신직수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	4/1/3	방준모 박정희 김형욱 최대현
		신동아 필화 사건	3/0/3	김형욱 이후락 김성곤
		동아일보 백지광고 및 강제 해직	3/1/2	양두원 박정희 신직수
		1980년 언론 통폐합과 강제해직	3/2/1	이상재 허문도 전두환
		보도지침 사건	3/2/1	이원홍 이경식 허문도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사건	김영삼 정권	안풍	2/2/0	권영해 김기섭
		총풍	2/1/1	권영해 이대성
		북풍	3/2/1	권영해 박일룡 이병기
	김대중 정권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1/0	진형구
	이명박 정권	2008년 촛불 진압	3/3/0	어청수 천성관 신영철
		용산참사	2/2/0	김석기 정병두
		민간인 사찰	3/3/0	박영준 이영호 이인규
		서울시공무원(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8/7/1	남재준 이재윤 김보현 권세영 이인철 이문성 이시원 원세훈
	박근혜 정권	세월호 사건	4/1/3	김장수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통합진보당 해산	3/0/3	황교안 김기춘 남재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9/9/0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조윤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김종

별첨 2－②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전체 명단 (628명)

민간인 학살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제주 4·3사건 (9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홍순봉	제주도경찰국장	치안국장, 육군헌병대장(대령) 증권협회 이사장	초기 강경진압 주도, 서북청년단 대거 동원	몰
송요찬	9연대장(중령)	육군참모총장, 내각수반	무차별 학살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령 발표	몰
함병선	2연대장(중령)	육군중장,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위원원장	군 토벌작전 주도	몰
문봉제	서북청년단 중앙위원장	교통부장관, 치안국장	서북청년단 학살 최종 책임	몰
김재능	서북청년단 제주지부장	제주신보 사장 (강제 탈취)	서북청년단 학살만행 책임자	몰
탁성록	9연대 정보참모(대위)	CIC진주파견대장	군 토벌작전 핵심 진압군	몰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제주 4·3사건 학살의 최종 책임	몰
조병옥	미군정 경무부장	내무부장관, 민주당 대통령후보	초기 강경진압 주도	몰
채병덕	국방부 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군 토벌작전 최고 지휘관	몰
여수·순천 학살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김백일	제5여단 여단장(중령)	제3사단장, 육군본부 행정참모부장	여순사건 토벌 중 민간인 학살 관련 지휘관	몰
백인엽	제12연대 부연대장(소령)	6사단장, 육본 기획참모부장, 1군단장	여순사건 토벌 중 민간인 학살 관련 지휘관	몰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여순사건의 강경 진압 지시. 민간인 학살의 정치적 책임자	몰

김종원	5연대 1대대장(대위)	경남계엄사 민사부장, 내무부 치안국장	여순사건 중 민간인 학살 지휘관	몰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학살 (2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학살 최종 책임자	몰
정일권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준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군 명령계통 최고 지휘관	몰
백성욱	내무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	내무부 명령계통 최고 지휘관	몰
조병옥	내무부장관 (백성욱 후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내무부 명령계통 최고 지휘관	몰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	독립운동, 내무부 장관	예비검속 명령발동, 학살책임자	몰
김창룡	육본 정보국 CIC 책임자	특무부대장	육본 방첩대(CIC) 최고 책임자	몰
장경근	국방부 차관	내무부 차관, 제3·4대 민의원, 내무부장관	보도연맹 결성 주도 및 군인에 의한 보련원 학살의 책임 수뇌부	몰
김갑수	내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대법관, 5대 민의원	보도연맹 결성 주도 및 경찰에 의한 보련원 학살의 책임 수뇌부	몰
김태선	치안국장	서울시 경찰국장,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보도연맹 결성 주도 및 경찰에 의한 보련원 학살의 핵심수뇌부	몰
이협우	경주 내남면 민보단장	제2~4대 국회의원	우익단체장으로 민간인학살 주도	몰
김종원	헌병부사령관겸 경남지구계엄사령관	계엄민사부장, 치안국장	부산, 경남지역 보도연맹원 학살의 최고 책임자	몰
한웅진	육군정보국 CIC본부장(중령)	최고회의 안분과위원, 9사단장	보도연맹 학살 관련 CIC 총 책임자	몰
장경순	대구 CIC 특무부대 차장(소령)	농림부장관, 6~10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대구지역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자 학살 지휘 책임자(한웅진 휘하)	몰
강화봉	거제경찰서 사찰주임		거제 보도연맹 사건 핵심 가해자 (사형선고 뒤 형집행정지로 석방)	?
신영주	경남도경 사찰과장	충남도경국장, 국회의원	경남지역 보도연맹 학살 핵심책임자	몰
한경록	경북도경국장	경기도경국장	대구·경북지역 보도연맹 사건의 핵심 가해자(경산 코발트광산 등)	몰
장도영	육군본부 정보국장(대령)	육군참모총장,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관련 방첩 책임자	몰
선우 종원	내무부 치안국 정보수사과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조폐공사사장, 국회사무총장	보도연맹 결성 주도 및 경찰 발포 명령(학살 지시)의 최고 수뇌부	몰
신성모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서리, 주일본 수석공사	보도연맹원 처형 지시	몰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소장)	'경남지구편성군 사령관'으로 좌천, 7.27 사망	한국전쟁 초기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군 최고 책임자	몰
송요찬	헌병사령관(대령)	육군참모총장,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관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핵심 책임자(50년 7월20일 <체포·구금 특별조치령> 발령)	몰
탁성록	CIC 진주파견대장	제주 4.3사건 당시 9연대 정보참모	진주지역 보도연맹원 학살 핵심 가해자	몰
오제도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제9·11대 국회의원	보도연맹 결성 및 관리 주도	몰
형무소 재소자 학살(2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이우익	법무부장관	친일판사, 대구고검장	형무소 재소자학살사건 최고책임자	몰
이형근	제2사단장 겸 충청지구 위수사령관(준장)	육군참모총장, 주필리핀 특명정권대사, 주영대사	대전형무소 사건 군 최고 지휘관	몰
심용현	제2사단헌병대 4과장	성신학원 이사장	대전형무소 학살 현장 책임자	몰
정재환	대전지검장	법무부 차관, 동아대 학장(설립자)	김택일 대전형무소소장과 이준영 특경분대장에게 정치범처단 지시	몰
이순일	대전형무소 소장(대리)			?
이준영	대전형무소특경분 대장			?
백원교	육군형무소장(소령)	서대문형무소 소장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핵심 가해자	몰
김득모	제2사단 헌병대장(소령)	육군 헌병감, 남서울컨트리클럽 사장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핵심 가해자	몰
이순구	충남도경국장	경북, 전남 등 도경국장	대전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관련 경찰 측 핵심 가해자	몰
원택연	법무부 형정국장	대구고검 차장 (3.15부정선거 관련 해임)	교정 총수로서 형무소 학살 사건의 최고 책임자	몰
이정용	진주경찰서장	고등계 형사, 3·15 발포명령으로 징역 17년	진주형무소 재소자 학살 과정에 경찰이 직접 개입함	몰
백운상	부산지구 CIC대장(소령)	CIC부부대장	부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핵심 가해자	몰
박창록	부산지구 헌병대장(중령)		부산형무소 및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핵심 가해자	몰
김종만	경남지구계엄 사령부무부장(소령)	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장	사형 판결·처형 뒤 관련 문서 조작 작성	몰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형무소 재소자학살사건 최종책임자	몰
백인엽	17연대장(대령)	육군중장 예편, 선인재단 설립 (비리로 징역3년 실형)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직접 가해자	몰
송요찬	헌병사령부 사령관	헌병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내각수반	대전 및 광주형무소 재소자에 대한 총살 명령자	몰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		대전형무소 학살사건의 핵심책임자	몰
홍순봉	호남전투지구헌병 사령관 (광주지역헌병대장)	치안국장, 육군헌병대장증권협회 이사장	광주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핵심 가해자	몰
한웅진	대구지구 CIC대장(중령)	국가재건최고회의 공안분과위원, 9사단장	대구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관련 CIC 책임자	몰
장경순	대구 CIC 특무부대장(소령)	최고위원, 농림부장관, 5선 의원, 국회부의장	대구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관련 CIC 책임자	생
김종원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및 헌병사령부 부사령관	계엄민사부장, 치안국장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최고 책임자	몰
한경록	경북도경국장	경기도경국장	대구·경북지역 재소자학살사건 핵심책임자(경산 코발트광산 등)	몰
부역 혐의자 학살 (18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유해진	충남 아산 신창지서장		신창지서사건으로 징역 15년 선고 (주민 150여명 총살)	몰
오제도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서울지검 파견검사)	대검찰청 검사, 제9·11대 국회의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찰측 핵심 수뇌부	몰
정희택	합동수사본부 심사실장(서울지검 파견검사)	11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구), 감사원장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부역자 심사실장	몰
안문경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서울지검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몰
이원희	합동수사본부 지휘관(서울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 거창양민학살 사건 담당 검사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몰
예관수	육해공 합동헌병 대장(중령)	민정당 대변인, 건설군납조합이사장	부역혐의자 학살 사건 헌병 측 핵심 책임자	몰
이무영	고양경찰서장		고양 금정굴 사건의 핵심 가해자	몰
김준연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민주당 최고위원, 5선의원	부역자 학살 사건 관련 법무라인 핵심 책임자	몰
이하성	서울시경 정보과장		부역자 학살사건 관련 서울지역 핵심 가해자	몰

이 호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겸 민사부장(준장)	법무, 내무부장관,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장	계엄고등군법회의 관장	몰
이익흥	서울시경국장	헌병부사령관, 치안국장, 제4대 국회의원, 내무장관	부역자 학살사건 관련 서울지역 핵심 가해자	몰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부역자 사건 관련 최종 책임자	몰
김창룡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	육군정보국 방첩대장, 특무부대장	부역자 사건 핵심 가해자	몰
노덕술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중령)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서울 범죄수사대 대장	서울지역 부역자 사건 핵심 가해자	몰
조병옥	내무부장관	경무국장, 경무부장, 민주당 대통령후보	부역자 사건 핵심 책임자	몰
장경근	국방부 차관	제3·4대 민의원(자유당), 내무부장관	부역자 사건 핵심 책임자	몰
한경록	경기도경국장	경북도경국장	고양 금정굴 사건 등 경기지역 부역혐의자 학살 사건 핵심 책임자	몰
선우 종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지휘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국회사무총장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지휘 관(경찰 측 파견 핵심 수뇌부)	몰
후방 지역에서의 학살 (11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최덕신	11사단장(준장)	외무부장관, 천도교 교령	11사단 학살 최종 책임자	몰
한동석	11사 9연대 3대대장		산청, 함양, 거창 일대 학살 집행자	몰
오익경	11사단 9연대장	육군 대령	학살 지휘체계	몰
백선엽	백야전전투사령부 사령관(중장)	육군참모총장, 교통부장관, 호남비료 사장	백야사 당시 민간인 학살 최종 책임자	생
최영희	제8사단장(준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7~10대 국회의원, 유정회의장	백야전전투사령부 소속 기동부대장	몰
김용배	서남지구 전투사령관(준장)	육군참모총장, 충주비료 사장, 대한중석 사장	백야사 전투 당시 민간인 학살 핵심 책임자	몰
신상묵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관 (경무관)	제주도경국장, 지리산 도벌사건으로 구속	백야사 전투 당시 민간인 학살 핵심 책임자	몰
권준옥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장	충무무공훈장(6·25전공), 육군 중령	전남 함평, 영광, 나주지역 민간인학살 집행자	몰
송요찬	수도사단 사단장(준장)	육군참모총장,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관	백야전전투사령부 소속 기동부대장	몰

김종원	경남지구 계엄 민사부장	내무부 치안국장	거창 등지 민간인학살 진상 은폐	몰
이성우	태백산지구 전투경찰사령관 (경무관)	서울시경 국장, 내무부 치안국장, 내무부차관	백야사 전투 당시 민간인 학살 핵심 책임자	몰
국민방위군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협의내용**	**생몰**
신성모	국방부 장관	내무부장관, 총리서리	국민방위군 동원 책임 및 은폐	몰
김윤근A	국민방위군 사령관	대동청년단 단장	국민방위군 학살책임, 사형	몰
윤익헌	국민방위군 부사령관		국민방위군 학살책임, 사형	몰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 국민방위군 사건 재판장	문교부장관, 정신문화연구원장	국민방위군 고문 역할, 사건 후 재판장으로 은폐 축소	몰
5·18 광주 학살(1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협의내용**	**생몰**
최 웅	11공수여단장	특전사령관, 합참본부장, 파키스탄 대사	광주항쟁 진압 지휘 (전남도청 앞 학살 현장 책임자)	
신우식	7공수여단장(대령)	관광공사 감사	광주항쟁 진압 지휘	생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대한민국 대통령	광주항쟁 진압 공모 및 지휘에 있어 수괴 역할	생
정호용	특전사령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13·14대 국회의원	광주항쟁 진압 공모 및 지휘	생
노태우	수경사령관(소장)	대한민국 대통령	광주항쟁 진압 공모 및 지휘	생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 교통부장관	광주항쟁 진압 공모 및 지휘	생
주영복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내무부장관	광주항쟁 진압 공모 및 지휘	몰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중장)	육군참모총장, 감사원장	광주항쟁 진압 공모 및 지휘 (시위 강력 진압 지시)	생
최세창	3공수여단장	수방사령관, 국방부장관	광주항쟁 진압 지휘 (3공수여단에 실탄 배부와 실탄 사용을 지시)	생
박준병	20사단장(소장)	보안사령관, 12~14대 국회의원	광주항쟁 진압 지휘	몰
장세동	특전사 작전참모(대령)	대통령경호실장, 안기부장	광주항쟁 진압 공모	생
박종규B	3공수여단 15대대장(중령)	육본 정보처장, 56사단장	광주항쟁 진압 시 도청진압작전	몰

내란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여수 제14연대 반란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협의내용**	**생몰**
지창수	14연대 인사계(상사), 남로당 조직책임자	14연대 인사계, 반란 현장지휘자	제14연대 반란 주동	몰
김지회	14연대 대전차포 중대장(중위)	14연대 반란군 사령관	제14연대 반란 주도 및 반란군 총지휘	몰
홍순석	14연대 순천파견 선임중대장(중위)	14연대 반란군 지휘관	제14연대 반란 주도 및 반란군 지휘	몰
5·16 군사반란 (28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협의내용**	**생몰**
박정희	제2군 부사령관 (소장)	대한민국 대통령	내란 수괴(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내란 지휘)	몰
김종필	예비역 중령	중앙정보부장, 9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내란 수괴 (내란 모의주도 및 계획 입안)	생
구자춘	6군단 포병대대장(중령)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13·14대 국회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육군본부 점령)	몰
길재호	공수특전단 부단장(중령)	무임소장관(정무장관), 공화당 사무총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군의 계획·조직·집행 등 전반적인 감독업무)	몰
김동하	예비역 해병 소장	대한체육회장, 마사회장, 친일인명사전수록	내란 중요임무 종사(쿠데타 당시 해병대지휘, 최고회의운영위원장)	몰
김용순	부산군수기지사령부 참모장(준장)	중앙정보부장, 제6·7대 국회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산지구책, 최고회의 내무위원장)	몰
김윤근B	해병 제1여단장(준장)	호남비료 사장, 한국수산개발공사(수개공) 사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쿠데타 당시 박정희와 함께 선두에서 한강 도강)	생
김재춘	제6군관구사령부 참모장(대령)	중앙정보부장, 무임소장관(정무장관), 제8·9대 국회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방첩부대장,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	몰
김종오	연합참모본부 총장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최고회의 위원)	몰
문재준	6군단포병사령관 (대령)	'장도영 일파 반혁명사건'으로 숙청	내란 중요임무 종사(육군본부 점령, 최고회의 재정 분과위원)	
백태하	제6군단 포병단 대대장(중령)	중앙정보부 서울분실장, 군산 아메리카타운 사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포병대대 이끌고 육군본부 장악)	
박종규A	미보급기지창지역 한국군파견대장(소령)	경호실장, 10대 국회의원, 대한체육회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장면총리 체포 담당, 최고회의의장 경호실장)	몰

이낙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행정실(중령)	국세청장,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최고회의의장 비서관)	몰
박치옥	제1공수특전단장 (대령)	'장도영 일파 반혁명사건'으로 숙청	내란 중요임무 종사(공수단 참여의 결정적 역할, 최고위원)	
오정근	김포 해병제1여단 대대장(중령)	국세청장, 제9대 국회의원(유정회)	내란 중요임무 종사(서울시경 각 경찰서 점령, 최고회의 종합경제심사위원장)	몰
오치성	육군본부 부관감실 장교계장(대령)	4선 국회의원, 무임소장관(정무장관), 내무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연락 담당, 최고회의 내무위원장)	생
유원식	육군본부 군사발전국(대령)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연락과 기획업무 담당, 최고회의 재경위원장)	몰
윤태일	제36보병사단장 (준장)	주택공사 사장, 제9대 국회의원, 친일인명사전 수록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란 성공 후 군인신분으로 서울특별시장)	몰
이석제	육본 군수참모부 기획과 과장(중령)	총무처장관, 감사원장, 제10대 국회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주요정책수립,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몰
이주일	제2군사령부 참모장(소장)	감사원장, 친일인명사전 수록	내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최고회의 부의장, 헌법심의위원장)	몰
채명신	제5사단장(준장)	주월 한국군사령관, 2군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혁명5인위원회' 일원, 최고회의 감찰위원장)	몰
홍종철	제6군단 작전참모(대령)	대통령 경호실장, 문공부장관, 문교부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6군단 병력 동원, 최고회의 문사위원장)	몰
송요찬	1960년 5월 육군참모총장 사퇴후 미국유학	내각수반, 인천제철 사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각 수반, 경제기획원장)	몰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대장)	반혁명 혐의로 무기징역 (이후 형집행 면제), 미 위스콘신대학 교수	내란 방조(애매한 명령으로 내란 방조, 계엄사령관, 최고회의 의장, 내각수반, 국방장관)	몰
김형욱	육군 제6관구사령부 정보참모(중령)	중앙정보부장, 제8대 국회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조직 담당, 최고회의 내무위원장)	몰
장경순	육본 작전참모부 교육처장	농림부장관, 제6~10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최고회의 기획운영위원장)	몰
박창암	혁명검찰부장(대령)	반혁명 연루, 월간지 「자유」 발행	혁명재판소 검찰부 기소 지휘	몰
박경원	제2군단장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 제10대 국회의원	현역군인으로서 내무부장관직 수행	몰
유신 쿠데타와 유신체제 형성 (1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주일 대사, 제10대 국회의원	유신작업의 부지휘자로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몰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유신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	몰
김동근	중앙정보부 보안차장보	중앙정보부 제6국장, 제14대 국회의원	중앙정보부 실무 작업 총괄지휘	생
김영광	중앙정보부 판단기획국장	중앙정보부 심리전 총국장, 3선 국회의원	유신헌법 제정의 실무기획	몰
김정렴	대통령비서실장	재무부장관, 주일 대사	유신작업 관련 청와대 측 책임자	생
홍성철	청와대 정무수석	내무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유신 실무팀의 구체적인 작업 결과 검토 및 보완 과정 참여	몰
유혁인	청와대 정무비서관	동아일보 정치부장, 공보처장관	유신 실무팀의 구체적인 작업 결과 검토 및 보완 과정 참여	몰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	문공부장관, 연합통신 초대 사장	유신 체제 수립에 따르는 국민조작과 선동 작업 담당	몰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내란 수괴(유신작업 총지휘)	몰
강창성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 차장보, 제14·16대 의원	야당의원들의 연행과 고문·조사 지휘	몰
신직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앙정보부장	유신헌법 조문·법제화하는 작업 지휘	몰
김기춘	법무부 과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3선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장	유신헌법 제정 과정에 참여	생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 (19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전두환	보안사령관(소장)	대한민국 대통령	반란, 내란 수괴, 상관 살해미수 및 내란목적 살인 / 무기징역	생
노태우	9사단장(소장)	대한민국 대통령	반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상관 살해미수 / 징역 17년	생
정호용	50사단장(소장)	육군참모총장, 내무부장관, 제13·14대 의원	반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목적 살인, 국보위 상임위원 / 징역 7년	생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대장)	교통부장관, 주택공사 이사장	반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목적살인 등, 국보위원 / 징역 7년	생
주영복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내무부장관	반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목적 살인 등, 국보위원 / 징역 7년	몰
차규헌	수도군단장(중장)	2군 사령관, 교통부장관	반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국보위원 / 징역 3년 6월	몰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중장)	중앙정보부장, 12~14대 국회의원	반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국보위원 / 사망으로 공소기각	몰
황영시	1군단장(중장)	육군참모총장, 감사원장	반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목적 살인, 국보위원 / 징역 8년	생
최세창	3공수여단장(준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	반란 모의 참여, 중요임무 종사, 상관 살해 미수(반란지휘) / 징역 5년	생

장세동	수경사 30경비단장(대령)	대통령 경호실장, 안기부장	반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 징역 3년 6월	생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대령)	청와대 정무수석, 제14·15대 국회의원	반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등 / 징역 8년	생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대령)	청와대 사정수석, 제14대 의원	반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반란 지휘) 등 / 징역 6년	생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 대공제2과장	청와대 민정수석, 안기부 2차장, 13대 국회의원	반란, 내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등 / 징역 8년	몰
신윤희	수경사 헌병부단장(중령)	육군 헌병감	반란 중요임무 종사(반란 살상) / 징역 3년 6월	생
박종규B	3공수여단 15대대장(중령)	육본 정보처장, 56사단장	반란 중요임무 종사(반란 살상, 광주민주항쟁 도청진압작전) / 징역3년 6월	몰
박희도	1공수여단장(준장)	육군참모총장, 토지개발공사 이사장	반란 모의 참여, 중요임무 종사 / 징역 5년	생
장기오	5공수여단장(준장)	육군 교육사령관, 총무처장관	반란 모의 참여, 중요임무 종사 / 징역 5년	생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겸 합수부 정보처장	민정당 사무총장, 3선 국회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란세력 집권 시나리오 '시국수습방안' 입안)	생
김진영	수경사 33경비단장(대령)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반란 중요임무 종사(모의 참여, 12·12 당시 병력동원) / 징역 2년	생

헌정유린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부산정치 파동과 발췌개헌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원용덕	헌병사령관	헌병사령관	헌병 중대병력 동원 정치파동 수행	몰
이범석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주중국대사	부산정치파동 기획 및 주도	몰
사사오입 개헌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최순주	국회부의장	조선은행총재, 재무장관	개헌 부결 선포 번복	몰
백한성	내무부장관	국무총리서리, 대법관	개헌 가결 정부입장 주도	몰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개헌 총 책임자	몰
이기붕	국회의장	이승만 대통령 비서, 제5대 부통령 당선	민의원 의장으로 개헌 선포, 헌법기초위원	몰

삼선 개헌 (1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전재구	중앙정보부 제3국장	9대 국회의원(유정회), 한진종합건설 사장	삼선개헌 추진 실무 조정 지휘	생
김진만	공화당 원내총무	국회부의장	개헌안 국회통과 주도	몰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최고회의 의장, 대한민국 대통령	삼선개헌 지시, 내용·시기 결정, 반대 국회의원 협박 회유	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국회의원	총괄지휘, 당·정·청 통합대책회의 운영, 개헌반대자 테러 및 고문	몰
이후락	대통령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개헌 지휘, 국회의원 협박 회유	몰
정일권	국무총리	육군참모총장, 국회의장	개헌 필요성 역설	몰
박경원	내무부장관	제10대 국회의원	삼선개헌 위해 공무원 및 관변단체 동원	몰
윤치영	공화당 의장서리	내무부장관, 국회의원	개헌 필요성 역설	몰
백남억	공화당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개헌안 마련, 국회 발의, 찬성토론 주도	몰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	무임소장관	개헌 추진 실무, 6년제 주장	몰
김성곤	공화당 재정위원장	국회의원, 쌍용그룹 회장	개헌 추진 필요자금 조달 (언론, 국회의원 매수 자금 등)	몰
김기완	중앙정보부 제7국장	주일공사	삼선개헌 당·정·청 통합대책회의 실무 담당	몰
긴급조치 선포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	몰
신직수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유신헌법(53조, 긴급조치권) 제정 실무	몰
제5공화국 수립 방조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최규하	대한민국 대통령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으로서 신군부의 내란행위를 묵인·방조	몰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국무총리 서리 및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신군부의 내란행위 묵인·방조	몰
김중서	정치풍토쇄신위원회 위원장(대법원 판사)	대구고법원장, 중앙선관위원장	정치활동규제대상자 811명 발표 등 신군부의 정치적 탄압 방조	몰
이 호	대한적십자사 총재	초대 치안국장,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으로서 동 기관이 각종 악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 참여	몰

이승만 정권 시기 고문조작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국회프락치 사건 (6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사광욱	담당 판사	경성지방법원판사, 대법원판사(1961)	이적행위로 단정 징역형	몰
최운하	서울시경 사찰과장	일본고등계형사 출신, 한국전쟁중 납북	국회프락치 사건 모의 주도	납북
오제도	서울지검 담당검사	대검 검사, 제9·11대 국회의원	국회프락치 사건을 국가변란의 반국가적 사건으로 조작	몰
김태선	서울시경국장	서울시 경찰국장,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국회프락치사건 주도	몰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총참모장)	육군참모총장 해임 직후 7.27 사망	국회프락치사건 조작	몰
전봉덕	헌병부사령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국회프락치사건 수사본부장으로 체포 및 고문	몰
반민특위 습격 사건 (8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노덕술	반민특위 피체 (서울시경 전 수사과장)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서울 범죄수사대 대장	반민특위 해산 및 특위 간부암살 음모 총 지휘	몰
최난수	서울시경 수사과장	친일경찰	6·6습격행위 주도, 반민특위 간부 암살 음모 모의	물
윤기병	중부 경찰 서장	친일경찰	6·6습격행위 수행	몰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반민특위 해산 지시 (AP통신 단독회견)	몰
장경근	내무부차관	제3·4대 민의원(자유당) 내무부장관	반민특위 해산 (특경대 해산)	몰
김태선	시경국장	서울시 경찰국장,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6·6습격, 반미특위 협박	몰
이 호	내무부 치안국장	법무, 내무장관,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장	반민특위 습격	몰
윤치영	내무부장관	친일(임전대책협), 4선 국회의원, 공화당총재	특위 해산 현행범 무죄 석방, 내무부의 묵인 또는 방조	몰
김구 암살 사건 (7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안두희	육군포병소위	육군소령 전역	암살 수행	몰
전봉덕	헌병부사령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안두희보호, 암살배후 및 사건축소, 배후은폐	몰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총참모장)	육군참모총장 해임 직후 7.27 사망	군으로 안두희를 이첩 사후처리, 단독범행으로 축소	몰
장은산	포병사령관(중령)	만주군출신, 대령	암살모의 및 지시, 암살모의 발설로 의문사	몰
윤치영	내무부장관	친일(임전대책협), 4선의원, 공화당총재	사건 은폐,묵인	몰
신성모	국방부장관	내무장관, 주일대사, 국무총리서리	암살배후, 국방부 특명 4호로 안두희 소위 복직	몰
김창룡	육군정보과장(육군정 보국 방첩대장,소령)	육군정보국 방첩대장, 특무부대장	암살모의, 사건 마무리	몰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협의 내용**	**생몰**
이기붕	국회의장	제3~4대 국회의원, 제5대부통령 당선	장면부통령 저격 배후지시	몰
임흥순	서울시장, 자유당기획의원	제2~3대 국회의원	장면부통령 저격 배후조종	몰
이익흥	내무부장관	치안국장, 경기도지사, 4대 민의원	장면부통령 저격 배후조종	몰
김종원	치안국장	경남지구 계엄사령관	장면부통령 저격 배후조종	몰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사법살인 (11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협의 내용**	**생몰**
박찬일	이승만 대통령 비서 (경무대 비서관)	경무대 비서	조봉암사건 모의 주도	몰
조인구	검사	변호사	조봉암 사형구형	몰
이근직	내무부장관	일제강점기 군수, 농림부장관	조봉암 제거 적극 동의	몰
김용진	2심 재판장 판사	고법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국가보안법 적용 2심 사형 선고	몰
임철호	국회의원(자유당)	국회부의장, 자유당 조직부장	조봉암 제거 모의	몰
장경근	국회의원(자유당)	내무부차관, 제3·4대 민의원, 내무부장관	조봉암 제거 모의	몰
홍진기	법무부장관	일제강점기 판사. 법무부장관, 중앙일보 사장	진보당 해산과 조봉암 제거 모의	몰
오제도	대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제9·11대 국회의원	간첩행위 조작	몰

김준연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민주당 최고위원, 5선 국회의원	진보당해산 묵인 동조, 조봉암 제거 모의	몰
이 호	법무부 장관	법무, 내무장관,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장	진보당 해산 및 조봉암사형 최종 법적 책임	몰
김갑수	3심 주심 및 재심 대법관	법무부차관, 대법원장직무 대리, 제5대 국회의원	사형확정 및 재심부결	몰

박정희 정권 시기 고문조작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5·16 직후 인권침해 사건 (5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조흥만	치안국장, 준장	제7대 국회의원(신민당 전국구), 화재보험협회 대표	혁신인사, 정당·사회단체 인사 대대적 검거 및 조사	생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국무총리, 자민련 총재	중앙정보부 동원해 인권유린	생
이석제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장	총무처 장관, 감사원장, 제10대 유정회의원	'혁명재판소법'과 '특수범죄처벌에관한 특별법' 제정	몰
박창암	혁명검찰부장, 대령	김동하 등과 반혁명 연루, 월간지 자유 발행	혁명재판소 검찰부 기소 지휘	몰
이철희	육군 방첩부대장	중정 차장, 제10대 국회의원 이철희·장영자 사건	'위험인물 예비검속' 입안, 정당 사회단체 인사 체포, 지휘	생
무장군인 법원난입 사건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최문영	제1공수특전단 대령	육사 8기 (징역3년)	사법부 침탈 및 언론기관 겁박	
박종규A	대통령 경호실장	제10대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회장	언론기관 겁박 사주	몰
제1차 인혁당 사건 (7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육사 8기, 최고위원, 제8대 국회의원	조작 발표. 조작 수사 지시 (5·16쿠데타/동백림사건)	몰
이용택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과장	중정 6국장, 제11·12대 국회의원	고문조작 주도	생
서주연	서울지검장	부산지검장, 밀수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 조작에 공안부 검사들이 반발했으나 기소강행	몰

정명래	서울지검 형사3부검사	중앙정보부 제5국 부국장, 법무연수원장	담당 검사가 기소거부한 것을 대신 기소하고 중정 5국 부국장으로 발탁	몰
신직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법률특보	중앙정보부 조작에 공안부 검사들이 반발했으나 기소 강행	몰
윤종원	중앙정보부 제5국 대공수사관	안기부 대공수사국 부국장	고문조작 실행	몰
한옥신	서울지검 차장검사		고문논란에도 증거 없이 무리한 기소 강행 (기소 13명중 11명 무죄)	몰
한일회담·협정 전후 내란조작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박영수	치안국장	서울시장, 대통령 비서실장(전두환)	불꽃회 사건, 고려대 구국투쟁위 사건, 한독당 사건 등 내란으로 조작	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불꽃회 등 내란 조작	몰
신직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법률특보	학생들을 내란죄로 기소	몰
한옥신	서울지검 차장검사	대구지검 검사장, 대검 공안부장	한독당내란사건 기소(모두 무죄) 김홍일 등 예비역 장성 명예훼손 사건에 내란선동 추가 기소(보석)	몰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홍필용	중앙정보부 제5국 국장	육군법무감, 정보학교장	불법 구금, 고문조작 지휘	몰
박종연	(2차)서울지검검사 (3차)중정5국부국장	변호사	학생시위에 내란죄 적용 3차 때 판사들 미행, 협박	생
이종원	서울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차관, 장관	3차 민비연 7명 간첩죄 등 기소	몰
이용택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과장	중앙정보부 제6국장, 제11·12대 국회의원	고문조작 주도	생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황진호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심 무죄 사형 구형	생
김기홍	서울형사지법 재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판사	고문조작된 조서 증거 채택 사형, 재심무죄	생
사법 파동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김종건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법무부차관, 대통령 사정수석, 법제처장	위헌 판결 보복으로 판사들에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몰
이규명	위와 같음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위와 같음	몰
최대현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수사국장, 관세청장, 제10대 국회의원	위헌 판결 보복으로 판사들에 구속영장 청구 지시	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정기승	서울형사지법 형사7부 재판장	서울형사법원장, 대법원 판사	내란음모 인정(목적성, 집합성, 명확성, 위험성 요건 무시)	생
이후락	중앙정보부 부장	대통령비서실장, 제10대 국회의원	고문·내란 조작 지시	몰
박종연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직전까지 중앙정보부 제5국 부국장)	불법감금·고문 인지하고도 기소, 참고인 폭행·협박	생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1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정용식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유류품 조작 방조, 참고인 위증죄로 구속하여 위증케 함	생
남산 부활절 예배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김교련	보안사 대공처장	합참 정보처장, 준장	고문 조작 지휘	몰
강창성	보안사령관	해운항만청장, 국회의원	고문 조작 지시	몰
문호철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서울고검 검사	조사시 수사관 입회	몰
김형기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 재판장	대법원판사	고문사실 불인정, 증거채택	몰
김대중 납치 사건 (5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이철희	중앙정보부 정보차장보	중앙정보부 제2차장, 유정회 의원, 이철희·장영자 사건	납치 지휘 총괄	몰
윤진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국 단장	중앙정보부 관리관(1급)	납치 현장 지휘	
김기완	주일공사 (중정일본책임자)	공군정훈감, LA흑색요원	현장 총괄 책임자	몰
김동운	주일 대사관 일등서기관	본명 김병찬	공작계획서 작성, 납치 행동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제10대 국회의원	납치 지시	몰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안경상	중앙정보부 제5국장	인천지검장, 감사원사무총장	고문수사 지휘, 고문치사 은폐	생
차철권	중앙정보부 제5국 10과 수사관		수사 주무, 폭행, 고문 주도, 고문치사 은폐 실무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	검찰총장, 내무장관, 법무부장관	"간첩이며 자살했다"고 허위발표	몰
문인 간첩단 사건 (1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김교련	보안사령부 대공처장	합참 정보처장, 준장	수사권 없는 민간인 수사 지휘 "간첩사건을 만들어보라" 지시	몰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사건 (19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조일제	중앙정보부 보안차장보	주일공사, 제10·11대 국회의원	고문조작 지휘	생
윤종원	중앙정보부 제6국 수사계장	안기부 5국 부국장	고문조작 수사	몰
손중덕	대구 남부서 정보3계 순경, 중정파견		인혁 관련자들에 잔인한 고문	
박재명	경북도경 정보과 경사, 중정파견		인혁 관련자들에 잔인한 고문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사건 허위 발표, 고문 조작 지휘	몰
문호철	비상군법회의 검사	서울고검 검사	중정 파견되어 수사	몰
강철선	비상군법회의 검사	전주지검 부장검사	임규영 전기고문 입회	생
박희동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 재판장, 육군 중장	3군사령관, 대장, 남해화학 사장	민청학련 관련자에 증거 없이 사형선고	생
박현식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심판부 재판장, 육군 중장	최고위원, 청와대 사정보좌관, 치안국장	민청학련 관련자에 증거 없이 사형선고	생
유병현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 재판장, 육군 중장	국보위, 합참의장, 주미대사	전 대통령, 성직자 등 사회 인사들에 증거 없이 중형 선고	생
이세호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장, 육군 대장	육군 참모총장,	인혁당 8인 증거 없이 사형선고	몰
민복기	대법원장	대법원장	사형확정, 사법살인 책임	몰

이병호	대법원 판사, 주심	대법원판사, 1976 현직에서 사망	상동	몰
서종철	국방부장관	육참총장, 대통령 안보특보	군법회의 관할관으로서 사형 확인, 8인 사형집행 명령	몰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선포 및 8인 사형지시	몰
김치열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사법처리 지휘	몰
이용택	중앙정보부 제6국장	제11·12대 의원	고문조작 수사 지휘	생
최명부	비상군법회의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고문 수사 및 그 결과를 기초로 기소	몰
이규명	비상군법회의 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고문 수사 및 그 결과를 기초로 기소	몰
수도권 선교자금 횡령 조작 사건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이재권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대전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판사동향을 중정에 보고, 국가형벌권 남용	몰
이용택	중앙정보부 제6국장	제11·12대 국회의원	NCC 총무 등 공격 사주, 고문 수사, 재판부 미행 협박	
강제 전향 및 사회안전법 제정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황산덕	법무부장관 (신직수 후임)	문교부장관, 불교진흥원 이사장	사회안전법 제정 실무 총괄	몰
배응찬	대전교도소 부소장	(서북청년단)	폭력적 강제전향 현장책임자	
강철형	광주교도소 교무과장	정읍 관음사 주지	폭력적 강제전향 현장책임자	
신직수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법률 특보	강제전향 지시 및 지휘	몰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서정각	서울지검장	광주고검 검사장	"민중봉기 유도, 정부전복" 허위발표	몰
정치근	서울지검 공안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허위 발표에 의거한 공소 유지	생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엄벌 지시	몰
이용택	중앙정보부 제6국장	제11, 12대 국회의원	재야인사들의 민주화요구를 국가변란을 획책한 것으로 조작	생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조준웅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공안1부장, 인천지검장	"WCC는 KGB가 침투" "반공은 맹목적이어야"	생
진상구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1과장		수사 책임자. 단순 모임을 용공조직으로 고문조작. 석방청원서 수사	몰
부마항쟁 진압과정 중 인권유린 사건 (5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	국회외무위원장, 4선 국회의원	10·17 계엄의결 전 병력 동원지시, "캄보디아에서 300만 죽여"	몰
최창림	마산경찰서장		시위대 사제 총기 휴대했다고 허위 기자회견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계엄법상 선포요건이 안 됨에도 계엄령 선포. "부산 같은 사태 생기면 내가 발포 명령"	몰
김근수	중앙정보부 안전국장	안기부 제1차장, 보훈처장, 국회의원, 상주시장	부산에 수사관 파견하여 합수단 실질적 지휘, 남민전 관련 조작 시도	생
권정달	부산보안부대장 합동수사단장	민정당 창당주도, 민정당 사무총장, 3선 국회의원	합수단의 고문, 가혹행위 지휘	생

전두환 정권 시기 고문조작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 (국보위) 상임위원장	민정당 총재, 대한민국 대통령	사건 조작을 주도한 합수부와 고문 수사를 수행한 중정의 최고책임자	생
이학봉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보안사 대공처장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안기부 제2차장, 제13대 국회의원	정치인과 학생들에 대한 체포·조사 총지휘, 내란음모 사건 조작 지휘,	몰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	민정당 창당 주도, 민정당 사무총장, 3선 국회의원	이학봉 등과 함께 정치인과 학생 검거를 위한 모의 및 준비	생
삼청교육대 사건 (8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김만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 위원장(중정감찰실장)	조달청장 민정당 국책조정위원	삼청계획 입안, 국보위 관련 업무 주관	생

서완수	국보위 사정분과위원 (육군 대령)	기무사령관 1군 부사령관	삼청계획 입안 과정에 참여	생
이춘구	국보위 사정분과위원 사회정화위원장	제11~14대 국회의원 내무장관, 국회부의장	삼청계획 집행 및 삼청교육 주관	몰
정경식	국보위 사정분과위원 (부장검사)	대검 공안부장 헌법재판관	삼청계획 입안 과정에 참여	생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	민정당 총재, 대한민국 대통령	국보위 설치해 '삼청계획' 승인, 계엄사에 하달	생
허삼수	국보위 사정분과위원 (보안사 인사처장)	청와대 사정수석 제14대 국회의원	삼청계획 입안 과정에 참여	생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23대) 겸 계엄사령관	교통부장관 주택공사 이사장	'불량배소탕 및 순화교육 준비 지침' 하달, 계엄포고 13호 발동	생
주영복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군부대에 삼청교육대 설치 지시	몰
10·27 법난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김충우	보안사 대공처장 계엄사 합수단장	재마창의령직장연합 향우회 회장	45작전 수사 업무 총괄	
노태우	보안사령관 계엄사 합수본부장	13대 대통령	조계종 승려들을 연행해 고문 수사한 45작전 지시	생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교통부 장관, 주택공사 이사장	80년 10월30일 군경 동원해 전국 사찰 일제 수색 명령	생
무림·학림 사건 (6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유흥수	치안본부장(치안감)	제12~16대 국회의원 주일본대사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확대	생
김경회	서울지검 공안부장	부산고검장, 형사정책연구원장	학림 수사 및 기소 지휘 고문 조작 조서로 기소	몰
허정훈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관위원, 헌변 회원	학림 1심재판장, 고문 조작 조서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생
박처원	치안본부 대공분실장 (경무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무림·학림 사건 고문 수사	몰
이근안	치안본부 수사관 (경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고문기술자	무림·학림 사건 고문 수사 (학림 사건 박문식 고문 등)	생
김수현	치안본부 수사관 (경위)	경기도경 대공수사 1반장	학림 사건 고문 수사 (학림 사건 이태복 고문 등)	생
부림 사건 (5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최병국	부산지검 검사	대검 공안부장, 중수부장, 제16~18대 국회의원	학생, 교사, 회사원들을 고문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 기소	생
고영주	부산지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방문진 이사장	고문 조작한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 기소	생
이덕만	부산시경 수사관(경감)		고문 수사 실무 책임	
송성부	부산시경 수사관(경위)		고문 수사	
이규홍	부산시경 수사관		고문 수사	
아람회·한울회 사건 (1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정용식	대전지검 부장검사	광주순천지청장, 서울동부지청장	고문으로 용공 조작된 사건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생
녹화 사업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박준병	보안사령관	4선 국회의원, 민정당 사무총장	녹화사업 총괄	몰
최경조	보안사 대공처장	보안사 참모장 (소장)	녹화사업 계획수립	생
서의남	심사과장(중령)		녹화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녹화사업 주도, 증거 인멸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녹화사업 계획수립 지시	생
오송회 사건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신갑생	전북도경 수사관	고문기술자	전주 대공분실 고문 수사	생
이재화	광주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항소심 재판장. 1심보다 국가보안법 위반 중형 선고	생
김근태 고문 사건 (8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이근안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고문기술자	전기고문	생
윤재호	대공수사 1과장	남부서(현 금천서) 경찰서장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지휘, 국회 청문회 위증죄 피소	생
김수현	대공수사 1반장(경감)		물고문	생
백남은	대공수사 2반장(경정)		물고문	생
김원치	서울지검 검사	서울고검 차장, 대검 감찰부·형사부장	고문 조작 사건 기소	몰

서 성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판사	안기부 대책에 따라 공판 진행 및 판결	생
박처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경무관)	치안감	남영동팀 총책	몰
정형근	안기부 대공수사국 수사2단장	안기부 1차장, 제15~17대 국회의원	검찰 및 경찰에 고문 지시와 은폐 조작 총지휘	생
부천서 성고문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문귀동	부천서 수사관(경장)		강제추행(성고문)	
서동권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안기부장, 헌변 회원	검찰이 사건 진상 밝혔으나 축소 은폐 지시	생
이철환	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재정신청 기각	생
장세동	안전기획부장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축소 은폐, 관계기관대책회의 주도	생
서노련 사건 (1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이종구	국군 보안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노동운동가들을 불법 연행 구금하고 고문	생
애학투련(건대 농성) 사건 (6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최상엽	대검 공안부장, 통합수사본부장	대검 차장, 법무부장관	대량 구속 수사 지휘. 사건 가담자 등급과 구속범위 마련	생
최 환	서울지검 공안2부장, 실무수사본부장	대검 공안부장, 부산고검장	대량 구속 수사	생
장세동	안전기획부장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학생 집회를 공산혁명분자 난동 매도해 강경대처, 공안정국 조성.	생
이해구	안전기획부 1차장	치안본부장, 내무장관 제13~16대 국회의원	학생들을 좌경용공으로 몰아 사회불안과 공안정국 조성 주도	생
강민창	치안본부장	치안총감, 6·25참전 유공자회 상임이사	학생들 자진해산 불허하고 대학 폐쇄해 감금, 강경진압, 직권남용	생
서동권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안기부장, 대통령 정치특보	대량 구속 수사 지휘 책임. 총 1,288명 구속 송치	생
반제동맹 사건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한종철	경기도경 대공분실 수사관		고문 수사	
이근안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노동운동가들을 불법 연행, 고문 수사. 89년 독직폭행 혐의로 피소	생
제헌의회 그룹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박희방	안기부 대공수사국 수사관		고문 수사	
장세동	안전기획부장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고문 수사 책임	생
전희찬	안전기획부 1국장 (대공수사국)	국가보훈처 차장 국가안보정책연구소장	고문 수사 지휘	생
김택수	서울지검 공안1부장	서울고검 차장, 부산고검장, 형사정책연구원장	고문 주장 묵살하고 중형 구형	생
심진구 고문 사건(6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여우· 불독· 곰· 독사	안전기획부 수사관	 ▲ 故人이 된 심진구 씨가 2005년 그린 고문수사관 4명의 몽타주. 위 왼쪽부터 여우·불독·독사·곰이란 이름을 붙였다.		
장세동	안전기획부장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책임자.	생
정형근	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2단장	안기부 1차장, 국회의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고문수사 지휘	생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7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박처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치안감	은폐 지시, 교사	몰
강민창	치안본부장	치안총감	황적준 박사에게 허위감정 의견 제출 직권남용, 사인 은폐 직무유기	생
이해구	안기부 1차장	치안본부장, 내무부장관, 국회의원	관계기관대책회의 주도 사건 은폐 지시, 교사	생

유정방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장(경정)		은폐 지시, 교사	
박원택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 2계장(경정)		은폐 지시, 교사	
조한경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 2계 1반장(경위)		물고문 등 고문치사	
강진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 2계 4반원(경사)		물고문 등 고문치사	
윤태식(수지 김 간첩조작) 사건 (6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전희찬	안전기획부 1국장 (대공수사국)	국가보훈처 차장 국가안보정책연구소장	살인 사건 은폐 및 간첩 조작	생
정주년	안전기획부 3국장 (국제1국)	외무부 본부대사 YTN 사장, 관동대 교수	살인 사건 은폐 및 간첩 조작	생
엄익준	국가정보원 2차장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대표, 안기부 3차장	2000년 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를 압력 행사해 중단시키고 은폐	몰
김승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국정원	2000년 경찰 내사 중단 압력 및 사건 은폐	
장세동	안전기획부장	대통령 경호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단순살인사건을 '여간첩 남편 납북 기도 사건'으로 조작 은폐 지시.	생
이학봉	안전기획부 제2차장	대통령 민정수석, 제13대 국회의원	피살된 사건 피해자(김옥분, 일명 수지 김)를 여간첩으로 조작	몰
제5공화국 정치판사 (6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안우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 외화 밀반출 사건, 김영삼 정권 당시 대표적인 정치판사로 거론	몰
정상학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수석판사, 대구지법원장	이수근 사형 배석. 김근태 고문경관 재정신청 심리지연으로 고발당함. 문목사 재판시 변호사 없이 재판 강행	몰
박영무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심 배석 판사, 제헌의회 사건, 박종철 고문경관 집유, 유성환 국시논쟁 사건 유죄	생
유태흥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	외압(안기부)에 굴복한 인사파동 등 5공 시기 사법부 권위 추락에 대한 총체적 책임	몰

손진곤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형사지법 수석판사, 안기부 1차장	청와대(민정비서관), 안기부(1차장)에 파견되어 권력의 시녀 노릇, TK출신의 정치판사	생
이영범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법원장	한승헌 반공법 위반 사건,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김낙중 사건, 안기부원 흑색선전 사건 등 시국 및 간첩사건 권력에 굴종	생

노태우 정권 시기 고문조작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서경원 방북과 공안정국 조성 사건 (8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안응모	안전기획부 1차장	치안본부장, 내무부장관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불법 연행과 고문 수사 지휘한 방북사건 책임자	생
김군성	안전기획부 수사관 인천분실에서 파견	고문기술자	고문 수사 (서경원 의원 방북 방양균, 민미련 사건 차일환 고문)	
안종택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	대검 중수부 과장 서울북부지검장	방양균 고문 피해 주장 묵살. 독직폭행 혐의로 피소	생
김학의	서울지검 공안2부 검사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민미련 사건 검사	생
서동권	안전기획부장	법무부차관, 검찰총장, 대통령 정치특보	89년 방북사건 수사 총책임자로 공안정국 조성, 사건 정치적 이용	생
정형근	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장	안기부 1차장, 제15~17대 국회의원	고문 수사 (서경원 의원 방북 방양균, 민미련 사건 홍성담 고문)	생
정구영	노태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서울지검장, 광주고검장, 검찰총장	방북 사건 확대해 공안정국 조성, 정치적 이용(서경원 의원 방북 김대중 평민당 총재 기소)	생
김기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15~17대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방북 사건 공소 지휘하면서 공안정국 조성 주도	생
사노맹 사건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서동권	안전기획부장	검찰총장, 대통령 정치특보, 변호사, 헌변 회원	수사과정에서 불법연행, 고문, 변호인 접견 제한 등 위법, 인권침해	생

정형근	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장	안기부 1차장, 제15~17대 국회의원	고문 수사. 피해자들이 알몸 구타나 성적 모욕,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 증언	생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10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협의 내용**	**생몰**
정해창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지검장, 방송위원, 법무부 장관, 헌변 회원	정국 반전을 위한 당정회의와 관계기관대책회의 주도	생
정구영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대통령 민정수석, 헌변 소속	분신 배후 철저 조사 지시 등 사건 조작 지휘	생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서울고검장, 대법관, 박근혜후보 법률지원단장	수사 지휘, 사건 조작	생
신상규	서울지검 강력부 주임검사	광주고검장, 동덕여대 이사장	자살방조 공소제기, 1~2차 필적감정 의뢰 등 수사, 사건 조작	생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국과수	뇌물 받고 유서필적 허위 감정, 증거 조작.	
노원욱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판사, 헌변 회원	1심재판장, 검찰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강기훈 징역 3년 선고	생
임대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춘천·대전지법 법원장, 특허법원장	항소심 재판장, 국과수 필적 허위감정 의혹에도 유죄 인정	생
박만호	대법원 형사3부 주심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직자윤리위원장	상고심 재판장, 상고 기각. 형법상 자살 관여죄 인정 판례 남김	생
서동권	안전기획부장	법무차관, 검찰총장 대통령 정치특보	당정회의와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여해 사건 조작	생
김기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제15~17대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유서대필 사건을 정치적 이용해 공안정국 조성 책임	생
중부지역당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협의 내용**	**생몰**
이상연	안전기획부장	안기부 1차장, 국가보훈처장, 내무부장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수사결과 정략적 이용	생
성용욱	안전기획부 1차장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국세청장, 평통 사무차장	수사과정 인권침해, 수사결과 정략적 이용. 국회 국방위에서 정치인 관련 첩보 보유 발언	생
정형근	안전기획부 수사차장보	안기부 1차장, 제15~17대 국회의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고문 등 인권침해 (피의자 양홍관 고문 등)	생

간첩조작 사건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이수근 간첩 조작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최대현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검 수사국장, 관세청장, 제10대 국회의원	탈출 시도 이수근을 간첩으로 조작 기소하여 사형시킴	몰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	중앙정보부 부장	사건은폐, 조작	몰
방준모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이수근 감시, 권총으로 협박	몰
박노수·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모성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국장		고문 수사	
전상석	제1심 재판장	대법원 판사	1심 재판장으로 사형 선고하여 집행하였으나 조작으로 밝혀짐	
최대현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검 수사국장, 관세청장, 제10대 국회의원	수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 배석을 시키는 등 심리적 강압 가함	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사건은폐 및 조작	몰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사건 (40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이한동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법 판사, 제11~13대 국회의원,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김재화사건(1967), 오성재사건(1973), 김한수·이종남사건(1973), 검은 10월단사건(1973)	생
양승태	서울형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김동휘사건(1975), 이원이사건(1975), 장영식사건(1975), 조득훈사건(1975), 강희철사건(1986), 오재선사건(1986)	생
김황식	서울형사지법판사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강우규 사건, 유영수, 김정사 사건(1977)	생
권종근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김영작사건(1974), 최철교사건(1974), 김승효사건(1974)	몰
윤영철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장	오성재사건(1973) , 박선정사건, 귀화 일본인 나쓰야 사건, 김장현사건	생

이재훈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성남지원장	이장형사건(1983), 윤정헌사건(1984), 조일지사건(1984), 구명서사건(1985)	생
김택수	서울지검 검사	부산고검장	이철사건(1975) 이동석사건(1975) 박순애사건(1977) 신귀영사건(1980)	생
서익원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차장, 마산지검장, 수원지검장	김동휘·강종건, 김종태, 이원이, 이동석, 조득훈, 이수희등 재일교포간첩사건(1975)	몰
이사철	서울지검 공안부 주임검사	서울남부지청 부장검사, 제15·18대 국회의원	이장형사건(1983), 구명서사건(1985)	생
이창우	서울지검 검사	대검공안부장 서울지검장	동백림사건, 최창일사건(1973), 울릉도사건, 고려대사건, 김규남사건	생
정진규	서울지검 검사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허철중사건(1984), 조일지사건(1984), 이동기사건(1986)	생
최명부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진두현사건(1974), 김오자사건(1975), 허경조사건(1975)	몰
정낙중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관, 주일대사관 파견		유영수 김정사 사건 당시 영사증명서 허위작성	
안필준	국군보안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 보사부장관	윤정헌사건(1984) 등 8건	몰
고병천	보안사 대공처 수사관	대공처수사과 수사2계반장	강종헌사건(1975), 유영수·김정사사건 (1977), 김태홍사건(1977), 이헌치사건(1981), 이종수사건(1982), 박박사건(1982), 윤정헌사건(1984)	생
장병화	보안사 수사관		재일교포 간첩 사건(김정사, 윤정헌, 강종헌, 김상순)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한경순	중앙정보부 수사관		재일교포 간첩 사건(오진영, 김동휘)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이권섭	중앙정보부 수사관		재일교포 간첩 사건(김동휘)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김종한	중앙정보부 수사관		재일교포 간첩 사건(오진영)	몰
이순신	안기부 수사관		차풍길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우종일	보안사 대공3과 과장	109보안부대장	불법구금, 고문가혹행위 / 이종수, 김태홍, 박박, 서성수, 허철중 윤석양이병 민간인 사찰	
오희명	보안사 대공3과 과장	307보안부대장	이동석사건(1975), 이수희사건(1975), 유영수·김정사사건(1977), 조신치사건 등	
조진제	제주지검 검사	통영지청장	김평강사건(1981)	생
진상구	중앙정보부 수사5계 계장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1과장(1979)	1975년 재일교포간첩사건(11·22사건)	몰
추재엽	보안사 대공과	양천구청장	윤정헌사건(1984년), 유지길 사건	생
박준병	국군보안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	김태홍 사건 등 19건	몰
이종구	국군보안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 국방장관	유지길 사건 등 13건	생
허정훈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종태사건(1975), 허경조사건(1975), 김원중사건(1975), 이동석사건(1975), 이철사건(1975), 이수희사건(1975), 강우규 김추백사건(1977), 박순애사건(1977), 유영수 김정사사건(1977)	생
최병국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제16~18대 국회의원	김장길사건(1981년), 이종수사건(1982년)	생
이재권	서울지검 검사	대전지검 차장검사	고병택사건(1974년), 진두현 사건	몰
정경식	서울지검 검사	헌법재판관	김영작사건(1974년), 김승효사건(1974년), 유영수 김정사 사건(1977년)	생
정용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장	구명서사건(1985), 구명우사건(1986)	생
김근수	중앙정보부 수사관	안기부 제1차장, 보훈처장, 국회의원, 상주시장	사와모도 산지(한국명 '한삼차') 사건(澤本三次, 1973)	생
차철권	중앙정보부 수사관	중앙정보부 제5국 10과 수사관	울릉도간첩사건(이성희 관련), 최종길교수사건	
노신영	안기부장	국가안정기획부 부장	차풍길사건(1982), 오주석사건(1983)	생
김기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1975년 재일교포간첩사건(11·22사건) 등	생
서성	서울지검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고창표사건(1983), 허철중사건(1984), 강희철사건(1986), 김양기사건(1986)	생

이덕만	부산시경 대공분실 수사팀장		신귀영사건(1980년), 부림사건	
송성부	부산시경 대공분실 수사관(경장)		신귀영사건(1980년), 부림사건	
이규홍	부산시경 대공분실 수사관(경사)		신귀영사건(1980년), 부림사건	

납북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 (20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박내조	전북도경 대공분실 계장 / 과장	전북도경분실대공과장, 김제경찰서장	백남욱·강대광사건 등. 불법감금, 고문조작 수사 및 지휘	몰
박지원	전북도경 수사관	전북도경 대공분실장	백남욱·최만춘사건 등. 불법감금, 고문조작 수사 및 지휘	몰
남궁 길영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	수사관	최만춘·임봉택(최춘환) 사건 등 불법감금, 고문조작	몰
백용기	해군목포지구 보안부대장(해군소령)	보안부대장	박월림사건 등. 불법구금, 고문조작 수사 지휘	
김용성	전주보안대 대공과장	보안사 3처방첩2과장	서창덕, 정삼근 사건. 불법구금, 고문조작 수사지휘. '청명계획' 입안. 김병진의 『보안사』	생
이우철	전주보안대 수사관	상사	서창덕, 정삼근 사건 불법감금, 간첩조작	?
이재준	전주보안대 수사관	준위	서창덕, 정삼근 사건 등 불법감금, 간첩조작	?
경무현	경기도경 수사관	경장	황용윤, 안장영, 김성학 사건 등. 불법감금, 고문조작	몰
서재두	강릉107보안대 수사계장	수사관	김용태, 이병규 사건 등 불법감금, 고문조작.	?
김남옥	순천지원, 정읍지원 검사(1심)	광주지검 부장검사, 전주지검차장	김성학·이청일, 태영호, 김양기 간첩사건 등 5건의 재심무죄 사건	생
김성남	서울지검 인천지청 검사(1심)	청주지청장, 변협 사무총장	정규용, 안희천, 안장영 사건 등 담당 검사	생
이희권	전주지검 검사	서울형사지검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김이남 사건(1심)/ 김춘삼, 정삼근 사건(2심) 검사	생
한옥신	대검찰청 검사	대구지검 검사장, 대검 특수부장	납북어부 강경처벌 지침. 2회 이상 납북귀환어부에 법정최고형(사형) 구형 지시(1968.12.24)	몰

한환진	대법원 형사부 주심	대법관	납북어부에 간첩죄 판례. 신평옥사건 1,2심 간첩죄 무죄선고 파기환송, 간첩죄 적용(1973.9.12)	몰
최병규	서울지법 인천지원 판사	인천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안희천 사건, 김흥수(무기선고), 안장영 사건(사형선고) 1심재판장	생
강철선	서울지검 인천지청 검사	광주고검 검사, 14대 국회의원(민주당)	김흥수 사건 1심검사(사형구형, 무기선고)	생
신상규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대검중수2과장, 광주고검장	서창덕 사건 검사. 강기훈, 권영해, 북풍공작(아말렉) 사건 등	생
최병국	춘천지검 강릉지원 검사	대검공안·중수부장. 국회의원(3선)	윤질규 사건 수사검사. 부림 사건 등 다수의 공안 사건	생
이근안	경기도경 대공분실 수사관	경감	정규용, 오형근, 안희천, 안장영, 김흥수, 안정호, 김성학 사건 등	생
신갑생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	경장	강대광 사건 수사관. 오송회 사건 등. 불법감금, 고문조작	생

월북자 가족 간첩조작 사건 (25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이치왕	중앙정보부·안기부수사관		석달윤/김정인 사건과 박동운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강충선	안기부수사관		박동운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심상은	안기부수사관		박동운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임동구	안기부수사관		박동운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이상귀	안기부수사관		박동운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유병창	중앙정보부·안기부수사관		석달윤/김정인 사건과 박동운 사건, 송씨 일가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이서우	중앙정보부수사관		석달윤/김정인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성종환	안기부수사관		송씨 일가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박영길	중앙정보부·안기부수사관		석달윤/김정인 사건과 박동운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변진우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차장검사	석달윤/김정인 사건에서 강압수사; 부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형 등 중형 구형	몰

안강민	서울지검 검사	대검 공안부장, 서울지검 장	박동운 사건 강압수사; 부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형 등 중형 구형	생
임내현	인천지검 검사	광주고검 검사장, 19대 의원	정영 사건에서 강압수사; 부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형 등 중형 구형	생
임휘윤	서울지검 수사 검사	대검찰청 공안1과장, 부산고검 검사장	송씨 일가, 오주석 사건, 최양준, 박동운 사건, 학림사건	생
김경한	서울지검 수사 검사	법무부 장관	송씨 일가 사건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사실 무시, 학림사건	생
오병선	1차 파기환송심(고법)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송씨 일가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유죄, 윤정헌 사건, 허철중 사건, 김광호 사건, 정영 사건	몰
김석수	재재 파기환송심 판사(서울고법)	대법원 판사, 국무총리	송씨 일가 사건에서 재재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 확정, 오주석 사건, 이종수 사건	생
김형기	재재 상고심 (대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 대법원 판사	송씨 일가 사건에서 불법구금 고문사실과 검찰에서의 자백 불인정, 유죄 판결 확정, 울릉도 사건, 한삼차 사건	
가재환	대법원장 비서실장	사법원수원장,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안기부 조정에 따라 판결에 영향력 행사	생
노승두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석달윤/김정인 사건에서 증거재판주의에 반하여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생
최종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석달윤/김정인 사건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1심 판결을 유지	생
김헌무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 대구지법 법원장	박동운 사건에서 사형 선고, 김태홍 사건 // 심한식 간첩 사건 무죄, 윤노파 살해사건 고숙종 씨 무죄	생
홍종수	전향 남파간첩으로서 경찰 보안부서 근무	서울시경 대공전략연구소, 공안문제연구소 등에 근무	함주명 사건에서 왜곡·과장된 내용의 진술조서 작성, 함주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	
김군성	안전기획부 인천지부 수사관		정영 사건, 홍성담 사건 불법구금 고문수사	
정명래	서울지검 공안부장	중정 5국 부국장, 광주지검 검사장	울릉도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1차 인혁당 사건	몰
윤종원	안기부 1국 1단 수사3과장	중앙정보부 6국 과장, 수지 김 사건 수사단장	박동운 사건에서 피의자 불법구금과 고문	몰

부정선거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3·15 부정선거 (2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이기붕	부통령당선자	제3~4대 민의원 의장 제5대 부통령 당선	부정선거 총괄	몰
최인규	내무부장관	제4대 국회의원, 교통· 내무부장관	부정선거 기획·총괄 / 사형(집행)	몰
이강학	치안국장	고려통상회장	경찰 동원한 부정선거(1심 사형)	몰
한희석	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	국회부의장, 진양화학사장	부정선거 기획	몰
박용익	자유당 총무위원장	제3~4대 국회의원	불법선거자금 조달	몰
임흥순	서울시장	서울시장	부정선거자금살포	몰
송인상	재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수출입은행장	부정선거 기획 6인위원회 위원	몰
이성우	내무부차관	내무부차관, 치안국장	부정선거공모	몰
최병환	내무부 지방국장	내무부 지방국장	투표결과조작	몰
이존화	자유당기획위원	제3~4대 국회의원	부정선거기획	몰
조 순	자유당기획위 선전위원장	제2~4대 민의원, 곡성실업사장, 전분협회 이사장	부정선거 기획	몰
임철호	자유당 당무위원	국회부의장	부정선거기획	몰
곽의영	체신부장관	제2~4대 민의원, 임광토건 및 대성공업 회장	부정선거 기획 6인위원회 위원	몰
김영휘	한국은행 부총재	산업은행총재, 한국화약고문	부정선거 자금 조달	몰
배제인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조사부, 문창물산 회장	부정선거 자금 조달	몰
김영찬	산업은행 총재	재무차관, 학교법인 연세재단 감사	부정선거 자금 조달	몰
김진형	한국은행 총재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 사장	부정선거 자금 조달	몰
구용서	상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부정선거 자금 조달	몰
김일환	교통부장관	육군 준장, 내무부장관, 한국전력사장	부정선거 기획 6인위원회 위원	몰
박만원	선거사무장	제2~4대 국회의원	부정선거기획	몰
이중재	자유당기획부위원장	재무부장관	부정선거 자금 조달	몰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부정선거 총괄	몰
장경근	자유당 선거대책위원	내무부장관, 제3~4대 민의원	부정선거기획, 경찰동원, 일본 도주	몰

이근직	농림부장관	내무부장관	부정선거모의조작	몰
4·19 시위진압과 발포 사건 (5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	경호실장 역할, 경무관	경무대 앞 발포명령(사형: 집행)	몰
유충렬	서울시경 국장	충렬학원, 벽성대 설립	경무대 앞 발포 실무책임(1심 사형)	몰
백남규	서울시경 경비과장	경무대서 사찰계장	경무대 앞 발포	몰
박종표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일제헌병	마산시위 발포, 김주열 사체유기	몰
홍진기	내무부장관	법무장관,중앙일보사장	서울시내 일원 발포명령(1심 사형)	몰
6·8 부정선거(1967년 제7대 총선) (7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엄민영	내무부장관	주일대사, 참의원	부정선거 실무총괄집행	몰
양달승	부정선거 당선자	청와대비서관	가장 심한 부정선거	몰
정일권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회의장	부정선거 정부 측 책임자	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부정선거 기획	몰
김종필	공화당의장	국무총리	부정선거 당 측 책임자	몰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	무임소장관	부정선거 당 측 실무책임자	몰
이후락	대통령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부정선거 청와대 측 책임자	몰
4·27 부정선거(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9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강창성	중앙정보부 보안차장보	보안사령관, 항만청장	선거자금살포	몰
백두진	국무총리	국무총리	부정선거 정부측 총 책임자	몰
박경원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선거대책관계회의 구성원	몰
백남억	공화당 의장	공화당 의장	선거대책관계회의 구성원	몰
김성곤	공화당 재정위원장	공화당 재정위원장	선거대책관계회의 구성원	몰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	무임소장관	선거대책관계회의 구성원	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선거총괄기획	몰
신직수	검찰총장	중앙정보부장	선거대책관계회의 구성원	몰
김정렴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	선거대책관계회의 구성원	몰
1992년 대통령선거 초원복집 사건 (5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정홍원	서울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장,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국무총리	사건 수사 지휘 사건의 본질을 부정선거보다 불법도청으로 변질	생
김진태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차장 검찰총장	사건 담당 검사, 도청 관련자들에게 실형 구형	생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제15~17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부정선거 모의 주도, 지역감정 조장 발언	생
정경식	부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헌법재판관	부정선거 모의에 가담	생
박일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장	부정선거 모의에 가담	생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행위 (10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장	대선 개입 및 여론 조작 지휘. 정치 활동 금지 위반	생
연제욱	국군 사이버사령관		대선 개입. 선거전 댓글 작성 등 여론조작 지시	생
옥도경	국군 사이버사령관		대선 개입. 선거전 댓글 작성 등 여론조작 지시	생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대선 개입. 심리정보국과 국익정보실 지휘	생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대선 개입. 국정원 댓글 및 여론조작 지휘	생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대선 개입. 국정원 댓글 및 여론조작 지휘	생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방해, 압력 행사	생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지연 및 방해 지시	생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축소 및 진상 은폐 기도	생
김진태	검찰총장	검찰총장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축소 및 진상 은폐 방조	생

언론자유 침해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경향신문 폐간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협의내용**	**생몰**
전성천	공보실장	목사, 기독교방송 사장	폐간 실행	몰
이기붕	민의원 의장	부통령	경향신문 폐간 지시	몰
홍진기	법무부장관	법무장관, 중앙일보회장	폐간 지휘	몰
임철호	자유당조직부장, 국회의원	농림장관, 국회 부의장	폐간 주도	몰
민족일보 폐간 및 조용수 사법살인 사건 (1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협의내용**	**생몰**
박창암	혁명검찰부장	월간 자유 발행인	민족일보 폐간, 발행인 조용수 사형	몰
부산일보 등 강탈 사건(5·16장학회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협의내용**	**생몰**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 (박정희 동기)	부산일보 사장, MBC 사장, 정수장학회 이사	강탈 계획 수립, 김지태 압박	몰
박용기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강탈 집행(김지태 비리 수사)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대한민국 대통령	강탈 지시	몰
신직수	최고회의 의장 고문	중앙정보부장	강탈 지휘	몰
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협의내용**	**생몰**
방준모	중정 감찰실장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대출금 조기 환수 등 이준구 협박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이준구가 경향신문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김형욱에 지시	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강제매각토록 압력 지휘	몰
최대현	서울지검 검사	대검 수사국장, 관세청장, 제10대 국회의원	강제 매각 강요위해 간첩죄로 억지기소	
신동아 필화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협의내용**	**생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사건 지휘	몰
이후락	대통령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수사 청탁	몰

김성곤	국회의원, 공화당 재정위원장	쌍룡그룹 총수	수사 청탁	몰
동아일보 광고탄압 및 기자 대량해직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경력**	**반헌법행위 혐의내용**	**생몰**
양두원	중정 보안차장보	중정보안차장보	실무 집행. 관련부처 공무원을 동원하여 광고 기업에 해약 압력.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사건 지시	몰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사건 지휘(양두원에 지시)	몰
언론통폐합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허문도	국보위 문공분과위원 대통령 정무비서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통일원장관	전두환에 “언론계 정화” 건의하고, 기획, 주도	몰
이상재	보안사 언론검열단 보좌관	대통령 사정비서관, 민정당 사무차장, 국회의원	언론인 해직, 언론기관 통폐합 실무 총괄	생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언론계 정화” 지시	생
보도지침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이원홍	문화공보부장관	한국방송(KBS)사장	보도지침 작성 지휘	생
이경식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장	안기부 언론특보, 공보처차관	보도지침 작성, 배포	생
허문도	청와대 정무비서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통일원장관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인 ‘보도지침’ 작성 지시	몰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사건 분야 집중검토 대상자

안풍 사건(대선자금 안기부 계좌관리 사건)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권영해	안기부장	육군 3군 부사령관, 국방부 장차관	안기부 예산의 15대 총선 여당 선거자금 유용 의혹 당시 기관책임자	생
김기섭	안기부 기조실장 겸 운영차장	삼성전관 전무 민자당 대표 특보	여당 선거자금 제공 당사자, 자금 출처가 김영삼 대통령 대선잔금으로 밝혀짐	생
총풍 사건(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이대성	안기부 해외조사실장	안기부 근무	사건 수사 후 은폐 주도	
권영해	안전기획부장	국방부 장차관	사건 인지하고 수사하지 않은 혐의(국보법 특수직무유기) 피소	생
북풍 사건(안기부 대선개입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박일룡	안기부 1차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장	북풍 공작으로 2년형	생
이병기	안기부 2차장	국가정보원장,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재미교포 윤홍준의 허위 기자회견 조종	생
권영해	안기부장	국방부 장차관	북풍 공작 지휘. 98년 안기부법 및 선거법 위반으로 5년형	생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1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	대전고검장	노조 파괴 위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생
광우병 촛불집회 폭력 진압 사건(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어청수	경찰청장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장	촛불 집회에 물대포, 경찰특공대 투입 등 과잉 진압	생
천성관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명-낙마	시위과정에서 연행된 대부분 시민들을 벌금형 기소 등 사법처리	생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관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 야간집회 관련 집시법 위헌법률심판청구 기다리지 말고 통상 처리 주문.	생

용산참사(용산철거민 과잉진압 사망 사건) (2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제20대 국회의원	공권력 과잉(직권 남용)으로 참사 책임, 국민 주거권 침해	생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수사본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편파 수사로 경찰에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	생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상득 의원 보좌관 지식경제부 2차관	불법 사찰 직권남용	생
이영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	한국노총 금융노조 조직본부장	불법 사찰 직권남용	생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노동부 감사관	불법 사찰 직권 남용	생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8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남재준	국정원장 (원세훈 후임)	육군 참모총장	증거 조작 책임. 중국 정부 출입경 기록 등 공문서 위조	생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간첩 조작, 벌금 1천만원	생
김보현	국정원 5국 기획과장	국정원 3차장	간첩 조작 및 고문 수사	생
권세영	국정원 5국 과장		간첩 조작 및 고문 수사	생
이인철	중국 센양 영사관 영사(국정원)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관	증거조작	생
이문성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전주지검 부장검사	조작 증거로 기소	생
이시원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조작 증거로 기소	생
원세훈	국정원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탈북민 간첩 조작 기소, 간첩 혐의 무죄	생
세월호 구조실패 및 직무유기 사건 (4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제18대 국회의원, 주중국대사	구조 관련 해군(수상구조 통영함) 출동 제지 의혹, 국회 위증 논란	생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제15~19대 국회의원	참사 당일 구조 관련 국민 생명권 보호(헌법 10조) 의무 방기	생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제15~17대 국회의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은폐 지시 의혹, 국회 위증 논란	생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사, 부산고검장, 국무총리	해경 구조 실패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생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3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김기춘	박근혜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제15~17대 국회의원,	법무부 통해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개입, 관련해 여론전 등 대책 주도	생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육군 참모총장	통합진보당 해산 배경인 이석기 의원 등 구성원들의 내란 음모·선동 사건 수사 기소	생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사, 부산고검장, 국무총리	국무회의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 상정,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생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9명)				
이름	**당시 직책**	**대표 경력**	**반헌법행위 혐의 내용**	**생몰**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제15~19대 국회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헌법준수 의무 위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최순실에 특혜 제공, 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법률 위반으로 탄핵되어 헌재 심판중	생
김기춘	박근혜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제15~17대 국회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인사전횡,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 의혹, 국회 위증	생
우병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검 중수1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인사전횡 등 직권남용 의혹, 국회 위증	생
안종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제19대 국회의원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속	생
조윤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변호사, 제18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문체부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의혹, 국회 위증	생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체육대학장	최순실에 문화체육 국정현안 보고 및 인사개입, 한국동계스포츠영재 센터에 삼성 후원 강요 혐의 구속	생
정호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박근혜 국회의원 보좌관	최순실에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과 직권남용 혐의 구속	생
안봉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	박근혜 국회의원 보좌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중	생
이재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박근혜 국회의원 보좌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중	생

별첨 3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 사업[1]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1. 들어가는 말

국가폭력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작업은 이행기의 정의를 세우는 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작업이다.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사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 처벌 작업이 진행되든지, 아니면 회복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 사죄와 용서와 화해가 진전되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처음부터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방기하였다. 그러다보니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자는 없는, 고문당한 사람은 있는데 고문하고 조작한 사람은 없는 그런 이상하기 짝이 없는 작업이 되고 말았다.

사실 국가폭력의 가해자를 기록하는 작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고, 민주정권이 들어선 뒤 만들어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같은 단체가 책임지고 했어야 했던 일이다. 작업의 엄중한 성격도 그렇고 또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미 해체되었고, 민주정권 시기에도 독재부역자 또는 반민주행위자 등 가해자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친박 뉴라이트 인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1 [논문] 한홍구,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경제와사회〉, 2016년 봄호)

이런 작업을 자신의 과제로 삼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정권교체가 되어 과거사재단이 출범하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야당의 분열로 정권교체의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과거사재단이 출범한다 해도 훨씬 더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작업을 뒤늦게 착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은 복잡하지 않다. 그냥 가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숨죽이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들을 법정에 세울 힘은 없고, 또 그들로부터 사과나 고백을 받아내 화해로 향한 길을 열 힘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인정도 고백도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여전히 윽박지르는 저들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2015년 10월 12일 출범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뒤늦게나마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한국사회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고, 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이 불처벌(impunity)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그 다음 〈반헌법행위자열전〉이 편찬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의 경과를 소개한 뒤, 반헌법행위자의 선정기준과 편찬 절차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할 것이다.

2.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1998년 2월 김대중은 30년이 넘는 군사정권과 그 후계 정권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국제사회는 한때 사형수였던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을 1994년 넬슨 만델라의 남아프리카 대통령 취임에 이은 인권의 승리로 보며 크게 경축했다. 만델라는 취임 이듬해인 1995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한국에서 유사한 이름의 위원회

는 김대중의 임기 기간(1998. 2 ~ 2003. 2)에는 설치되지 못했고 2005년 12월에 가서야 설치되었다. 20세기 초반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가 해방과 더불어 분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쟁까지 치른 뒤 군사독재에 시달려야했던 한국의 과거사 정리는 대단히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1945년의 해방, 1960년의 4월 혁명, 1979년의 박정희 피살, 1987년의 6월 항쟁 등과 같이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행기에 정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아파르트헤이트 단일 사안을 다루는 것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불행했던 과거와 관련한 위원회가 20여개가 만들어져야할 만큼 정리해야 할 과거는 복잡했다.

1989년 동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구공산주의 진영에서 실시된 과거청산은 구체제가 갑자기 작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구체제가 자행한 인권침해에 관한 자료는 완벽하게 남아있었고, 이행기 정의를 확립하는 데 대한 사회적 동의 역시 압도적이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한 백인 세력이 더 이상 민족분리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권력을 흑인들에게 이양했다.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만델라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 가해자들에게 일정한 사면을 해주었다. 한국에서 과거청산이 진행된 맥락은 동유럽이나 남아프리카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한국에서 어두웠던 과거에 책임이 있는 세력은 정권만 내주었을 뿐 여전히 막강한 사회적 힘을 갖고 과거청산에 저항했다.

1961년 5 · 16 군사반란의 주모자인 김종필과 손을 잡는 등 구세력의 도움을 받아 집권했고, 김종필을 '민주'정권의 국무총리로 지명할 수밖에 없던 김대중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과거청산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없었다. 동구나 남아프리카에서 이행기 정의를 세우는 문제는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시작되던 반면, 한국에서 과거사 정리는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 그 자체를 실행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추구되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동구나 남아프리카에서는 정리대상이 된 구세력이 조직적 퇴각을 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들의 힘을 빼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과거사 정리를 추진했다. 남아프

리카에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사 정리에 구세력이 동의한 상태에서 작업이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엄청난 난관에 아주 빈번히 부딪혀야 했다.[2] 반면 구세력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시작된 한국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동구와 남아프리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 20여 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천명이 넘는 조사관이 정부의 급여를 받으며 활동했지만, 한국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단 한 명의 가해자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다. 아니, 처음부터 한국의 과거청산은 처벌을 포기하고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할 당시 한국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IMF의 경제적 식민지배를 받는 상태였다. 이 외환위기는 분명 재벌의 방만한 경영과 관료들의 무책임한 재벌 봐주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목숨을 끊어야하는 비극 속에서도 거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현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에서, 수십 년 전에 자행되어 증거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국가폭력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을까?

군사독재가 물러난 뒤 한국사회는 민주사회로 이행을 시작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한국은 분명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선도하는 나라였다. 민주화와 더불어 한국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출현했다.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 권영길이 선거 기간 “국민 여러분, 민주화 되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고 다닌 것은 큰 화제가 되었다. 한국이 민주사회로 이행하면서 누가 가장 많은 덕을 보았을까? 안타깝게도 일반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몇몇 민주화 운동가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여 젊음을 바쳤던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낄 만큼 민주화가 진전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2 데스몬드 투투 주교 지음, 홍종락 옮김, 〈용서 없이 미래 없다〉, 2009, 홍성사.

민주화의 성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군부와 중앙정보부-안기부 등 군사독재의 핵심세력이 물러간 자리를 재빨리 채우며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등장한 재벌[3]과 검찰과 관료와 민간 정치인과 언론이었다. 군과 중앙정보부-안기부를 이어받은 국정원은 과거와 같은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권력집단의 공고한 카르텔의 일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개혁 진영은 패배하고 보수 세력이 10년 만에 다시 집권했다. 보수 세력은 인수위 시절부터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폐지를 계획했다. 2008년 봄,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여 일어난 대대적인 촛불시위 때문에 보수 세력이 타이밍을 놓쳐 과거사위원회의 폐지가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활동기간 종료로 문을 닫게 된 위원회도 여럿 나왔고, 예산 삭감이나 위원의 교체로 대부분의 위원회가 무력화되고 고사상태에 빠졌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은 이행기 정의의 수립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근혜는 어두웠던 군사독재의 상징인 박정희의 딸이었고, 박근혜가 정치를 시작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이었다. 반면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며 과거사 정리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2012년의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정권 시절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보아야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의 후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의미했다. 국민들은 이행기의 정의를 세우는 대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박근혜에게 투표했다. 이행기 정의의 수립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의 대중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

3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장례를 생중계하는 화면 위로 한국의 최대 재벌 삼성의 불법 상속에 면죄부를 주는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는 속보자막이 나갔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파괴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비해 더 빨리, 더 많이 진행되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과 군의 사이버 사령부가 깊숙이 개입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편파적인 수사를 일삼았고,[4] 법원은 무죄판결로 면죄부를 주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처벌할 때와는 달리 깜짝 놀랄 정도의 관용을 베풀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실제 도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사건 수사를 은폐하려했다는 이유로 탄핵위기에 처해 물러간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행기 정의의 확립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부정선거 및 부정선거 은폐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재조사가 이루어져야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미룰 때 그것이 과거사 문제가 된다. 미래의 새로운 과거사 문제를 양산하는 상황에서 애써 이룩한 과거사 정리의 성과는 거의 빠짐없이 파괴되었다. 특히 대법원은 유신 체제하에서 인권 탄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긴급조치에 따른 법집행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판시[5]했고, 사법살인이라고 불리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하급심이 산정한 배상금의 이자가 과다 지급되었다면서 이미 지불한 배상금을 환수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6]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전면적인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현대사 연구는 1980년 광주 학살을 거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천한 현대사 연구의 역사에서 민주정권 시기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몇몇 연구자들만으로는 꿈꿀 수 없는 엄청난 사료 발굴과 사실의 정리를 이루어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성과는 당연히 역사교과서에 반

4 검찰총장 채동욱은 국정원 조직을 동원하여 선거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장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2013년 6월 11일)했으나, 9월 6일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취임 6개월만인 9월30일 사임했다. 그 이후 검찰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수사를 일삼았다.

5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대 대상 아니다'", 〈한겨레〉 2015년 3월 27일자; 한상희,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48824 손해배상(기),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253335, 2016년 2월 29일 검색.

6 "물고문 · 전기고문에 사형도 모자라 '이자 고문'", 〈한겨레〉 2013년 9월 14일자;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썼는데…'일부 반환' 첫 판결", 〈한겨레〉 2013년 10월 24일자.

영되어야할 것이나, 박근혜 정권은 이행기 정의 확립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을 교육하기는커녕 현재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되어있는 내용조차 삭제하고 독재정권을 미화하려 하고 있다.

3. 이행기 정의와 불처벌(Impunity) 문제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5 · 16 군사반란 직후에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던 유가족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사형 판결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7] 그렇지만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이 무조건 불처벌로만 귀결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0년 4월 혁명 직후 3 · 15 부정선거 관련자와 시위 군중에 대한 발포 책임자들을 처벌한 바 있다.[8]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1차와 2차 인혁당 사건 등 고문과 조작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문귀동, 김근태 고문 사건에서 김수현, 최상남, 김영두, 백남은 등이 처벌받았고, 이근안도 뒤늦게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문경관 조한경, 강진규, 반금곤, 황정웅, 이정호 등 5인과 고문은폐조작 책임자인 강민창,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등 4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9] 물론 이들이 처벌받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지은 죄에 비하면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고문경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 이상 국가가 고문경관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고문이 사라지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

7 "이원식에 사형 확정", 〈경향신문〉 1961년 11월 14일자; 한국혁명재판사 편찬위원회, 〈혁명재판사〉 4집, 1962, 189~ 368쪽의 각 지역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 참조.

8 이들에 대한 상세한 판결 내용은 〈혁명재판사〉 2집, 71~1461쪽 참조. 나중에 형량을 감경 받은 사람이 많지만, 5 · 16 후 설치된 혁명재판소 판결 결과로만 따지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으로 사형 4명, 무기징역 4명, 20년 2명, 15년 6명, 12년 3명, 10년 4명, 8년 2명, 7년 21명, 6년 3명, 5년 7명 등 많은 사람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 고문에 직접 가담한 경찰관들은 1988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조한경 징역 10년, 강진규 8년, 황정웅 5년, 반금곤 6년, 이정호 3년 등 형이 확정되었다. 〈동아일보〉 1988년 2월 23일자. 대법원은 사건 발생 9년만인 1996년 1월 5일 고문 은폐조작의 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대공수사단 간부 유정방과 박원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겨레〉 1996년 1월 6일자.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199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한겨레〉 1993년 7월 28일자.

한국에서 과거에 자행된 국가범죄에 대한 불처벌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5년, 1979년 12 · 12 사건과 1980년 5 · 17 계엄확대조치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였다. 당시 정권과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면죄부를 주려하였으나, 성난 민심은 〈5 ·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법정에 세웠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는 등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22일 사면 · 석방되어, 이들의 처벌은 사면을 위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0]

한국에서 과거사 관련 법률은 20개가 넘게 제정[11]되었지만, 12 · 12사건과 5 · 18 학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은 없다. 2000년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

10 5 · 18재판에 대해서는 박은정, 한인섭 공편, 〈5 · 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199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최재천, 〈끝나지 않은 5 · 18: 재판의 의미와 과제〉, 2004, 향연 등을 참조할 것.

11 ■ **식민지배 이전과 식민지배 관련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1993.06.11)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03.05)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2004.03.05)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2004.03.22)
△ 한 · 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5.01.14)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10.17)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10)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관련법**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1996.01.05)
△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0.01.12)
△ 노근리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03.05)
■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법**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08.06)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특례법(1995.12.21)
△ 5 ·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12.21)
△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01.26)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0.01.15)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01.1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07.24)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2004.01.29)
△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대한특별법(2005.07.29)
■ **포괄적 과거청산 관련법**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2005.05.31)

한 특별법〉, 2005년 제정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모두 생명권 침해와 관련된 법령이면서도 진실규명만 담고 있을 뿐 책임자 처벌을 담고 있지 않았다. 시민사회나 과거사 관련 단체에서도 입법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했다. 구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와 행정부, 구세력이 완벽하게 장악한 언론이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청산운동 진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뿐"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않았다. 구체제가 여전히 튼튼하게 버티고 있고, 구체제 쪽이 수십 년 간 봉인되었던 과거사의 뚜껑을 여는 것에 완강히 저항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한 과거사 관련 단체의 고육책이었다. 과거사 관련 단체가 이런 고육책을 채택한 데에는 일단 진실이 드러나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일어날 것이라는 너무나 주관적인 기대가 깔려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규명이 되면 처벌의 여론이 일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벌이라는 무기를 내려놓았더니 진실규명 자체가 벽에 부딪혔던 것이다. 자신들이 범했던 고문과 조작에 대해 제대로 고백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화해'로 가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던 '사면'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백하는 대가로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진실화해위원회는 고백을 끌어내는 대신 사면을 해주었기에 진실을 위해 처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2] 처음부터 처벌을 내려놓고 시작한 한국의 과거청산 운동은 진실의 고백조차 끌어낼 수 없었다. 20여개의 과거사 위원회에서 1천 여 명의 조사관이 과거의 국가범죄를 파헤쳤지만, 핵심적인 가해자의 고백을 끌어내지도 못했고, 단 한명의 가해자도 감옥에 보낼 수 없었다.

가해자들을 처벌할 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진실이 스스로 규명되는 일은 없다. 사건의 관련자들이 서로 책임을 면하려고 발뺌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의 추악하고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지만, 고문의 가해자들이 처벌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나 동

12 데스몬드 투투, 앞 책.

료들이 범한 범죄행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처벌이 불가능하고 가해자들의 고백을 기대할 수 없다보니 과거사 진실규명은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변에서 운좋게 살아남은 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명칭은 유사했지만, 이름 빼놓고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랐다.

죽은 자만 있고 죽인 자는 없는 상황, 고문당한 자만 즐비하고 고문한 자는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과거청산 작업이 시작될 때도 피해자들의 대중운동조차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해자들의 오만방자함이 가히 하늘을 찌를만하였다. 한국에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은 과거 그들이 행한 학살이나 고문조작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자신들의 애국적 행동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눈을 부라리고 있다. 2007년 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 판결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때 판결문의 한 부분인 법관의 이름도 공개하려 하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수구진영 전체가 거세게 반발했다.[13] 불처벌이 당연시되다보니 과거 중앙정보부, 보안사, 대공경찰 등에 근무하다가 고문조작 등으로 정말 드물게 처벌받은 사람들은 매우 불운한 사람으로 동정을 받거나 때로는 순교자 취급을 받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14]

4. 왜 반헌법 열전인가?

민주정권이 들어선 뒤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 또는 독재인명사전과 같이 과거 군사독재시절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람들의 명단과 행적을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제 시기의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해 정리하는 〈친일인명사전〉의 편찬이 구체화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비해 보다 가까운 과거이자 오늘

13 한 예로 〈조선일보〉는 "당시 법대로 판결…왜 지금 잣대로 문제 삼나"라는 기사로 과거사위의 방침을 비판했다. 〈조선일보〉 2007년 1월 31일자.

14 서해성, "광장을 위하여", 〈한겨레〉 2004년 6월 12일자.

의 현실과 직결되는 독재정권 시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고문조작을 일삼은 자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범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자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기념사업회가 무엇보다도 먼저 착수해야 할 사업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작업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사실 이런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커녕 개별 사건의 보고서에서 관련자들 이름을 거의 전부 OOO으로 감춰 버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인력과 예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어느 모로 보나 마땅히 이런 사업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떠맡았어야 할 기구들이 손을 놓아 버리자 몇몇 단체나 개인들이 이런 작업의 필요성을 환기하거나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모임인 민주 · 평화 · 복지포럼의 이부영 상임대표는 2011년 5 · 16 군사반란 50년 학술대회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친일인명사전〉처럼 유신체제에 부역했던 언론인, 학자, 문인, 시민운동가의 명단을 담은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을 신뢰받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내년 쯤 펴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15] 작업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김정남,[16] 김삼웅,[17] 서해성[18] 등을 비롯하여 민주화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거나 그 정신을 계승하여 활동하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독재인명사전〉이나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 만든다", 〈경향신문〉 2011년 10월 21일자.

16 김정남, "언젠간 〈반민주 인명사전〉도 나와야 –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프레시안〉 2009년 11월 25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9760, 2016년 2월 29일 검색.

17 김삼웅, "4월혁명 정신으로 '반민주인명사전' 만들자", 〈한겨레〉 2014년 4월 18일자.

18 서해성은 김근태가 세상을 뜨자 그의 공식 추모 게시판에 "민주화운동 박해자 중 여지껏 누구도 죄를 스스로 고발한 자가 없다. 이따금 일제 군인조차 죄를 털어놓을 때면 이 땅에 사는 게 욕스러웠다. 이들에 대한 징벌 없이 도달한 내일이 바로 MB체제다. 독재인명사전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인륜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영구적 추적과 징계,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는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걸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바로 그들이 김근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다. 김근태의 죽음은 독재인명사전을 지체 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마지막 당부다"라고 썼다. http://gtcamp.tistory.com/145 2016년 2월 29일 검색.

국가폭력 가해자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성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을 갖고 검토된 것은 2014년 초 민청학련계승사업회에서였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모임인 이 단체의 간부진들은 구성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그 배상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공익적 목적에 쓰기로 하고 〈독재인명사전〉의 발간을 검토하면서 필자에게 그 작업을 맡아줄 것을 의뢰했다. 이에 필자는 김기춘 등 유신시절 조작간첩을 누구보다도 많이 만든 장본인이 여전히 정권의 최고실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드는 방대한 작업이라며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대표 인물들을 뽑아 열전을 편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에서는 필자에게 사업계획을 세울 것을 의뢰했고, 필자는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간부진과 몇 차례 협의 후 2014년 2월 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거행된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총회에서 〈반인륜행위자 사전 편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사업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총회는 사업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회원들 다수가 사업의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사업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회원 내부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대다수 회원들이 중요한 사업을 총회에서 처음 들었다는 것, 둘째,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권력에 대해 대단히 공세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주는 현실적인 부담, 셋째, 독재정권 시기의 모든 국가폭력을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는 부담 등이었던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총회에서 사업안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으나, 필자는 기왕 시작한 일이니만큼 2014년 3월 31일 평화박물관 총회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였고, 평화박물관은 열전 편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필자가 평화박물관을 중심으로 열전 편찬을 위한 사업계획을 다듬고, 기초자료 조사와 전문 인력 운용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후원회원 모집을 막 시작했을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배를 버리고 도망친 선장을 보며 전쟁이 터지자 저 혼자 살려고 한강다리를 끊고 도망친 이승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속속 밝혀지는 '관피아'들의 무책임한 행각을 보며, 필자는 관피아들의 핵심이 공안마피아이고, 공안마피아가 실제로 권력을 공고히 한

것이 다리 끊고 도망친 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도망칠 때는 보도연맹으로, 돌아와서는 부역자로 학살한 것을 통해서라는 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는 필자로 하여금 국가폭력 가해자들을 정리하는 사업의 대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만들었다. 처음 필자는 작업의 범위를 5 · 16 군사반란 이후의 국가폭력으로 상정하고 작업을 계획했었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일했던 필자의 경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승만 시기의 민간인학살이나 다른 사건들을 다루는 것은 자료의 성격도 다를 뿐 아니라 사업의 규모도 너무나 방대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현 정치권력의 역사적 뿌리와 계보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대상 시기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평화박물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측에 공동사업을 위한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렇다 할 대답을 듣지 못하던 중 2015년 2월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총회에서 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국가폭력 대신 유신시기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조사정리만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에 필자는 유신 시기에서는 민청학련계승사업회와 공동사업의 문을 열어놓되 유신 앞 뒤 시기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마침 필자가 조희연 교수의 서울시 교육감 당선으로 공석이 된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관장을 2014년 여름부터 맡게 되어 민주자료관도 이 사업을 평화박물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평화박물관과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은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15년 7월 16일 지식인 33인의 명의로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 한국사회는 나름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과거청산도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내란 · 부정선거 · 학살 · 고문 및 조작 ·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법치를 내세

우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 몇몇 공안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고문과 조작의 당사자들은 사과조차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고문과 조작으로 받은 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 대한민국 100년을 맞으며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내란 · 부정선거 · 학살 · 고문 및 조작 ·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책임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것이다. 지난 시기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학살 및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을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으며, 가해자를 적시하지도 않았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 유럽에서는 70년이 지나도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이 현실의 법정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마저 피해갈 수는 없다.[19]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진보언론은 이 제안에 큰 관심을 보여 1면 톱이나 사설, 특집 등으로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의 편찬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20] 약 석 달 뒤 제헌국회가 1948년 반민특위 위원과 재판관, 검찰관을 임명한 날인 10월 12일에 맞추어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우연한 일이지만 이날은 박근혜 정권은 역사쿠데타라 불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의 행적을 정리한다는 내용은 변함

19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 반헌법행위자열전 만들기 자료집〉, 2015,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주비위, 26~27쪽.

20 "헌법파괴자 인명사전 만든다", 〈경향신문〉 2015년 7월 15일자; "역사의 법정에 공소시효란 없다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 평화박물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경향신문〉 2015년 7월 15일자; "광복 70년 '반헌법행위자열전' 만든다"; 이만열 · 한홍구 대담, "헌법의 민주 정신 훼손한 이들, 살아있을 때 역사적 책임 물어야 – '반헌법 행위자 열전'의 의미를 말하다", 〈경향신문〉 2015년 7월 16일자; 〈한겨레〉 2015년 7월 15일자; "(사설)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을 환영한다", 〈한겨레〉 2015년 7월 16일자; 한홍구, "법 갖고 장난치는 '수구 법비들'이 헌법을 파괴한다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특별기고", 〈한겨레〉 2015년 7월 17일자;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한겨레〉 2015년 7월 17일자.

이 없었지만, 결과물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독재인명사전〉 또는 〈반민주행위자(인명)사전〉 등의 명칭이 주로 거론되었다. 이들 명칭은 당시의 역사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도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기징 친숙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민주-독재' 또는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가 너무 낡고 진부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반인륜행위자 사전〉이었다. 이 명칭은 주로 박정희 시대 이후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을 정리한다는 전제 하에 이미 출간된 〈친일인명사전〉, 그리고 언젠가 편찬될 〈민간인학살 인명사전〉을 3부작으로 묶을 때 적절한 명칭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고려되었다. 이 명칭은 영어의 crimes against humanity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인도에 반한', '반인도', '반인륜' 등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감이 낯설고, 반인륜이나 반인도라는 말에서 꼭 국가폭력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결국 고민 끝에 '반헌법행위자' 열전으로 낙착되었다. '반헌법행위자'는 초기부터 후보군에 있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용어란 이유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다. 독재, 민주 같은 용어는 이미 지나칠 정도로 편가르기 같은 진영 용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기에 많은 국민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진 명칭이 되기는 어려웠다. 반헌법행위자라는 말은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장차 진보와 보수의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헌법에 대해서 진보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했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헌법문제의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진적인 분파에 속한 사람들은 헌법이란 부르주아 놀음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기도 했고, 또 워낙 헌법이 살아 숨 쉬지 못하고 죽어있다 보니 헌법에 대해 기대나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진보진영 일부에서도 헌법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1987년 헌법의 수명이 다했으니 새로운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21] 과거사 정리나 이행기의 정의확립 문제를 헌법에 준거기준을 두고 접근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1 대표적인 것으로 박명림 외,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2008, 대화문화아카데미);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헌법 다시보기-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2007, 창비) 등이 있다.

민주진영 또는 진보진영이 헌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별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화 이후 헌법은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가시적 성과로 헌법에 구현된 것이 직선제와 헌법재판소였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폭압으로 처리되던 문제들이 민주화 이후 헌법이라는 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권력기관으로 부상했다. 특히 2004년 수구세력이 감행한 탄핵이 민주시민들의 저항으로 좌절되고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획득한 것은 보수층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대통령에 이어 입법부까지 민주개혁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보수세력 입장에서는 선출되는 권력을 모두 빼앗긴 것을 의미했다. 이제 그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4년의 행정수도 판결에서 2014년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지배 체제를 부정하거나 지배 체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반체제 이단자가 생길 경우 헌법의 적인 그에게 사회적 파문을 선고함으로써 지배 체제의 안정을 확보"[22]한다는 헌법재판소가 떠맡은 이데올로기적 억압 기능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에 뒤이어 7 · 8 ·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그동안 억눌려있던 노동자들의 힘이 격렬하게 솟구쳐오자 기득권층이 헌법적 가치를 들먹이는 일도 부쩍 잦아졌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기사의 제목을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23]라고 뽑은 것이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부치면서 보수정권이 "올바른 역사교육은 헌법가치 따른 평화통일 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24]은 최근의 대표적인 예이다.

보수세력은 현실세계에서 헌법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의미를 진보진영에 비해 훨씬 일찍 깨달았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항하여 보수적이고 나이든 변호사들이 결성한 모임의 이름은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었다. 경실련 사무총장 출신의 대표적인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를 거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은 보수적인 헌법학자 강경근과 함께 2006년에 〈헌법과 反헌법〉(기파

22 국순옥,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법학〉 11권, 1996, 30쪽.

23 〈조선일보〉 2004년 12월 20일자.

24 "직격 인터뷰 – 역사전쟁 방아쇠 당긴 황우여 교육부장관", 〈월간중앙〉 2015년 12월호.

랑)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보수세력 입장에서 진보진영을 상대로 헌법을 무기 삼아 강력한 이념 공세를 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순옥 교수가 지적한 대로 "헌법이란 계급투쟁의 지형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데올로기 투쟁"이며 "헌법해석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은 민주주의 변혁운동의 향배를 가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지배세력의 것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지배의 정당성, 즉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주권의 원칙, 법 앞의 평등의 원칙,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각종 기본적 인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25]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보수세력의 전유물로 놔둘 수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헌법을 창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과거사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아야 한다. 몇 차례의 이행기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의를 세우지 못했던 한국은 과거사의 만물상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 수없이 많은 민간인 학살과 고문조작과 간첩조작의 사례들을 일일이 처리할 수 없어 '포괄적 과거청산'으로 묶어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였다. 과거사의 개별사건들이 발생시기와 성격 면에서 너무나 다르다보니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 내의 얼마 되지 않는 역량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시기도 오랜 시간에 걸쳐 있고, 사건의 성격도 판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사건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준거기준을 마련하는 것. 둘째, 사건의 가해자들을 명확히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포괄적 과거청산'을 표방하고 출발했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등한히 하였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헌법이라는 확실한 준거기준에 입각하여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들을 인물별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아무리 헌법파괴를 일삼은 독재정권이라 한들 헌법을 없앨 수는 없었다. 유신헌법은 헌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헌법을 처참하게 유린했지만,

25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173쪽.

고문은 유신헌법에서도 금지된 일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역사적 평가를 늘릴 수 있다. 또한 가해자들의 경우, 개별사건에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요청된다. 우리말에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 일은 한 자가 바로 다른 일을 한 그 자"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대상이 될 만한 자들은 공안세력의 핵심인물로서 하나의 사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권위주의적 정권에 복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에 개입해왔다. 그들 중 상당수는 민주화 이후에도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들먹이면서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이들 개별인물의 상세한 이력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들 공안세력의 계보도를 그리는 작업이다. 이들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타고 앉아 법을 지키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바로 이렇게 헌법적 가치나 법치를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헌법을 파괴하고 고문 · 조작 등의 범죄행위를 일삼았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다. 헌법을 유린했던 자들에게 헌법을 맡겨둘 수는 없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핵심적 보수인사들의 반헌법적 과거를 낱낱이 밝혀내고 기록함으로써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민주화운동진영의 헌법해석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왜 〈반헌법행위자'인명사전'〉이 아니고 〈반헌법행위자'열전'〉을 편찬하려고 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사전'으로 갈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인물을 망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의 양은 '열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진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김기춘 등 old boy 들의 귀환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등 일련의 사건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국가폭력의 핵심기구인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 등 공안세력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교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도 인력도 없이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를 사전편찬을 시작한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의 실천적 의미를 기대할 수 없다.

방대한 사전의 편찬은 후일로 미루고, 현실적으로 제한된 인원과 자원만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현가능한 규모로 대상인물을 한정하여 그들의 열전을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편이 효율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방 후 64년이 지나 2009년에 발간된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은 수록인물 거의 전원이 사망한 상태에서 발간되었다. 반면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대상자 중 최소한 1/4~1/3 정도는 생존인물일 것이다. 수록 대상자 거의 대부분이 사망한 상태에서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다. 살아있는 권력을 기록하려는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친일인명사전〉에 비해 훨씬 강력한 저항을 야기할 것이 확실하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후원만이 수구세력의 반발을 뚫고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기록한 〈반헌법행위자열전〉의 발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5.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 반헌법행위자의 선정기준과 절차

그러면 반헌법행위자로 분류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는 반헌법 행위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26]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 내란 · 학살 · 고문조작 · 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 ▲ 내란 · 학살 · 고문조작 · 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 ▲ 내란 · 학살 · 고문조작 · 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 ▲ 내란 · 학살 · 고문조작 · 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26 한홍구, "기조발제: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인물 선정 기준",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2015, 1쪽.

우선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반헌법 행위자를 내란 · 학살 · 고문조작 · 부정선거 등 4개 분야에 국한하여 선정하려 하고 있다. 헌법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고, 현행 헌법은 조문이 모두 130조에 달한다. 내란 · 학살 · 고문조작 · 부정선거 등은 민주공화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반헌법 행위이지만, 반헌법 행위가 꼭 이 4개 분야에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열전에 수록하려는 반헌법 행위의 범주를 이 4개 분야에 국한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을 파괴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다양한 기본권의 침해, 도청과 사찰, 반통일 행동, 경제적 불평등, 노동권에 대한 침해, 환경파괴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의 과거청산 운동이 가해자를 정죄하기는커녕 실명을 거명조차도 하지 못한 현실에서 반헌법 행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국가 범죄로 한정하여 반헌법 행위자들을 정리하려 하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거나 헌법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를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다 기록하려는 과욕을 부리다 보면 방대한 작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아무 것도 기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 노동, 문화, 환경 등 중요한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나 그 행위자를 이번 작업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그런 작업은 현실적으로 지금의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욕을 부리다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현실가능한 목표를 향해 집요하게 또박또박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반헌법 행위자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물론 공직자가 아닌 사인(私人)들도 반헌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수구보수 세력은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반헌법 행위자로 규정하려 할 것이다. 환경 파괴나 노동권 침해 등을 자행한 자들은 대개 경제인으로 공직자이기보다는 사인일 가능성이 크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반헌법 행위자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가 가장 빈번했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의한 헌법 파괴나 인권침해는 사인에 의한 헌법 파괴나 인권침해에 비해 그 범위가 지극히 넓고 피해도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현대사를 관통해 온 불처벌의 관행 때문에 공직자가 공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중대한 국

가폭력은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범위는 비교적 명확하다 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 4 · 3 사건이나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에는 서북청년단 등 우익 청년단체의 간부와 성원들이 깊게 관련되었다. 문제는 이들 사설단체들이 절차 상 하자 없이 공권력으로부터 정식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았느냐 여부이다. 이들이 군경의 직접 지시 아래, 또는 비호나 묵인 아래 국가폭력의 집행도구로 활용된 점은 분명하지만, 개개인의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밝혀내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될 사람들은 내란 · 학살 · 고문조작 · 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나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나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도 제한된 범위에서 포함될 것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인물 선정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헌법행위자열전〉과 유사하게 특정인의 과거행적을 기록하려 한 다른 프로젝트들은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수록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27]

> (수록대상) 이 사전은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 식민통치 ·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 · 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대상으로 한다. 매국 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반민족행위자 전부를 수록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일협력자로서 일정한 직위 이상은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로 삼았다.

27 "선정기준 해제", 〈친일인명사전〉 I, 2009, 민족문제연구소, 18~81쪽.

이 사전은 이어 수록인물 선정의 세부기준을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4. 일제의 황민화정책 ·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5. 기타 친일행위자 등을 들고 있다.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28] 이 사전은 또 1. 기독교, 2. 천도교, 3. 불교, 4. 천주교, 5. 유교, 6. 언론, 7. 교육 · 학술, 8. 문학, 9. 음악, 10. 미술, 11. 공연예술, 12. 친일단체, 13. 전쟁협력 등 13개 분야에 걸쳐 각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아직 세세한 수록인물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강의 원칙을 비교해보면 〈친일인명사전〉에 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친일인명사전〉의 수록인물이 근 5천 명인데 비해 반

28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1) '을사늑약' '한일합병' 등 일제의 국권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2) 매국의 대가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1)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2)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 · 부찬의)로 활동한 자
(3)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관리
(4) 경찰로서 경부 이상으로 재직한 자와 고등계 경찰,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경찰
(5) 군인으로서 위관급 이상의 장교와 분대장급 이상의 헌병으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인
(6) 판사 · 검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사법 관리
(7) 국책 경제기관 · 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8) 도 · 부의원 등 관선 · 민선의 공직자로서 친일행위가 현저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1) 국권수호 또는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 · 권유한 자
(2)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3) 일제에 협력하여 밀정행위로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4)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 · 처형 · 학대 · 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

4. 일제의 황민화정책 ·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1) 학병 · 지원병 · 징병 · 징용 · 공출 · 국방헌금 등을 적극 선전 · 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2)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적극 협력한 자
(3) 침략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1만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4)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5)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6) 문학 · 예술 · 교육 · 학술 · 언론 · 종교 등의 분야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5. 기타 친일행위자
(1)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현저한 자
(2)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 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3) 항일운동의 경력이 있으나 변절하여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4) 해외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에서 위의 각 항에 상당하는 자
(5) 위의 각 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저한 친일행위가 확인되는 자

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예정 인물이 3백 명으로 훨씬 적기 때문일 것만은 아니다. 〈친일인명사전〉의 분야별 선정기준은 대부분 민간영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자에 국한되어 있으며 민간인은 극히 예외적으로 수록될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부일협력자로서 일정한 직위 이상은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직위범 규정이 없으며 독재정권에 협력한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은 기본적으로 이번 편찬 사업에서 수록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다.

일제의 강점은 그 자체가 원인무효였으며, 일제의 지배 체제에 적극적으로 복무하여 일정한 직위 이상에 오른 자들을 부일협력자로 분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독립운동세력의 상당 부분이 배제되었고, 또 제주 4 · 3사건과 같은 유혈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또 5 · 16 군사반란이나 유신쿠데타와 같은 내란으로 수립된 정권이 오래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권 하에서 일정한 직위 이상을 지낸 사람을 일제강점기의 직위범 규정처럼 일률적으로 반헌법행위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독재정권 하에서 장관이나 차관을 지냈다고 무조건 반헌법행위자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선정후보나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독재정권이 유지되었던 수십년동안 행정 · 입법 · 사법 3부에서 장 · 차관급 공직을 역임한 공직자의 수는 수천 명이 훨씬 넘을 것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실제 행한 행동을 선정기준으로 삼지 직위를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헌법행위자열전〉에서는 "민주화운동을 방해한 자"를 선정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군사독재정권은 중앙정보부, 보안사, 대공경찰 등 아주 다양하고도 방대하고 체계적인 민주화운동 탄압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했었다. 이런 기관에 근무한 자들은 민주화운동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불의에 항거한 4 · 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헌법전문의 구절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고, 민주화운동

에 대한 탄압은 곧 저항권에 대한 탄압이자 반헌법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팀은 이렇게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정보부, 보안사, 대공경찰 등 민주화운동 탄압기구에 근무했다고 해서 모두 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정권시기에 고문은 일상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고문수사관 모두의 신상을 파악하고 그들을 반헌법행위자로 수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조갑제의 책들이 잘 보여주듯이[29] 고문과 조작은 정치범들에게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범에게도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었다. 중앙정보부, 보안사, 대공경찰 등 민주화운동 탄압기구에 종사했던 수만 어쩌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 실제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될 사람은 이들 기관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주요 고문조작사건을 기획했거나, 주요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고문조작을 자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수록될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문학 · 예술 · 교육 · 학술 · 언론 · 종교 등의 분야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를 수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반헌법행위자열전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독재 권력의 헌법파괴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를 선정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사실 군사독재정권이 유지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언론인 · 문화예술인 · 지식인 · 학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유신체제나 5공 체제는 독재 권력이 장악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직접 고용된 공직자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들의 협력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다. 사실 유신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찬양하거나, 광주학살로 탄생한 전두환 정권을 위해 용비어천가를 불러댔던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의 추악한 모습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자의 반헌법행위를 우선 기록하고자 하는 〈반헌법행위자열전〉에서 이들의 행적을 수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재권력에 대한 지식인과 언론인들의 부역행위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과는 별도로 누군

29 조갑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1986, 한길사; 조갑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고문에 의한 인간파멸과정의 실증적 연구〉, 1987, 한길사.

가에 의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작업이지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은 이를 포괄할 정도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직자가 아닌 지식인들의 독재정권 유지와 작동에 대한 기여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현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에 나선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독재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지식인들을 너무 많이 봐주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역량 상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대상자를 공직자로 국한한다는 것은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지식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정한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는 작업을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수구보수진영에서는 〈친북 · 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을 편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수록대상 종북인사 100명의 명단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한바 있다.[30] 이들이 밝힌 친북 · 반국가행위자의 개념규정과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31]

1. 개념 규정

친북 · 반국가 행위자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당국노선이나 맑스레닌노선을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헌법정신 부정행위, 국보법 위반행위, 반국가활동 등)를 지향, 선동하는 인사.

2. 세부기준

<u>* 친북행위: 북한당국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자</u>

–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 · 선군노선을 미화, 찬양하는 자

– 김일성 · 김정일을 미화, 찬양하고 이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자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하는 자

30 "친북인명사전도 만들겠다 – 국가정상화추진위서 편찬", 〈조선일보〉, 2009년 11월 27일자.

31 "친북인명사전 선정기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2016년 2월 29일 검색, http://crnn.org/home/bbs/board.php?bo_table=dictionary_003&sca=선정기준

–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지지, 선동자

–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지지 · 선전하는 자

– 북한의 대남노선(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체결 등) 지지 · 선전하는 자

– 북한의 좌익적 역사관을 정당화하고 지지 · 선전하는 자

–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나 인권탄압의 지지 등 기타 북한노선을 지지 · 선전하는 자

<u>* 반국가행위: 헌법질서 부정 · 파괴 및 국가변란 선전선동자</u>

–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자

〈사례〉 대한민국의 정치 · 경제 체제를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난,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 건국 이후의 대한민국 역사를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왜곡 묘사, 대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긴요한 법률 · 기관 · 정책 등을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폐기를 선동

–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파괴, 전복을 선동하는 자

– 의회민주주의 부정 및 국가사법체계(경찰, 검찰, 사법부, 군 등) 파괴, 전복선동자

– 노동자계급 주도의 지하혁명당 결성과 PT독재노선을 추종하는 자

– 계급투쟁에 의한 인민정권 수립을 주장하는 자

– 폭력혁명에 의한 국가전복과 변란을 선동하는 자

–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선동하는 자

〈친북 · 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의 선정기준은 대단히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언론 출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당연히 용인되어야 할 행동은 저들의 입맛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친북 · 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을 편찬하겠다는 사람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를 제시한다거나,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는 비정상적인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일환으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거나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종북인사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의적인 운영 때문에 늘 비판을 받아왔는데, 〈친북 · 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의 선정기준은 자의적인 국가보안법에 비해서도 훨씬 모호하고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이런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란 · 학살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등 4개의 영역을 명시하고, 행위 당시의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만을 반헌법행위로 조사하고자 한다.

과거청산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될 때 수구보수세력에서 언제나 나오는 반발은 왜 과거의 일을 지금의 잣대로 재려하냐는 것이다.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려 할 때 법조 엘리트들이 같은 논리로 반발했고.[32]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재심에서 대법원이 강기훈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을 때 수사검사들도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사과할 일이 아니다. 세종대왕이 한 판결도 지금의 잣대로 하면 결론이 달라지는 게 많을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33] 역사학에서 역사는 늘 새로 쓰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부름을 받고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관점에서 오늘의 잣대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불러오는 작업을 포기한다면 역사학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반헌법행위자를 선정할 때는 역사연구의 일반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지만, 수구보수진영의 불만을 십분 수용하여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반헌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오늘의 법률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추출하여 이런 행위를 자행한 사람만을 수록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수구보수세력이 과거청산작업을 비판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내

32 주 13) 참조

33 "남기춘, '세종대왕 판결도 지금 잣대론 결론 달라져'", 〈경향신문〉, 2015년 5월 15일자.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라는 것인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그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또한 너무나 많은 잠재적인 반헌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그 어떤 헌법이나 헌법에 따른 법률체계도 내란 · 학살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등의 반헌법행위를 용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민간인 학살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였으며, 유신헌법 하에서도 고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진실화해위원회나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과거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여 재심을 권고했던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75건에 달한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당연히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판결문 등 재심자료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문과 조작에서 책임져야할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신원까지 파악할 수도 있다. 재심사건은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지겠지만,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간인학살사건을 보면 거의 모든 학살과 처형이 재판같은 사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자행되었으니, 처음부터 재심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정식재판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고문이 자행됐던 경우도 대단히 많고, 흔히 부일장학회 사건 또는 정수장학회 사건이라 불리는 부산일보 및 문화방송 주식 강탈사건 당시 김지태 사장 부부에 대한 재판이나, 경향신문 강제 매각사건 당시 이준구 사장에 대한 재판 등과 같이 재판이 사건의 핵심을 비껴간 채 피해자를 겁박하여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2016년도에는 반헌법행위자의 선정기준을 확립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앞에 제시한 원칙은 총론에 해당하는 것일 뿐, 내란 · 학살 · 고문조작 · 부정선거 등 4개 분야는 각각의 분야별로 아주 구체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 수립 이후의 내란의 경우 여순반란사건(1948), 5 · 16군사반란(1961), 유신친위쿠데타(1972), 12 · 12사건(1979)에서 5 · 17 계엄 확대(1980)에 이르는 군사반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정권이 조작한 수많은 내란조작사건[34]도 내란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실제의 내란의 경우 각 사안별로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형법의 내란죄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 1) 수괴 2) 모의참여자 3) 지휘자 4)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5)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 6)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것은 형사법 상의 기준이고, 내란을 실행한 자들 내부에서의 논공행상은 또 다른 기준에 따라 행해졌을 것이다. 그 내부사정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논공행상의 밖으로 들어난 결과만큼은 비교적 상세하게 알 고 있다. 5 · 16 직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나 5 · 17 직후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과 같이 내란 수행을 위해 설치된 특별기구의 구성원이 된 자, 정계 · 관계 · 군 · 경찰 · 정보기관 · 국영기업 등에서 요직에 앉게 된 사람들, 내란과 관련하여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사람들, 내란을 실행한 자들이 기록한 역사나 조직한 모임에서 주요하게 부각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은 주요 반헌법행위에 관련된 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열전에 포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서는 열전에 수록될 인물의 숫자를 잠정적으로 300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300명이면 많다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한국현대사에서 자행된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에 비춰본다면 너무나 적은 숫자일수도 있다. 수록대상자 300명을 내란 · 학살 · 고문조작 · 부정선거 등 4개 분야로 기계적으로 나누면 한 분야 당 75명 안팎이 될 것이고, 많아야 100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 민간인 학살의 경우 유가족들은 희생자 숫자를 많게는 100만, 관련 연구자들은 적어도 30만~40만은 될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인 학살 관련 반헌법행위자로 겨우 100명 정도를 수록한다고 하면 몇 십 명 죽인 정도로는 적극적인 검토 대상도 되지 못할 처지이니, 이런 기막힐 일이 어디 있겠는가? 간첩 사건 한 건이 터지면 피의자가 한 명이라 해도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수십 명은 넘고, 피의자가 수십 명인 간첩단 사건이면 수사 관여자는 수백 명이 넘게 된다. 그런데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재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만 해도 70여 건이 넘으니 고문 · 조작 분야에서도 어지간한

34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내란조작인 최능진 사건, 5 · 16 직후의 수많은 이른바 반혁명 사건, 박정희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수많은 내란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이 아니고는 가해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아직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작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과가 발표되면 피해자 측에서 왜 우리 사건의 이런 악랄한 사람이 빠졌느냐는 항의는 많아도, 당사자나 후손이 아닌 제3자가 왜 저런 사람이 포함되었느냐고 시비를 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반헌법행위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이 기준에 입각하여 전문가들의 치밀하고 조심스러운 검토를 거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사람들로 수록대상자 명단을 선정하여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대상자에 대한 집필에 들어가려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반헌법행위자인가는 사실 위에 설명한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조금 길지만, 필자가 다른 글에서 서술한 것을 인용해보기로 하자.[35]

> 1960년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상태로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4월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과연 어떤 자가 어린 김주열을 저토록 무참히 살해하고 그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까? 체포된 범인은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박종표였다. 당시의 신문자료나 박정희 군사 정권이 발행한 〈혁명재판사〉는 박종표의 이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사실 그는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악질 헌병 아라이 겐키치였다. 친일세력의 반민특위 습격으로 반민특위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무죄로 풀려난 박종표는 악질고등경찰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잡혀갔다가 풀려나면서 헌병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것처럼 신분을 세탁하여 경찰이 되었다. (…) 어디 박종표뿐이랴.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지금까지 역대 국무총리는 모두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 대상으로 심각하게 검토될 만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이명박 정권의 절반 가까운 기간 동안 총리 자리를 차지했던 김황식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법정 최고형이 유기징역인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게 한 신의 한 수를 둔 판사였다. 그다음 총리 정홍원은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력자

35 한홍구, "법 갖고 장난치는 '수구 법비들'이 헌법을 파괴한다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특별기고", 〈한겨레〉 2015년 7월 17일자.

였던 김기춘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기춘은 초원복집 사건이라는 불법 선거개입으로 감옥에 가야했고 절대로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처벌을 면하고 오뚝이처럼 부활했다. 정홍원은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였다. 담당검사 김진태는 현재 검찰총장이다. 그다음 총리 이완구는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의 실무자로서 5 · 17 내란의 주요 부분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감금 사건인 삼청교육대의 설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다음 현재의 총리인 황교안은 법무장관 시절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주도한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을 은폐한 혐의가 대단히 짙다. (…) 천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부총리 황우여는 1970년대 김대중 대통령 등 민주인사들을 처벌한 명동사건의 판사이자, 1980년대 최악의 공안사건인 학림 사건의 판사이기도 했다. (…) 〈변호인〉의 강 검사 같은 자의 맏형이 바로 유신 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며 본격적인 조작간첩 사건의 시대를 연 김기춘이다.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실제 검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주임검사 최병국은 대검 공안부장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은 성공한 내란이라고 봐주고 1996년 한총련 사건의 지휘자로 학생을 5천명 이상 연행했으며, 그 후 3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부림사건에서 실제로 법정에 자주 나와 강 검사의 실제 인물이라 할 고영주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민노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통합진보당 해산의 기획자였고, 일찍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산을 주장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주역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새누리당 쪽 위원으로 나가 있다. 아직 세월호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고영주는 세월호의 진실 인양을 막기 위해 공안세력이 파견한 대표 칼잡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가치를 세우자는 것이지 수구와 진보의 편가르기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대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수구세력의 상투적인 변명에 대하여, 이념적으로는 확실히 보수진영에 섰으나 "공직자로서 헌법과 양심과 상식을 지키려 했던 분들의 사례"도 충실하게 소개할 것이다. 필자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을 처음 제안할 무렵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승만에 맞서 꼬장꼬장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킨 김병로 대법원장, 검찰권을 수호하려다 이승만에 밉보여 검찰

총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된 김익진, 이승만과 검찰총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은 현직 장관을 기소한 최대교, 일제에 복무했던 자가 새 나라에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검사직을 사임한 엄상섭, 다리 끊고 도망간 자들이 피난 못 간 서울 시민을 단죄하는 재판놀음에서 온전한 정신과 양심으로 〈재판관의 고민〉을 저술한 유병진, 인혁당 조작 사건의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던진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 도시산업선교회와 노동자들을 불순세력으로 처리하라는 박정희의 압력을 거부한 유신 말기의 대검 공안부장 박준양" 같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수 엘리트들"로 제시한 바 있다. [36]

6.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아무리 민주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정부나 관변의 예산을 받아서는 가해자들을 기록하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최근 20년의 역사적 경험으로 아프게 깨달았다. 결국 이 작업은 힘이 들더라도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 책임 있는 지식인들이 수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15년 7월 뜻을 같이 하는 33인의 지식인[37]이 발기인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을 제안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2015년 10월 12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강우일, 김정헌, 김중배, 신인령, 이만열, 이해동, 홍세화 등 일곱 분을 대표로 하여 정식으로 출범했다. 편찬위원회에는 민족민주운동과 시민사회의 원로 64분이 고문으로 참여했다.[38] 〈반헌법행위자열전〉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헌법행위자 300명의 행적을 대한민국의 대표 지식인 300여 명이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편찬위원회의

36 위와 같음.

37 고광헌, 김두식, 김귀옥, 김명인, 김민웅, 김상봉, 김진숙, 김칠준, 김형태, 김희수, 박노자, 박인규, 박태균, 서해성, 선대인, 아임피터, 오유석, 오창익, 이명춘, 이상호, 이재승, 임경석, 정용욱, 정태인, 정희진, 조국, 조영선, 주진우, 최강욱, 하종강, 한상권, 한홍구, 홍윤기

38 고문 64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정구 고 은 권낙기 권오헌 김금수 김삼웅 김상근 김세균 김원웅 김정남 김종철 김태진 문규현 문대골 문영희 문정현 박석무 박순희 박용일 박재승 박정기 박중기 배은심 배종렬 백기완 백낙청 서경원 서중석 양길승 염무웅 오세철 오종렬 오충일 유초하 유홍준 윤경로 이기명 이부영 이수호 이이화 이창복 이행우 이현배 임옥상 임재경 장영달 장행훈 장혜옥 전창일 정동익 정성헌 정지영 조세희 조화순 지용택 채현국 천영세 최병모 최영도 한승헌 한완상 현기영 홍 번 효 림

출범 당시에는 1차로 필진 100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39] 나머지 필진의 명단은 추후 공개될 것이다. 필진으로 참여할 300명은 자기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사 관련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조사하여 반헌법행위자들의 행적을 기록할 것인가?

사실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2016년의 한국사회가 과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보고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을 상당한 법위에서 밝혀내었다. 다만 그들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그들을 OOO으로 남겨두었을 뿐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이제 그들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 것이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지, 조사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시인 김춘수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단지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고 노래했지만, 우리가 가해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물론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당장은 당사자나 후손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비로소 과거의 짐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앞에 소개한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란 · 민간인학살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등 4개 분야에서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의거하여 여러 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300명 선의 반헌법행위자를 선정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10여 명의 편찬위원회 소속 조사연구원들이 개인별로 자료수집을 할 것이다. 이 때 수집하는 자료는 반헌법행위와 관련된 것에 국한하지 않고, 그의 출

39 발기인 33명은 당연히 필진으로 참여하는데, 이들을 제외한 6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내희 강용주 강정구 고병헌 권혁태 권형택 김 당 김덕진 김삼웅 김성수 김세균 김영훈 김용민 김응교 김인국 김재명 김주완 김중배 김호철 김효순 김훤주 나승구 노순택 노회찬 문용식 박건웅 박경신 박준성 박찬승 변영주 서중석 송기호 신기철 신명철 신주백 염규홍 오경종 유시민 유영표 유왕선 유초하 윤석인 윤승용 이단아 이만열 이선옥 이승환 이영일 이영재 이인람 이종구 이철수 이해영 전규찬 전명혁 정지영 정진우 조현연 진중권 채은아 최정기 한정숙 허상수 현상윤 홍성담 홍세화 황인성

생과 성장에서 반헌법행위를 범할 때 까지의 이력, 반헌법행위 자체,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생애사를 최대한 자세하게 수집하여 정리하여 해당자가 관계된 반헌법행위의 사건파일과 함께 집필예정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원자료를 꼼꼼히 수집정리하여 집필예정자에게 전달한다면, 집필예정자가 꼭 과거사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반헌법행위자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 보면 집에 가서 물만 붓고 취향에 따라 약간의 양념만 더해 끓이기만 하면 되는 매운탕처럼 편찬위원회에서 재료를 잘 다듬어 집필예정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관련 분야 박사급 연구자들과 과거사 조사관이나 유관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한 전문가들이 상근을 하며 실무적으로 받쳐주어야 대한민국의 대표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헌법행위자들의 행적을 기록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오래된 일이고 또 반헌법행위자들이 자신들의 행적을 감추거나 장막 뒤에 숨어있는 경우도 많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김기춘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노덕술이나 김창룡 또는 김형욱이나 이후락 같은 자들조차 낯선 이름일 수 있다. 진보당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은 사건 자체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건을 기획하고, 고문조작하고, 기소하고, 엉터리 판결하고, 그 결과 승진하거나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시민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주요 사건이나 활동 분야(예컨대 중앙정보부-안기부 편, 보안사 편, 대공경찰 편, 공안검찰 편, 고문수사관 편 등등)로 묶어 펴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선정 결과에 편집 방침이 구체화되겠지만 개인별로는 대략 200자 원고지 50~100매 내외로 300쪽 단행본 10 여권 분량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전체 작업 기간은 아마도 4~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작업성과를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펴낼지 아니면 한꺼번에 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의 편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분들은 역시 시민편찬위원들이다. 이 작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이 작업은 100퍼센트 작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에 의해서 진행된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작업을 후원하는 모든 분들을 시민편찬위원으로 모시고 있다. 시민편찬위원들 중에는 재정적인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자료의 제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시민편찬위원은 필자가 2014년 2월부터 강연을 다니며 모으기 시작했는데, 2015년 7월 기자회견 이후 크게 증가했고, 2015년 10월 12일 편찬위원회의 정식 출범과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팽창을 보여 현재 3천 명 이상의 열혈시민들이 시민편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모금액도 단기간에 1억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이 작업이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참여와 후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헌법을 파괴해 온 자들로부터 헌법을 되찾는 작업에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7. 맺음말

내란 · 학살 · 고문조작 · 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를 일삼은 자들의 행적을 정리하는 작업은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오히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 법을 지키라고 삿대질하며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자부심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지금 젊은이들은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지금 헌법이 꼭 이상적인 헌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헌법전문의 내용만 살아있다면 젊은이들이 자기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침 뱉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이 기댈 곳은 헌법뿐이다. 테러방지법 같은 악법을 막아낼 수 있는 근거도 헌법뿐이다. 헌법을 파괴해 온 자들이 헌법을 농락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은 잠자고 있던 헌법을 우리의 실생활로 불어내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을

제안하면서 다짐했던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에 기초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듭할 것이다. 우리들의 작업도 언젠가는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겠다. 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다.”[40]

(2016년 2월 22일 투고, 2월 28일 심사, 2월 29일 채택)

■ **주요 용어**

민주화, 국가폭력 가해자, 이행기 정의, 불처벌, 과거청산, 헌법, 반헌법행위자열전, 학살, 내란, 부정선거, 고문조작, 평화박물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공직자, 친일인명사전, 선정기준

■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1.11.14. “이원식에 사형 확정”.

_____. 2011.10.21.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 만든다”.

_____. 2015.5.15. “남기춘, ‘세종대왕 판결도 지금 잣대론 결론 달라져’”.

_____. 2015.7.15. “역사의 법정에 공소시효란 없다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 평화박물관,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_____. 2015.7.16. “광복 70년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든다”. 이만열 · 한홍구 대담,“헌법의 민주 정신 훼손한 이들, 살아있을 때 역사적 책임 물어야 – ‘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의미를 말하다”.

_____. 2015.7.15. “헌법파괴자 인명사전 만든다”.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친북인명사전 선정기준”. http://crnn.org/home/bbs/board.php?bo_table=dictionary_003&sca=선정기준(검색일: 2016.2.29)

국순옥. 1996.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법학》, 11권.

김삼웅. 2014.4.18. “4월혁명 정신으로 ‘반민주인명사전’ 만들자”.《한겨레》.

김정남. 2009.11.25. “언젠간 〈반민주 인명사전〉도 나와야 –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9760(검색일: 2016.2.29)

민족문제연구소. 2009. 선정기준 해제 .「친일인명사전」I.

40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주비위. 2015.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들기 자료집」.

박은정 · 한인섭 공편. 1995.「5 · 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명림 외. 2008.「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서해성. 2004.6.12. "광장을 위하여"《한겨레》.

「월간중앙」. 2015. "직격 인터뷰 – 역사전쟁 방아쇠 당긴 황우여 교육부장관".

《조선일보》. 2007.1.13. "당시 법대로 판결…왜 지금 잣대로 문제 삼나".

_____. 2009.11.27. "친북인명사전도 만들겠다 – 국가정상화추진위서 편찬". 조갑제. 1986.「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한길사.

_____. 1987.「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고문에 의한 인간파멸과정의 실증적 연구」. 한길사.

최재천. 2004.「끝나지 않은 5 · 18: 재판의 의미와 과제」. 향연.

투투, 데스몬드. 2009.「용서 없이 미래 없다」. 홍종락 옮김. 홍성사.

한상희. 2015. "(판결비평)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253335(검색일: 2016.2.29)

《한겨레》. 2013.9.14. "물고문 · 전기고문에 사형도 모자라 '이자 고문'".

_____. 2013.10.24.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썼는데…'일부 반환' 첫 판결".

_____. 2015.3.27.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_____. 2015.7.16. (사설)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환영한다".

_____. 2015.7.17.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한국혁명재판사 편찬위원회. 1962.「혁명재판사」, 2집, 4집.

한홍구. 2015.7.17. "법 갖고 장난치는 '수구 법비들'이 헌법을 파괴한다 –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특별기고".《한겨레》.

_____. 2015. "기조발제: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인물선정 기준".「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2007.「헌법 다시보기: 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별첨 4－①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직 구성

◎ 상임 대표 (1명)

이만열

◎ 공동 대표 (5명)

강우일 김정헌 김중배 이해동 홍세화

◎ 책임편집인

한홍구

◎ 고문 (61명)

강정구 고 은 권낙기 권오헌 김금수 김삼웅 김상근 김세균 김원웅 김정남 김종철
김태진 문규현 문대골 문영희 문정현 박석무 박순희 박용일 박재승 박정기 박중기
배은심 배종렬 백기완 백낙청 서경원 서중석 양길승 염무웅 오세철 오종렬 오충일
유초하 유홍준 윤경로 이기명 이부영 이이화 이창복 이행우 이현배 임옥상 임재경
장영달 장행훈 전창일 정동익 정성헌 정지영 조세희 조화순 지용택 채현국 천영세
최병모 최영도 한완상 현기영 홍 번 효 림

◎ **필진 (1차 96명)**

강내희 강용주 강정구 고광헌 고병헌 권혁태 권형택 김귀옥 김 당 김덕진 김두식 김명인 김민웅 김삼웅 김상봉 김성수 김세균 김영훈 김용민 김응교 김인국 김재명 김주완 김중배 김진숙 김칠준 김형태 김호철 김효순 김훤주 나승구 노순택 노회찬 문용식 박건웅 박경신 박노자 박인규 박준성 박찬승 박태균 변영주 서중석 선대인 신기철 신명철 신주백 임병도 염규홍 오경종 오유석 유시민 유영표 유왕선 유초하 윤석인 윤승용 이단아 이만열 이명춘 이상호 이선옥 이승환 이영일 이영재 이인람 이재승 이종구 이철수 이해영 임경석 전규찬 전명혁 정용욱 정지영 정진우 정태인 정희진 조 국 조영선 조현연 주진우 진중권 채은아 최강욱 최정기 하종강 한상권 한정숙 한홍구 허상수 현상윤 홍성담 홍세화 홍윤기 황인성

◎ **시민편찬위원**

별첨 4－②

2015년 7월 16일 열전 편찬 제안문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제정은 3 · 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하면서 국민들이 서로 맺은 신성한 약속이었다. 분단을 극복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세력이 꿈꾸었던 해방된 새 나라의 미래상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은 제헌헌법이 제시했던 새 나라의 모습에 부합되는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제헌헌법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자던 당연한 다짐을 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넘어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 그것을 나눠먹을 권리까지 누려야한다던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왜 굴뚝으로, 철탑으로, 전광판으로 내몰리고 있는가? 입만 열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들먹이는 수구세력은 정작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담보하는 소중한 제헌헌법을 왜 가르치려 하지 않는가?

불행하게도 한국의 헌정사는 첫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비틀대기 시작했다. 국회프락치 사건, 반민특위의 무력화, 백범 김구의 암살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족적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 일제 고등경찰과 헌병 출신자들에 의해 거꾸로 청산되는 과정이었다. 전쟁 발발 후 서울 시민들에게 “가만 있으라” 라고 방송한 뒤 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 등은 서울 수복 이후 돌아와 피난 못간 시민 수십만을 부역자로 처벌했다. 친일을 반공으로 가린 일제 고등경찰과 헌병 출신자들은 조작 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독재정권 유지의 첨병이 되었다. 이들 공안마피아들이야말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암 관피아의 중추세력이다.

한국사회는 나름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과거청산도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내란 · 부정선거 · 학살 · 고문 및 조작 ·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법치를 내세우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 몇몇 공안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고문과 조작의 당사자들은 사과조차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고문과 조작으로 받은 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 대한민국 100년을 맞으며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내란 · 부정선거 · 학살 · 고문 및 조작 ·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책임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것이다. 지난 시기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학살 및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을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으며, 가해자를 적시하지도 않았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 유럽에서는 70년이 지나도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이 현실의 법정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마저 피해갈 수는 없다.

해방 64년이 지난 2009년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지만, 수록대상 친일파 거의 대부분이 이미 죽은 뒤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들은 이 질곡의 현대사를 낳은 장본인들 중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을 편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 · 부정선거 · 학살 · 고문 및 조작 ·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될 것이다. 구

체적으로는 반민특위 습격 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들 중 200-300명가량을 수록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오만을 피하기 위해 행위 시의 법률로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만을 수록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작업을 제안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짐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에 기초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듭할 것이다. 우리들의 작업도 언젠가는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겠다. 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내란 · 부정선거 · 학살 · 고문 및 조작 · 각종 인권유린의 관련자들께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떳떳한 자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께

먼저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시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책임 있는 지식인들께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대표적인 국가폭력 가해자 200~300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200명이 정리하도록 하려는 작업입니다. 이 무거운 역사적 짐을 같이 지는 마음으로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의 집필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께

현행 헌법과 제헌헌법을 꼭 읽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친일파로부터 이어져 온 반헌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을 되찾읍시다.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의 시민편찬위원이 되어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67주년 제헌절에

고광헌 김두식 김귀옥 김명인 김민웅 김상봉 김진숙 김칠준 김형태 김희수
박노자 박인규 박태균 서해성 선대인 아임피터 오유석 오창익 이명춘 이상호
이재승 임경석 정용욱 정태인 정희진 조 국 조영선 주진우 최강욱 하종강
한상권 한홍구 홍윤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http://findbadmen.com
badmen0815@gmail.com